

2022 한국공간환경학회 춘계학술대회

한국의 주거불평등 분석과 대안

- 일시: 2022. 04. 22. (금) 10:00-17:30
- 장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영원홀 & 230호 (온/오프라인 동시진행)
- 공동주최: (사) 한국공간환경학회, 서울대아시아연구소 아시아도시사회센터

2022 한국공간환경학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며

2년 이상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는 시점에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가장 뜨겁게 논의된 이슈 중의 하나가 주거 문제입니다.

주거 문제도 다양한 세부적 논의들이 있겠지만,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특히 주거 불평등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기획 세션을 구성했습니다. 주거 불평등에 대한 역사적, 이론적 고찰, 청년, 고령자 등 주거 약자들에 대한 집중적 탐구, 공공주택 공급 문제를 다룬 논문 등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각각의 주제들이 모두 중요하며, 동시에 전체적으로 주거 문제를 중산층의 내 집 마련 문제로 축소하는 주류 담론에 대한 비판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공간의 상품화 문제, 공동체와 행복, 환경 등 다양한 주제들을 비판적으로 다룬 논문들이 발표될 예정이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발표자, 토론자, 사회자, 행사 운영 담당자로 참여를 약속해 주신 많은 분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한국공간환경학회 회장 · 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센터장 **박배균**
한국공간환경학회 학술위원장 **손정원**

2022 공간환경학회 춘계학술대회 프로그램

시간/장소	영원홀	230호
10:00-11:40	일반세션 1 <투기적 도시화 그리고 상품화와 재개발>	일반세션 2 <공간의 인식, 재구성 그리고 수출>
11:40-13:30	점심시간	
13:30-15:10	기획세션 1 <주거불평등 분석>	일반세션 3 <공간의 정치생태학>
15:10-15:30	Coffee break	
15:30-17:10	기획세션 2 <주거불평등 대안>	일반세션 4 <행복 격차, 공동체 그리고 인간 너머>
17:10-17:30	폐회식	

[세션 구성]

세션	사회자	토론자	발표제목
<p>기획세션 1 〈주거불평등 분석〉</p>	손정원 (런던대)	김용창 (서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표 1: 이후빈 (강원대) · 홍다솜 (서울대) 〈주거자본주의의 불평등 지형: 주거부유층과 주거빈곤층을 중심으로〉 발표 2: 박미선 (국토연구원) 〈청년 다양성에 기초한 주거여건, 인식, 욕구의 이질성 탐색〉 발표 3: 이새롬 (서울대) 〈고령자 관점에서 본 정주환경의 포용성〉
<p>기획세션 2 〈주거불평등 대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표 1: 박인권 (서울대) 〈한국 주택정책 변천과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발표 2: 박준 (서울시립대) · 봉인식 (경기연구원) 〈공공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재원조달 분석〉
<p>일반세션 1 〈투기적 도시화 그리고 상품화와 재개발〉</p>	심한별 (서울대)	신현방 (런던정경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표 1: 이승원 외 (서울대) 〈‘강남’을 동반했던 30년의 키워드: 투기적 도시화의 언어들〉 발표 2: 정민기 (세필드대) 〈서울 주거지역의 상품화, 온라인 블로거의 선택적 정보공유, 밀레니얼 세대의 미학적 투어리즘의 관계: 연남동 젠트리피케이션 과정(2010-2018)을 중심으로〉 발표 3: 정진영 · 이건축 (서울대) 〈재개발 공간의 역동적 구성〉
<p>일반세션 2 〈공간의 인식, 재구성 그리고 수출〉</p>	이후빈 (강원대)	진종현 (공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표 1: 이진수 (아이다호대) 〈탈식민 한국에서 한국 지정학의 서양화: 표문화 (1908-1985) 의 생애와 지정학적 사고〉 발표 2: 최기훈 (경기연구원) 〈COVID-19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적용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이용자들의 경계 넘기를 통한 공간 재구성〉 발표 3: 오도영 (홍콩 링난대) 〈스마트 도시 수출의 꿈: 한국의 도시 수출 시도에 대한 비판적 접근〉
<p>일반세션 3 〈공간의 정치생태학〉</p>	정진영 (서울대)	황진태 (통일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표 1: 박양범 (서울대) 〈제주 대정읍 농지 태양광 발전과 에너지 전환의 지리〉 발표 2: 김레베카 (성공회대) 〈연결성으로서의 발전: 에너지전환기의 하천 복원〉 발표 3: 박종구 (경희대) 〈다층적 행위자와 접경지역 로컬네트워크: 화천군 군납 로컬네트워크를 사례로〉
<p>일반세션 4 〈행복 격차, 공동체 그리고 인간 너머〉</p>	이민주 (서울대)	이영아 (대구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표 1: 이민주 (서울대) · 박민진 (서울연구원) 〈서울 청년의 행복 격차: MZ세대를 중심으로〉 발표 2: 최희진 (서울대) 〈좋은 공동체를 향한 희망과 열망, 그리고 행복한 미래: 경남 창원 수정마을의 공동체 회복 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 3: 조용혁 (경희대) 〈남북한 경계넘기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간 너머 주체에 관한 연구 - 석모도 북한 쌀 보내기 운동을 사례로〉

[차례]

기획세션 1. 주거불평등 분석

- <주거자본주의의 불평등 지형: 주거부유층과 주거빈곤층을 중심으로>
이후빈 (강원대) · 홍다솜 (서울대)
- <청년 다양성에 기초한 주거여건, 인식, 욕구의 이질성 탐색>
박미선 (국토연구원)
- <고령자 관점에서 본 정주환경의 포용성>
이새롬 (서울대)

9pg

24pg

54pg

기획세션 2. 주거불평등 대안

- <한국 주택정책 변천과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박인권 (서울대)
- <공공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재원조달 분석>
박준 (서울시립대) · 봉인식 (경기연구원)

76pg

118pg

[차례]

일반세션 1. 투기적 도시화 그리고 상품화와 재개발

- <‘강남’을 동반했던 30년의 키워드: 투기적 도시화의 언어들>
이승원 외 (서울대) 120pg
- <서울 주거지역의 상품화, 온라인 블로거의 선택적 정보공유, 밀레니얼 세대의 미학적 투어리즘의 관계: 연남동 젠트리피케이션 과정(2010-2018)을 중심으로>
정민기 (세필드대) 137pg
- <재개발 공간의 역동적 구성>
정진영 · 이건축 (서울대) 166pg

일반세션 2. 공간의 인식, 재구성 그리고 수출

- <탈식민 한국에서 한국 지정학의 서양화: 표문화 (1908-1985) 의 생애와 지정학적 사고>
이진수 (아이다호대) 194pg
- <COVID-19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적용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이용자들의 경계 넘기를 통한 공간 재구성>
최기훈 (경기연구원) 207pg
- <스마트 도시 수출의 꿈: 한국의 도시 수출 시도에 대한 비판적 접근>
오도영 (홍콩 링난대) 228pg

[차례]

일반세션 3. 공간의 정치생태학

- <제주 대정읍 농지 태양광 발전과 에너지 전환의 지리>
박양범 (서울대) 244pg
- <연결성으로서의 발전: 에너지전환기의 하천 복원>
김레베카 (성공회대) 267pg
- <다층적 행위자와 접경지역 로컬네트워크: 화천군 군납 로컬네트워크를 사례로>
박종구(경희대) 294pg

일반세션 4. 행복 격차, 공동체 그리고 인간 너머

- <서울 청년의 행복 격차: MZ세대를 중심으로>
이민주 (서울대) · 박민진 (서울연구원) 313pg
- <좋은 공동체를 향한 희망과 열망, 그리고 행복한 미래: 경남 창원 수정마을의 공동체 회복 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최희진 (서울대) 331pg
- <남북한 경계넘기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간 너머 주체에 관한 연구 - 석모도 북한 쌀 보내기 운동을 사례로>
조용혁 (경희대) 350pg

기획세션 1. 주거불평등 분석

사회: 손정원 (런던대)

- <주거자본주의의 불평등 지형: 주거부유층과 주거빈곤층을 중심으로>
이후빈 (강원대) · 홍다솜 (서울대)
- <청년 다양성에 기초한 주거여건, 인식, 욕구의 이질성 탐색>
박미선 (국토연구원)
- <고령자 관점에서 본 정주환경의 포용성>
이새롬 (서울대)

2022 한국공간환경학회 춘계학술대회

2022년 4월 22일 금요일 13:30~15:10

주거자본주의의 불평등 지형

: 주거부유층과 주거빈곤층을 중심으로

이후빈 (강원대) · 홍다솜 (서울대)

발표순서

- 1) 서론
- 2) 문헌연구
- 3) 분석방법 및 자료
- 4) 분석결과
- 5) 이후 분석방향

1. 서론

주거자본주의의 유형 분류

		Owner-occupation Rate (reflects size of social rental sector and thus commodification; partial disconnect from global capital markets as a consequence)	
		Low	High
Mortgages as a % of GDP (reflects securitization as a cause and stratification as a consequence; but also a stronger connection to global financial markets)	High	Corporatist Market Housing (but not houses) as social right, but strong stratification of the market: Owner-occupiers vs renters; plus defamilialization; plus public organizations control rented housing. Low property tax revenues. Problems of inter-generational equity as housing market outsiders are priced out of accommodation.	Liberal Market Highly commodified: Houses as assets; strong stratification of the market: Owner-occupiers vs renters. Market based self-help. High property tax revenues. Problems of inter-generational equity as housing market outsiders are priced out of accommodation. Many of these economies were also 'Frontier' societies.
	Low	Statist-developmental Housing (not houses) as social right, but financial repression reduces market segmentation / stratification (?); plus private organizations control rented housing. Low property tax revenues.	Familial Non-commodified but not de-commodified: Houses as a familial social good, but not as a social right. Stratification from access to formal sector employment. Non-market self-help. Low property tax revenues.

출처 : Schwartz and Seabrooke, 2008: 256

주거자본주의, 주택금융 확장과 주거체제 변화

영미권과 같이 주택금융이 자유로운 국가에서는
주택의 금융화와 이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이 명확하고,
점유형태를 기준으로 주거체제 변화도 역동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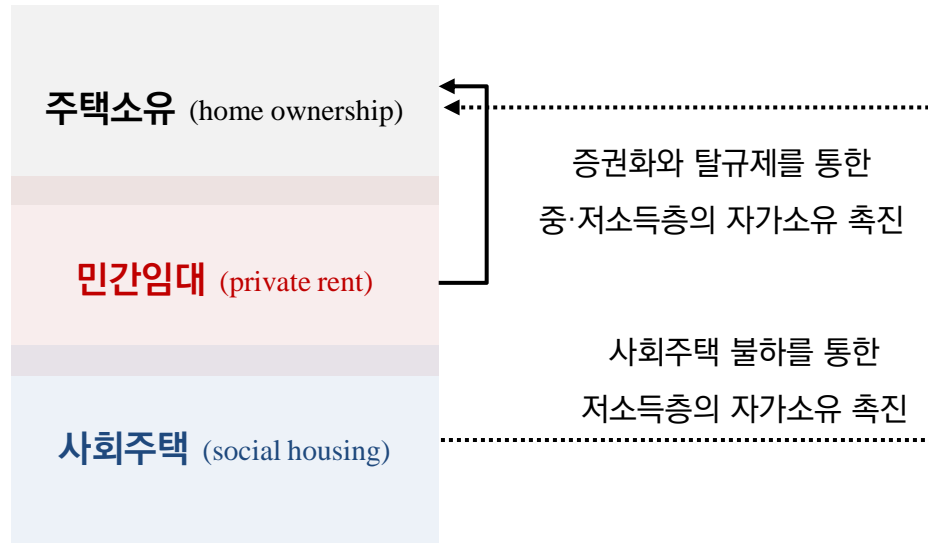
주택금융 억압 국가는 주택가격 상승이 덜 하므로,
주택시장-주도 계층화가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다?
한국은 주택금융 확장과 주거체제 변화가 뚜렷하지 않음

세계적 주거자본주의 논의에 자극을 받아 한국의 주거불평등 분석

2. 문헌연구 - 주거자본주의와 주거불평등



2. 문헌연구 - 주택자산 불평등



주택금융 확장으로 주택소유가 확대되면 자본주의 불평등이 완화되는가?

저소득층이 주택소유에 진입해서 자산을 축적하고 부족한 소득을 보충하면, 불평등이 완화되지 않을까?
하지만 주택의 금융화로 너도 나도 주택소유자가 되면 주택소유자 내부의 불평등이 더 확대되지 않을까?

주택소유 확대에 따른 계층간 재산 불평등 심화 (Wind et al.,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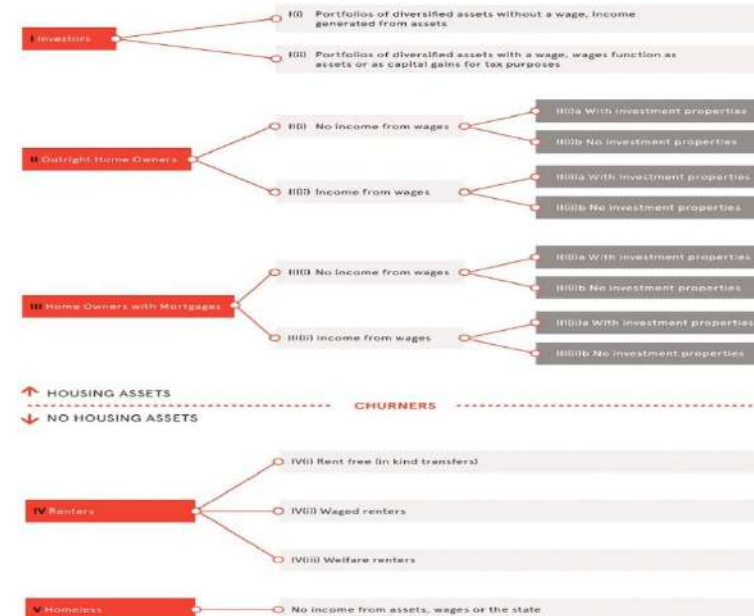
- 주택소유 확장이 예상대로 저소득층의 재산축적에 기여할 수 있는가?
- 저소득층이 금융 확장으로 주택소유자가 되어도, 계층 간 불평등 증가

임금 하락과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새로운 계급 분류 (Adkins et al., 2021)

- 주택가격 상승의 불평등한 분배를 고려한 새로운 계급 분류 필요
- 자산-기반 계급 분류는 상대적으로 주택소유자 내부의 이질화에 초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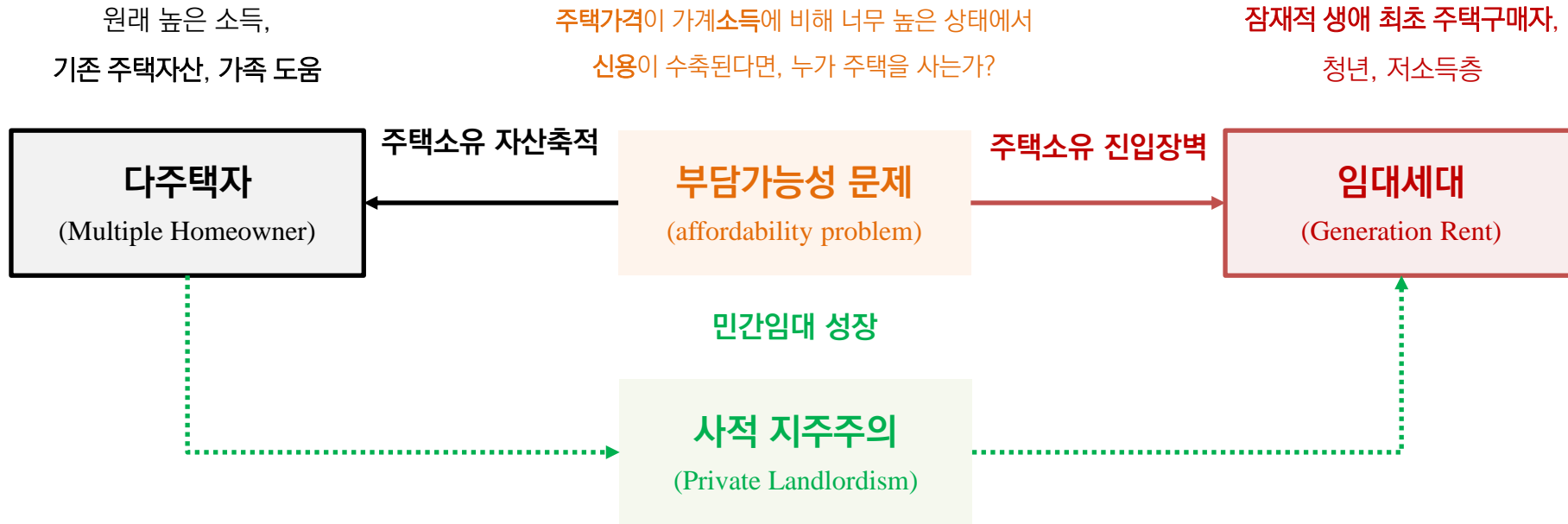
주택자산의 축적과 소진에 따른 계층화 (Forrest and Hirayama, 2018)

- 주택자산을 축적하는가 또는 소진하는가에 따라 계층구분 가능
- 축적하는 가족, 소진하는 가족, 영구적인 세입자 가족



출처 : Adkins et al., 2021: 565

2. 문헌연구 - 임대세대 부상



신자유주의 공통적 경향으로 세대적 분열 (Forrest and Hirayama, 2009)

- 신자유주의 공유된 담론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일본 맥락적 차이
- 하지만 핵심적 사회적 변화로 청년 주택소유의 현저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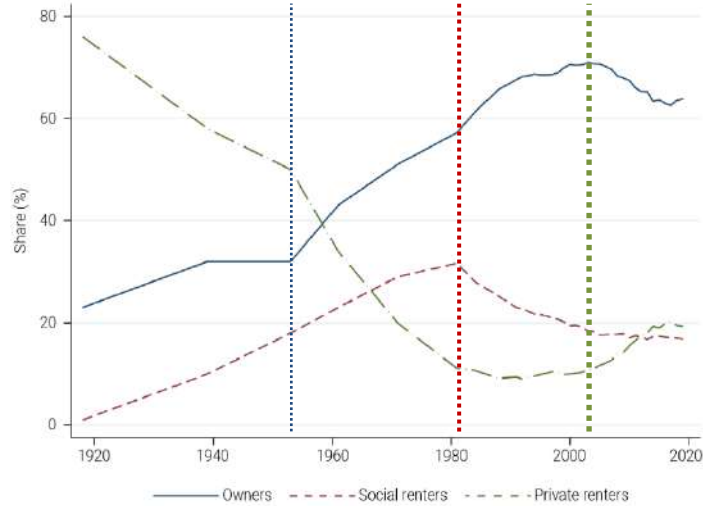
주택소유의 현저한 세대간 불평등에 대한 비판 (Christophers, 2018)

- 주택을 매개로 세대간 불평등이 현저하지만, 여전히 계층적 문제
- 주택의 세대간 이전을 통한 세대내 계층적 불평등의 재생산

2. 문헌연구 - 점유형태 불평등 · 주거불평등 독립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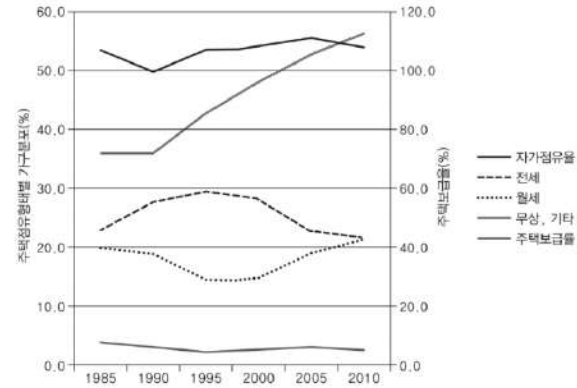
Figure 1. Private rental housing lost market share during the 20th century

Tenure trends in England, 1920-2020



출처: <https://www.brookings.edu/essay/uk-rental-housing-markets/>

<그림 6> 한국의 주택점유형태별 가구분포의 변화, 1985-2010



출처: 통계청, 『2011 한국의 사회지표』에 수록된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 연도 자료. 비교: 월세는 사급세, 무보증월세, 보증부월세 모두 포함.

출처: 신진욱·이은지, 2012: 238

‘전세의 월세화’와
‘공공임대주택 확대’ 이외
한국의 주택점유구조는
수십 년 간 거의 변하지 않음

한국형 주거자본주의에서 주거불평등 지형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하위 집단에서 주거불평등이 어떻게 차별적으로 형성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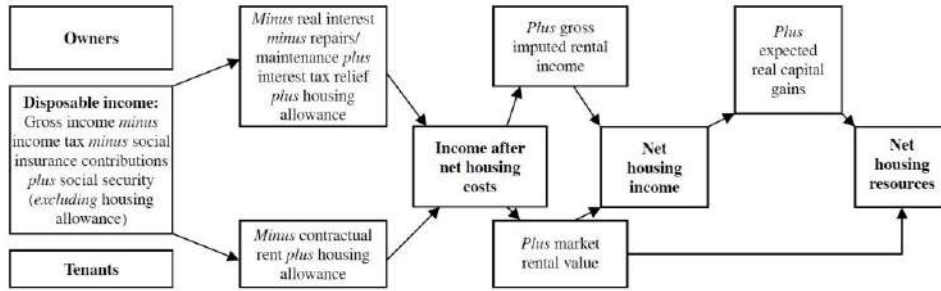
점유형태 불평등에 기초한 주택재산 불평등 (Christophers, 2021)

- 사회적으로 생산되는 tenure inequality가 wealth inequality 초래
- 재산 불평등의 정책 대안은 tenure neutrality을 원칙으로 해야 함

소득 분배에서 주거체계 독립성, 주거빈곤 (Stephens and Steen,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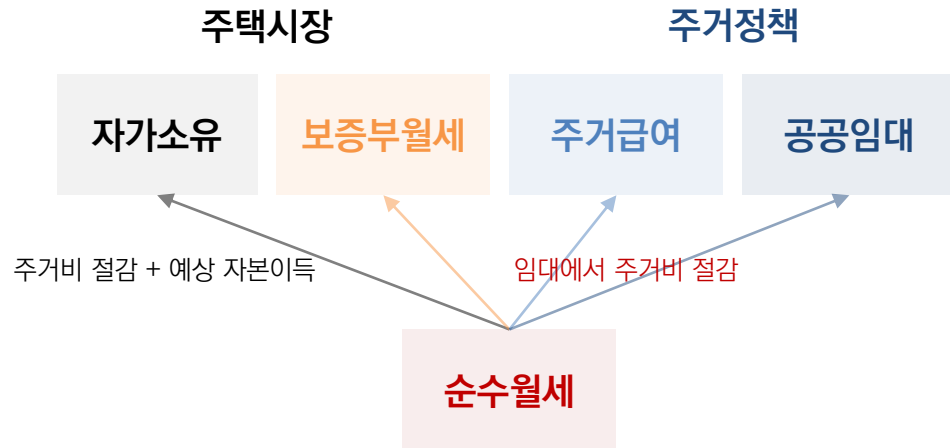
- 주거로부터의 현물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점유형태 불평등 화폐화
- 소득빈곤과 주거빈곤의 괴리 → 주거체계의 빈곤감소 효과

2. 문헌연구 - 분석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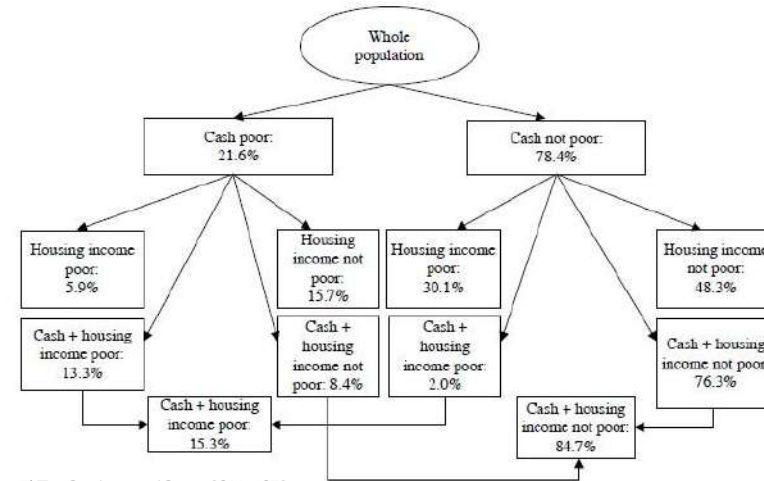


출처 : Stephens and Steen, 2011: 1042

민간임대 시장월세 기준으로 주택시장과 주거정책 운영에 따른 점유형태별 상대적 이점을 순주거소득(net housing income)으로 포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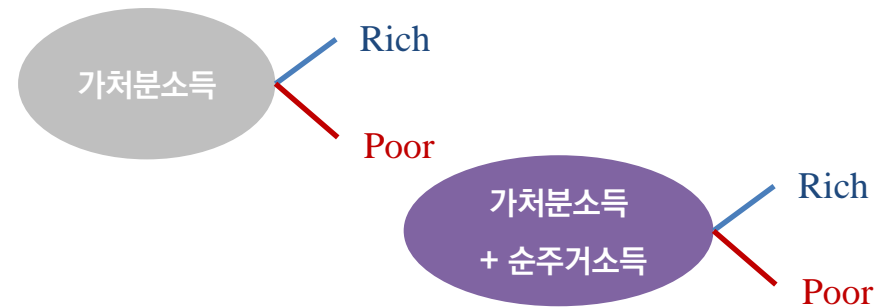


- ① 가치분소득 Rich, 순주거소득 포함하면 Not Rich → 부유층탈락
- ② 가치분소득 Not Rich, 순주거소득 포함하면 Rich → 주거부유층
- ③ 가치분소득 Poor, 순주거소득 포함하면 Not Poor → 빈곤층탈출
- ④ 가치분소득 Not Poor, 순주거소득 포함하면 Poor → 주거빈곤층



자료 : Stephens and Steen, 2011: 1063

가처분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층과 순주거소득 포함 상대적 빈곤층 비교
소득빈곤이지만 주거로 인해 전체 빈곤을 면하는 사람이 많아 빈곤 감소



3. 분석자료 및 방법 -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계생활수준의 정도와 재무 건전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국가지정 통계조사

- 가계의 자산, 부채, 소득, 지출 등의 규모, 구성, 분포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미시적 재무 건전성 파악
- 전국의 약 20,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며, 시도별 자산 비중을 고려해 표본규모 매년 확정

거주주택 관련 자료

- 점유형태 구분 (자기집, 전세, 월세, 기타)
- 주거형태 구분(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기타)
- 평형 및 지역(수도권, 지방) 구분
- 거주주택 금액
- 현거주지 전월세 보증금
- 월세
- 재산세 (토지와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 총액)
- 거주주택 구입 대출이자
-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가처분소득 관련 자료

- 처분가능소득 = 가구소득 - 비소비지출
- 가구소득의 세부분류
- 비소비지출의 세부분류

3. 분석자료 및 방법 - 순주거소득

원래 시장에서 지불해야 하는 월세 - 실제 지불하는 월세 자가소유 경우 1년 동안 주택가격 상승분

순주거소득(net housing income) = 주거비 절감 + 예상 자본이득

자가소유	주거비 절감 + 예상 자본이득	$(거주주택 금액 \times 전세비율 \times 전월세전환율) - (거주주택 재산세 + 거주주택 구입 대출이자) + (거주주택 금액 \times 주택가격 상승률)$ <p>전세비율·전월세전환율·주택가격 상승률 =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서 지역, 평형, 주택형태에 따라 구분 거주주택 재산세 = 전체 부동산자산 중에서 거주주택의 가격 비율을 전체 재산세에 곱해서 계산</p>
보증부월세	주거비 절감	$(현거주지 전월세보증금 \times 전월세전환율 + 월세) - (월세 +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순수월세	순주거소득 기준	$(월세) - (월세) = 0$
주거급여	주거비 절감	$\text{보증부월세 순주거소득} + \text{주거급여 추정액}$ <p>주거급여 추정액 = 각 가구의 소득 및 재산에 기초하여 해당 가구가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별 평균 주거급여액</p>
공공임대	주거비 절감	$\text{시장월세} - (\text{월세} + \text{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주거급여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거주 여부로 별도로 표시하지 않음
 시장월세 = 자가소유와 보증부월세를 모두 월세로 환산한 다음, 지역, 평형별로 유형을 구분해서 평균을 계산한 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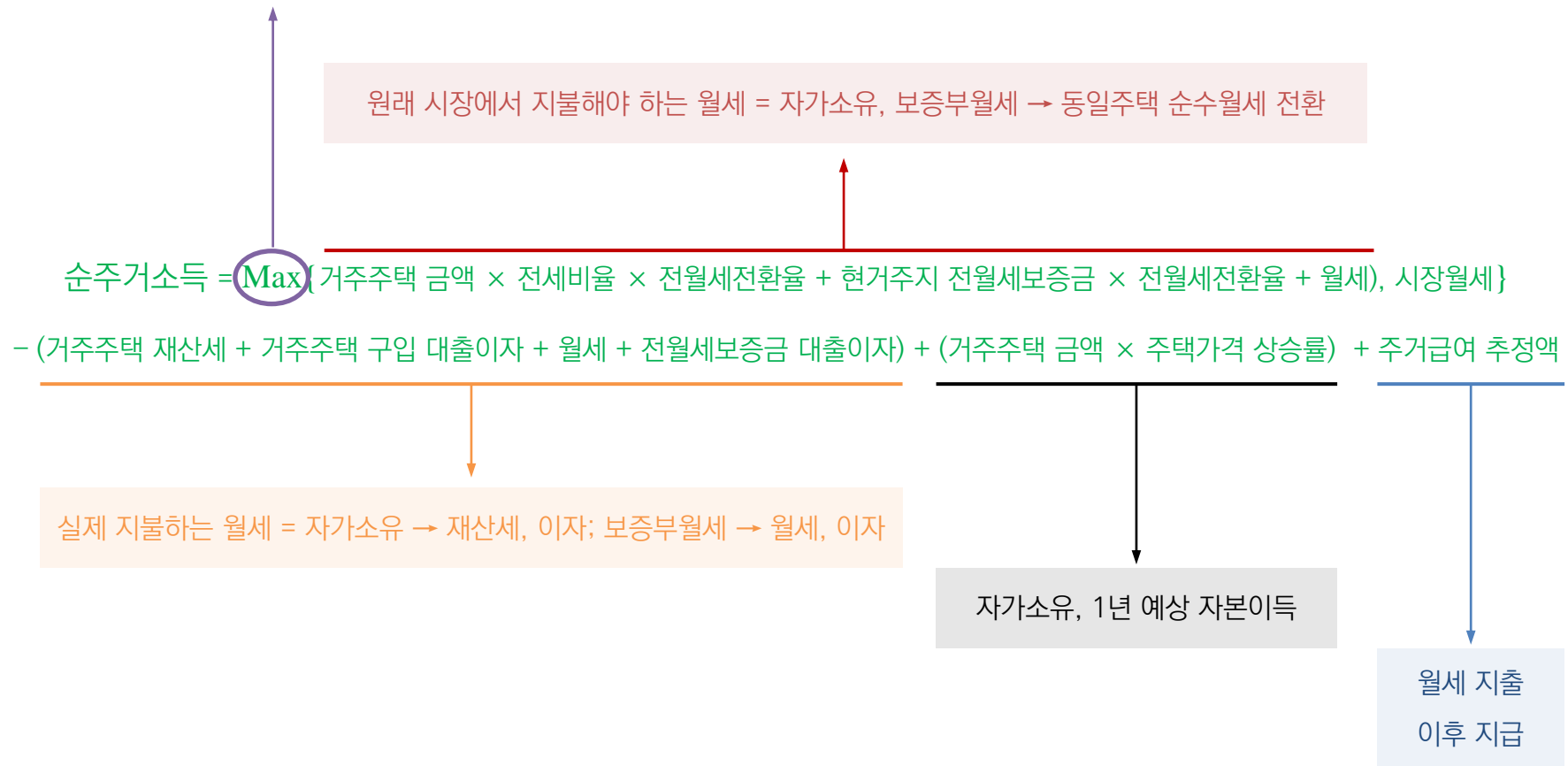
3. 분석자료 및 방법 - 계산식

동일주택 순수월세 전환시 지불해야 하는 월세와 시장 평균적인 월세를 비교하여 더 큰 값 추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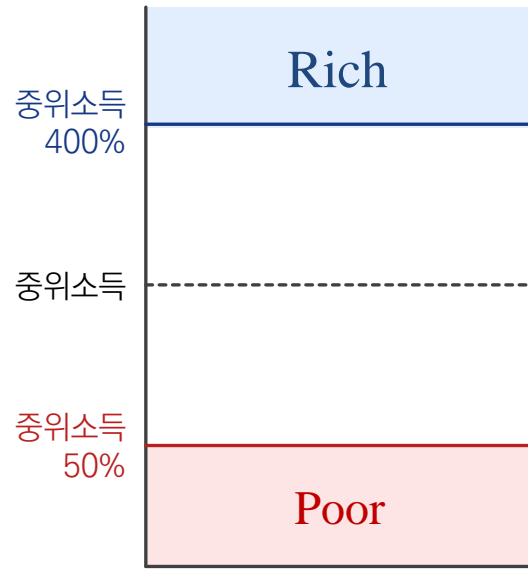
동일주택 순수월세 < 시장월세 → 점유형태와 상관없이 시장 평균적인 월세보다 더 저렴하게 주거문제 해결

① 공공임대 = 보증부월세 조건이 시장 평균보다 저렴, 시장월세와 실제 지불 월세의 차이는 주거정책에 의한 현물소득

② 과소소비 = 점유형태에 상관없이 시장 평균보다 주거의 질을 낮추는 선택을 통해 주거비 절약 ex) 지하주거 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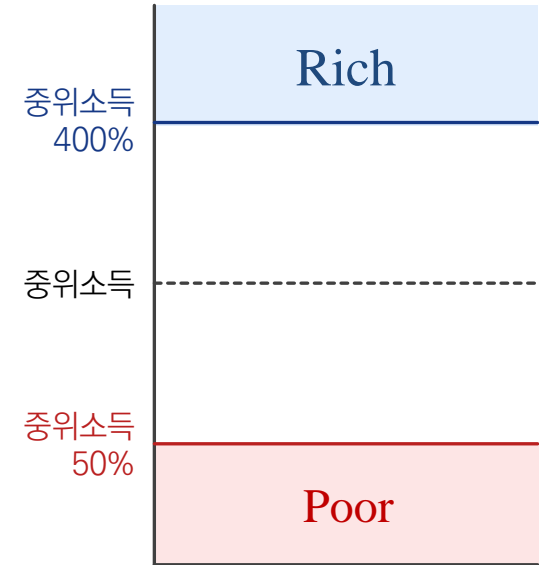
3. 분석자료 및 방법 - 계층 분류



가처분소득

(단, 거주주택 재산세, 이자지급 제외)

순수월세 기준으로 점유형태별 이점을
현물소득으로 포착한 주거소득을 합하면
상대적 빈곤과 부유가 어떻게 바뀌는가?



가처분소득 + 순주거소득

상대적 빈곤율

상대적 빈곤율이란 전체 인구 중 빈곤 위험에 처한 인구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상대적 빈곤선을 설정한 이후 이를 바탕으로 상대적 빈곤율을 계산합니다. 상대적 빈곤선은 전체 인구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중위소득의 50%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정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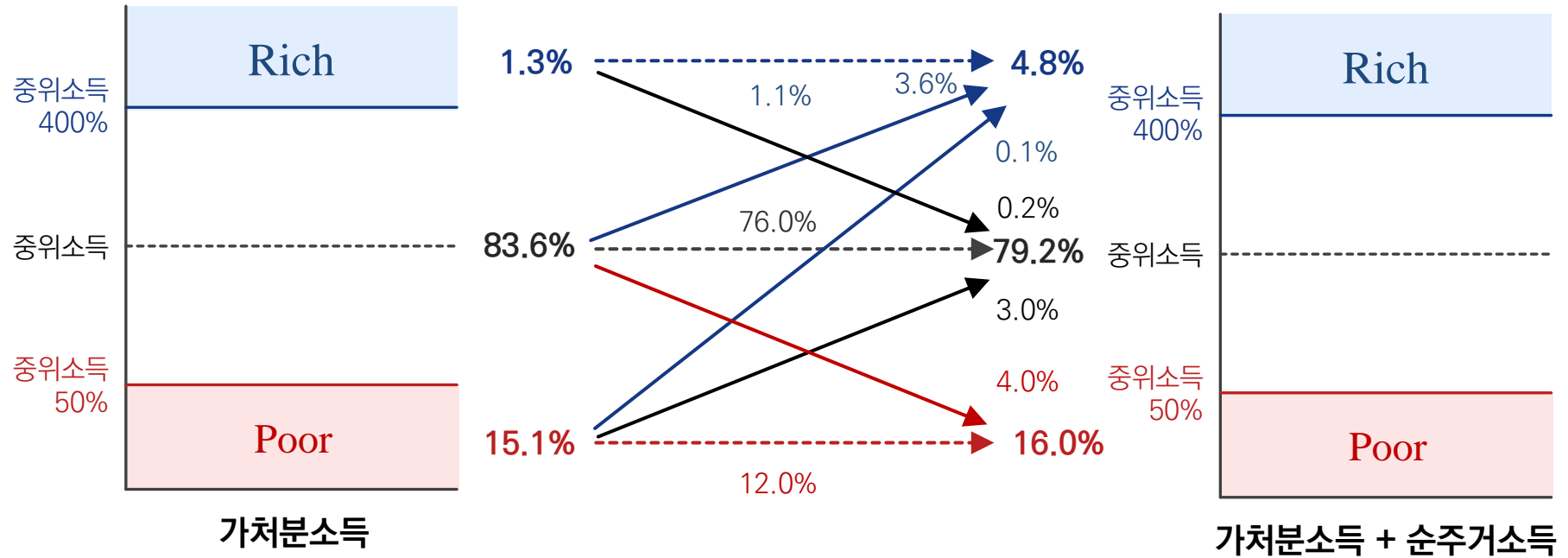


예를 들어 그래프에서 중위소득이 2,998만원일 때(가계금융복지조사, '20년 군동화 처분가능소득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의 50%인 1,499만원이 됩니다. 소득이 1,499만원 이하인 인구비율이 15.3%이므로 상대적 빈곤율은 15.3%라고 나오게 됩니다.

빈곤율은 다른 소득분배지표에 비해 노인 빈곤율이나 아동 빈곤율 같은 특정계층에 대한 빈곤율을 많이 이용합니다. 이들 빈곤율을 계산할 때에도 상대적 빈곤선은 전체 인구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사용하며, 상대적 빈곤선보다 소득이 적은 특정계층 인구의 특정계층 총인구의 비율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노인 빈곤율은 (상대적 빈곤선보다 소득이 적은 노인인구/총노인인구)×100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 빈곤선은 전체 인구 중위소득의 50%로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상대적 부유선'에 대해서는 합의된 정의를 찾기 어려움. '예외적인' 부유의 상태를 소득만으로 측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존재하지만, 본 연구는 Medeiros, 2006를 참고하여 중위소득 4배를 상대적 부유선으로 정의
※ Medeiros(2006)는 상대적 부유선을 상대적 빈곤선의 8~12배, 즉 중위소득의 4~6배로 정의할 수 있다고 주장함

4. 분석결과 - 계층 분류



(단, 거주주택 재산세, 이자지급 제외)

주거로 부유층에서 탈락한 집단	0.2%	→	부유층탈락	
주거로 부유층이 된 집단	3.7%	→	주거부유층 (housing rich)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층이지만 순주거소득을 포함하면 부유층 진입하는 0,1%는 중복 고려하여 주거부유층에만 산입
주거로 빈곤층을 탈출한 집단	3.0%	→	빈곤층탈출	
주거로 빈곤층이 된 집단	4.0%	→	주거빈곤층 (housing poor)	
	<u>10.9%</u>			

5. 이후 분석방향

계층의 결정요인

- 소득분배에서 주거불평등의 독립성을 보여주는 부유층탈락, 주거부유층, 빈곤층탈출, 주거빈곤층
- 누가 주거로 인해 부유층 또는 빈곤층 구분선을 넘나드는가? 주거로 인한 혜택 or 불리의 결정요인?
- 소득분배로부터 독립적인 주거불평등을 구성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국제비교관점에서 한국 주거불평등의 특수성과 일반성

- 주택금융이 억압된 국가로서 한국의 주거불평등은 주택금융이 자유로운 국가와 어떻게 다른가?
- 한국 주거불평등에 대한 사례연구가 세계적 주거자본주의 논의에 어떤 함의를 줄 수 있는가?

참고문헌

- 신진욱·이은지, 2012, 금융화 시대의 주택체제 변동의 네 가지 경로: 국제 비교 관점에서 본 한국 주택불평등 구조의 특성, *경제와 사회* 95, 218-253.
- Adkins, L., Cooper, M. and Konings, M., 2021, Class in the 21st century: Asset inflation and the new logic of inequality, *Economy and Space A* 53(3), 548-572.
- Christophers, B., 2018, Intergenerational Inequality? Labour, Capital and Housing Through the Ages, *Antipode* 50(1), 101-121.
- Christophers, B., 2021, A tale of two inequalities: Housing-wealth inequality and tenure inequality, *Economy and Space A* 53(3), 573-594.
- Forrest, R and Hirayama, Y., 2009, The Uneven Impact of Neoliberalism on Housing opportuni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33(4), 998-1013.
- Forrest, R. and Hirayama, Y., 2018, Late home Ownership and Social re-stratification, *Economy and Society* 47(2), 257-279.
- Medeiros, M., 2006, The rich and the poor: the construction of an affluence line from the poverty line, *Social indicators research* 78(1), 1-18.
- Schwartz, H. and Seabrooke, L., 2008, Varieties of Residential Capitalism in the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Old Welfare States and the New Politics of Housing, *Comparative European Politics* 6, 237-261.
- Stephens, M. and Steen, G., 2011, 'Housing Poverty' and Income Poverty in England and The Netherlands, *Housing Studies* 26(7-8), 1035-1057.
- Wind, B., Lersch, P. and Dewilde, C., 2017, The distribution of housing wealth in 16 European countries: accounting for institutional differences, *Journal of Housing and the Built Environment* 32, 625-647.

한국공간환경학회 학술대회

청년 다양성에 기초한 주거여건, 인식, 욕구의 이질성 탐색

2022.4.22.

국토연구원 박미선 주거정책연구센터장



목 차

CONTENTS

- » 청년층 가구유형 구성
- » 청년층 가구구성별 주거여건
- » 청년층 주거인식
- » 청년 성별(gender) 주거 욕구
- » 나가며



청년층 가구유형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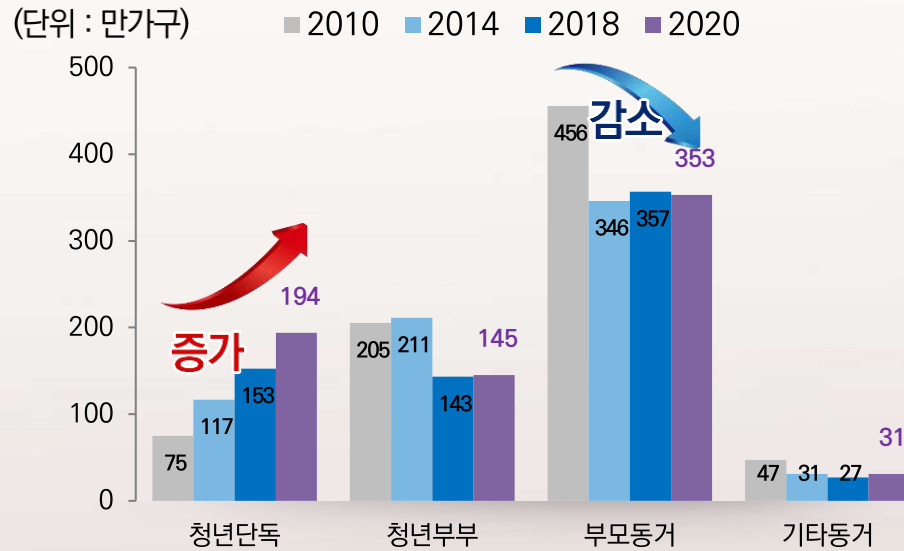


부모 동거 → 결혼 독립 X
선형적 생애변화 담보 X

○ 청년층 가구유형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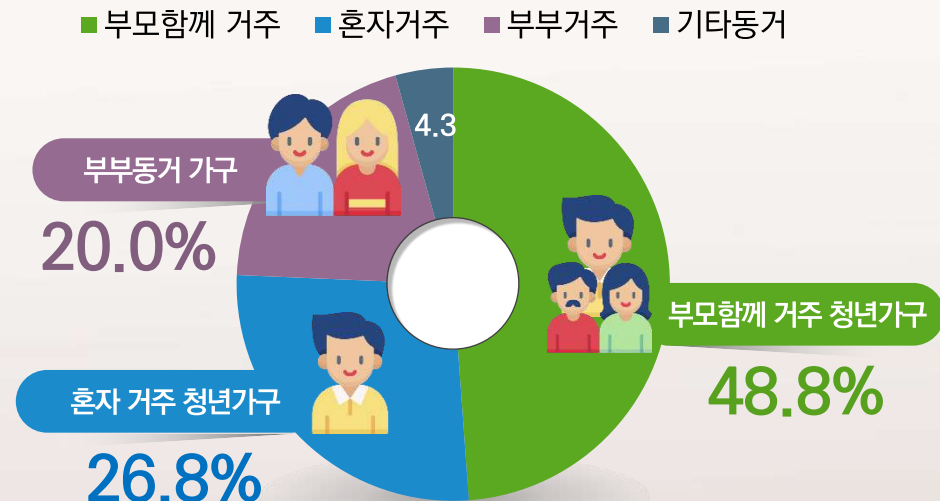
- 청년(만19~34세)은 부모와 함께 살거나(부모동거), 부부로 거주하거나(청년부부), 혼자 독립하여 살거나(청년 단독), 이들이 아닌 누군가와 함께 거주(기타동거)
- 지난 2010~2020년 사이 청년은 **부모동거가 감소하고 독립하여 혼자 사는 청년이 급증**
- 현재 청년의 모습은 절반 정도(48.8%)가 부모와 함께 살고, 1/4이상(26.8%)이 혼자 독립적으로 거주하며 1/5 (20%)은 부부가 되어 함께 거주(기타 동거 4.3%)

청년가구 유형별 규모 분포 추이(2010~2020)



원자료 출처: 국토교통부, 각년도, 주거실태조사

청년가구 유형별 구성비(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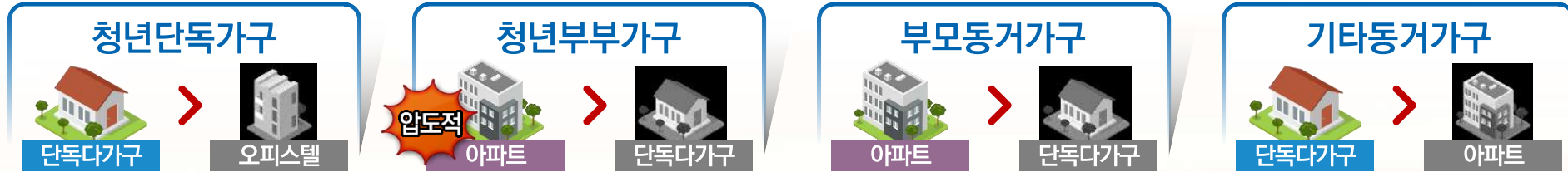
청년 가구구성별 주거여건



청년층 주거여건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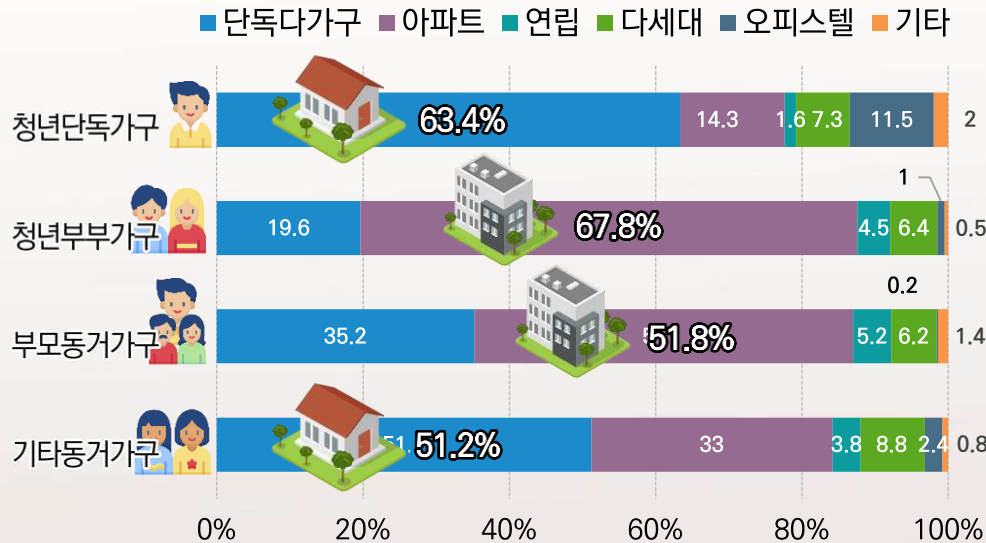


○ 주택유형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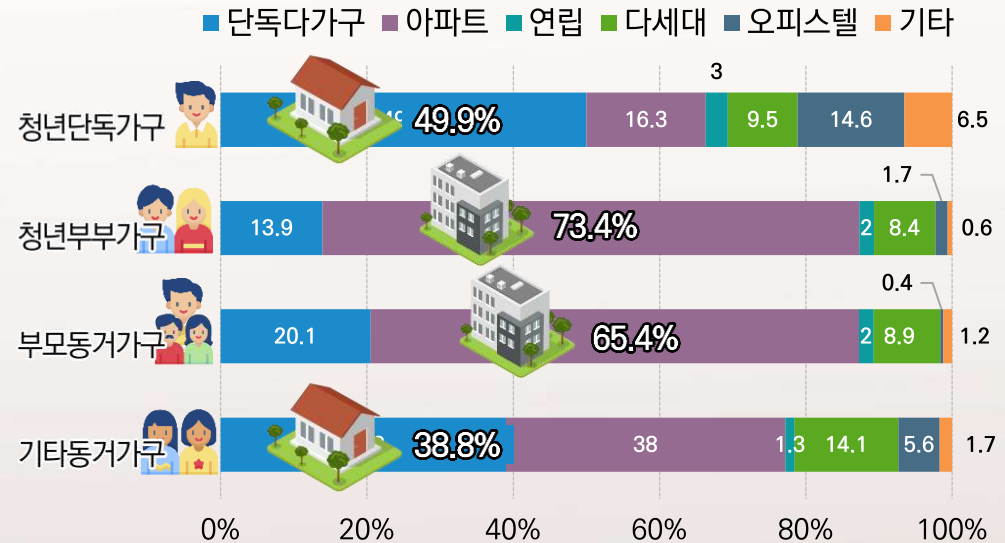
- 2010~2020년 사이 청년단독가구의 아파트, 오피스텔 거주 비중 증가, 청년부부 아파트 증가

청년가구 유형별 거주 주택유형(2010)



주: 기타는 주택이외의 거처와 비거주용 건물내 거주하는 경우를 합한 수치임
원자료 출처: 국토교통부, 2010년 주거실태조사

청년가구 유형별 거주 주택유형(2020)



주: 기타는 주택이외의 거처와 비거주용 건물내 거주하는 경우를 합한 수치임
원자료 출처: 국토교통부, 2020년 주거실태조사

청년층 주거여건 변화



○ 주택유형 변화를 통한 시사점

청년단독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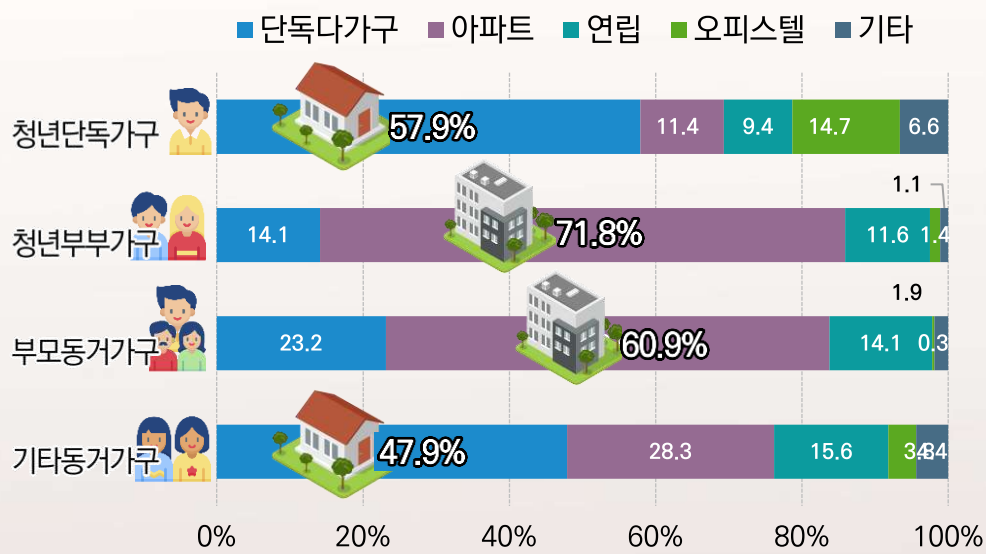
- 2018~2020년 사이 변화
- 부모지원 받은 청년 독립 증가 가능성
- 부모지원이 어려운 청년 주거여건 악화 또는 개선 미미 가능성

청년부부가구

부모동거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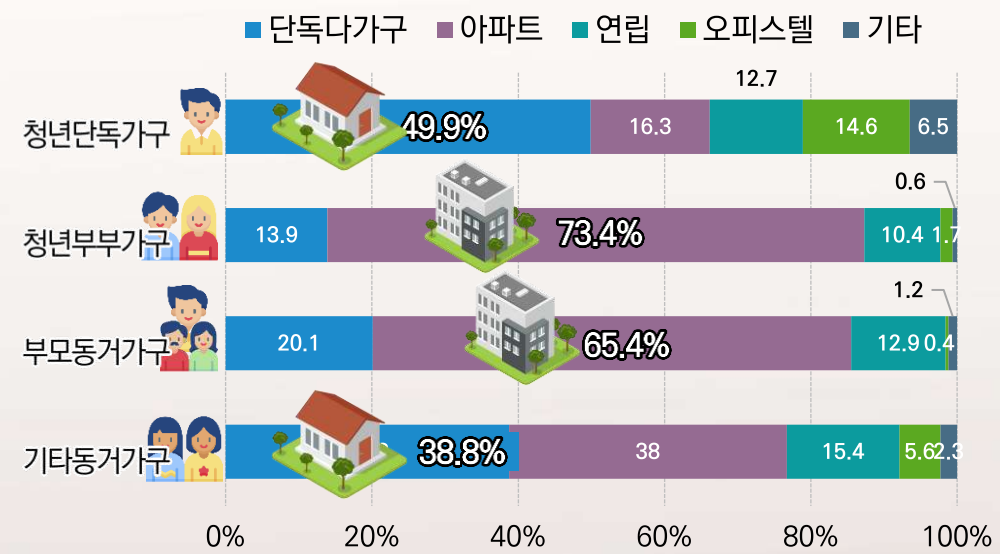
기타동거가구

청년가구 유형별 거주 주택유형(2018)



주: 기타는 주택이외의 거처와 비거주용 건물내 거주하는 경우를 합한 수치임
 원자료 출처: 국토교통부, 2018년 주거실태조사

청년가구 유형별 거주 주택유형(2020)



주: 기타는 주택이외의 거처와 비거주용 건물내 거주하는 경우를 합한 수치임
 원자료 출처: 국토교통부, 2020년 주거실태조사

청년층 주거여건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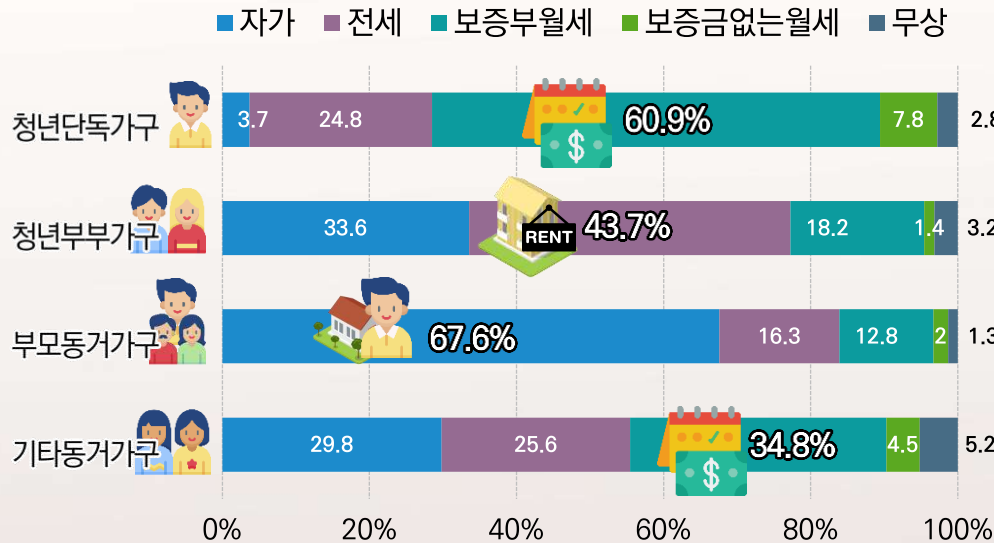
결혼 시 전세 → 자가로 진입
(부모지원 and/or 금융조달 가능자)

점유형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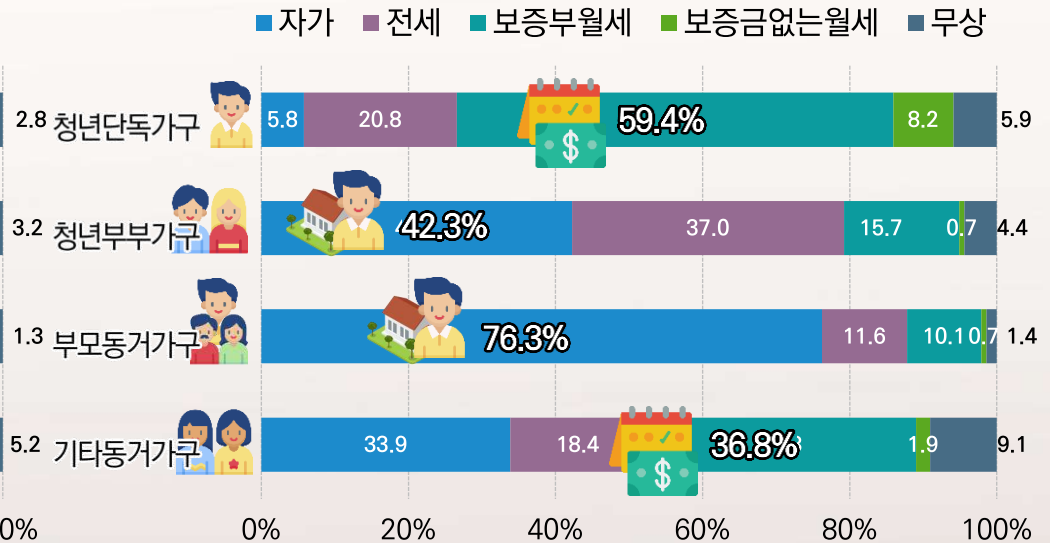
- 2010~2020 : 청년단독 보증부월세, 청년부부 전세 → 자가

청년가구 유형별 점유형태 분포(2010)



주: 가구원수는 실제 동거하고 있는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함
원자료 출처: 국토교통부, 2010년 주거실태조사

청년가구 유형별 점유형태 분포(2020)



주: 가구원수는 실제 동거하고 있는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함
원자료 출처: 국토교통부, 2020년 주거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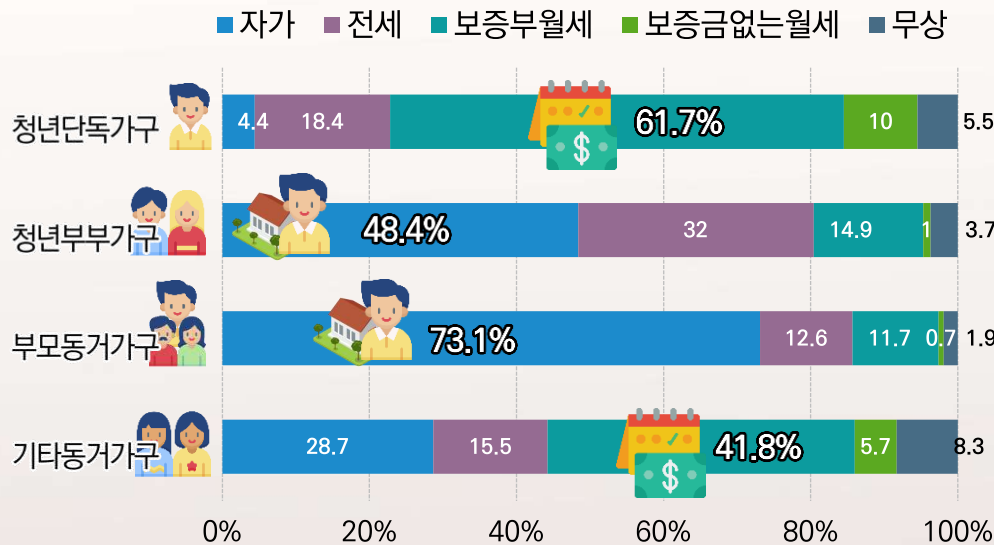
청년층 주거여건 변화



○ 점유형태 변화의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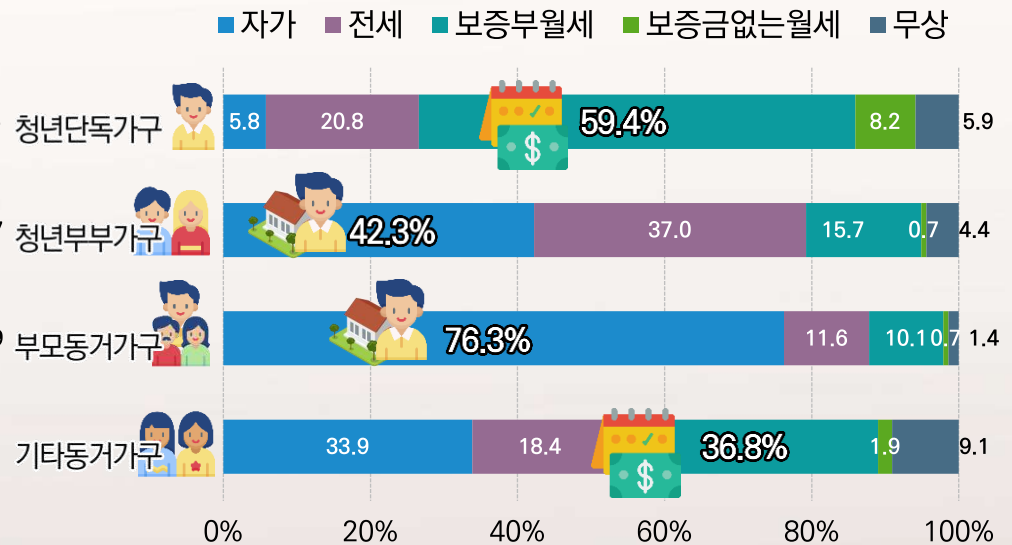
- 청년단독가구**
 - 2018~2020 변화
 - 청년부부 자가율 하락(6%p) + 전세비율 증가(5%p), 전세진입 가능성
 -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여파 짐작
- 청년부부가구**
- 부모동거가구**
- 기타동거가구**

청년가구 유형별 점유형태 분포(2018)



주: 가구원수는 실제 동거하고 있는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함
원자료 출처: 국토교통부, 2018년 주거실태조사

청년가구 유형별 점유형태 분포(2020)



주: 가구원수는 실제 동거하고 있는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함
원자료 출처: 국토교통부, 2020년 주거실태조사

청년층 주거여건 변화



○ 주거비 부담 : 가격 및 임대료, 부담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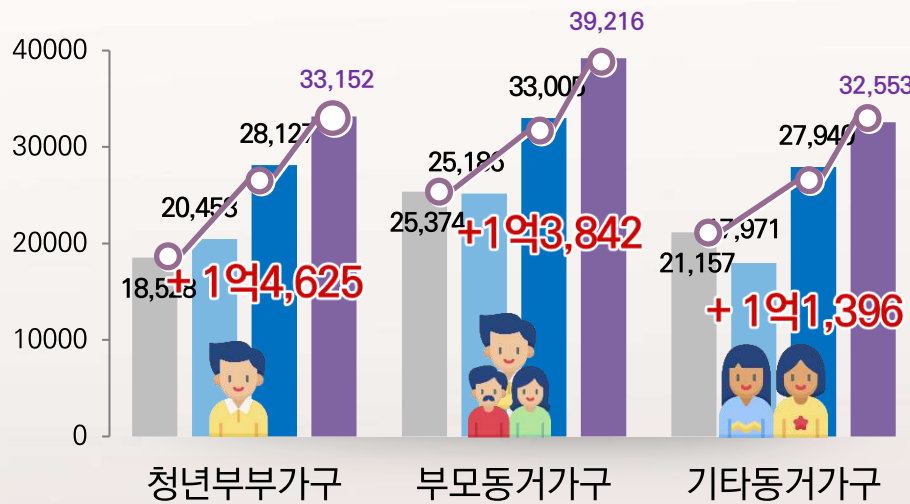


자가가구

- 청년부부가구 3.3억원 주택, 부모동거가구 3.9억원 주택가격
- 결혼 3.3억 주거비용 조달, 2년 전에 비해서도 5천만원 상승
- 부모의존 상승 and/or 금융대출 조달 증가 → 격차 증가 암시

청년가구 유형별 평균 주택가격(2010~2020)

(단위: 만원) ■ 2010 ■ 2014 ■ 2018 ■ 2020 ○ 2010~2020 변화



구분	2010	2014	2018	2020	2010~2020 변화
청년부부가구	18,527	20,458	28,127	33,152	14,625
부모동거가구	25,374	25,186	33,005	39,216	13,842
기타동거가구	21,157	17,971	27,940	32,553	11,396

주: 조사 당해연도 명목가격 기준임

원자료 출처: 국토교통부, 각년도 주거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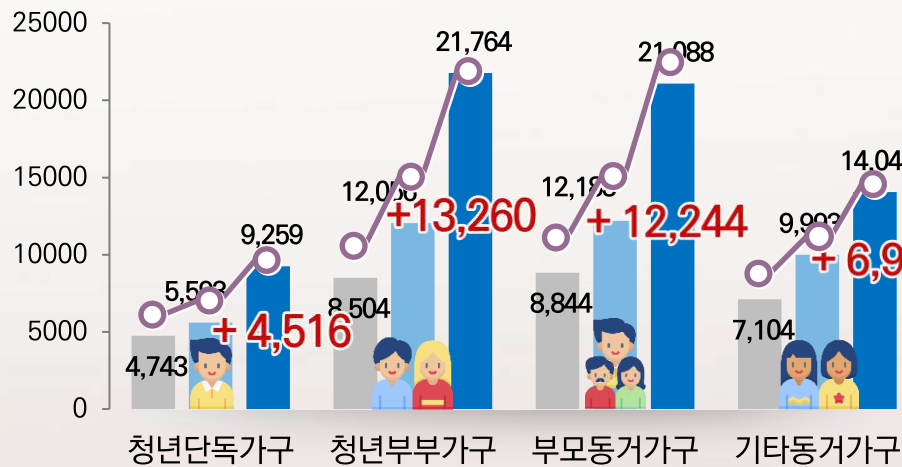
주거비 부담 : 가격 및 임대료, 부담감



- 청년부부, 부모동거 : 2.1억원 수준 전세; 청년단독은 전세보증금 9,259만
- 2010년 가구유형별 전세가격 차이 크지 않았으나 2020년에는 1억원 이상 차이
- 청년단독 1억 가까이 소요, 부부 2년전에 비해 4천만원 이상 상승 → 대출없이 안정적 점유형태 유지 근원적 한계

청년가구 유형별 평균 전세가격(2010~2020)

(단위: 만원) ■ 2010 ■ 2014 ■ 2020 ○ 2010~2020 변화



구분	2010	2014	2018	2020	2010~2020 변화
청년단독가구	4,743	5,593	7,762	9,259	4,516
청년부부가구	8,504	12,056	17,617	21,764	13,260
부모동거가구	8,844	12,183	17,911	21,088	12,244
기타동거가구	7,104	9,993	11,683	14,049	6,945

주: 조사 당해연도 명목가격 기준임

원자료 출처: 국토교통부, 각년도 주거실태조사

청년층 주거여건 변화



○ 주거비 부담 : 가격 및 임대료, 부담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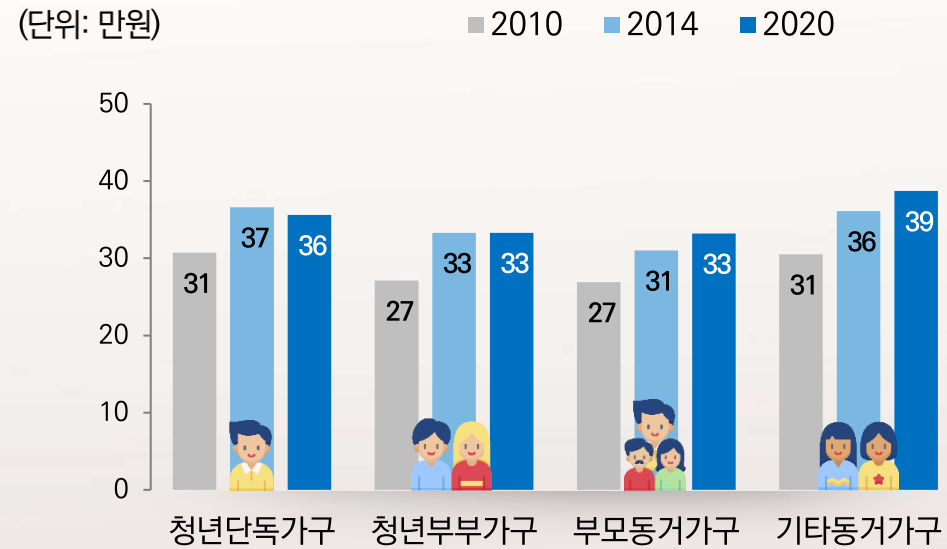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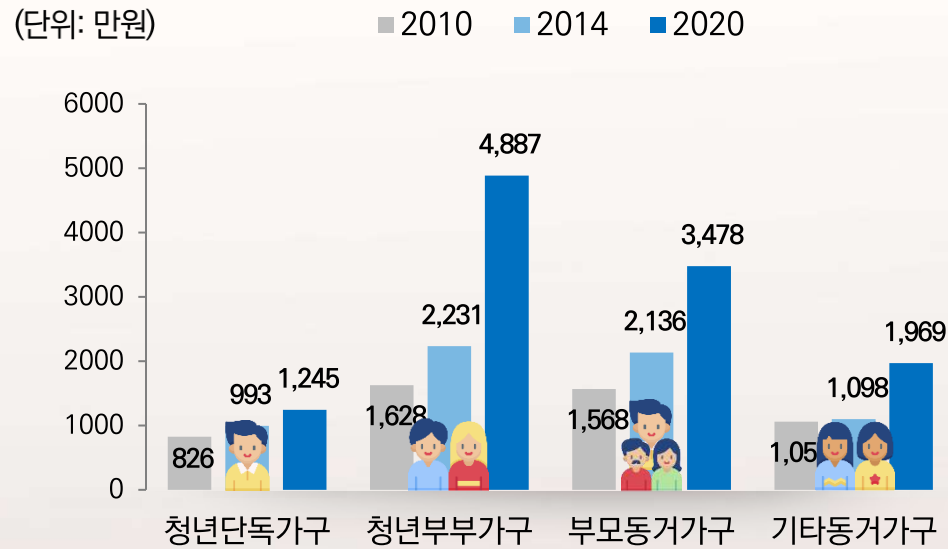
열악한 거처 상존 & 빈곤비즈니스, 지옥고 등 증가



- 청년단독가구 : 보증금 1천2만원에 36만원 월세 지불
- 청년부부, 부모동거가구 : 3-4천만원대 보증금에 33만원 월세
- 청년단독가구와 기타동거가구의 보증금, 월세규모 유사

청년가구 유형별 평균 보증금 수준(2010~2020)

청년가구 유형별 월세 수준(2010~2020)



주: 조사 당해연도 명목가격 기준임
원자료 출처: 국토교통부, 각년도 주거실태조사

청년층 주거여건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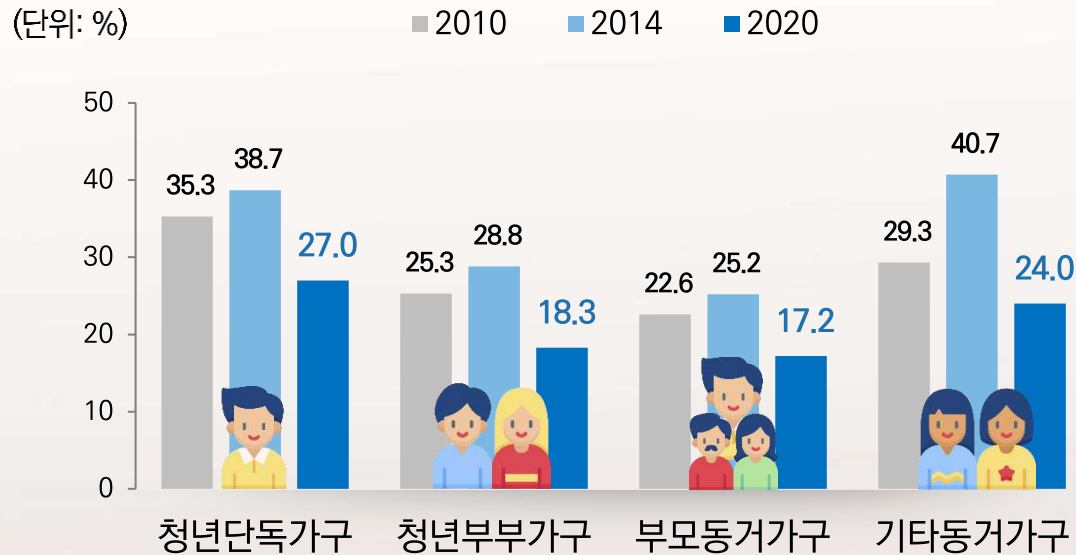


○ 주거비 과부담 가구

- 주거비부담이 소득의 30%를 초과하여 임대료부담이 과도한 가구
- **청년단독가구의 1/4 이상(27%)이 주거비부담이 과도**
- 청년부부가구는 18.3%, 기타동거가구 약 24%



청년가구 유형별 월소득 대비 임대료 과부담가구 비율(2010~2020)



구분	2010	2014	2020
청년단독가구	35.3	38.7	27.0
청년부부가구	25.3	28.8	18.3
부모동거가구	22.6	25.2	17.2
기타동거가구	29.3	40.7	24.0

주: 임대보증금의 월세전환율은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하는 전월세 전환율을 사용함. RIR 중위수 기준임
 원자료 출처: 국토교통부, 각년도, 주거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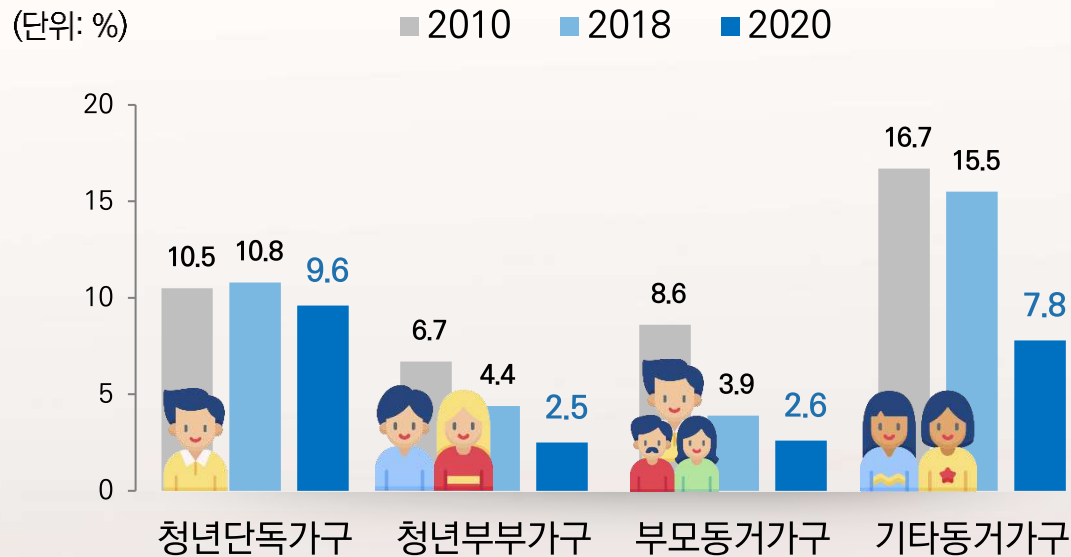


○ 최저주거기준 미달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청년단독가구에서 9.6%**, 기타동거가구에서 7.8%로 높게
- 부모동거가구나 청년부부가구는 2.5%로 낮은 수준이나 홀로 독립하면서 부모 또는 배우자와 거주하지 않는 경우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여건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음

**부모독립 시 지원없을 때
기준 미달 거처 선택**

청년가구 유형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2010~2020)



구분	2010	2014	2018	2020
청년단독가구	10.5	5.0	10.8	9.6
청년부부가구	6.7	4.5	4.4	2.5
부모동거가구	8.6	4.1	3.9	2.6
기타동거가구	16.7	13.4	15.5	7.8

청년층 주거여건 변화



○ 주거비부담에 대한 체감도 (임차료 및 대출금 부담정도)

- 청년단독가구 23.6% 주거비부담 체감도 높음
- 청년부부가구, 기타동거가구 20.7% 매우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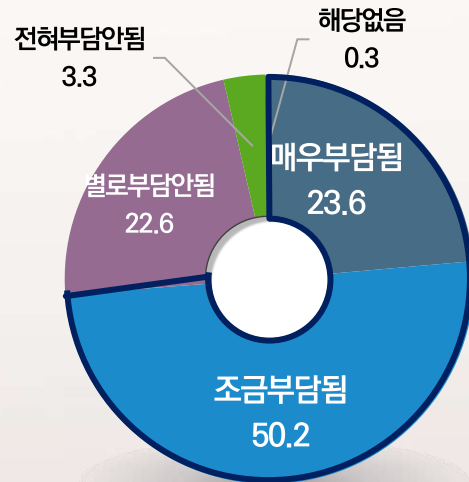
주거비 부담 증가의 결과

- ➔ 청년 단독: 생애 이행 지체
- ➔ 청년 부부: 양육비 지출과 경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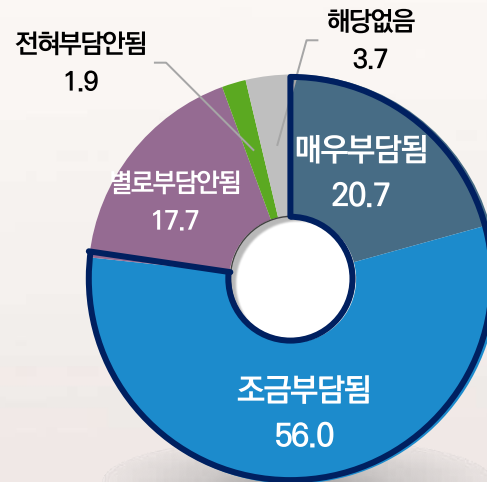


청년단독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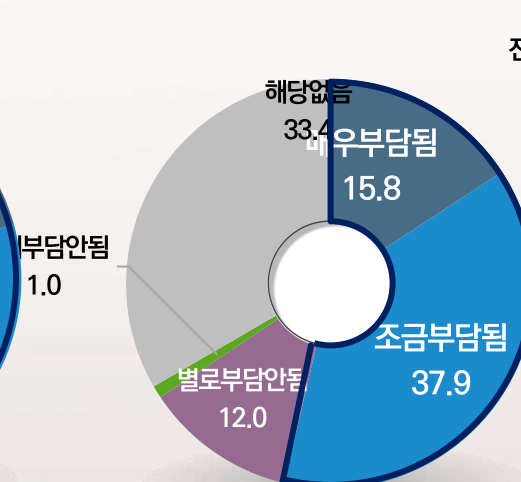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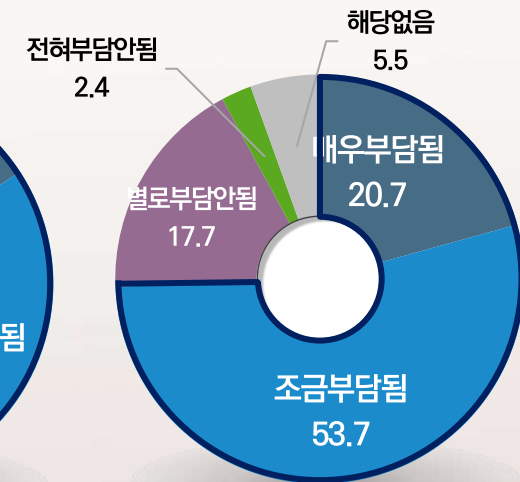
청년부부가구



부모동거가구



기타동거가구



주: 임대보증금의 월세전환율은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하는 전월세 전환율을 사용함. RIR 중위수 기준임
원자료 출처: 국토교통부, 2020년 주거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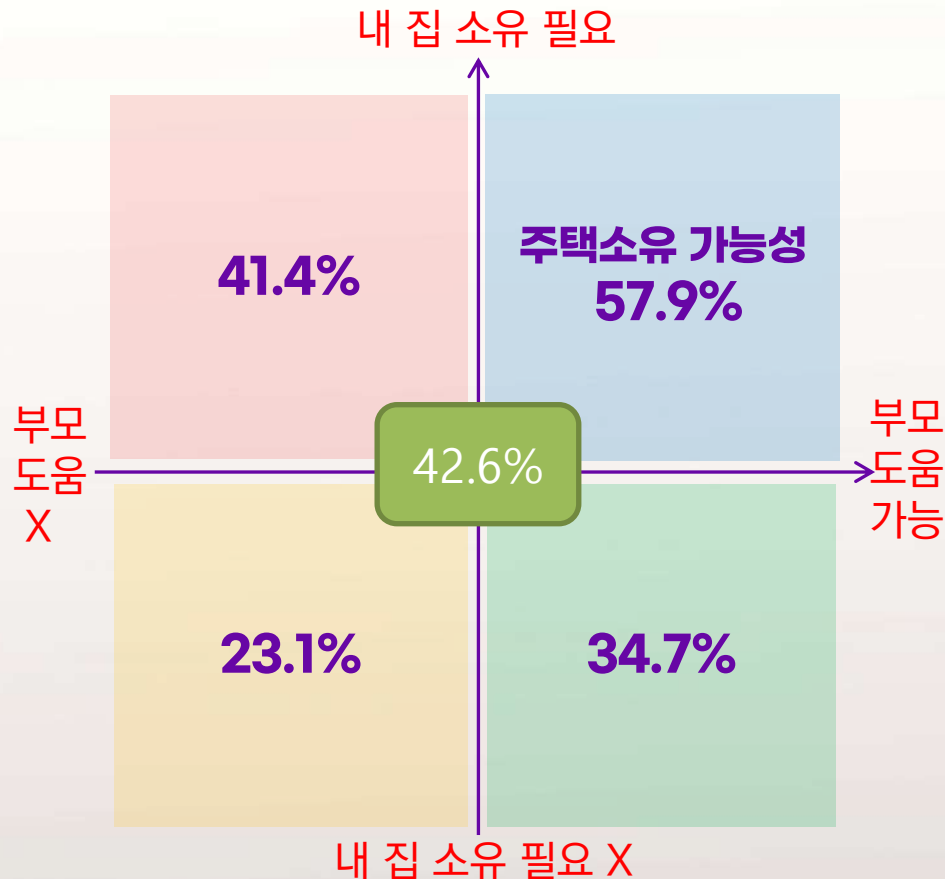
청년층 주거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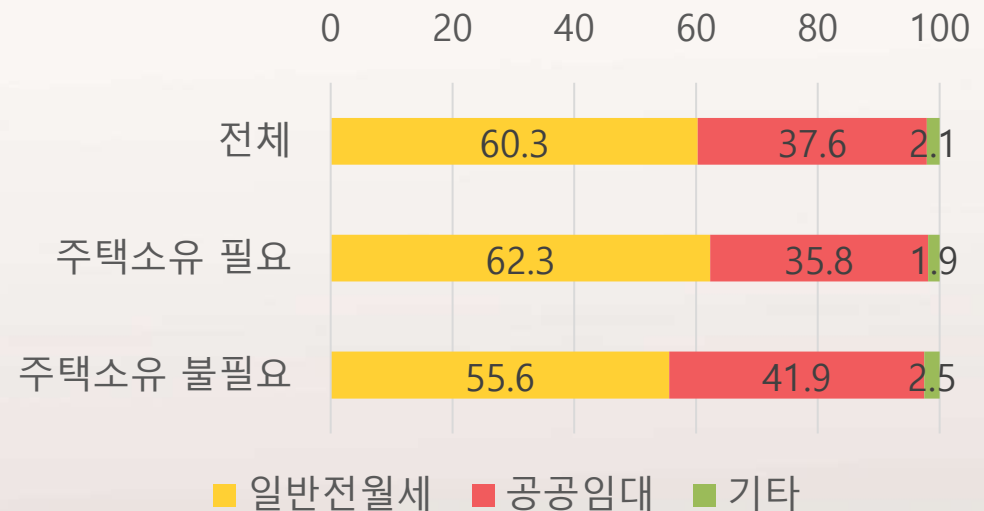
○ 내 집 소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무주택 청년은 76.9%

- 본인 소득 및 자산 고려 시, 향후 10년 이내에 주택을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무주택 청년은 42.6%
- 주택소유 필요성과 부모지원 기대 여부에 따라 현저한 차이



향후 10년 내 주택소유 불가능하면,
일반 전월세 거주(60%) > 공공임대주택 거주(38%)

주택소유 불가능할 경우의 선택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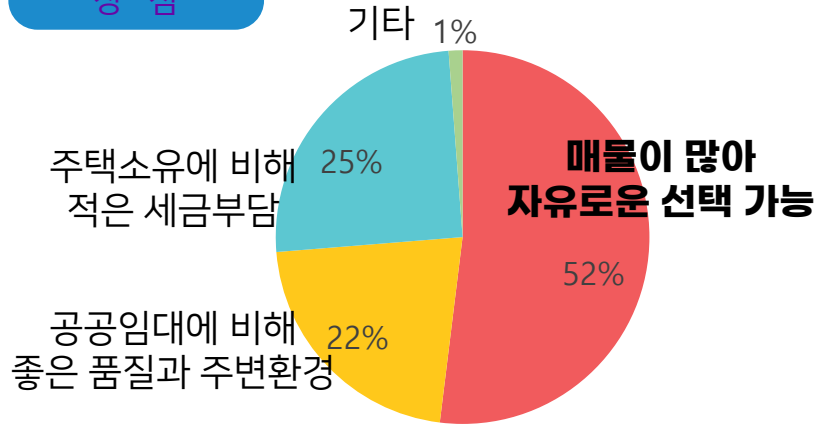


미혼 청년 주거 인식 (2030 미혼 청년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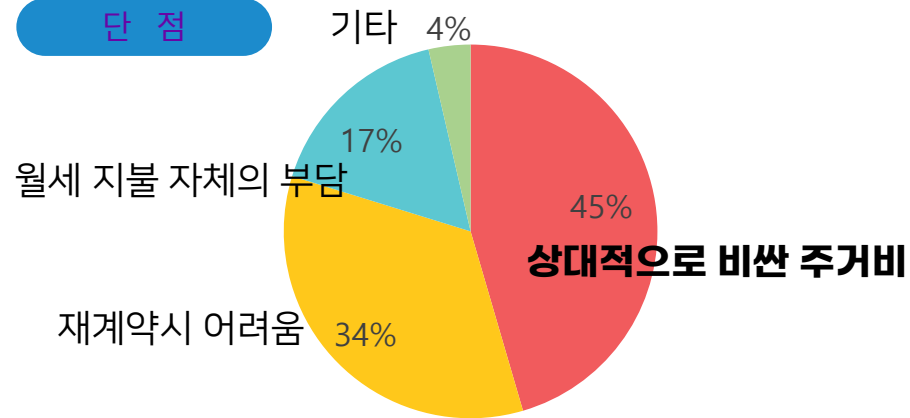


일반 전월세주택에 대한 인식

장 점



단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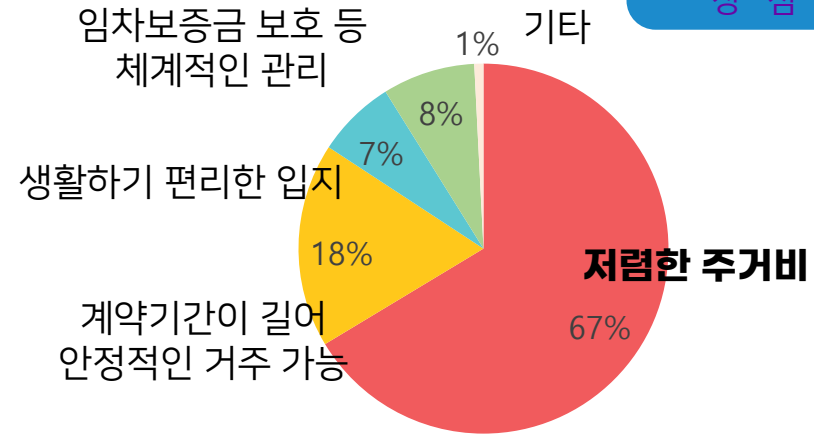
원자료 출처: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 2021년, 2030 미혼청년 설문조사

➔ 선택 가능성 확대 ➔ 공공임대 공급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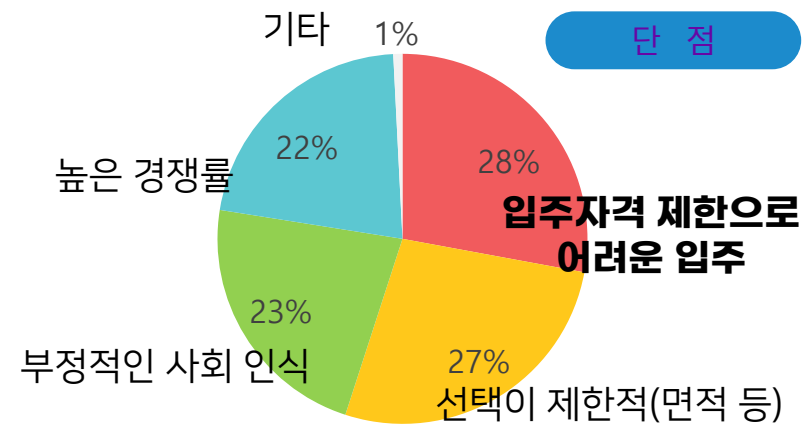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

장 점



단 점



➔ 저렴 주거비 장점 유지, 단점 개선(면적,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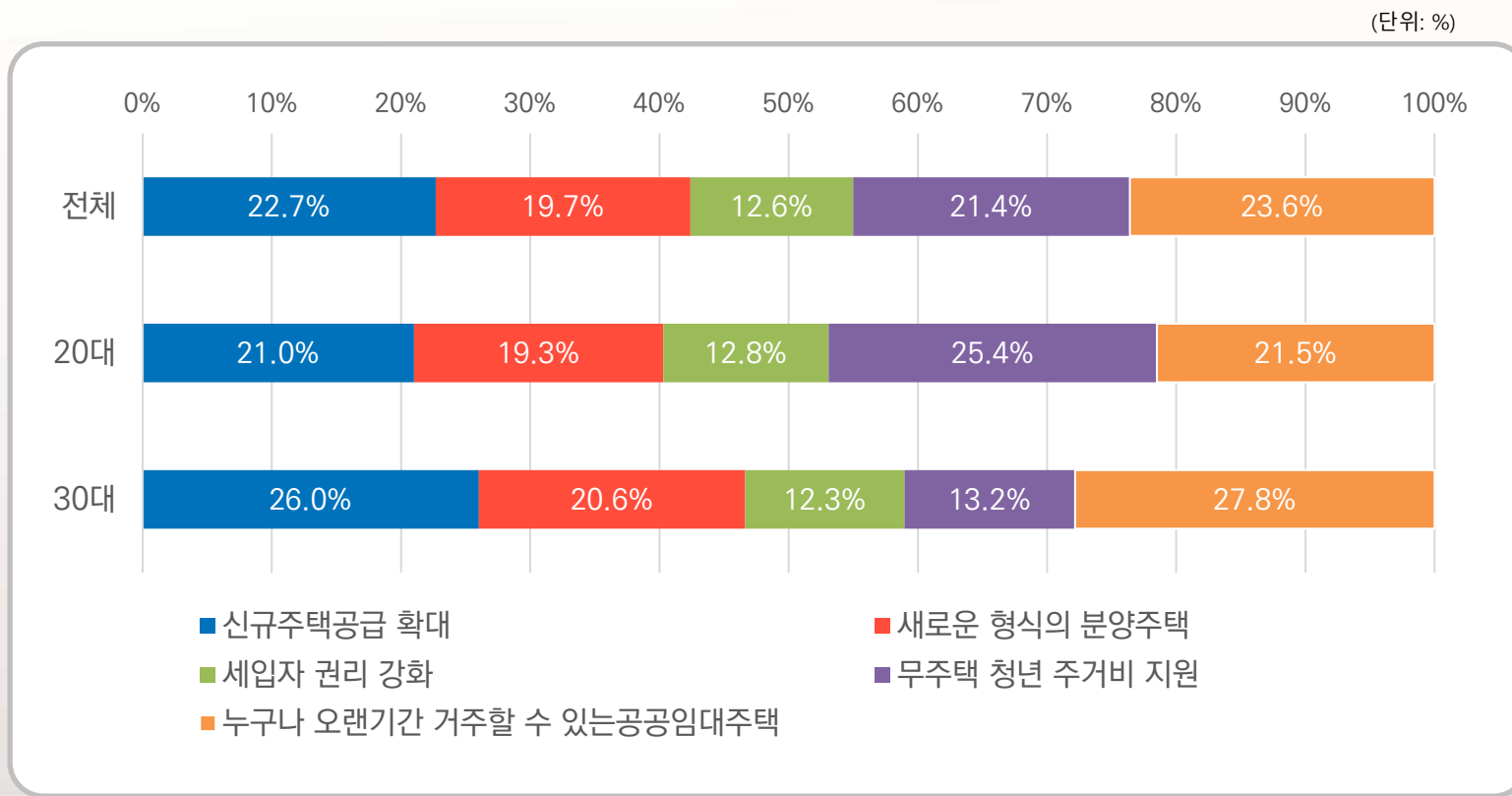
미혼 청년 주거 인식 (2030 미혼 청년 설문조사)



● 가장 시급한 정책은 '누구나 오랜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23.6%)'

● '신규주택공급 확대(22.7%)' > '무주택 청년 주거비 지원(21.4%)' 등의 순

- 20대의 가장 시급한 정책 : '무주택 청년 주거비 지원(25.4%)'
- 30대의 가장 시급한 정책 : '누구나 오랜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27.8%)'
- 30대는 20대에 비해 '신규주택 공급확대', '자가소유 기회를 확대하는 새로운 형식의 분양주택 도입' 더 시급



청년 성별(gender) 주거 욕구





○ (성별 차이) 독립의 결정 → 정보의 탐색 → 안전한 주택/주거지 요구 → 주거비/거처의 특성

○ 독립 결정 과정의 난관

- 안전함이 보장되지 않으면 독립 불가 (비용 제약 조건하에서 안전요건이 추가)
- 여성 청년의 독립에 대한 사회적 인식 “여자가 혼자 살면...문란하다던데...”
- 중개 가능한 대상 물건 자체의 축소, 상향평준화 (어차피 보여줘도 계약 안 할 것이니 안 보여준다)
 중개업소 여성 혼자 방문시 상대적 차별(무시) 경험 → 연령 차별 + 성별 차별 중첩

→ 더 적은 독립(남성 대비); 더 긴 통근 통학 감수; 더 비싼 주거비용 지출; 양호한 주거여건

→ 잠만 자는 공간이어도 남성은 독립 가능; 짧은 통학; 더 싼 주거비용; 열악한 주거환경 감수

자료: 민달팽이 유니온 상담사례와 인터뷰 결과



○ (성별 차이) 독립의 결정 → 정보의 탐색 → 안전한 주택/주거지 요구 → 주거비/거처의 특성

○ 정보의 탐색에 최대한 노력

- 제약조건이 많아서, 정부 지원 정보 탐색에 열정적
- 여성 청년 간 상호 정보 공유 활발
- 정책 인지도 여성 청년이 높아

- 청년주거상담센터, 여성 문의가 압도적

	모른다		들어 본적있다		알고 있다	
	남	여	남	여	남	여
행복주택	23.1	12.6	53.0	52.5	23.9	34.8
행복기숙사	60.9	59.2	28.6	28.6	10.5	12.2
청년전세임대주택	31.4	21.5	46.2	48.1	22.4	30.4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20.7	9.4	42.1	36.4	37.1	54.3

* 자료: 국토연구원, 2021 청년주거정책 인지도 조사 내부자료



남성 청년



여성 청년



○ (성별 차이) 독립의 결정 → 정보의 탐색 → 안전한 주택 요구 → 주거비/거처의 특성

○ 안전한 주거환경 요구의 실패

- 방법창 설치 요구 목살 빈번
 - 자기 비용으로 설치한다고 해도 반대하는 경우
 - 혼자 사는 여성의 불안함을 이해 못하는 임대인
- 안전 미확보는 생명의 위협으로 느끼는 여성 청년



여성 청년

○ 거처에서의 불안감, 주거환경의 안전에 민감

- 모르는 이가 거처 인근까지 따라오거나
 - 문 밖에 서성대거나, 이웃 거주민으로부터 스토킹 경험 등 흔히 보고
 - 남성 청년은 집의 문 잠금에도 무심 vs.
여성은 주소 노출 민간(택시타고 귀가시 길 건너 하차, 애인에게 집주소 X)
- 가장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에 옆집 사람(광진구 1인 청년조사 결과)



남성 청년



○ (성별 차이) 독립의 결정 → 정보의 탐색 → 안전한 주택/주거지 요구 → 주거비/거처의 특성

○ 주거안전에 대한 체감도 차이

- 주거안전에 도움이 되는 요소: 보안장치 >>>... >>> 임대인
- 보안장치(86%), 치안기관(73%), 이웃 또는 지인(72%),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65%), 임대인(38%)
- 귀갓길 불안 체감도: 물리적 위협 당할까봐 위협하게 느낀다: 여성 67%, 남성 25%
- 귀가 시 정류장에서 집까지 위협하게 느껴진다: 여성 39%, 남성 12%
- 귀갓길 위협하게 느껴져 통화(척) 해본 경험있다: 여성 74%, 남성 18%
- 귀갓길 위협으로 대처행동 해본 경험있다: 여성 85%, 남성 24%



여성 청년



남성 청년



○ (성별 차이) 독립의 결정 → 정보의 탐색 → 안전한 주택/주거지 요구 → 주거비/거처의 특성

○ (경제적) 주거비 지출

- 남성 주거비 과부담 적고; 여성이 주거비 지출 높은 경향
- 청년 1인가구 중 여성 28%, 남성 26%가 주거비 과부담 (RIR 30%+) (2020년 주거실태조사)

○ (물리적) 기준미달, 비주택 거주

- 남성 물리적 열악한 거처 거주 비율이 높음
- 청년 1인가구 중 남성 11.5%; 여성 7.0% (2020년 주거실태. 전체가구 4.6%)

○ (청년주택) 행복주택, 전세, 매입 등

- 전세임대, 매입임대주택 거주자 성별 분포



여성 청년



남성 청년



동아일보 | 문화

“코로나시대 극단 선택, ‘이대녀’ 가장 많이 늘어”

김재희 기자

입력 2022-04-15 03:00 | 업데이트 2022-04-15 03:26

○ (코로나시대 극단 선택)

○ 2020년 사망자 중 54%가 자살

- “청년자살자 증가는 직업, 주거, 인간관계에서 청년들이 다른 연령대보다 취약한 데 따른 것이다.”
- 팬데믹이 본격화된 2020년 20대 사망자 중 54.3%가 스스로 생을 마감
- 그해 20대 자살 사망자는 1471명으로 직전 해에 비해 12.6% 증가

○ (직업-주거-인간관계 취약한 20대)

- 직업을 잃고, 주거도 불안정한 상황에서 관계의 단절까지
- 다른 연령층에 비해 친구 관계에 더 의존적인 청년층의 정서적 박탈감이 심화
- 남성은 교통, 경찰 등 위기 상황에도 반드시 유지돼야 하는 필수인력 종사자 수가 여성에 비해 많음
- 저임금 직군에 종사하는 비율도 여성이 더 높아 코로나19로 인해 생활고를 겪는 위험도 그만큼 높아짐

출처: <https://www.donga.com/news/Culture/article/all/20220415/112890013/1> (2022.4.15 접속)



여성 청년



남성 청년

나가며





○ 청년 이행기 특성 이해 : 부모 독립 지원, 청년 주거

- 학업, 취업 (준비), 독립된 삶 등을 위한 단독가구 희망
- 부모로부터의 독립이 부모세대와 청년세대 모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 기성세대와 다름 인정

○ 부모 자산 이전 가능성과 연동된 청년 주거

- RIR 30 초과 임대료 과부담 가구 지원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지원 강화, 주거상향 이동

○ 공공임대 지속 공급 → 안전망 기능

- 시장에서 자력으로 주거 마련 어려운 청년
- 국가의 최저보장수준

○ 청년독립 증가에 따라 1인가구 삶의 질이 악화되지 않도록

-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소득, 정보, 돌봄 등에서 취약
- 개인의 삶의 선택권 존중과 생애 이행기 지원

○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비 과부담

- 국가의 주거보장 수준 설정 & 달성
- 최저주거기준 확대



청년단독가구



청년부부가구



부모동거가구



기타동거가구



○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

○ 저출생? 결혼 장려?

-

○ 어느 목소리에 반응하는가

- 약자에 눈을 감고 욕망의 폐부만 반응

○ 기본자산?

-

○ 국가는 무엇을 보장하려는가

-

○ 지속가능사회 가능?

-



여성 청년



남성 청년



청년단독가구



청년부부가구



부모동거가구



기타동거가구

한국공간환경학회 학술대회

청년 다양성에 기초한 주거여건, 인식, 욕구의 이질성 탐색

감사합니다

박미선 mspark@krihs.re.kr



한국공간환경학회 춘계학술대회 (2022.04.22)

고령자 관점에서 본 주거환경의 포용성

서울대학교 대전환기 지속가능도시 혁신인재양성단

환경대학원 박사후연구원

이새롬

01 연구의 배경

02 도시 포용성 및 고령자 배제 이론 고찰

03 고령자의 주거환경 경험과 포용성 의미 탐색

04 소득수준에 따른 주거환경 차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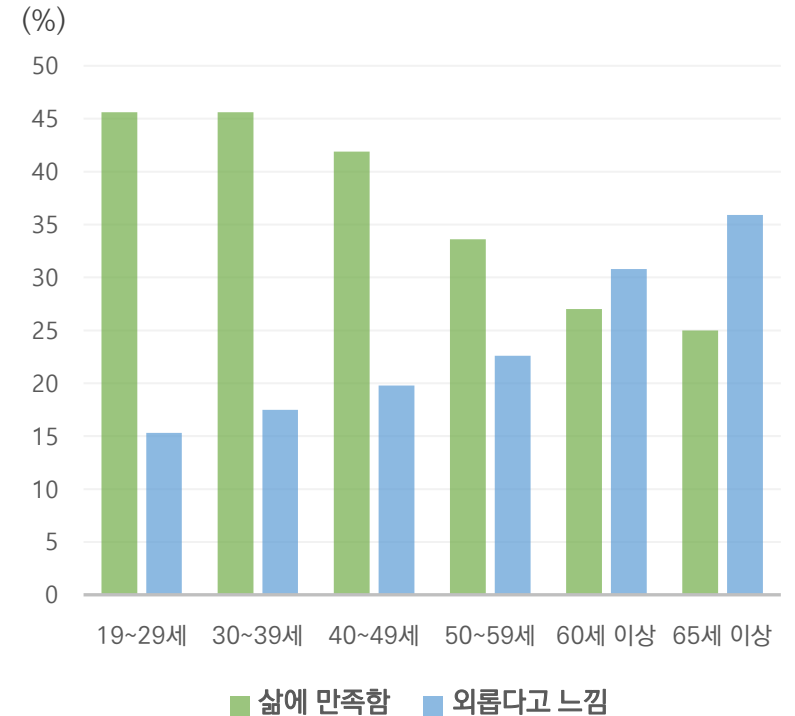
늘어나는 고령자, 길어진 노년기

■ 우리나라 고령자의 낮은 삶의 질

- 사회적으로 늘어난 고령 인구와 개인의 생애주기에서 노년기의 확대
- 노년층 빈곤률·자살율은 OECD 평균의 4배에 달하는 수준
(보건복지부·중앙자살예방센터, 2020)
- 삶에 대한 만족감은 가장 낮고 외로움은 가장 높은 연령 집단
(사회조사, 2020)

■ 노년기 깊어지는 격차

- 개인 간 삶의 질과 안녕감의 차이는 노년기에 가장 크게 벌어짐
- 생애 궤적에서 경험한 기회와 자원의 차이가 축적되므로 집단 내 이질성이 증대되는 연령층 (Walsh et al.,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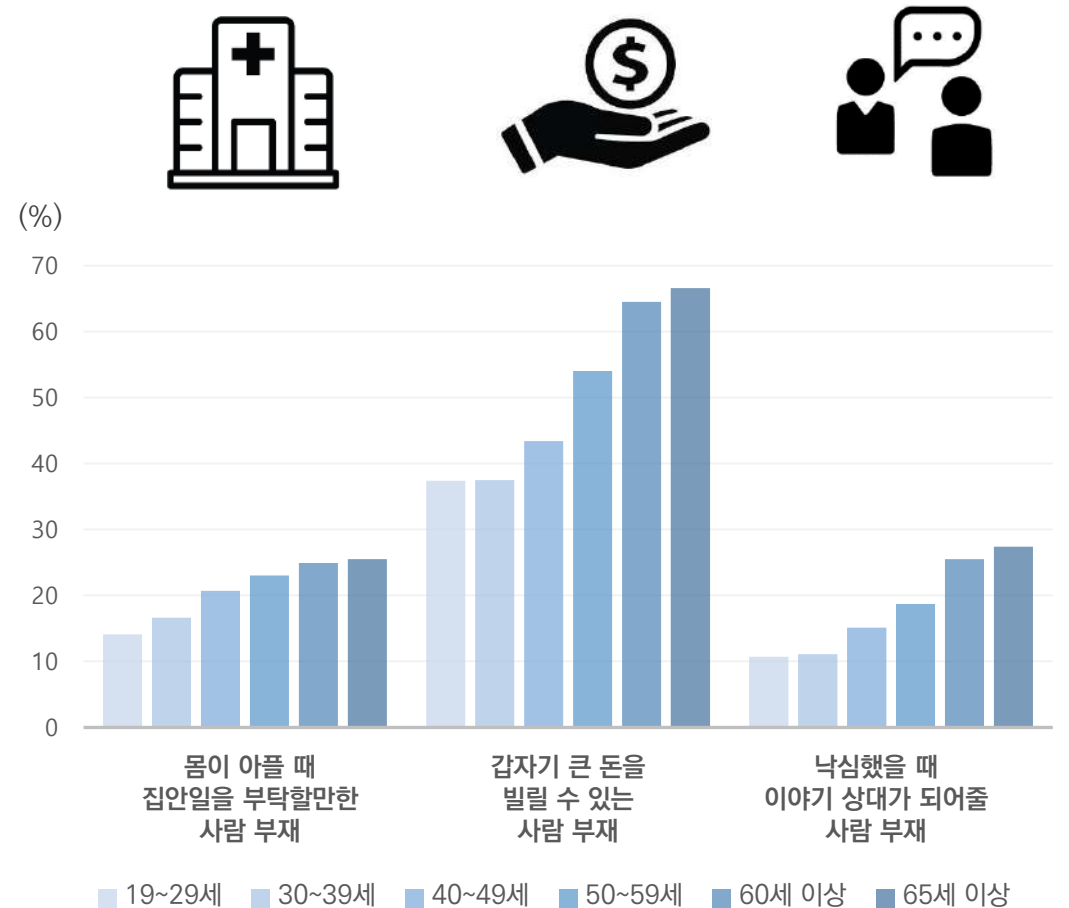
노년기에 당면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복합적·다차원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노년기

- ‘질병, 빈곤, 외로움’ 의 삼중고
- ‘신체기능 저하-외부활동 감소-소외감 증대’의 악순환
- 고령자 문제를 단일 차원으로 설명하기에 역부족

고령자의 ‘배제(exclusion)’

- 고령자는 배제에 처하기 쉽고, 다중배제 및 고착화 위험이 높음
(Scharf et al., 2005, Walsh et al., 2017)
- 배제 경험과 삶의 질 / 주관적 건강 / 우울감과의 관련성 보고
(Barnes et al., 2006; Tong et al., 2011)



* 사회조사(2020) 바탕으로 작성

어떠한 환경에서 나이들어 가는가

■ 삶의 공간적·사회적 영역 축소

- 노년기 삶의 범위는 도시 전체에서 집 주변 주거환경으로, 사회활동 전반에서 일상생활로 축소
- 집 안팎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고 근린을 벗어날 기회 감소하므로
주거지의 서비스, 자원, 환경 등에 대한 의존도 커짐 (Glass & Balfour, 2003)

■ 정주에 대한 욕구 증가

- 환경에 대한 적응력 약화로 인해 변화에 취약한 고령층
- 서울시 고령자의 86%는 ‘현재 거주하는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 원하며
그 이유는 ‘익숙한 공간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가 가장 높은 76.5%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2018)
- ‘지역사회에서 나이들기(Aging in Place)’는 살던 집, 살던 동네에서 가능한 오래 생활할 수 있는 것
- 하지만 ‘어떠한 환경에서 나이드는가(Place of Aging)’에 대한 논의는 부족 (Gardener, 2011)



‘포용적인 주거환경에서 나이들기’ (Aging In Inclusive Residential Environment)

고령자 배제 완화를 위한
‘주거환경 포용성’
개념 구성

‘고령자의 관점’에서
주거환경 포용성의
의미 탐색

소득수준에 따른
주거환경 ‘차이’ 분석

연구의 대상 및 범위

-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UN 고령화율 산출 기준)
- 대도시는 사회적 배제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공간 (박인권·이민주, 2016)
- 대도시의 높은 주거비, 짧은 거주기간, 혼잡성, 익명성, 빠른 변화 등의 조건은 고령자의 어려움을 가중할 위험

혼합연구(mixed method approach)

문헌연구	도시포용성 및 고령자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론적 고찰 및 개념 틀 설정
정성적 접근	서울시 고령자 대상으로 심층면담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의 경험과 응답에 근거하여 주거환경 포용성의 의미를 탐색할 필요
정량적 접근	서울시노인실태조사 (2018) 자료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다 많은 표본을 대상으로 일반화된 특성 도출 • 소득수준에 따른 주거환경 차이 검증

도시 포용성과 고령자 배제 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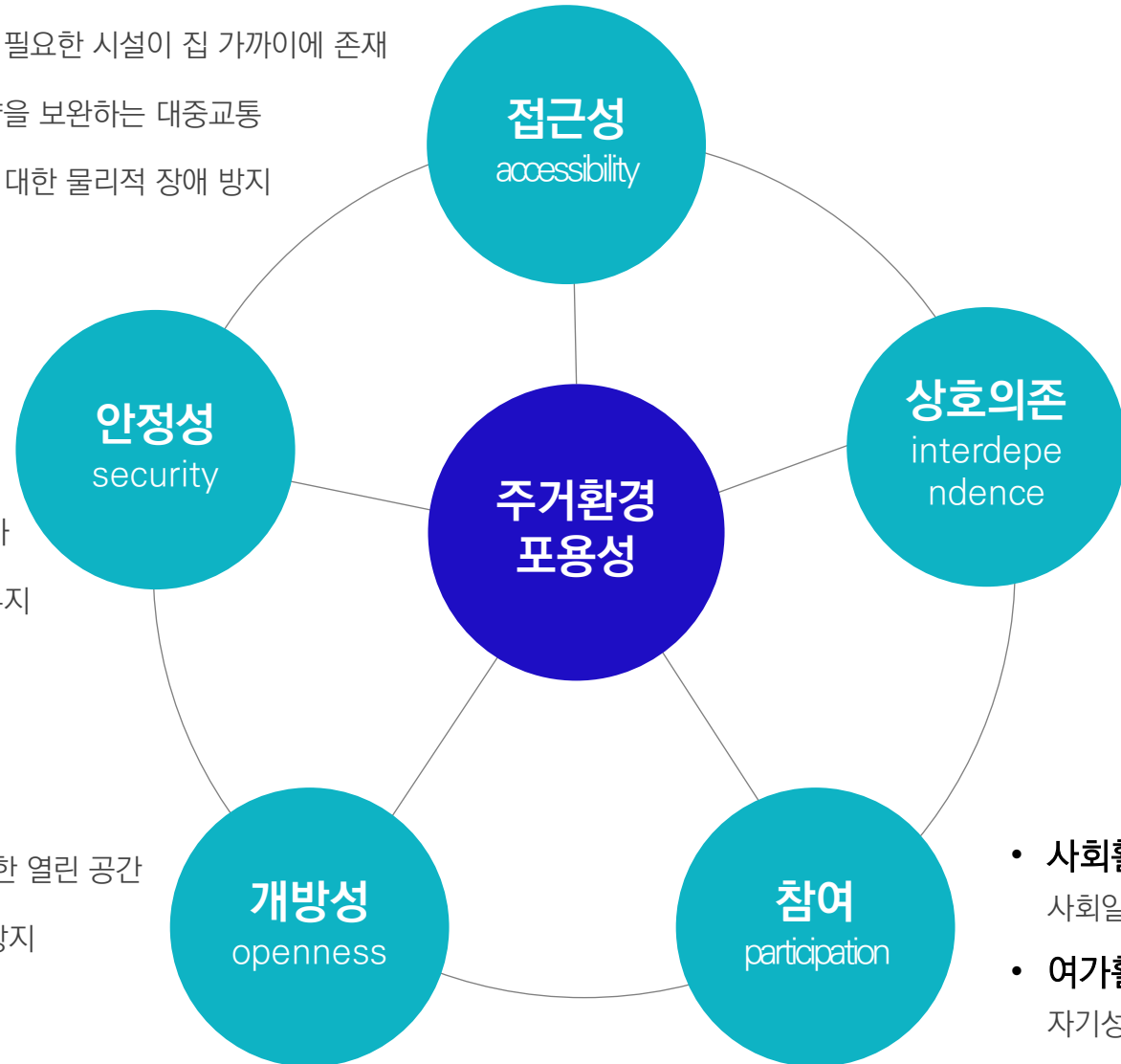
	도시 포용성	고령자 배제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나이, 인종 등과 관계없이 ‘모두가’ 도시가 제공하는 각종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 (UN Habitat, 2002) • 경제·사회·공간적 차원의 배제 문제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통합적’ 대응 (World Bank,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차원에서 자원과 권리의 ‘결핍’ 또는 정상적 관계 형성과 참여의 ‘불가능’ (Levitas et al., 2007) • 빈곤 또는 박탈과 차별되는 ‘다차원성, 동태성’ (Berghman, 1995)
유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용도시를 위한 공간적 전략에 대한 논의들 (UN Habitat, 2017; 박인권·이민주, 2016; 변미리, 2016) • 살만한 주택, 저렴한 주거, 공공공간 확충, 주거지 분리 해소, 서비스 공급의 형평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의 특수성 반영한 논의들 (Scharf et al., 2005; Walsh et al., 2017; 배지연 외, 2006; 박현주·정순돌, 2012) • 경제활동 참여가 핵심이기보다 비공식적인 참여와 사적 관계망, 건강 등의 중요성 강조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취약계층 대상 • 도시라는 지리적 스케일이 고령자의 일상생활을 대입하기에 광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및 근린환경의 중요성 언급하고 있으나 공간환경에 대한 논의의 구체성 결여

고령자 관점의 포용적 주거환경 개념과 구성 차원

- **근린시설 근접성** :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집 가까이 존재
- **대중교통 편의성** : 이동성 제약을 보완하는 대중교통
- **양질의 보행환경** : 외부활동에 대한 물리적 장애 방지

- **안전한 주택** : 노년기 주택 안전에 대한 필요 반영
- **저렴한 주택** : 한정된 소득으로 주거비부담 위험 증가
- **장기거주** : 정체성 형성하는 익숙한 장소와 기억의 유지

- **풍부한 공공공간** : 누구나 언제나 이용가능한 열린 공간
- **세대간 통합공간** : 연령에 따른 공간 분리 방지



- **지역사회관계망** : 가까이에서 도구적, 정서적 자원을 교환하는 통로
- **고령자 인정** :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엄한 인간으로서 인정과 비차별

- **사회활동** : 사회일원으로서 역할 지속
- **여가활동** : 자기성취 및 의미 있는 시간 활용

면담조사 방법

-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개별 심층면담
- 2021년 10월, 서울시립 A 노인종합복지관
-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총 10명 대상

“집 안팎의 환경에서 언제 만족감, 편안함을 경험하는지”

“집 안팎의 환경에서 언제 소외감, 어려움, 불안을 경험하는지”

“어떠한 주거환경에서 노후를 보내기 원하는지”

질적 내용분석(Qualitative Content Analysis)

- 녹취록을 바탕으로 유사한 의미를 가진 내용을 범주화하여 중심 현상을 파악하는 방법 (Hseish & Shannon, 2005)
- 원자료 > 코드(code) > 주제(theme)로 단계적으로 축약

〈표〉 면담 대상자

대상자	연령	성별	점유 형태	주택 유형	동거인	기간	주거지원	경제활동
어르신1	91	남	자가	아파트	아들내외	60년	-	x
어르신2	92	남	임차	다세대 반지하	혼자	60년	주거급여	X
어르신3	78	남	임차	다가구 반지하	혼자	8년	전세금 지원	X
어르신4	82	여	임차	다가구 1층	혼자	30년	주거급여	O
어르신5	78	여	임차	단독 반지하	혼자	40년	주거급여	X
어르신6	82	여	임차	영구임대 아파트	혼자	20년	주거급여	X
어르신7	80	남	임차	다세대	혼자	5년	전세금 지원	X
어르신8	87	남	자가	단독	부부	60년	-	O
어르신9	72	여	자가	다세대	부부	40년	-	O
어르신10	76	여	자가	다세대	아들	10년	-	x (손주양육)

안정적인
주거

오래 살아서 익숙하고 편안한 동네

이웃과 함께 공유하는 삶의 터전

주거급여 통한 주거비부담 경감

“변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 익숙한 거. 이 자리에서 죽어야지요.” (어르신 8)

“딸이 자꾸 옆에 와서 살라고 하는데 싫어. 여기가 내 터전이고 친구가 있으니깐.” (어르신 4)

“집은 오래 사는 게 중요하지. 근데 임대아파트라도 나는 00구에만 있었으면 좋겠어. 먼 데 살면 (이웃과) 떨어지니깐. 그건 내 소원이지. 오래 살 수 있는 집. 집이 제일 소중한.” (어르신 5)

“전에는 고시원에 살다가 취약계층이라고. 구청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고시원보다 훨씬 낫지. 여기가 맘이 편해요” (어르신 3)

-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지역사회 계속 거주에 대한 확고한 의사
- 상실과 변화의 연속인 나이들의 과정 속에서 장기거주는 개인적, 사회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바탕

집밖의
외부공간
경험

가로, 공지 등 자유로운 외부공간 이용

부담없이 찾는 고령자 시설

가까운 목적지와 이동 지원

“밖에 나와 돌아다니는 게 좋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좋아.” (어르신 6)

“나는 걸어 다니는 걸 좋아하고 차 안 타려 하거든. 내가 00동 살잖아. 00시장까지 다 걸어 다녀. 여기서 가려면 버스정류장 네 개인데 걸어. 운동이다 하고.” (어르신 5)

“복지관에서 공부하고 밥 먹고 내 친정집이요.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일부러 방을 이쪽으로 얻어 왔어요.” (어르신 7)

- 뚜렷한 목적지가 있다기보다 자유로운 이동, 외부환경을 탐색, 여유시간 소비의 행태
- 저렴한 식사 해결, 동년배와의 교류, 다양한 교육 활동, 일자리 소개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복지관
- 집 가까이에 위치하여 자주 찾거나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먼 거리에서도 접근

주제

코드

이웃과의
상호의존

외로움을 잊게 하는 이웃

서로 돕고 살피는 이웃

“외로울 때도 있지. 많이 아플 때. 저번에는 냉장고에 물이 있는데도 일어날 수도 없지. 그때 누가 오면 반갑잖아. 파스를 붙이려도 여긴 (등 뒤에) 못 붙이니깐 사람이 오면 붙여 달라고 하고.” (어르신 4)

“아들보다 이웃이 자주 보니 더 좋지. 이 동네가 사람이 훈훈한 맛이 있잖아. 고향이랑 같으니까... 안 좋은 다리를 집에서 넘어져서 화장실 넘어져서 석 달 깎스했어. 그때 교회 식구들이 와서 도와줬어.” (어르신 2)

- 때때로 가족보다 더 가까운 존재로 음식을 나누거나 아플 때 찾는 실질적 도움을 주고받음
- 각종 지원의 통로인 이웃은 가족에 대한 의존을 원하지 않는 고령자들의 삶에 중요한 함의

자발적인
참여활동

삶의 활기와 성취를 경험하는 활동

다른 사람을 만나는 외롭지 않은 시간

“(복지관에 오면) 레크레이션 댄스도 하지, 운동도 하지. 여러 가지 해서 시간이 부족해요.” (어르신 6)

“여기서 소개해 준 어린이집에 청소하러 가는 거야. 그전에는 동네 여자들과 집에서 놀고 그랬는데... 지금은 여기서 일자리 마련해줘서 너무 고마워. 일하는 건 즐겁고 좋아.” (어르신 9)

- 참여하는 활동의 다양성은 많지 않지만 의미있는 시간을 보낸다는 그 자체로 만족
- 경제활동은 삶 활기를 찾아준 활동 또는 생활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하는 활동으로 상반

주제

코드

불안정한
주거

열악한 거처와 유지관리 부담

주거비부담과 주거선택 제한

원치 않는 이사와 고립에 대한 불안감

“화장실도 오래되어서 변기도 물이 새고, 보일러가 배관이 어떻게 됐는지 쓰시지 않아. 이불 두 개 덮고 자요, 전기장판 깔고.... 가장 불안한 거는 집이 고장 나면 내가 고쳐야 하니 그게 불안해요.” (어르신 3)

“어디 비싼 데는 못 가잖아. 여기는 싸니깐. (중략) 아파트가 좋지. 겨울에 안 춥고. 근데 우리가 되겠어?” (어르신 4)

“딴 데 외따로 가면 더 외롭잖아. 그때 가면 아주 고립되는 거잖아.” (어르신 5)

- 열악한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해충, 냉난방, 설비 등에 대해 걱정
- 한정된 주거비로 인해 아파트는 살고 싶지만 살 수 없는 주택유형
- 임대주택보다 주거급여를 선호하는 이유는 사는 지역을 떠나 고립되는 것에 대한 불안

급격한
환경 변화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주거환경 변화

주택가격 상승으로 주거선택 제한

“(전에 살던 데) 다 헐려서 철거하잖아. 11년을 살았는데 철거해서 거기로 간지. 작년 10월 15일에 이사했거든. (중략) 돈 많은 사람들이 집 사서 세를 내는 거라. 여기도 아파트 들어오면 헐린다고 하는데....” (어르신 4)

“오히려 집을 뺏기는 느낌이지. 너무 비싸서 오히려 우린 못 들어가. 지금 월세 받는 게 더 좋지. (중략) 있는 사람들은 좋겠지만, 나이 든 사람은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 월세도 벌기 힘들고.” (어르신 9)

-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주, 이웃관계 와해, 비용 부담에 대한 불만
-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자녀와 가까운 곳에서 살거나 한 곳에 장기거주하는 것이 어려워짐

주제

코드

외부공간
이용 제약

열악한 보행환경과 접근 어려운 위치

고령자시설의 다양성 부족

근린시설 이용의 경제심리적 어려움

“언덕배기 같은 데 말고, 여기 올라올 때마다 내가 그래. ‘깔딱 고개 올라온다’라고. 이런 데 말고 쉽게 올 수 있는 장소에 (있으면 좋겠어).” (어르신 10)

“노인시설이 경로당 하나뿐이에요. 근데 앉아서 다들 고스톱만 하고 있으니깐 거기가 안 좋아요. 노인이 갈 수 있는 데가 하나밖에 없으니깐... 이런 시설들이 다양하게 있으면 좋겠어요.” (어르신 8)

“마트는 사고 싶은 거 있어도 얼마인가 글자가 안 보여. 가르쳐 달라고 하면 ‘쓰여 있어요’ 하고는 안 가르쳐주고 그냥 가. 그래서 그 물건을 못 사고 마트를 못 가. 할머니들이 파는 데가 제일 편해서 동네 시장 가.” (어르신 6)

-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은 ‘외롭고, 답답한’ 시간이어서 어디라도 나가고 싶지만 마땅히 갈 데 없는 상황
- 신체경제적 취약성과 물리적, 심리적, 경제적 장벽이 맞물려 원하는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험

관계망의
와해

이웃관계에서의 소외

나이에 의한 차별과 세대간 무관심

“내가 수급자니깐 사람들이 안 좋아해. 이웃하고 일절 교류 없어. 옆집에 누군지도 몰라. 저번에 누가 이유 없이 우리 집 문을 때려 부수고 그래서 경찰이 온 적 있어.” (어르신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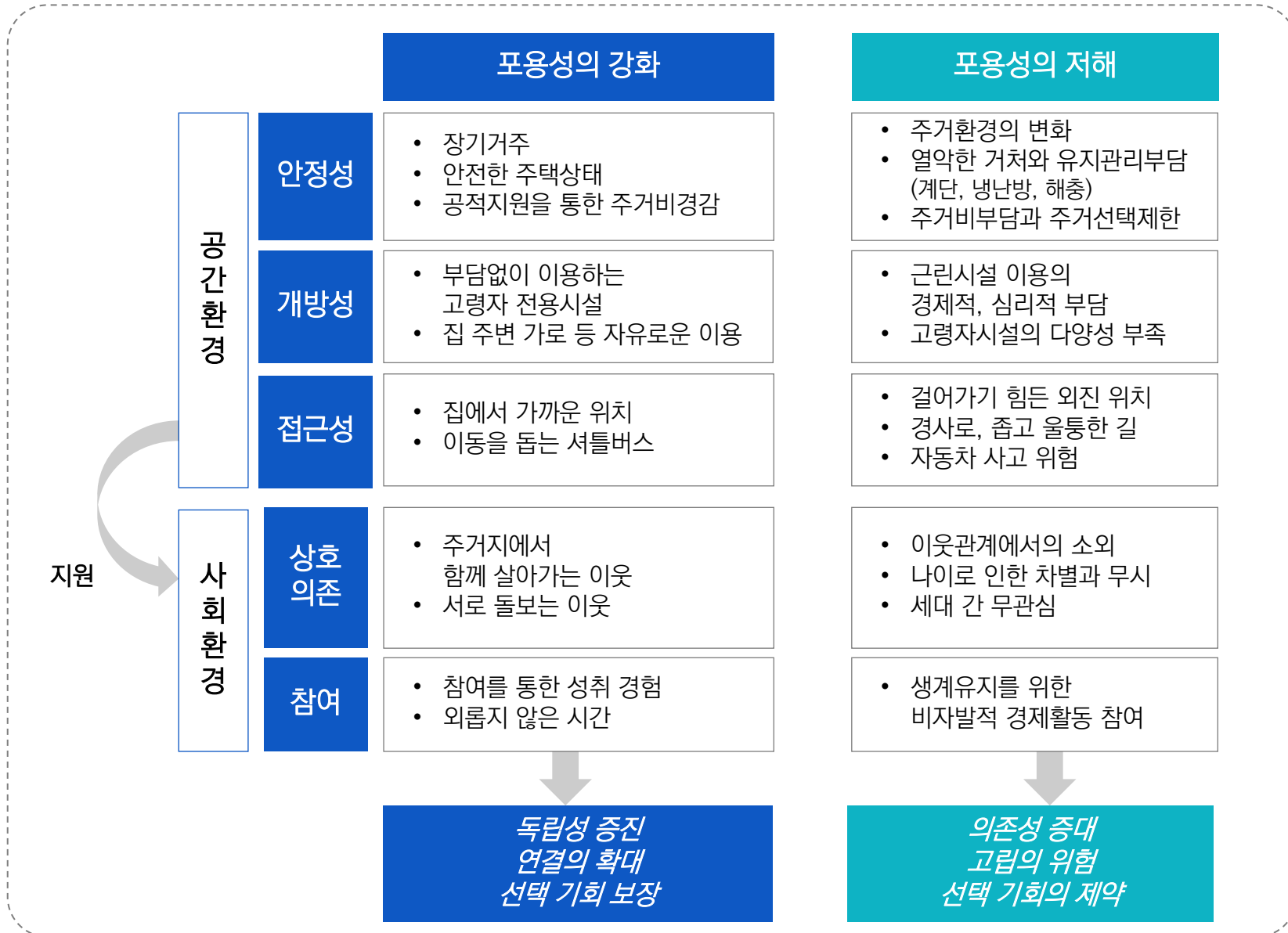
“젊은 사람은 늙은이 심정을 모르니깐. 크게 해달라 그럼 싫어하고 얘기하다가 가버려. 짠하고 속상해.” (어르신 6)

- 주로 남성 참여자들이 이웃관계망에서 소외되는 경향
- 청장년세대는 ‘대하기 어려운, 우리와 다른’ 집단으로 인식하며 교류는 거의 부재

주제

코드

고령자 관점에서 본 주거환경 포용성의 의미



〈고령자 포용적인 주거환경〉

“노년기 제한된 자원을 보완하여
비자발적인 의존이나 고립된 상황을 벗어나
독립성과 사회적 연결을 돕는
주거환경”

소득에 따른 개인적 특성 차이

2018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 지난 1년 월평균 가구소득의 중위값 기준
(근로·사업·재산소득, 연금, 용돈, 정부보조금 등 포함)
- 총 3,034명 가운데
저소득 1,498명 / 고소득 1,536명

〈표〉 소득수준별 개인적 특성 차이

변수	전체 (n=3,034)	소득수준			t-value	
		저소득 (n=1,498)	고소득 (n=1,536)			
성별(남성=1)	0.47	0.42	0.51	4.46***		
연령	74.11	75.51	72.75	-12.25***		
가구 유형	독거	(23 %)	(43 %)	(4%)	(1.0e+3***)	
	노인부부 가구	(40 %)	(45 %)	(35 %)		
	기타 가구	(37 %)	(12 %)	(61 %)		
사회경제적 특성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37 %)	(48 %)	(27 %)	(266.69***)
		중학교	(24 %)	(28 %)	(21 %)	
		고등학교	(29 %)	(20 %)	(38 %)	
		대학교 이상	(9 %)	(4 %)	(14 %)	
월가구소득(만원)	229.52	103.46	352.47	59.02***		
경제활동 참여=1	0.34	0.25	0.42	10.16***		
신체적 특성	주관적 건강	3.25	3.04	3.44	12.05***	
	만성질환 3개이상=1	0.28	0.33	0.23	-6.50***	
	인지기능 제한=1	0.20	0.25	0.14	-7.31***	
	IADL제한=1	0.18	0.19	0.17	-1.50*	
	장애 유=1	0.08	0.11	0.06	-4.95***	

주1) * p<0.1, ** p<0.05, *** p<0.01

주2) 괄호 안의 값은 해당 비율(%) 또는 Pearson chi-square 검정값을 나타 냄

소득에 따른 주거환경의 공간적 차이

주택 상태 및 점유형태

- 모든 항목에서 고소득 집단의 주택상태 만족 수준 높음
- 자가점유율 : 저소득 (60%) < 고소득 (85%)

주거비부담수준

- 생활비 중 가장 부담되는 항목이 '주거비' 라는 응답 : 저소득 (40.9%) > 고소득 (36.2%)

집 안에 있는 시간

-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 : 저소득 (17.7 h) > 고소득 (15.7 h)
- 동 밖에서 보내는 시간 : 저소득 (3.87 h) < 고소득 (5.23 h)

〈표〉 소득수준별 주거환경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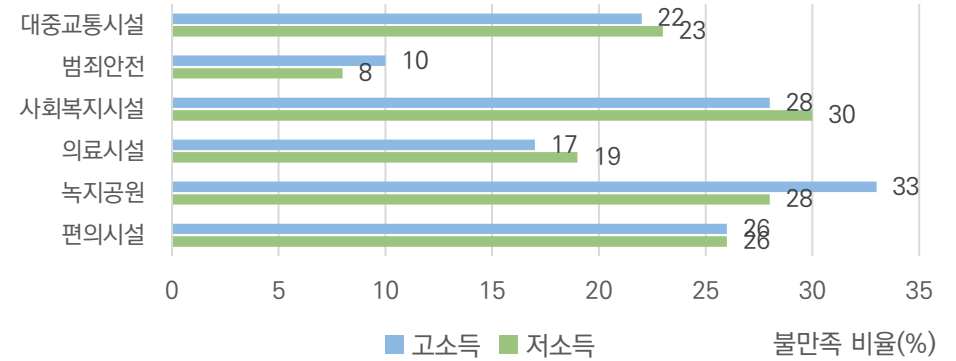
변수		소득수준		
		저소득	고소득	t-value
주택의 물리적 상태	총점	24.45	25.64	7.67***
	구조 편리성	3.63	3.79	6.03***
	구조 안전	3.52	3.68	5.49***
	화장실 안전	2.89	3.09	5.07***
	냉난방	3.65	3.84	6.57***
	환기	3.79	3.93	5.35***
	방음	3.38	3.55	5.63***
	공간 충분	3.59	3.76	6.44***
주거비 부담	생활비 중 1순위	(40.9)	(36.2)	(22.12***)
	생활비 중 2순위	(36.9)	(34.1)	
	1,2순위 아님	(22.3)	(22.8)	
자가 점유율 (%)		0.60	0.85	255.8***
지역 내 거주기간 (년)		21.95	22.36	0.78
시간 활용	집 내부	17.07	15.67	-12.71***
	거주 동 안	3.05	3.10	0.44
	거주 동 밖	3.87	5.23	11.53***

* 괄호 안의 값은 해당 비율(%) 또는 Pearson chi-square 검정값을 나타냄

소득에 따른 주거환경의 공간적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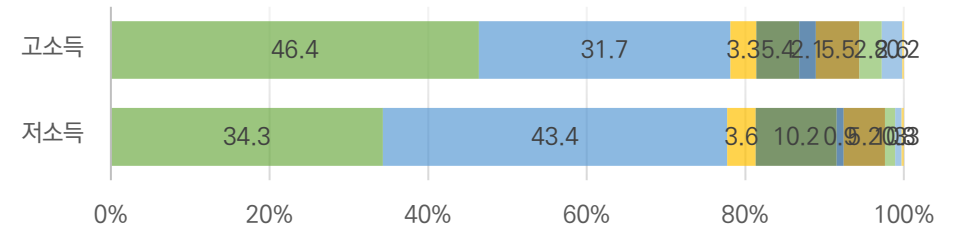
주거환경에서 다음 항목에 대해 불만족하는지?

- 고소득은 '녹지'가 1위 (33%)
- 저소득은 '사회복지시설'이 1위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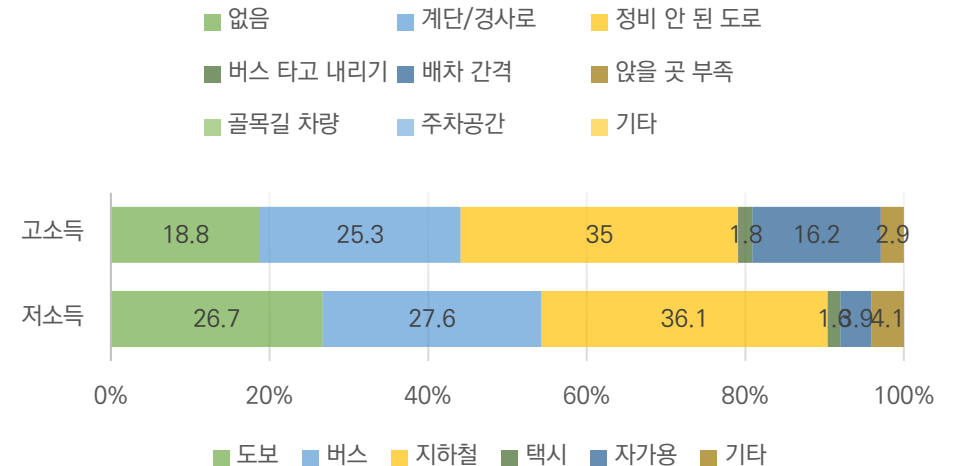
외출 시 어려운 항목은 무엇인가?

- 고소득은 '없다'가 1위 (46.4%)
- 저소득은 '계단/경사로'가 1위 (43.4%)



주로 이용하는 통행수단은?

- 모든 집단에서 1위는 '지하철'
- 도 보 : 저소득 (26.7%) > 고소득 (18.8%)
- 자가용 : 저소득 (3.9%) < 고소득 (16.2%)



소득에 따른 주거환경의 사회적 차이

지역시설 이용률

- 모든 집단에서 가장 높은 이용률은 ‘야외공간(공원, 하천, 산, 운동장 등), 종교시설’
- 복지관/경로당 : 저소득 > 고소득
- 문화시설/체육시설 : 저소득 < 고소득

사회적 관계망

- 모든 집단에서 왕래 빈도는 ‘이웃’이 가장 높음
- 혈연, 친구, 직장동료 관계망 규모/왕래빈도/지지수준 : 저소득 < 고소득
- 이웃 관계망의 왕래빈도/지지수준 : 집단간 차이 유의하지 않음
- 총 관계망에서 이웃이 차지하는 비중 : 저소득 > 고소득

〈표〉 소득수준별 지역시설 이용률 차이

시설이용률 (%)	소득수준		
	저소득	고소득	t-value
복지관	0.18	0.11	-5.78***
경로당	0.33	0.22	-7.23***
노인교실	0.03	0.03	-0.54
구청주민센터	0.07	0.08	0.36
문화시설	0.08	0.16	6.86***
체육시설	0.07	0.15	7.60***
야외공간	0.74	0.74	-0.13
종교시설	0.49	0.50	0.63

〈표〉 소득수준별 사회적 관계망 차이

관계망	소득수준		
	저소득	고소득	t-value
혈연관계망			
연락하는 인원 (명)	11.91	12.90	5.91***
연락·왕래 빈도	2.91	3.31	15.22***
도움·의지 정도	3.77	3.90	5.43***
친구관계망			
연락하는 인원 (명)	2.67	2.77	1.85**
연락·왕래 빈도	2.98	3.25	5.25***
도움·의지 정도	3.60	3.95	2.30***
이웃 관계망			
연락하는 인원 (명)	3.60	3.95	2.30**
연락·왕래 빈도	3.54	3.51	-0.52
도움·의지 정도	3.08	3.07	-0.68
직장동료 관계망			
연락하는 인원 (명)	0.54	1.15	10.55***
연락·왕래 빈도	0.54	1.13	10.36***
도움·의지 정도	0.54	0.11	10.43***
총 관계망 중 이웃 비중			
인원 규모 측면	0.19	0.15	-3.74***
연락·왕래 측면	0.25	0.20	-10.30***
도움·의지 측면	0.15	0.13	-7.52***

주) * p<0.1, ** p<0.05, *** p<0.01

■ 포용적 주거환경에서 나이들기

- 고령자 배제 완화에 기여하는 환경 특성을 논의하고자, ‘포용성’ 개념을 고령자에 관점과 주거환경 영역에서 고찰
- 사회적 공간적 측면을 포괄하는 ‘참여, 상호의존, 안정성, 개방성, 접근성’의 구성 개념 제시

■ 고령자 경험에 근거하여 탐색한 주거환경 포용성

- “노년기 제한된 자원과 역량을 보완하여 의존적이거나 고립된 존재로 남지않도록 돕는 주거환경 특성”
- 살아온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주하고 외부공간을 자유롭게 오감으로써 독립성을 강화하고 공간적 개방 경험
- 이웃과 유대관계와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에 밀착함으로써 정체성과 사회적 연결, 상호돌봄 강화

■ 소득에 따른 차별적인 접근 필요

- 소득에 따라 주거환경의 공간사회적 차이 확인 : 이용 공간 분화, 생활 반경, 이웃관계망 의존도 등
- 집단별로 상이한 어려움, 필요, 잠재력에 따른 세분화된 지원이 바람직

참고문헌

- 박인권 · 이민주(2016), “도시 포용성 구성개념과 지표체계의 개발 : 한국의 포용도시 의제 설정을 위하여”, 『공간과 사회』, 26(4): 109-158.
- 박현주 · 정순돌(2012), “노인의 사회적 배제 수준의 변화유형과 예측요인 : 영국고령화패널(ELSA)분석”, 『한국노년학』, 32(4): 1063-1086.
- 배지연 · 노병일 · 곽현근 · 유현숙(2006), “노인의 사회적 배제와 우울에 관한 탐색적 연구”, 『노인복지연구』, 33: 7-27.
- 보건복지부 · 중앙자살예방센터(2020), 『2020 자살예방백서』, 보건복지부.
- Barnes M, Bloom A, Cox K et al.(2006), *The Social Exclusion of Older People: Evidence from the First Wave Of ELSA*, London : Office for the Deputy of Prime Minister.
- Berghman, J.(1995), “Social Exclusion in Europe : Policy Context and Analytical Framework” In Room, G.(Eds.), 『Beyond the Threshold : the Measurement and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Bristol: Policy.
- Gardner, P. J.(2011), “Natural Neighborhood Networks — Important Social Networks In The Lives of Older Adults Aging In Place”, *Journal of aging studies*, 25(3): 263-271.
- Glass, T. A. & Balfour, J. L.(2003), “Neighborhoods, Aging, and Functional Limitations”. In Kawachi, I. & Berkman, L. F.(Eds.), *Neighborhoods and Health* (303-334), Oxford University Press.
- Levitas, R. et al.(2007), *The Multi-dimensional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London: Townsend Centre for the International Study of Poverty.
- Scharf, T., Phillipson, C., & Smith, A.E.(2005), “Social Exclusion of Older people in Deprived Urban Communities of England”, *European Journal of Ageing*, 2(2): 76-87.
- Tong, H. M. et al.(2011), “Effects of Social Exclusion on Depressive Symptoms: Elderly Chinese Living alone in Shanghai, China”, *J Cross Cult Gerontol*, 26(4): 349-364.
- UN Habitat(2002), *The Global Campaign on Urban Governance, Concept paper*, 2nd Edition, UN-Habitat.
- UN Habitat(2017),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Housing and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Habitat III Policy Papers: Policy Paper 1 The Right to the City and Cities for All* , New York: United Nations.
- Walsh, K., Scharf, T. & Keating, N.(2017), “Social Exclusion of Older persons: a Scoping Review and Conceptual Framework”, *European Journal of Ageing*, 14: 81-98.

기획세션 2. 주거불평등 대안

사회: 손정원 (런던대)

- <한국 주택정책 변천과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박인권 (서울대)
 - <공공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자원조달 분석>
박준 (서울시립대) · 봉인식 (경기연구원)
- ▣ 종합 토론: 김용창 (서울대)

한국 주택정책 변천과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박인권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

Contents

- 들어가며
- 주택·부동산시장 정책의 변천과정
- 서민 주거안정 정책의 변천과정
- 역대정부 주택정책 분석 및 평가

“갈팡질팡하는” 한국의 주택정책

- 인수위의 새 주택 정책
 - 임대차 3법 폐지, 대출 및 재건축 규제 완화,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완화 등 → 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많은 정책들을 뒤집겠다고 공언
- 과거 주택정책은 기본 철학부터 일관성 없이 갈팡질팡
 - 역대 정부들은 **주택가격의 안정**과 **경기 부양** 사이에서 동요

尹인수위 "임대차 3법, 시장에 혼란...폐지·축소 검토"

파이낸셜뉴스 입력 : 2022.03.28 14:55 수정 : 2022.03.28 14:55



<https://www.fnnews.com/print/202203281453269980>

흔들리는 주거 안정

- 주택가격 상승기 대응
 - 주택가격이 오를 때 정부는 **조세와 각종 규제를 강화**하여 수요를 억제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
 - 공교롭게도(?) **진보 성향**의 정부 때는 주택가격이 상승하여 주로 시장을 억제하는 정책 채택
- 경기 하강기 대응
 - 정부는 다시 **억제책들을 완화**함으로써 주택 수요를 늘리고, 이를 발판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추진
 - **보수 성향**의 정부가 집권하면 각종 규제를 푸는 관행이 반복
- 흔들리는 주거 안정
 - 자가보유율(61.1%)이 여전히 낮은 상황에서 주택시장이 경기에 종속되어 불안정한 주택가격은 국민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협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6835.html

논의 사항

- 한국 역대 정부의 주택정책(주택시장, 주거안정)은 어떤 **변천과정**을 겪어왔는가?
 - 주택시장 과열기와 냉각기에 따른 대응
 - 주택정책의 목표와 수단의 변화
- 주택정책의 **결과**는 어떠했으며 어떤 **문제점**들을 야기했는가?
 - 주택·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과 효과
 - 주거안정 정책의 효과와 부작용
- 주택정책의 **향후 방향**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주택·부동산시장 정책의 변천과정

박정희 정부: 1963~1979년

- (배경) 경제성장(중동·월남특수 등)과 국토개발(경부고속도로, 강남개발 등)로 1960년대 후반과 70년대 후반에 두 차례의 부동산 과열 발생
- (가치/철학) 규제를 통해 비생산적인 부동산 자금을 생산적인 산업자금으로 유도하고 지가 안정 도모
- (주요 사업/정책)
 - 부동산 투기억제세 도입(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 1967): 부동산 과열에 대한 최초의 규제. 토지양도차액에 대하여 50%의 세율로 부과 ⇒ 양도소득세가 신설되면서 통합(1974)
 -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1977): 신규 민간주택의 분양가격을 행정지도를 통해 일률적으로 규제
 - 소형주택의무규정(1978): 주택 건축연면적의 40% 이상을 소형주택(85㎡ 이하)으로 공급하도록 규정
 - 부동산투기억제 및 지가안정을 위한 종합대책(8.8 조치, 1978): 토지거래신고 및 허가제 도입, 부동산 양도소득세 증액 ⇒ 당시로서는 유례없이 강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침체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 목적: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차익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투기적인 부동산투자를 억제하기 위함
- 1967년 11월 29일 제정, 1968년 1월 1일 시행
- 과세대상:
 - 서울시·부산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 당초 건물에 대해서도 대지가 건평의 10배를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에 포함시켰으나 나중에 제외함
- 과세액
 - 양도 차익: 양도 당시 시세표준액 - (취득시 시세표준액 + 자본 지출액 + 취득시 시세표준액*도매물가상승률)
 - 과세액: 양도 차익 * 50%



자료: 경향신문 1967.9.6.1면

전두환 정부: 1980~1988년

- (배경) 1980년에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경기침체, 1980년대 후반에는 **3저 호황**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급등**
- (가치/철학) **물가안정**을 경제 운용의 최우선 목적으로 추구
- (주요 사업/정책)
 - ① 부동산 시장 **촉진책**(1980~82) → ② **억제책**(1982~85) → ③ **촉진책**(1985~86)
 -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경기에 따라 자율화(1981)했다가 부활(1983) →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규제로 인해 **80년대 민간업체의 아파트 공급량 저조 ⇒ 1990년까지 자가거주율 하락 지속**
 - **채권입찰제 도입**(1983): 분양가상한제 부활의 보완책. 분양가격과 기존 시세 사이에 발생하는 차익을 채권으로 회수하여 국민주택기금으로 활용
 - **토지과다보유세 도입**(1986) : 종부세의 전신. **한시운용**(1988~89)되었고 과세기준이 약하여 효과 미약

분양가 상한제와 아파트 분양 채권 입찰제

분양가 상한제 채택

내주중 最終 발표

정부는 민간과 아파트 분양가제, 실제화방안이며 분양가제고시제를 채택키로 하였다.

정부는 7일 아안 부향 (경향신문) 기사를 인용하여 분양가제고시제를 채택키로 하였다.

투기억제 實務委 實勢化 차액 現金흡수

의한 끝의 이각 결정하 고 아파트 분양가제, 실시 시 분양가제고시제를 채택키로 하였다.

분양가 상한제 채택

정부는 민간과 아파트 분양가제, 실제화방안이며 분양가제고시제를 채택키로 하였다.

아파트분양 債券입찰제로

많이 산 사람에게 우선권... 곧 발표

20년거치 年利 2% 線... 4월 시행

민주노동당

민주당은 아파트 분양가제고시제를 채택키로 하였다.

민주노동당

민주당은 아파트 분양가제고시제를 채택키로 하였다.

자료: 조선일보 1983. 3. 17. 1면

자료: 경향신문 1983. 3. 8. 1면

노태우 정부: 1988~1993년

- (배경) 절대적인 주택부족과 3저 호황(1986~88)에 따른 **부동산 시장 과열**(1988~90년간 **토지가격 연27% 급등**), 전국 상위 5%의 토지수요자가 전체 민간소유지의 65.2%를 보유(토지공개념연구위원회, 1989)
- (가치/철학) 토지공개념의 도입을 통한 무분별한 **토지수요 억제**, 민간의 **주택공급 대규모 확대**
- (주요 사업/정책)
 - 5차례에 걸친 부동산 억제대책 발표와 주택 대규모 공급으로 인해 **1992년부터 토지가격 하락세**
 - **토지공개념 3법 제정**(1989):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1994) 및 폐지(1998), 택지소유상한법은 폐지(1998) 및 위헌(1999), **개발이익환수법**은 유예·완화(1998) 및 **운용정지(2001)됐다**가 **재부과(2006)**
 - **종합토지세 도입**(1989): 종합부동산세의 전신이나, 지방세로 설계되어 목적 달성에는 부적합
 - **분양가 원가연동제 도입**(1989): 민간 건설업체의 지속적인 분양가 인상 요구와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기조가 맞물려, 정부의 통제 하에 분양가 현실화

토지공개념 도입

「토지공개념」 내년 3월 시행

6대도시부터 3개法案 小委員 합의 통과

「鄭의원사퇴·소씨증언」
拒否하면 重大선

村民代表
늦어도 19일

民主선 핵심축 소 거들

宅地 초과분 부담금

개발부담금 原案대

토지공개념관련법 수정안 비교

구분	원 부안	小委 수정안
활용	6대도시 2백평, 읍면지역 4백평	6대도시 1백평, 읍면지역 3백평
제한부	개발부담금 50%	개발부담금 50%
개발부담금	개발이익의 50%	개발이익의 50%
원칙 방지 조항	없음	있음
가산금부과조항	없음	있음

필

- 택지소유상한제
 - 6대도시 2백평, 시급 3백 평, 읍면지역 4백 평 상한
 - 초과택지 부과율: 나대지(6%~11%), 부속토지(4%~7%)
- 토지초과이득세
 - 3년 동안 정상 지가상승률을 초과한 지가상승에 대해 미실현 자본이득을 과표로 부과
-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의 50%

자료: 동아일보 1989. 12. 7. 1면

김영삼 정부: 1993~1998년

- (배경) 노태우 정부 후반부터 시작된 **부동산 가격 안정세 유지**. 정권 말기의 **외환위기 발생**(1997)
- (가치/철학) 금융·부동산 **시장 투명성** 지향, 대내외적 금융환경의 변화로 **개방·자유화** 표방
- (주요 사업/정책)
 - **부동산 실명제 도입**(1995): 금융실명제 도입(1993) 이후에 비실명 금융자금이 가명·차명으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 ⇒ 부동산 투기수단으로 악용되던 명의신탁, 장기 미등기 등의 관행을 바로잡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를 유도**
 - **분양가 자율화**: 1990년대 중반부터 건설업체들의 도산 발생 → 1995~99년간 점진적으로 **분양가 규제 완화**(1998년에는 수도권 분양가 자율화) ⇒ **2000년대 부동산 시장의 과열화** (1998~2006년간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512만원에서 1546만원으로 3배 이상 증가)

김대중 정부: 1998~2003년

- (배경) 집권 당시의 외환위기로 **주택시장의 침체**와 **건설업체들의 대량 부도 사태** 발생(1997)
- (가치/철학)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적 재정·통화정책** 총동원
- (주요 사업/정책)
 - ① **부동산 시장 촉진책**(1998~2001): 10차례의 주택건설촉진대책을 통해 시장제약 요인을 제거(**분양가 자율화, 분양권 전매 허용, 토지공개념 폐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소형주택의무비율규정 완화, 주택청약제도 완화** 등) ⇒ 저금리기조가 동반하면서 투자자금이 주택시장에 유입 ⇒ **2001년 하반기부터 주택가격의 폭등 시작**
 - ② **부동산 시장 억제책**(2002~2003): 정책기조를 선회하여 6차례의 억제대책(**투기과열지구 재도입, 투기지역·LTV 도입** 등)을 발표하였으나 목적달성에 실패



부동산정책 내년 이렇게 달라진다

규제도 풀고 돈도 풀었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모르는 참체의 늪에 빠지자 정부는 규제완화에서 자금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양책을 쏟아 내놨었다. 올해 발표된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중 상당수는 관련법 개정을 거쳐 내년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녹이기 위해 올해 지면 군불에서 수요자들이 실제 온기를 느끼는 시점은 내년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내년 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을 분야별로 살펴본다.

규제 풀고 세금 줄고...
지원 늘고 돈 물리고...

주택규제가 대폭 풀린다

민영아파트 청약 자격제한 폐지

▼아파트 분양가 전면 자율
 화=전용면적 18평 이하 국민주
 택과 수도권 공공택지에 건립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의

보유한 사람이 민영주택 청약 1
 순위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공택지에 건립되는 민영아파
 트의 재단침 제한기간(2년)이



주택 토지 건축 분야 제도개선 내용

구 분	종 전	개 정
분양가 자율화	국민주택 및 수도권 공공 택지건립 85㎡이하 공동 주택 분양가 규제	폐지

자료: 동아일보 1998. 12. 23. D2면

노무현 정부: 2003~2008년

- (배경) 김대중 정부의 수요촉진책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 2000~06년은 전세계적으로도 주택가격 급등.
- (가치/철학) **투기적 수요 억제**를 통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도모
- (주요 사업/정책)
 - 개발부담금(2005)과 분양가상한제(2007)의 부활, 투기지역(2002)·투기과열지구(2003)의 도입
 - 세제 및 금융규제 강화: 종합부동산세 신설(2005), 양도소득세 종과세, DTI 도입(2005), LTV 강화
 -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주택거래신고제 도입, 2004):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 ⇒ 2006년부터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가 발표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정보 대칭성 제고
 - 2기 신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現 세종시) 등의 지역개발을 통해 공급 확대 ⇒ 오히려 전국의 토지가격 상승을 부추겼다는 비판
 - 임기 내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를 꺾는 데에는 실패했지만, OECD 평균 수준보다는 낮은 상승폭

이명박 정부: 2008~2013년

- (배경) 부동산 가격 상승기의 공급증가 및 수요억제 정책으로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급증. 글로벌 금융위기 (2008) 이후 부동산 시장 침체와 하우스푸어 등장. 임기 중반부터 주택 전세가 급등으로 렌트푸어 증가
- (가치/철학) 규제완화와 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지향
- (주요 사업/정책)
 - 지방 미분양 아파트 대책: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LTV 완화, 취·등록세 감면, 공공 매입 등 ⇒ 임기 내 꾸준히 감소(2008년 16.6만 호 → 2012년 7.5만 호)
 - 규제 완화: 양도세·종부세·전매제한·재건축규제 완화, 투기지역·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등 ⇒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여전히 수도권 매매시장은 안정·침체
 - 전월세 안정대책: 전세자금대출 확대,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유인, 매입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등 ⇒ 전세가 상승세는 억제되지 못했으며, 전세자금대출 확대는 오히려 ‘갭 투자’의 수단으로 악용

박근혜 정부: 2013~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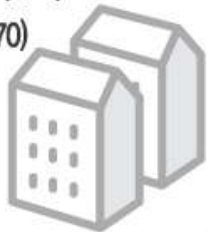
- (배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지속되는 **부동산 산업의 침체 및 전세난**. 위축된 수요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 과열기에 착수되었던 **주택물량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수급불균형
- (가치/철학) **수요증진**과 **공급조절**을 통한 주택거래 정상화
- (주요 사업/정책)
 - **주택공급 조절**: 공공분양주택 **공급목표 축소**(연 7만 → 2만 호), 추진 중인 개발지구 사업계획 조정
 - **주택수요 조절 및 전세난 대책**: 주택대출금리 인하 등을 통한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전환 유도**
 - ① **부동산 시장 촉진책(2013~2016)**: 양도세 한시 면제, 취득세율 영구 인하, LTV·DTI 및 재건축 규제 완화 등 ⇒ 주택 시장이 회복세로 전환되었으나, 더 나아가 가계 부채증가와 주택시장 과열을 초래
 - ② **부동산 시장 억제책(2016~2017)**: LH 택지공급 조절, 중도금 대출 보증 강화, 청약조정대상지역 내 전매제한 강화 등 정책방향 전환하였으나 **목적달성 실패**

'빛 내서 집 사라' 초이노믹스

최경환 효과?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 두 달 새 4조 늘어

입력 : 2014-08-13 00:26

최근 2개월간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
증가 자치구 (단위: 억원)



국민일보 2014. 8. 13일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760620>

7월 주택 거래량 2013년比 94% ↑

입력 : 2014-08-14 03:45



국민일보 2014. 8. 14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761649>

문재인 정부: 2017~2022년

- (배경) 재개발·재건축 관련 지역들을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 과열**. 단기수요(갭투자) 등 수도권 아파트 수요 확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전세계적인 유동성 확대로 **세계적인 자산가격의 상승**
- (가치/철학) **경기부양 수단으로서의 주택정책 거부**. **투기수요가 억제**된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 안정화
- (주요 사업/정책)
 - **금융규제: LTV 규제강화**(2020년부터 9억원 이하 50%, 초과분 30%) 新DTI·DSR 도입
 - **조세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부세율 인상(2018. 9. 13) 및 과세대상 확대(2019. 12. 16)**·다주택자 중과,
 - **‘핀셋’규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확대**
 - **재개발·재건축 규제: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지정지역 내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공공 참여형 정비사업,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3080+) 시행,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도입,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 재건축 부담금 현실화**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공적지원 주택 연 20만호씩 100만호 공급, 3기 신도시 통해 30만호 공급 계획**
 - **분양가격 규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확대, 전매제한 기간 연장**
 - **2019년 상반기 가격은 다소 안정화** 되었으나 효과가 지속되지 못하고 **2019년 하반기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하고, 2020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는 유동성 증가와 함께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말까지 가격상승이 지속됨**

부동산 정책 발표 현황

발표일	부동산정책 명칭	주요 내용
2017.06.19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	민간택지 전매제한 강화, 재건축 조합원 공급주택 축소, LTV·DTI 10%p 강화
2017.08.02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서울 25개구, 과천·세종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정비사업 분양권 전매 및 재당첨 제한
2017.09.05	8·2 대책 후속조치	성남 분당구·대구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완화
2017.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규제지역 新DTI·DSR 도입, 소득상정기간 확대 및 산정방식 변경
2017.11.29	주거복지로드맵	2023년까지 연평균 20만호씩 6년간 공적지원 주택 100만호 공급
2017.12.13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임대사업자 지방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제제감면 혜택 확대
2018.06.28	2018년 주거종합계획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실행 예고, 소규모 정비사업 행정지원 실시
2018.07.05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신혼부부 6세이하 자녀 둔 한부모가족·청년 등 주거지원 확대
2018.08.27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서울 4개구 투기지역, 광명·하남 투기과열지구, 구리·안양 동안구 조정대상 등 지정
2018.0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및 비거주 목적의 고가주택 매입시 대출 제한
2018.0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수도권 지역에 5년간 주택 30만호 공급, 3기 신도시 계획 발표
2018.12.19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남양주·하남·인천여왕·과천 3기 신도시 지정, 광역교통망 계획 발표
2019.01.09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임대관리 구축, 임대인 세제감면 혜택 의무조건 제시
2019.04.23	2019년 주거종합계획	공적임대·주거급여·전월세자금 등 부동산 금융지원 확대,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상향 및 공사비 검증 도입
2019.05.07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고양 청룡·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지정
2019.08.12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확대 및 전매제한 기간 연장
2019.10.01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개인사업자·법인 LTV규제 강화 및 신설, 분양가상한제 적용 검토 기준 확대
2019.11.06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강남4구 22개동·마포구 1개동·용산구 2개동·성동구 1개동·영등포구 1개동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2019.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LTV 규제 강화, 초고가 주택 부담금 금지, 규제지역 주택세분 및 전입 기한 단축
2020.02.20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조정지역 내 LTV규제 강화, 1주택자 신규주택 전입의무 조건 추가
2020.05.06	수도권 주택공급 기법 강화 방안	공공 정비사업 통한 공급 확대 계획 발표
2020.05.20	2020년 주거종합계획	2023년부터 연평균 25만호 이상 공급, 3기 신도시 조기 추진, 공공 참여형 재개발 도입
2020.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수도권·대전·청주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 안전진단 강화, 재건축 부담금 현상화
2020.0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주택공급확대 TF 운영, 청약제도 개선, 전월세 자금지원 확대 및 이자 인하
2020.08.04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도입, 공공재개발에 해체구역 등 사업참여대상 확대
2021.02.04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공공 직접사업 정비사업(3080+ 재개발·재건축) 도입

<http://www.housinghera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227>



서민 주거안정 정책의 변천과정

박정희 정부: 1963~1979년(1960년대)

- (배경) 한국전쟁으로 파괴된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로의 인구집중** 가속화 → **주택난 심각**
- (가치/철학) 구호차원에서 진행되던 주택공급은 경제정책의 한 부문으로 계획되었으나 **공업 개발의 후순위**, **민간부문 주택공급에 의존**
- (주요 사업/정책)
 - **주택공급의 제도적 틀 정비**: 대한주택공사법(1961), 공영주택법(1963), 주택자금운용법(1963),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66), 한국주택금융고법(1967)
 - 경제개발계획의 틀 속에서 **1·2차 주택건설5개년계획** 수립: 2차 계획(1967~71) 83만호 공급 목표(민간투자 93.6%, 정부투자 6.4%) ⇒ 실제 54만호 공급
 - **공영주택사업 추진**: 주택공사는 중소득층, 지자체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공급하기로 규정되었으나, 서울시가 건설한 **와우아파트 붕괴(1970)**를 계기로 지자체의 주택공급도 **중·고소득층 대상으로 전환**

박정희 정부: 1963~1979년(1970년대)

- (배경) 1970년대 초반 경제침체, 국내의 정치적 불안으로 ‘유신’ 선포 → 주택공급에 대한 정치적 필요성 대두, 이후 팽창적 경제정책을 통한 경제 급성장 → ‘신중간층’의 등장, 아파트 선호도 증대(실수요+투기수요)
- (가치/철학) 주택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을 강화하였으나 실제 주택공급은 여전히 민간부문에 의존, 주택수요는 산업발전과 이에 따른 개인의 소득수준 향상으로 창출된다는 사고의 지속
- (주요 사업/정책)
 - 250만호 주택건설 10개년 계획 수립: 1972~81년간 공공주택 250만호 공급 목표(전체 공급량의 44%)
⇒ 실제 주택공사의 건설량 27,840호
 - 주택건설촉진법(1972), 특정지구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1972) 제정: 민간 주도의 주택공급전략 시행
 -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특별조치법(1977) 제정: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부동산 투기억제정책과 맞물려 실패

전두환 정부: 1980~1988년

- (배경) 제2차 석유파동, 유신체제 붕괴 등의 혼란상에 **신군부 집권** → 노동자·저소득층의 사회적 동요에 반응 필요성 대두, **세입자의 주거 불안정 및 주택난 사회문제로 대두**
- (가치/철학)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 해소, 무주택 저소득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 (주요 사업/정책)
 - **500만호 건설계획 수립 및 택지개발촉진법(1980) 제정**: 1981~91년간 공공주택 200만호, 민간주택 300만호 공급 목표 ⇒ 1982~88년간 실제 공급량 171만호(공공 83만호, 민간 88만호), 주택건설에 필요한 대단위 토지 확보 가능 (7,700만평)
 - **주택임대차보호법(1981) 제정**: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차 계약의 최소기한(1년) 지정
 - **임대주택육성방안(1982), 임대주택건설촉진법(1984) 제정**: 장기임대주택(5년·20년) 공급 ⇒ 재정적 문제로 20년형은 성과 부진, 대부분이 5년형(주택청약자 대상) ⇒ 총 임대주택 공급 실적 12.9만호(1982~87)

노태우 정부: 1988~1993년

- (배경) 1960년대 이래 **자가거주율의 지속적인 하락**(1990년이 최저점, 50% 수준)
- (가치/철학) 주택공급의 대규모 확대, **극빈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 공급** → 공공택지를 활용한 공급 중심의 정책이 본격화(5대 수도권 1기 신도시 건설에 착수, 대대적인 공공택지 공급 시작; ‘길 대통령’ vs. ‘집 대통령’)
- (주요 사업/정책)
 - **200만호 주택건설계획 수립**: 1988~92년간 수도권 90만호, 지방도시 110만호 공급 목표 ⇒ 실제 조기 및 초과달성(총 214만호, 당시 총주택의 33% 건설) ⇒ 주택난 해소에 기여, 집값 하락세(1991~97)
 - **25만호 영구임대주택건설계획(1989) 수립**: 처음으로 국가재정을 투입한 극빈층 대상의 주택공급 ⇒ 재정투자 부담에 따라 19만호로 축소하여 공급 ⇒ 대안으로 **50년 공공임대주택**이 제시되었으나, 김영삼 정부 때 정부지원을 중단(1995), 총 3만호 공급에 불과

김영삼 정부: 1993~1998년

- (배경) 1990년대는 주택 대량 생산기로서 주택보급률의 지속적인 상승 및 주택가격의 하향안정세
- (가치/철학) 주택의 안정적인 공급 기조를 유지, 세계화 추세 속에서 탈규제·민영화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면서 임대주택 사업의 공공부문은 축소, 민간 임대주택 건설은 장려
- (주요 사업/정책)
 - 주택은행 민영화(한국주택은행법 폐지, 1997): 일반 상업은행의 주택금융시장 진입 허용, 2001년에 국민은행과 대등 합병
 - 주택임대사업제 도입(1994): 임대사업자로 등록 시 취득세, 재산세 및 소득세 등 세제혜택 부여
 - 임대주택에 대한 정부지출 감축, 민간 부문 비중 확대: 1993~97년간 총 41.8만호의 임대주택을 공급
⇒ 노태우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물량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민간부문 비중은 김영삼 정부가 75.5%로 노태우 정부(46.6%)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

김대중 정부: 1998~2003년

- (배경) 외환위기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지속적으로 악화
- (가치/철학) 이전 정부의 민간 의존적 임대주택 건설 촉진책은 주택경기에 좌우된다는 근본적 한계 → 임대주택 정부지출 확대, 사각지대인 무주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 공급 모색 → 서민 주거안정
- (주요 사업/정책)
 - 20만호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 수립: 영구임대주택의 재정부담으로 10·20년형 국민임대주택 도입(1998), 1998~2003년간 계획한 20만호 중, 총 19만 573호 공급(95.3%)
⇒ 임기 말, 국민임대주택 20만호 건설로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턱없이 부족함을 인식, 10년간(2003~2012) 100만호 건설계획을 추진
 - 가구소득 기준으로 국민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 영구임대주택과는 다르게 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없는 저소득층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에게도 입주자격 부여(20년형)

노무현 정부: 2003~2008년

- (배경) 전반적인 주택 부족 문제는 크게 완화되었지만, 수도권 지역은 여전히 **만성적 주택 부족난 심화**
- (가치/철학) 수도권의 주택부족문제 해결,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국민임대주택 공급 확대** → 빈곤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강화**
- (주요 사업/정책)
 - **150만호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 수립**: 이전 정부의 국민임대주택(10·20년형→30년형) 100만호 건설계획에 10년 공공임대주택 50만호가 추가되어 총 150만호 ⇒ **2003~2007년간 공급 실적 공공임대 56.2만호**(국민임대 49.5만호 포함)
 -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 방식 도입**: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매입임대(2004~), 전세임대(2005~), 장기전세(2007~) 도입 ⇒ 공급 실적 매입임대 1.8만호(2004~07), 전세임대 1.9만호(2005~08)
 - **주택공영개발제 도입(2005)과 최초의 주거실태조사 실시(2006)**

이명박 정부: 2008~2013년

- (배경) 인구·가구구조의 변화(고령화, 저출산 등)에 따른 **주택수요 감소**, 물량 위주의 임대주택 공급정책 → 도심 외곽에 공급이 편중되는 등 **지역별 수급불일치** 문제 야기, 도심 내 임대주택 부족문제 대두
- (가치/철학) **중소형 보금자리주택**(공공+분양) 도심 공급 활성화,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 자가 촉진 및 서민 주거안정
- (주요 사업/정책)
 - **150만호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수립**: 2009~18년간 공공임대 80만호, 공공분양 70만호(수도권 100만호 공급계획)
⇒ **2008~13년간 공공임대 공급 실적 54.8만호**(국민임대 23.5만호, 영구임대 2.8만호 포함)
 - 1993년 이후 중단된 **영구임대주택 공급 재개(2009)**: 2009~18년간 영구임대 공급 실적 10만호
 -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확대: 입주시기, 분양가, 입지 등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예약 방식 도입
 - 임대료 보조 정책인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2008)**

박근혜 정부: 2013~2017년

- (배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지속되는 **부동산 산업의 침체 및 전세난**으로 수도권 지역의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양산 우려
- (가치/철학) 생애주기별 특화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다양화**, 민간자본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 서민 주거복지 지원 강화
- (주요 사업/정책)
 - 이전 보금자리주택이 '**공공주택**'으로 변경, 2013~17년간 **65만호 공공주택 공급계획**(공공임대 55만호, 공공분양 10만호) ⇒ 2013~17년간 **공공임대 공급 실적 31.7만호**(국민임대 12만호 포함)
 - **공공임대리츠**와 **행복주택**(신혼부부/사회초년생/대학생 등),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등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 도입 ⇒ 공급 실적 행복주택 1.6만호, 뉴스테이 7.8만호
 - **빈집 정비, 사회적 주택, 마을정비형 등 소규모 정비를 통해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계획** 추가(2016)

문재인 정부: 2017~2022년

- (배경)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주택가격 상승 → 서민들의 **내집마련에 어려움 가중**, 여전히 도심 내 임대주택 매우 부족한 실정, 매매가격에 비해 **전세가격**은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나 **2020년부터 급격히 상승**
- (가치/철학)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고도화,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등 **포용적 주거복지 실현**
- (주요 사업/정책)
 - **민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임대사업자 지방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감면 확대(2017.12.13), 임대차3법 시행 후 임대등록제도 개편(2020. 7. 10)
 - **공적임대주택 연 17.6만호 공급계획 수립**: 공공임대 13.6만호, 공공지원주택(뉴스테이) 4만호, 재개발 임대주택비율 상향
 - **신혼부부·청년,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방안 확대 및 구체화**: 신혼희망타운 조성, 희망상가를 통한 창업공간 지원, 복지서비스 연계된 임대주택 공급 등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018)를 통해 주거급여 지원 대상 확대 ⇒ 2017년 81만 가구, 2018년 94만 가구 지원(2019년 올해 110만 가구 지원 계획)
 - **임대차 3법 도입**(2020.7.31): 도입.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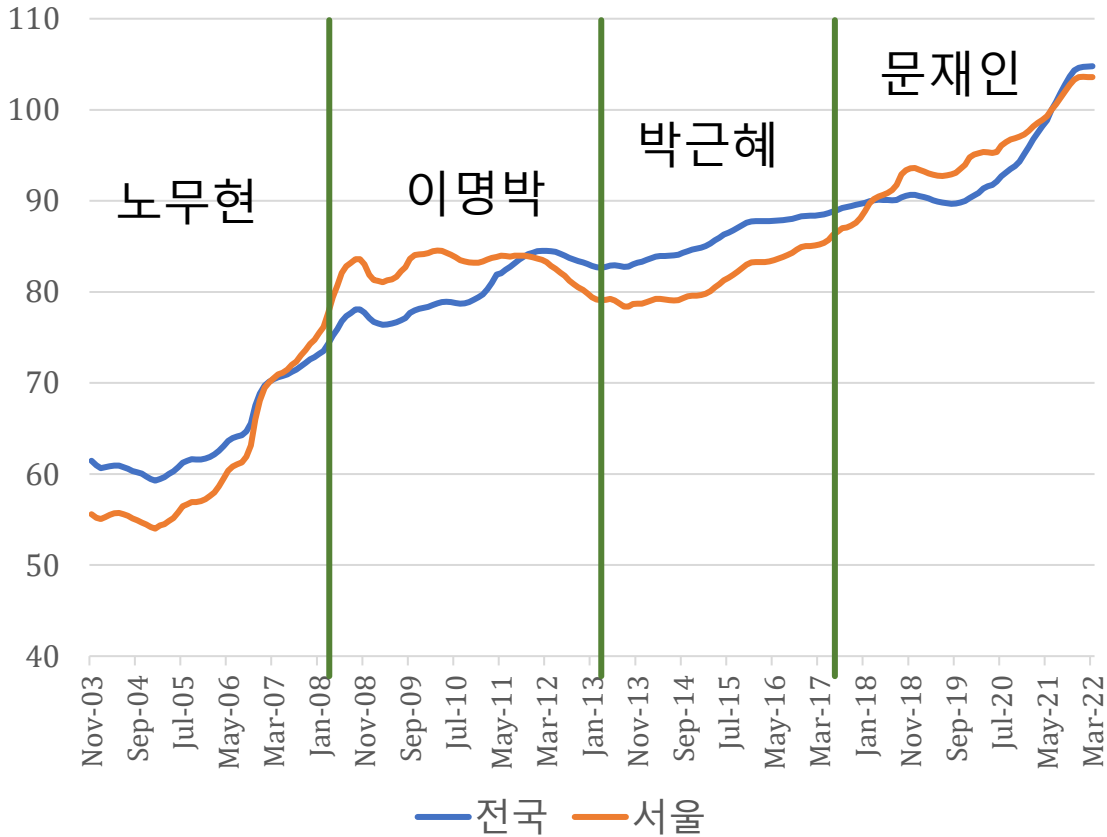
역대 정부 주택정책 분석 및 평가

주택·부동산 시장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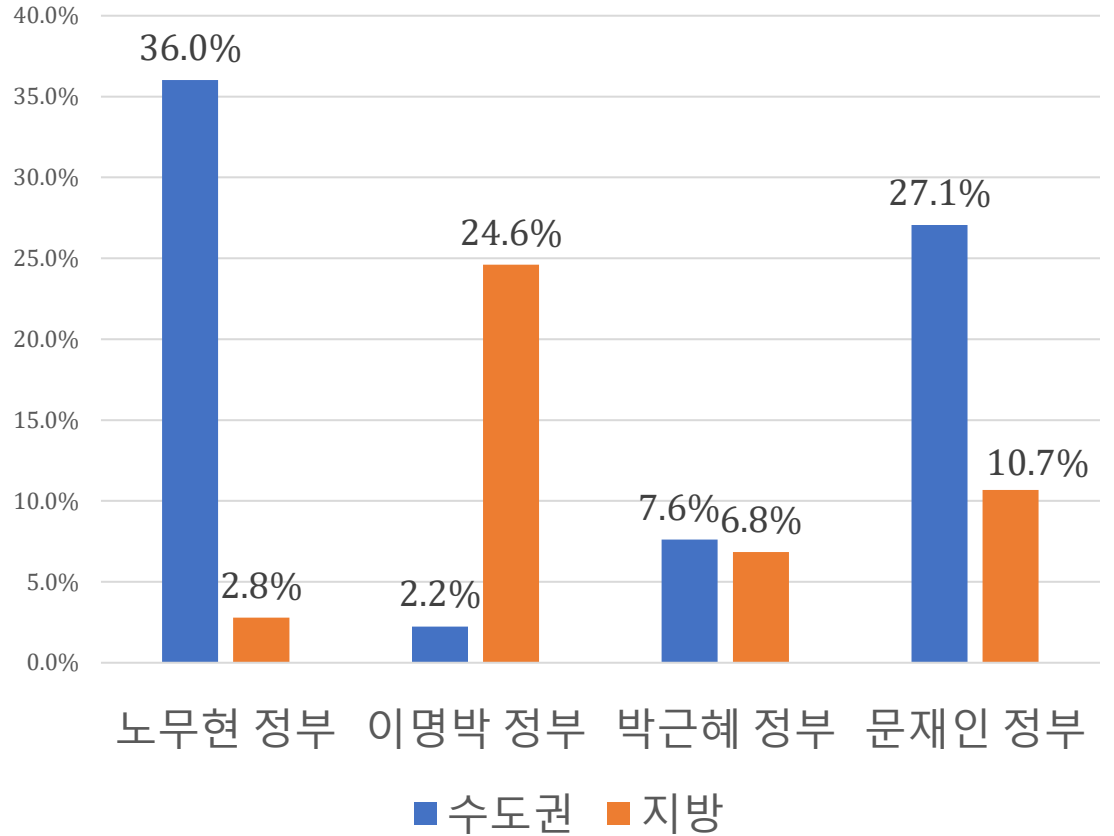
- 박정희, 전두환 권위주의 정부는 통제경제 하에서 **주택공급을 경제정책의 한 부문으로 설정**,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공영개발방식을 통해 **민간건설 부문의 주택건설을 촉진함**
- 팽창적 경제성장기에서의 여유자금은 통제된 금융시장보다 주택시장으로 유입, **한국의 주택 정책은 만성적으로 경기에 종속 → 주택이 대중들에게 자산으로서 강하게 인식되는 결과를 초래함**
- 1967년 최초의 **부동산투기 억제조치**를 시작으로, 정부가 주택 및 부동산 정책의 완급조절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거나 억제하는 현상**이 줄곧 지속됨
- **조세, 대출금융, 청약·전매**(이상 수요부문), **재개발·재건축**(수요 및 공급 부문), **신도시**(공급부문), **분양가**(가격부문) 등의 조절을 통해 주택시장 통제 시도 ⇒ 그러나 부동산이라는 재화 특성상 정책의 효과 예측이 어려움(ex. 재건축 완화는 공급 확대이나 투기적 수요를 유발하여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음)
-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들이 추진했던 **모든 수요 억제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은 많이 상승했음**
 - 주택정책에 대한 불신에 따른 가수요(‘영끌’ 수요)의 발생, 주거안정 정책과 주택시장 정책의 엇박자로 인한 투기수요 발생, 코로나19 팬데믹 대책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유동성 공급 등의 여파

주택시장의 변화

주택 매매가격지수 추이(2003~2022)



정권별 주택 가격 변동률(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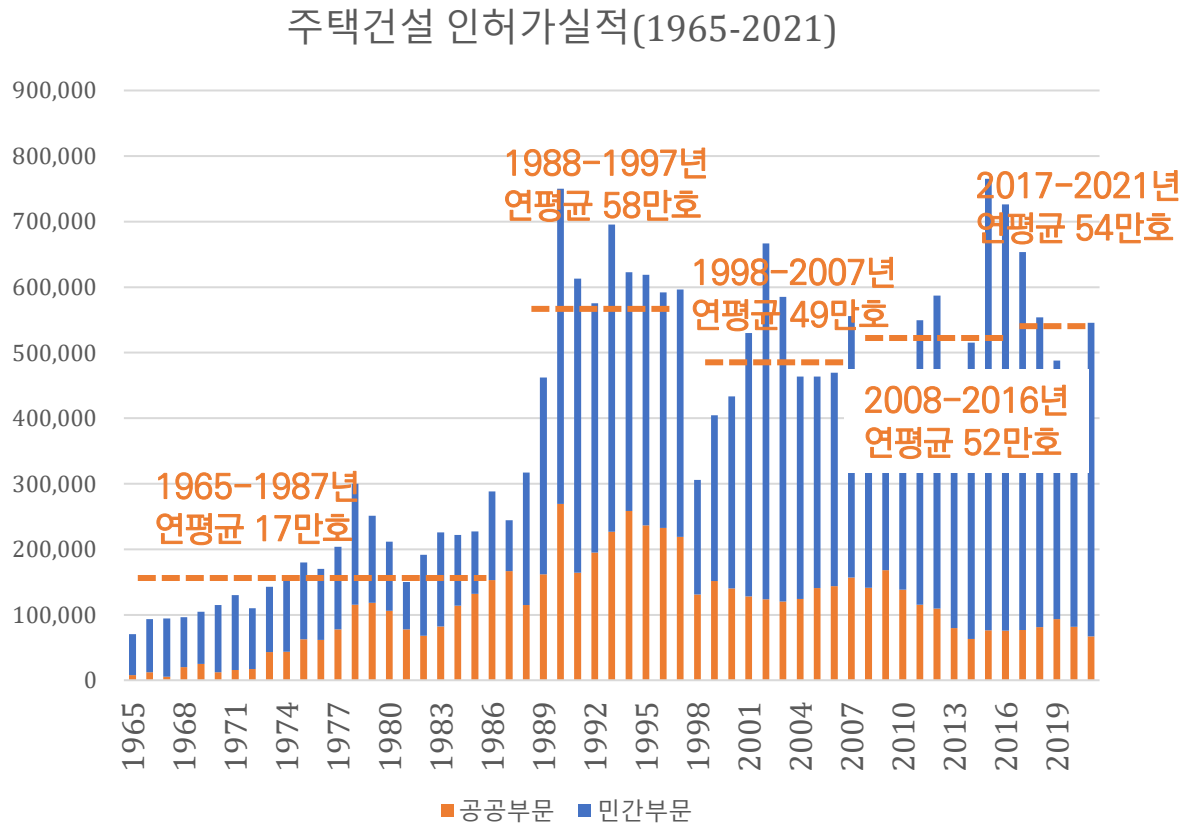
자료: 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매매가격지수)
 *노무현 정부: 2003.11~2008.02 이명박 정부: 2008.02~2013.02
 *박근혜 정부: 2013.02~2017.05 문재인 정부: 2017.05~2022.03

서민 주거안정 정책

- 주택공급을 민간부문에만 의존했던 권위주의 정부 시기에는 저소득층 대상의 저렴한 주택공급이 미비했음
-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은 1980년대 말 노태우 정부의 영구임대주택 19만호 건설 이후 꾸준히 증대되어 서민 주거를 위한 주택의 양적 증가에 크게 기여함
- 특히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 임대주택 공급에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공격적인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그 동력이 이후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실적으로 이어짐
-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된 생애주기 및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정책은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의 제고에 기여할 것이지만, 이에 따른 비효율적인 측면(복잡한 신청·선정방식 등)도 고려해야 함
-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수요 측면에서는 주택바우처(2008년), 주거급여(「주거급여법(2014)」 제정, 2015년 개별급여로 개편) 등 임대료 보조 정책을 추진함
- 임대주택단지의 노후화와 사회적 낙인 효과, 주거지 분리에 대응하여 질적 수준의 제고가 필요함
- 문재인 정부의 민간 임대주택등록제는 2019년까지 전세가격 안정에 기여하였으나, 주택시장 정책과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못해 주택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다시 이것이 임대가격 상승으로 되돌아오는 악순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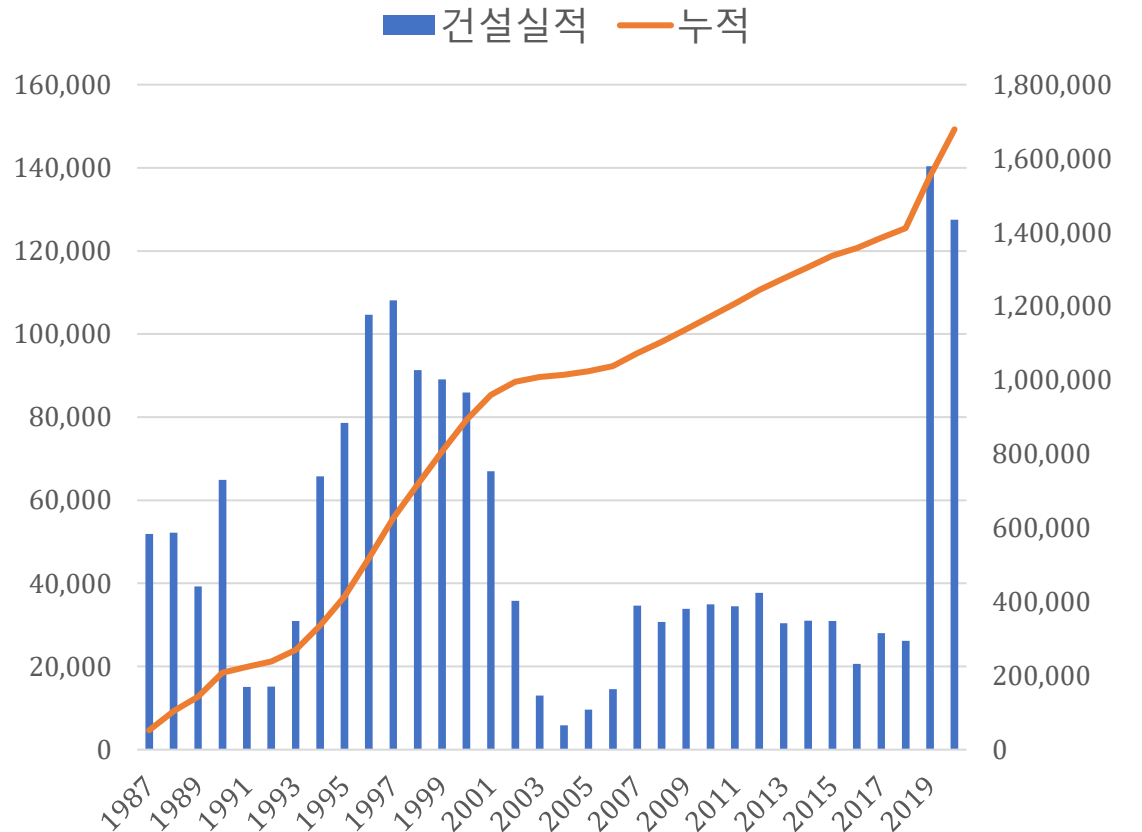
전체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전체 주택 건설 실적(1965~2021)



자료: 낙성대연구소+ 주택건설실적통계

공공임대주택 공급 현황(1987~2020)



자료: 국토교통부, 임대주택통계 (사업계획승인)

역대 정부 주택시장 정책 종합

- 사회·경제적 배경
 - 거시경제의 변동에 따른 주택시장의 등락 반복, ‘자산’으로서의 주택인식, 수도권·지방 시장의 분화
- 가치/철학: **전국적 규모에서 주택가격 안정과 경기 부양 사이에서 동요**
- 사업방식
 - 수요조절: 조세(양도세·보유세)·대출금융(LTV·DTI)·청약·전매 등
 - 공급조절: 재개발·재건축 규제, 신도시 건설 등
 - 가격조절: 분양가상한제
- 규제/입법 수단
 - 소득세법(1949), 주택법(1972, 舊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1978),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1989), 종합부동산세법(200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06)

역대 정부 서민 주거안정 정책 종합

- 사회·경제적 배경
 - 30년간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량이 부족하고 지역별·계층별 수급불일치 지속
- 가치/철학: **잔여적·선별적 주거복지 실현에서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으로 전환 중**
- 사업방식
 - 공공임대(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 장기전세, 분양전환 공공임대,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및 공공분양주택
 - 민간임대주택(공공지원 민간 임대 등)
 - 주거급여·주택임대차보호
- 규제/입법수단
 - 주택임대차보호법(198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1984, 舊 임대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2003, 舊 국민임대특별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2012), 주거급여법(2014), 주거기본법(2015)

한국 주택정책 변천과정 종합 평가

- 명확하고 **일관된 주택정책의 철학의 부재**: 매매 가격안정, 서민주거 안정, 경기 부양 사이에서 동요
 - 보수정권과 진보 성향 정권에 따라 정책의 변화가 심함: **수요 억제 및 공공 역할** vs. **공급 확대 및 민간 역할 강조**
 - 주택시장 과열기와 냉각기에 따라 정책의 기조가 크게 변경 → **주택 정책이 만성적으로 경기에 종속**
 - 학습효과에 따라 ‘버티면 결국 정부는 물러선다’는 그릇된 믿음. **주택이 자산 축적의 수단으로 인식됨**
-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고 주거환경의 질에 대한 체계적 관리도 미흡함 → 낙인효과와 사회적 배제 심각
 - 공공임대주택 지역·계층별 수급 불일치, 주거급여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부정수급의 문제도 있음.
 - 여전히 불충분한 임차 가구 주거 안정성
- 주택·부동산 시장 정책과 주거안정 정책의 엇박자로 인한 **정책간 상충 문제**
 - 주거안정 위한 민간 임대주택등록제가 수요 억제를 위한 조세 강화 정책이 상충되어 조세회피 수단으로 활용되고 투기수요를 부추기는 문제 발생
 - 시장 안정과 주거 안정을 주택 정책의 양대 축으로 삼고 상호 보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필요

한국 주택정책 변천과정 종합 평가, 계속

■ 수요 측면의 정책과 공급 측면의 정책 간 조정 미흡

- 수요 억제 없이 공급 확대만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은 가져올 수 없고, 수요를 자극하여 시장 불안정 심화시킴
- 수요에 부응하는 지속적인 공급 없는 수요 억제 정책은 '풍선효과' 등으로 인해 결국 시장 불안정으로 이어짐

■ 정책 목표 간 상충, 정책 수단 간 상충이 발생하고 정책 목표-수단의 정합성 부족 문제 발생

- 조세 정책에 '주택시장 가격 안정'이라는 목표와 '불로소득에 대한 제재'이라는 목표가 동시에 작용하여 두 가지 목표 모두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 (e.g. 보유세와 거래세 개편에 관한 장기적 로드맵 없이 보유세와 거래세 모두 증세)
- 임대차 3법의 시행 vs. 민간 임대주택등록제 시행, 민간 임대주택 등록제 vs. 각종 조세 강화 등
-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한 지출 확대 vs. 주택 등 자산가격 상승



감사합니다!

〈공공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재원조달 분석〉

박준 (서울시립대) · 봉인식 (경기연구원)

일반세션 1. 투기적 도시화 그리고 상품화와 재개발

사회: 심한별 (서울대)

- <‘강남’을 동반했던 30년의 키워드: 투기적 도시화의 언어들>
이승원 외 (서울대)
- <서울 주거지역의 상품화, 온라인 블로거의 선택적 정보공유, 밀레니얼 세대의 미학적 투어리즘의 관계: 연남동 젠트리피케이션 과정(2010-2018)을 중심으로>
정민기 (세필드대)
- <재개발 공간의 역동적 구성>
정진영 · 이건축 (서울대)
- ▣ 토론: 신현방 (런던정경대)

[2022년 공간환경학회 춘계학술대회]

중산층 생활공간에서 투기의 대상까지

: 신문 기사를 통해 본 강남의 주제어

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사회센터
홍지수 홍다솜 심한별 이승원

01 | 연구 배경 및 연구 질문

- '투기적 도시화 극복을 위한 공유적 도시전환 전략 연구' (2021~2026)사업의 일부
- 강남형 도시화(강남화)가 한국사회의 지배적 도시 모델이 되는 과정에 대한 재인식
 - 강남형 도시를 형성한 사회-문화-공간적 변화의 '힘'과 그 근원
 - 강남화에 영향을 받고 그 과정에 참여한 개인들의 경험과 정동
- 강남을 재현하는 담론 및 '언어'의 중요성
 - 대중의 인지적 정의 형성에 영향을 미침
 - 개인들이 내면화 하는 지배적 가치들의 이데올로기적 재현 (Covan, 2018)
 - 강남의 의미화, 가치화 과정 속 대중들의 집단적 사고를 '매개하는 도구'로서 언어
- 대중매체의 '언어'는 강남형 도시화에 대한 어떠한 구성적, 실체적 효과를 가지는가?
 - 30여 년(1990~2020) 기간, '강남'과 관련한 주류 신문기사의 언어 분석
- '투기성'을 전제로 한 공간 인식을 넘어, 강남형 도시화 과정에서 생성되고, 그 과정을 추동해간 '정동'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 인식

01 | 연구 배경 및 연구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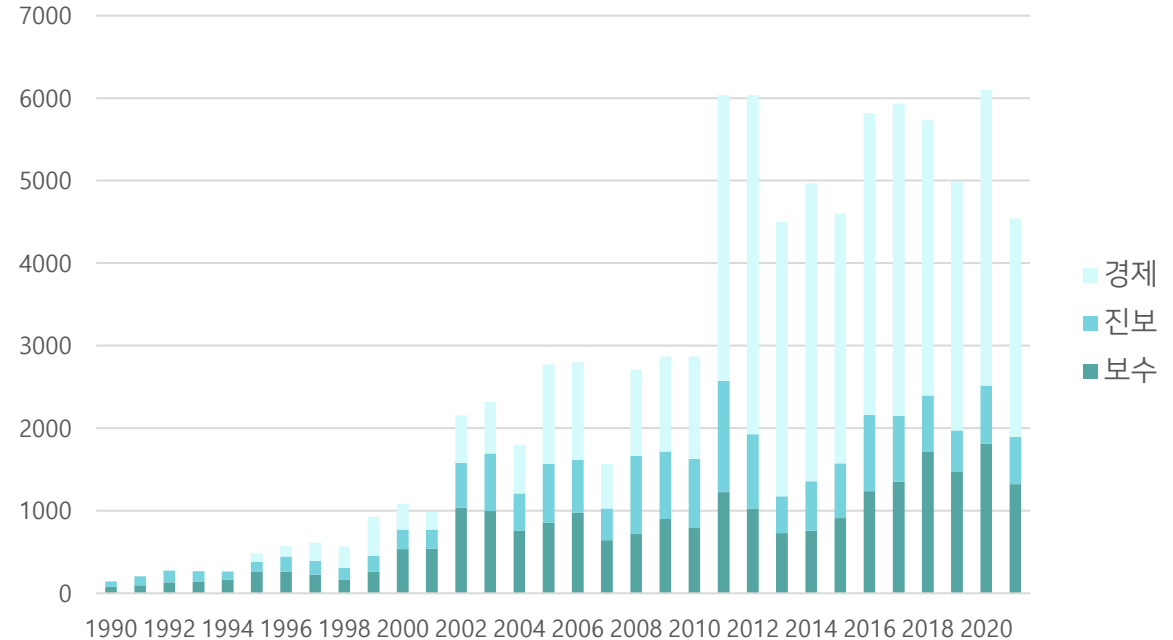
- '강남화'를 출세와 투기적 이익 추구 공간의 확장이 아닌, 발전주의 국가 시기 형성된 한국 도시적 삶과 문화, 생산과 소비형태 등이 얽힌 사회적 욕망의 복합적 얽힘의 연장선에서 파악
- 지난 30년 간 변해 온 강남화 과정에서 형성된, 또는 강남화 과정에 투영된 강남화의 의미는 무엇인가?
 - 투기 대상이자 도시에 새로운 중산층 생활환경/양식의 선택지로서의 강남
 - 자산 상위 집단 중심 투기 대상이자 한국 사회 지배적 생활환경/양식으로서의 강남
 - 투기의 사회화/대중화의 진원지이자 도시전환의 징후로서의 강남
-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나타난 언어 분석 결과는 동일한 시기 한국의 경제 정책과 문화적 흐름의 변화와 상호보충적인가?

02 | 연구 방법

[분석 자료]

-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포털 'Big Kinds'에서 '강남'을 키워드로 검색하여 뉴스 데이터 수집.
- 보수, 진보, 경제지에서 발행부수가 가장 많은 두 개 신문사 선택 (단, 조선일보는 1990년대 초반 기사가 비공개 처리되어 분석에서 제외)
- 정치, 경제면 기사로 한정하였으며, 정치경제적 측면과 관련이 없는 기사 및 중복된 광고성 기사는 제외함.
- **총 87,477개의 기사 분석**

<언론사별 연간 기사량, 1990~2021>



<1990~2021년 각신문사별 강남 관련기사 보도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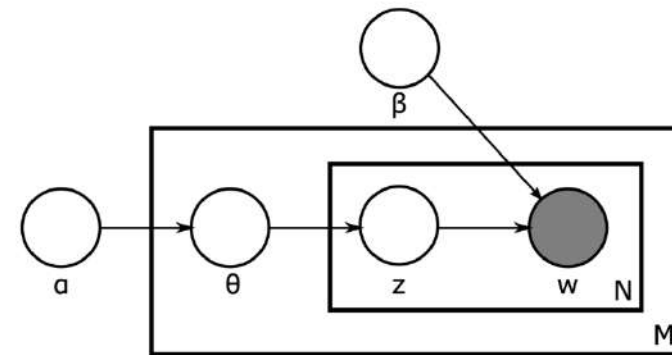
전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87477	13579	10496	9753	6257	31873	15519

02 | 연구 방법

[분석 방법]

-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자료 수집 및 '단어 빈도-역 문서 빈도'를 통해 핵심 단어 추출
- '잠재 디리클레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모델을 적용한 토픽 모델링 수행
- 'Griffith 2004', 'CaoJuan 2009', 'Arun 2010', 'Deveaud 2014' 을 활용하여 잠재 토픽 수(k)를 **25개**로 설정
- 25개 토픽을 다시 **7개** 영역으로 분류

<잠재 디리클레 할당모델>



$$p(z_1, \dots, z_n) = \int p(\theta) \left(\prod_{n=1}^N p(z_n | \theta) \right) d\theta : \theta \text{에 의해 문서에서 토픽 } z_n \text{이 생성될 확률}$$

$$p(w, z) = \int p(\theta) \left(\prod_{n=1}^N p(z_n | \theta) p(w_n | z_n) \right) d\theta : \text{토픽 생성 확률에 따른 단어 생성의 확률}$$

자료: Blei et al. (2003)

03 | 분석 결과

<토픽별예시기사제목>

25개토픽	개영역	기사제목예시
강남권 아파트 가격 상승	부동산 가격	대형 아파트값 서초동 삼풍 최고-부동산랜드 조사
수도권 아파트 가격		서울 아파트 전세값 강남구 대형, 노원구 소형 강세
전세금 상승		강남·분당, 전세금 올라도 울며 겨자먹기
상가건물 임대		신축 업무빌딩 강남 몰린다
투자 전략	부동산 투기	타워팰리스식 재테크 아세요
부동산 투자/투기		부동산재테크의식조사. 상가에 투자하고 싶다 40%
소형 부동산 투자/투기		오피스텔 투자, 싸게 사서 임대로 돌릴까
아파트 입주		부동산/7~8월 이사하려면 지금부터 서둘러야
아파트 분양 광고	부동산 광고	시흥연성 동아아파트 할인 분양
역세권 부동산 분양 광고		용인 동백지구 시선집중/강남.분당 인접 경전철 개통 예정
주거 생활형 광고		대구 8학군 역세권에 84㎡ 아파트 192실
부동산 과세		양도세 절세전략, 한시 인하 100% 활용하기
부동산 대책	부동산 정책	8.31 추가대책 윤곽/개발부담금 부과 등
주택 대출		서민용 주택담보대출 내달 재개, 버블세븐지역은 억제키로
집값 상승 대책		주거불안 서민 피 마른다
주택 청약		20배수외 청약자 아파트 장만 화정지구 노려라
수도권 신도시	부동산 공급	신도시 내집 판교 갈까, 동탄 갈까
택지 개발		수도권 택지지구 주변 땅 들썩들썩
재개발 재건축		잠실 등 5개 저밀도 아파트지구/재건축 25층까지 허용
교육		도피성 해외유학 시들/비판여론 의식 경기침체 반영
교통	생활 환경	새 한남대교 내달 8일 부분개통/완전개통 내달 13일
오피스타운		신금융가 강남시대를 여는 사람들
지역명		강북 건물용적률 크게 높여 주거지역 강남과 같은 수준으로
부동산 범죄		청와대 사칭 땅불하사기/4억행진 브로커 2명구속 1명수배
선거/지역구	기타	6.13 현장 강남구청장/서초구청장/송파구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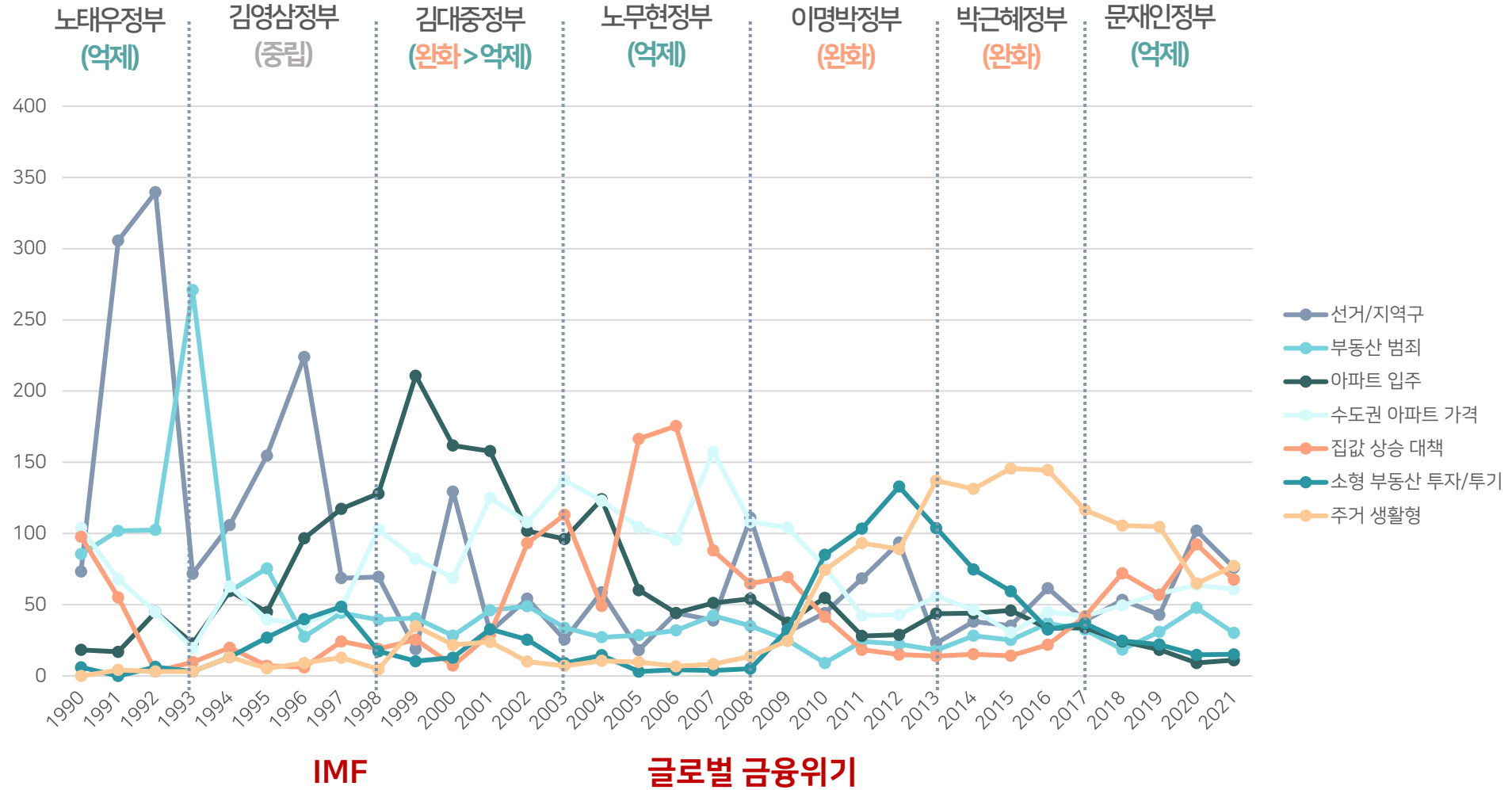
03 | 분석 결과

<토픽 모델링 결과 주요 키워드>

토픽	영역	키워드/주제어(상위 10개)									
전체		아파트	부동산	주택	가구	분양	정부	단지	지역	가격	상승
강남권 아파트 가격 상승	부동산 가격	아파트	거래	가격	매매	전용	상승세	시세	매물	집값	거래량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	아파트	하락	가격	단지	매매	송파	전세금	상승세를	매물
전세금 상승		전세	전세금	월세	입주	세입자	보증금	수요	물량	전세난	집주인
상가건물 임대		건물	상가	빌딩	보증금	임대	대지	연면적	수익	상권	대로변
투자 전략	부동산 투기	투자	주식	펀드	수익	상품	금리	금융	은행	투자자	자금
부동산 투자/투기		부동산	투자	경매	매입	투자자	상가	전문가	빌딩	매각	물건
소형 부동산 투자/투기		오피스텔	분양	수요	소형	수익	임대	투자자	인근	위치	지하철
아파트 입주	부동산 광고	가구	분양	아파트	입주	단지	물량	공급	예정	일반	구역
아파트 분양 광고		세대	제공	가능	호텔	분양가	계약	혜택	계약금	중도금	이용
역세권 부동산 분양 광고		예정	개통	분양가	지구	용인	인근	규모	위치	광고	이용
주거 생활형 광고		가구	단지	예정	전용	이용	편리	규모	설계	조성	면적
부동산 과세	부동산 정책	주택	중부세	세금	양도세	공시	보유세	부담	재산세	기준	다주택자
부동산 대책		정부	대책	규제	지역	완화	투기	지정	제한	방안	과열
주택 대출		대출	주택	규제	금리	은행	담보	DTI	LTV	가계	부채
부동산 정책 집값 상승 대책		부동산	정부	집값	정책	주택	가격	공급	상승세	대책	규제
주택 청약	부동산 공급	분양	청약	분양가	공급	가구	위례	물량	전용	경쟁률	당첨
수도권 신도시		도시	분당	판교	동탄	경기	신도시	성남	용인	평택	화성
택지 개발		주택	공급	토지	계획	지구	공공	그린벨트	부지	LH	주거
재개발 재건축		단지	사업	재건축	조합	건축	추진	구역	리모델링	정비	시공사
교육	생활환경	교육	사람들	교수	경제	중요	학교	대학	나라	서울대	학원
교통		도시	한강	노선	사업	계획	개통	지하철	교통	김포	GTX
오피스타운		기업	고객	서비스	사업	금융	영업	브랜드	관리	업체	매출
지역명	기타	지역	전국	지방	부산	경기	대구	증가	서초	수도권	인천
부동산 범죄		재산	검찰	신고	국세청	부동산	수사	혐의	확인	보유	자금
선거/지역구		선거	민주당	국민	한나라당	국회	출마	새누리당	정책	지역구	야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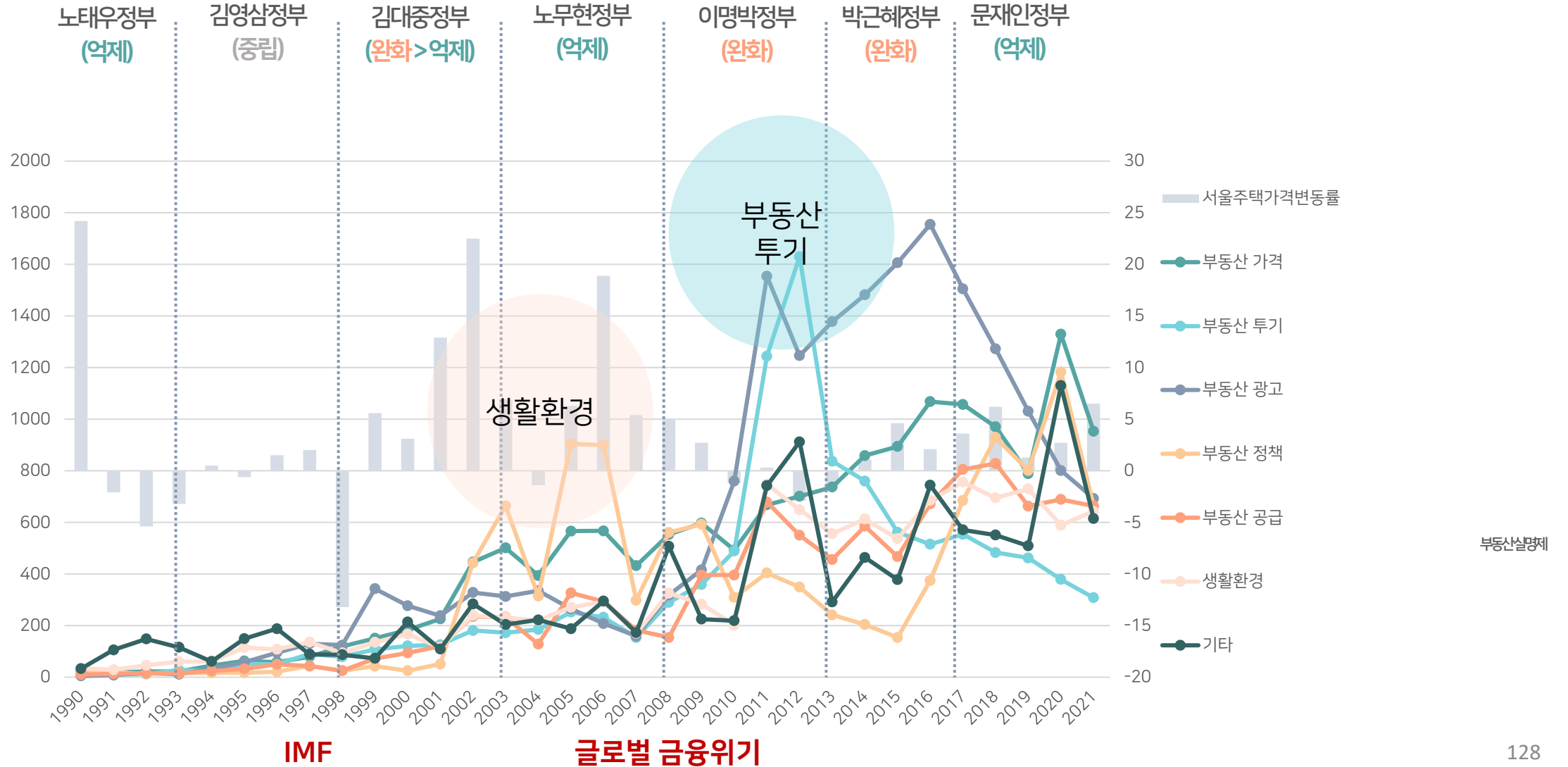
03 | 분석 결과

<주요토픽의 시기별 변화량(1990~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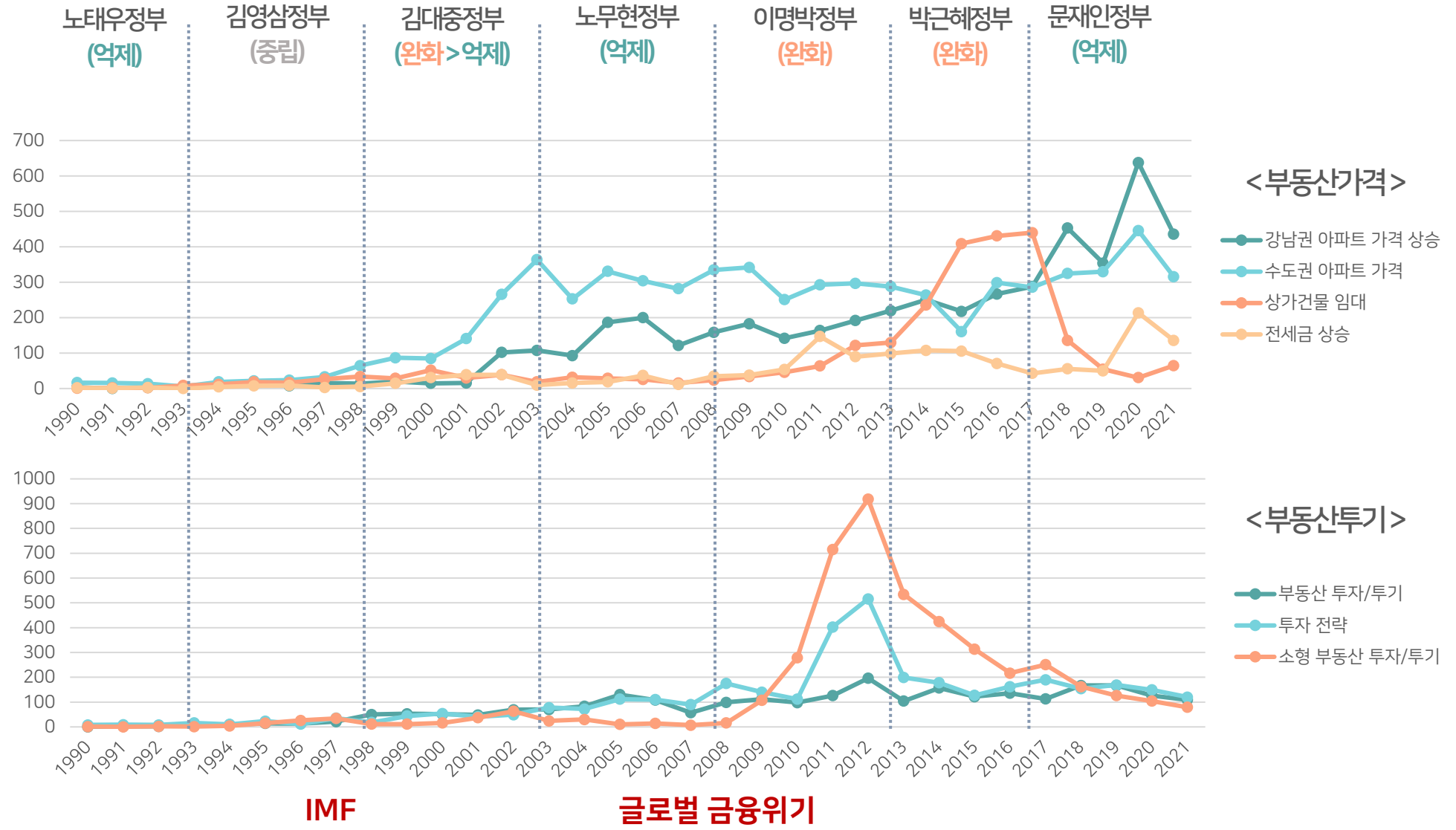
03 | 분석 결과

<주요 영역의 시기별 변화량(1990~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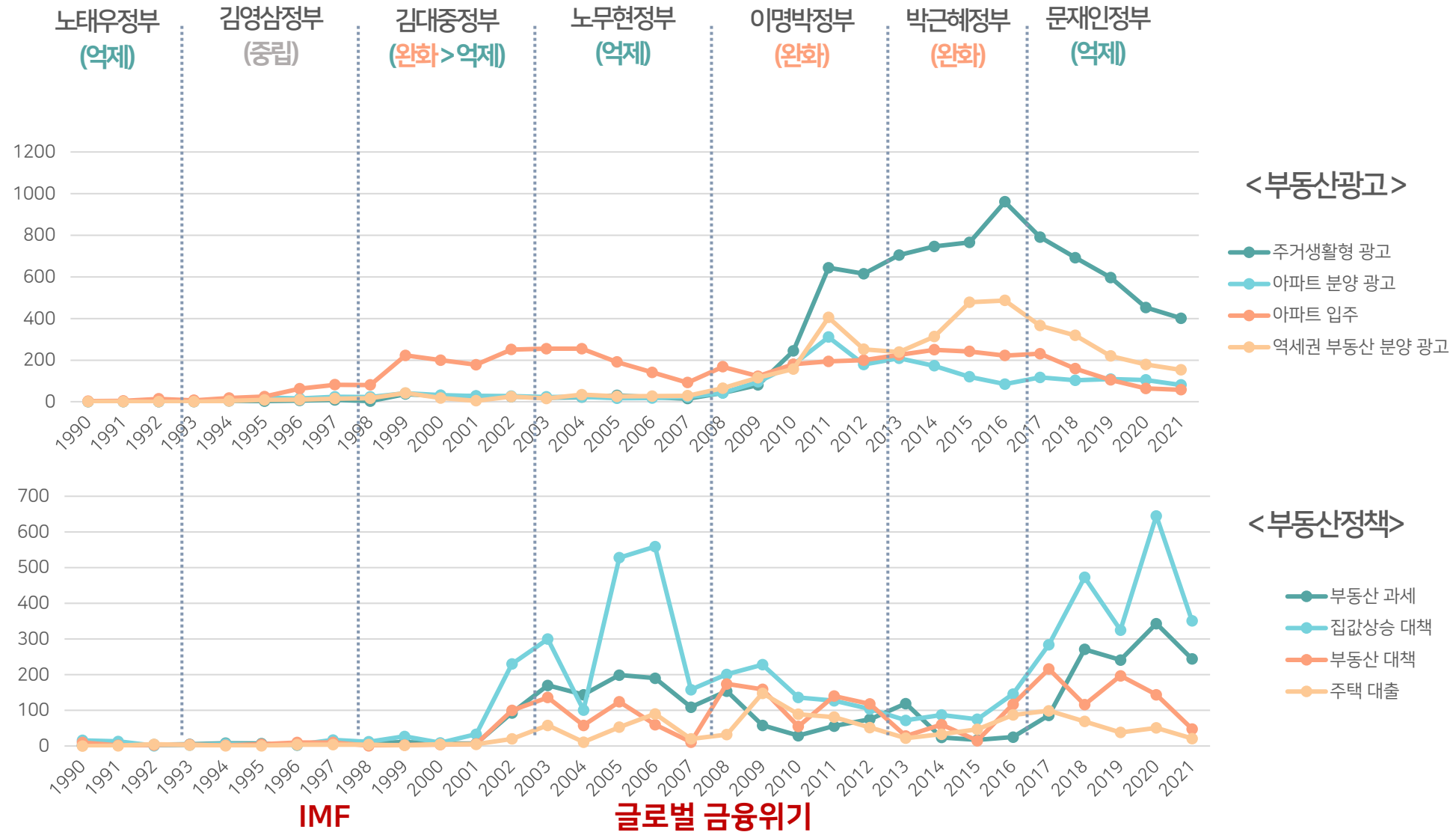
03 | 분석 결과

<주요토픽별 시기별 변화량 1 (1990~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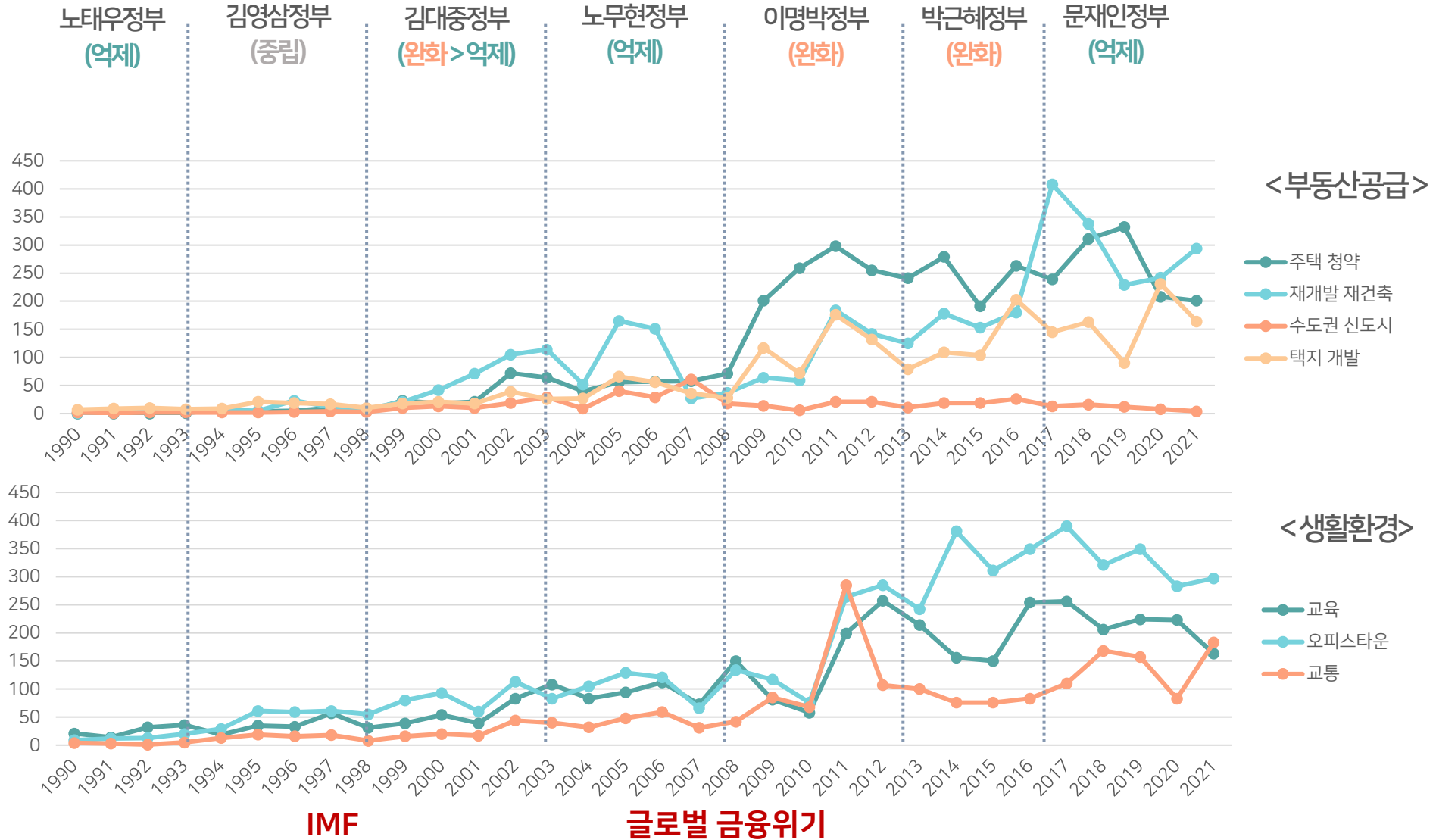
03 | 분석 결과

<주요 토픽별 시기별 변화량 2 (1990~2021)>



03 | 분석 결과

<주요 토픽별 시기별 변화량 3 (1990~2021)>



03 | 분석 결과

<시기별 담론의 공간적 배경>

	지역(상위 20개)	지역(상위 20개, 강남3구제외)
시기(1): 1990~1997	서울, 강남, 수도권, 경기, 부산, 대구, 여의도, 강북, 인천, 서초, 광주, 잠실, 중구, 경남, 경북, 송파, 전남, 마포, 성남, 영등포	경기, 부산, 대구, 여의도, 강북, 인천, 광주, 중구, 경남, 경북, 전남, 성남, 영등포, 대전, 상계, 용산, 일산, 강동, 노원, 수원
시기(2): 1998~2009	강남, 서울, 수도권, 경기, 송파, 서초, 강북, 대치, 일산, 강동, 용인, 인천, 양천, 목동, 평촌, 여의도, 과천, 판교, 개포, 역삼	경기, 강북, 일산, 용인, 인천, 양천, 목동, 평촌, 여의도, 과천, 판교, 개포, 강동, 용산, 성남, 부산, 수원, 중구, 뉴타운, 성북
시기(3): 2010~2021	강남, 서울, 수도권, 경기, 서초, 송파, 인천, 여의도, 강북, 강동, 부산, 대치, 용산, 용인, 대구, 마포, 반포, 성남, 판교, 과천	수도권, 경기, 인천, 여의도, 강북, 강동, 부산, 용산, 용인, 대구, 마포, 성남, 판교, 과천, 수원, 성동, 하남, 동탄, 위례

03 | 분석 결과

<토픽상대적순위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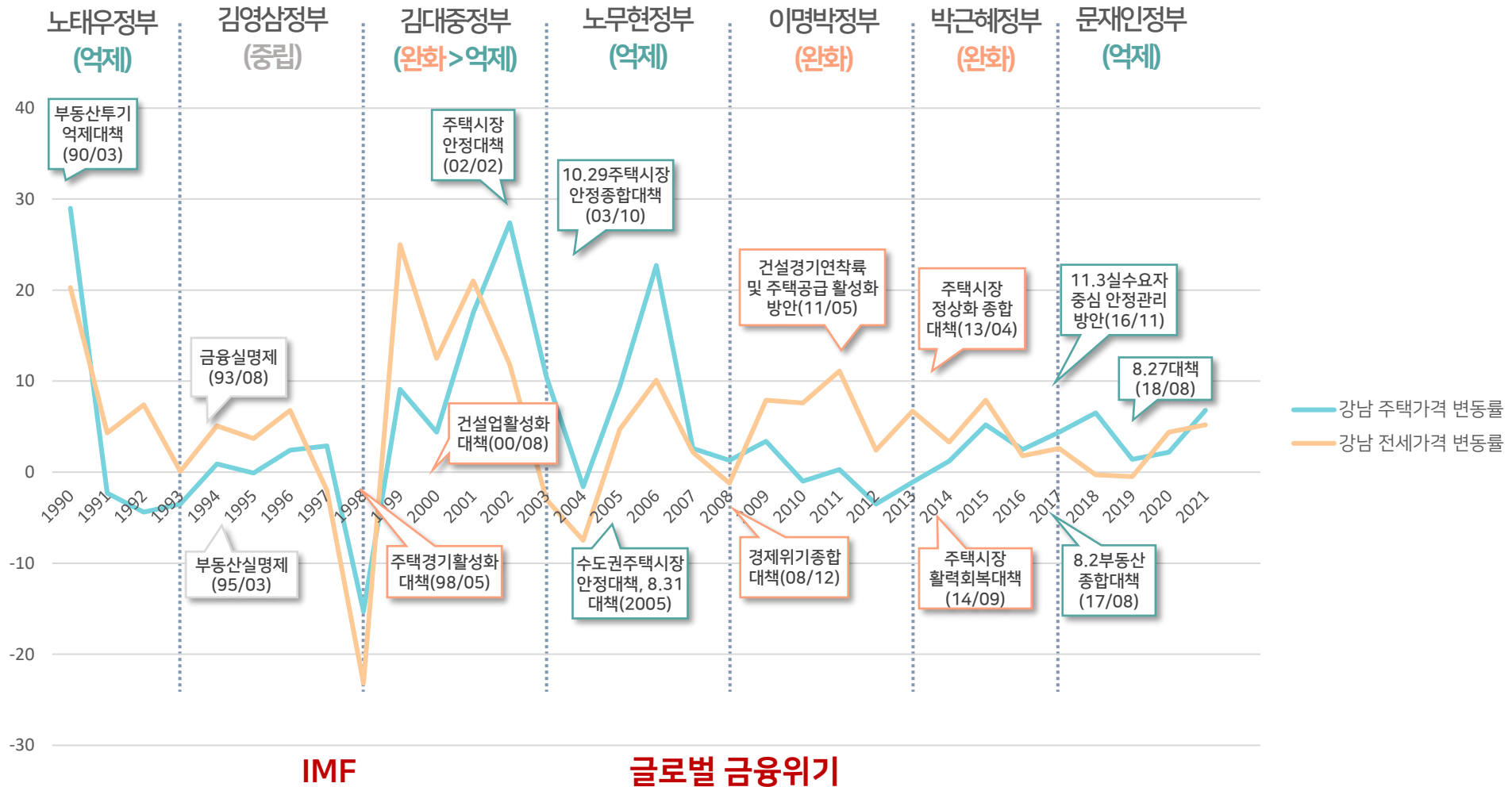
Topic	부동산 가격				부동산 투기				부동산 광고				부동산 정책				부동산 공급				생활환경				기타	
	강남권 아파트 가격 상승	수도권 아파트 가격	전세금 상승	상가건물 임대	투자 전략	부동산 투자/투기	소형 부동산 투자/투기	아파트 입주	아파트 분양 광고	역세권 부동산 분양 광고	주거 생활형 광고	부동산 과세	부동산 대책	주택 대출	집값 상승 대책	주택 청약	수도권 신도시	택지 개발	재개발 재건축	교육	교통	오피스타운	지역명	부동산 범죄	선거/지역구	
1990	11	2	14	17	8	22	17	13	17	17	22	14	6	22	3	22	14	9	17	1	11	7	9	4	5	
1991	23	3	18	14	8	14	23	10	14	18	18	10	14	18	5	23	18	8	12	4	12	6	7	2	1	
1992	13	4	13	16	9	16	16	4	20	24	20	11	13	10	20	24	16	7	11	2	6	7	2	1		
1993	10	12	24	8	5	6	21	10	17	24	21	13	15	17	17	21	20	9	15	2	4	6	1	3		
1994	11	3	19	8	10	11	20	5	15	20	20	14	23	25	17	15	23	11	17	3	2	9	5	1		
1995	14	7	17	11	6	14	13	5	8	16	23	18	19	25	21	21	24	8	19	4	2	8	3	1		
1996	19	6	18	11	15	14	5	2	12	16	20	24	16	22	22	21	24	9	8	4	12	3	10	1		
1997	15	7	25	9	5	11	6	1	10	16	22	17	19	23	13	19	23	13	18	3	12	2	8	4		
1998	13	2	20	6	10	4	1	1	9	12	23	17	25	21	14	21	23	16	17	7	17	3	10	8	5	
1999	15	2	19	11	5	4	1	1	8	7	10	20	24	25	12	13	22	17	14	9	18	3	22	6	15	
2000	20	4	12	7	5	8	9	1	11	17	13	23	25	24	22	17	21	14	9	5	15	3	16	10	2	
2001	20	2	8	13	7	6	1	1	14	24	15	22	23	24	12	17	21	18	3	8	19	4	16	5	11	
2002	1	1	17	17	15	13	14	2	21	22	22	10	9	24	3	12	25	17	7	11	16	6	20	5	4	
2003	1	1	25	22	11	12	20	3	21	24	22	4	5	15	2	1	18	19	6	7	17	10	16	9	13	
2004	2	2	23	17	10	8	19	1	21	16	22	3	11	24	6	3	25	20	13	8	17	5	14	12	4	
2005	2	2	23	21	10	7	25	4	24	22	20	3	9	16	1	15	18	13	6	11	17	8	19	12	14	
2006	3	2	19	22	10	11	25	6	24	21	23	4	14	13	1	1	20	17	5	9	15	8	18	12	6	
2007	3	1	23	21	6	13	25	5	19	16	22	4	24	20	2	12	11	14	17	8	15	10	17	7	9	
2008	7	2	20	23	4	12	25	6	17	14	16	8	5	21	3	13	24	22	19	9	17	10	15	11	1	
2009	4	1	23	24	7	12	13	8	15	11	18	21	5	6	2	3	25	9	20	18	16	9	22	17	14	
2010	9	3	20	21	11	12	1	5	6	7	4	24	19	13	10	2	25	15	17	18	16	14	22	23	8	
2011	16	8	17	23	5	20	1	12	6	4	2	24	18	22	19	7	25	14	13	11	9	10	21	15	3	
2012	12	5	22	17	4	11	1	10	13	9	3	23	18	24	21	8	25	16	15	7	20	6	19	14	2	
2013	8	3	18	12	11	16	2	7	6	6	1	14	23	24	22	5	25	21	13	9	17	4	20	19	14	
2014	7	6	18	9	11	15	2	8	13	4	1	24	22	23	19	5	25	17	11	16	21	3	20	14	10	
2015	7	10	17	3	14	15	4	6	2	2	1	24	25	22	20	8	23	18	11	12	19	5	21	13	9	
2016	7	6	23	3	15	17	12	11	2	2	1	25	18	20	16	8	24	13	14	9	22	5	19	10	4	
2017	6	7	24	2	16	19	11	13	1	5	1	23	15	21	8	12	25	17	3	10	20	4	22	14	9	
2018	3	6	24	18	17	13	15	16	21	8	1	10	20	23	2	9	25	14	5	11	12	7	22	19	4	
2019	2	5	23	22	14	15	17	19	18	11	1	8	12	24	6	4	25	20	9	10	16	3	21	13	7	
2020	3	5	12	24	15	17	19	22	18	14	4	6	16	23	2	13	25	10	9	11	21	8	20	7	1	
2021	1	5	15	20	16	17	19	22	18	14	2	8	23	24	4	9	25	11	7	12	10	6	21	13	3	

04 |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 30년 기간, 강남형 도시화 과정에 동반되었던 투기적 도시화의 언어들의 모습
- 시기에 따른 주제어 변화는 당시의 경제적 상황(IMF, 글로벌 금융위기 등) 속에서 주류 매체가 생산한 강남 관련 주요 의제들을 보여주고 있음
- 성격을 달리하는 역대 정부의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주제어 상황은, 부동산 관련 금융, 주택 구입 관련 규제, 새로운 주거지역 공급 정책 등의 관련 요인들과 상관관계를 암시함
- 주제어 분석은 또한 문제적 현상으로서 '강남-부동산-주택(아파트)'가 담론의 대상으로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보임
- 주류 매체의 '언어', 그리고 그것에 영향을 받는 개인의 '정동'이 실물 부문(주택가격, 구입 행위 등)에 실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불평등(부채, 자산 소유 구조)에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의 질문이 뒤따름
- 이러한 투기적 도시화의 언어들에 대한 정치, 사회, 문화, 경제적 문법의 재배열을 통한, 강남형 도시 모델의 공유적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 제시 필요

04 |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 관련 제도 및 정책의 변화와 토픽 모델링 결과 간의 관계



04 |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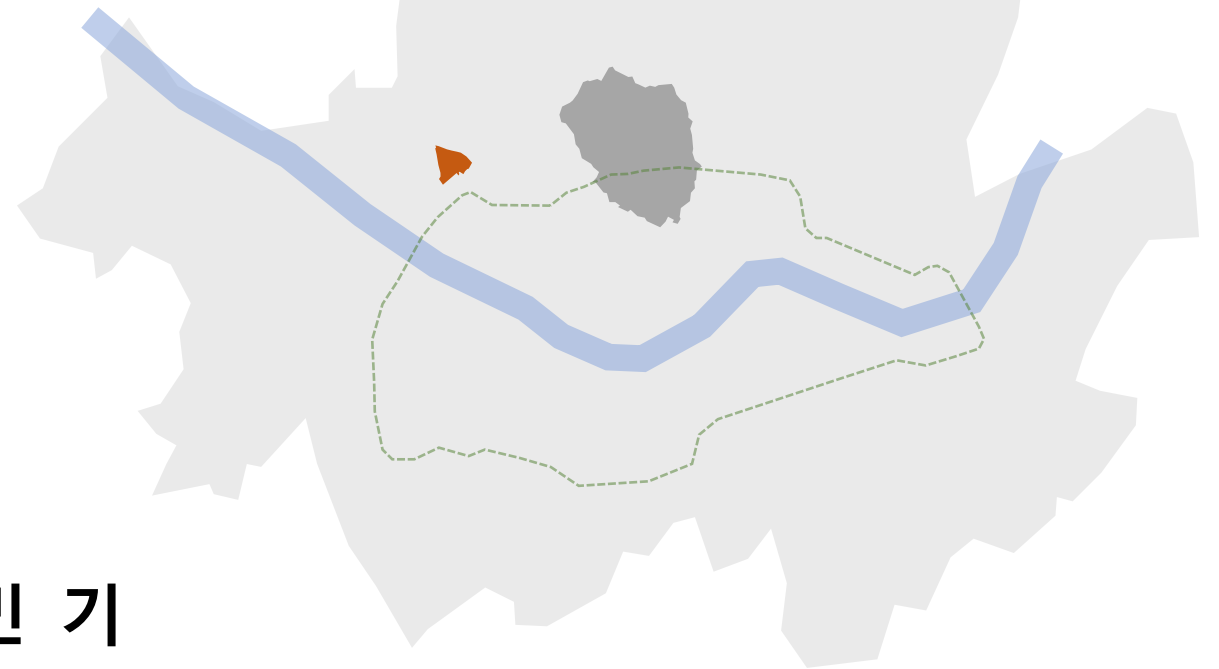
- 부동산 시장지표 및 투기적 도시화의 지표와 토픽 모델링 결과 간의 시계열적 상관관계

<토픽모델링결과 및 부동산 지표 간 공적분 분석결과>

	부동산정책	부동산투기	부동산광고	부동산공급	부동산가격	생활환경	기타
강남 주택가격 변동률	-0.211	-0.043	-0.043	-0.154	-0.003	0.410	0.040
전국 주택가격 변동률	-0.102	-0.123	-0.110	-0.267	-0.310	0.215	-0.100
강남 전세가격 변동률	0.094	-0.015	0.059	-0.017	-0.137	0.026	-0.117
서울 전세가격 변동률	0.103	-0.043	0.058	-0.030	-0.178	0.006	-0.146
강남 주택매매 거래	-0.076	0.125	0.137	0.199	0.395	0.345	0.177
서울 주택매매 거래	-0.108	0.027	0.058	0.080	0.194		0.137
전국 주택매매 거래		0.213	0.261	0.211	0.206		
서울 주택인허가		0.377	0.357	0.496			
전국 주택인허가		0.332					
강남 아파트매매 거래	-0.049	0.132	0.153	0.214	0.425	0.309	0.180
서울 아파트매매 거래	-0.052	0.103	0.134	0.188	0.327	0.412	0.186
전국 아파트매매 거래	0.111	0.234	0.281	0.214	0.218		0.279
서울주택담보대출						0.260	
전국주택담보대출						0.300	

서울 주거지역의 상품화, 온라인 블로거의 선택적 정보공유, 밀레니얼 세대의 미학적 투어리즘의 관계

: 연남동 젠트리피케이션 과정(2010-18)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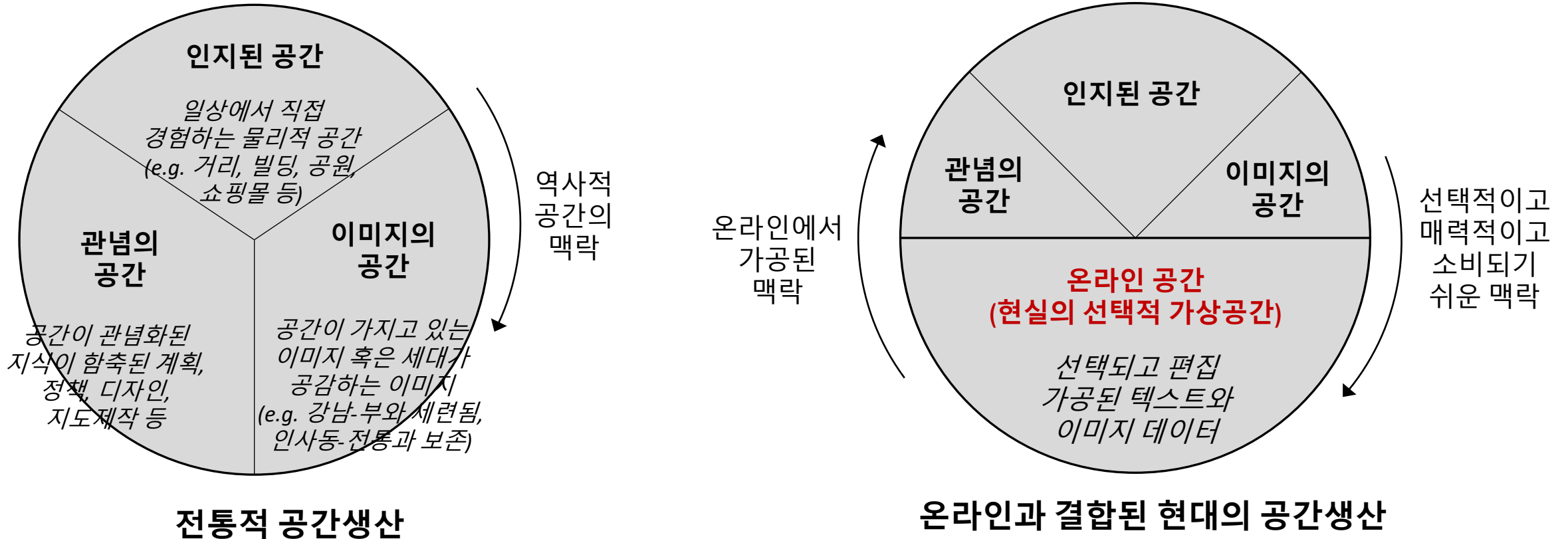
정민기

mkjeong082@gmail.com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980년대 이후 세계화, 신자유주의, 기술혁신에 따른 공간생산의 로직 및 시스템 변화
e.g. 탈산업화와 민간중심개발, 자본의 집중과 다국적 메가프로젝트, 주택 금융화와 젠트리피케이션, 정보화와 글로벌 도시, 계층양극화와 지역 불균형, 상징적 경제와 핫플레이스, 플랫폼 자본주의와 탈중앙화된 자본의 흐름 변화
- 금융화, 경제적 불평등, 민간자본의 개발은 젠트리피케이션 등 현대도시의 새로운 문제들을 발생
- 서울의 핫플레이스(e.g. 경리단길, 연남동, 을지로 등)로 불리는 동네의 상업화 및 젠트리피케이션은 **20세기**(세계화, 신자유주의, 민영화, 금융화, 정보화)와 **21세기**(디지털기술, 저가항공, 빅데이터, 핀테크, 플랫폼 산업)의 **충돌지점**에서 새로운 형태로 발생
- **온라인 정보는 어떻게 현대도시의 주거공간을 상품화 시키는가? (서울 연남동 사례)**

2. 공간생산 매커니즘의 변화: 분석의 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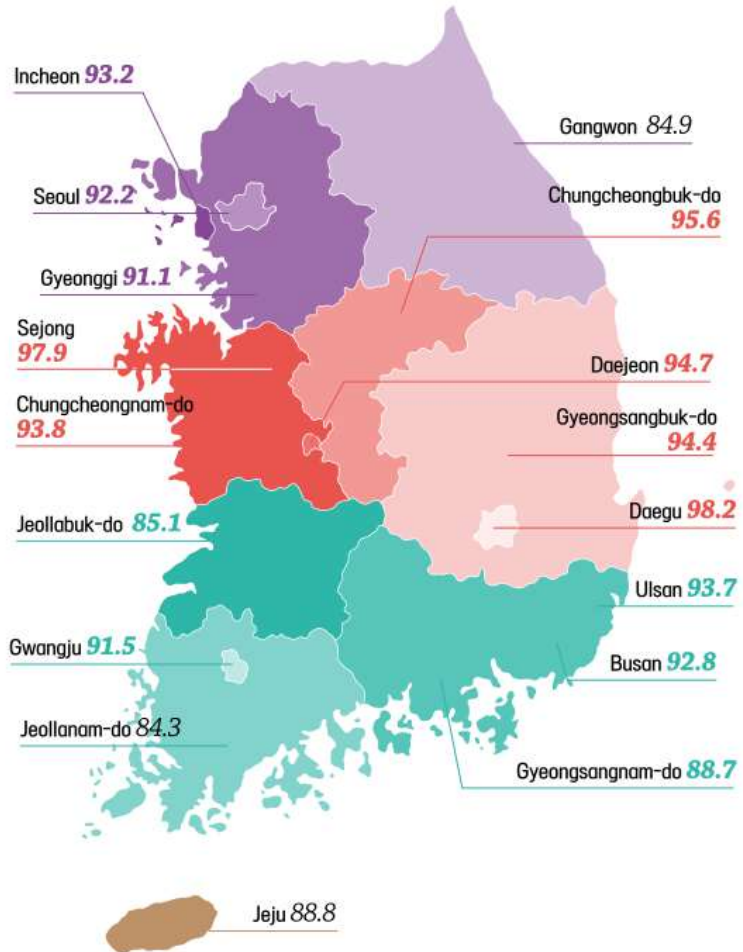


앙리 르페브르의 공간생산 이론 (The Production of Space)
 룽 쉴츠의 사회적 공간화 이론 (Social Spatialisation)

2. 공간생산 매커니즘의 변화: 디지털 환경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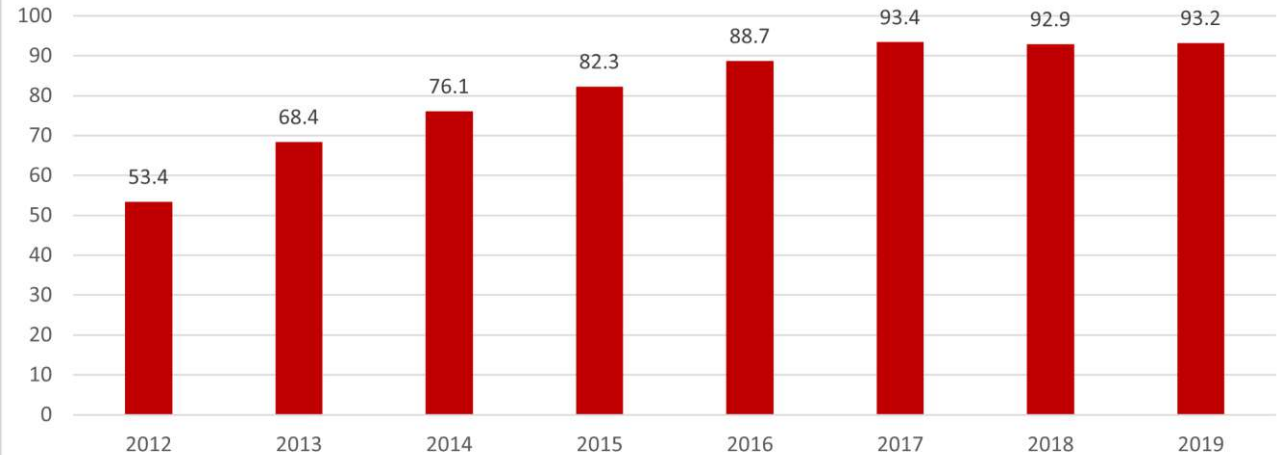
Internet Usage Rate by Region

(Un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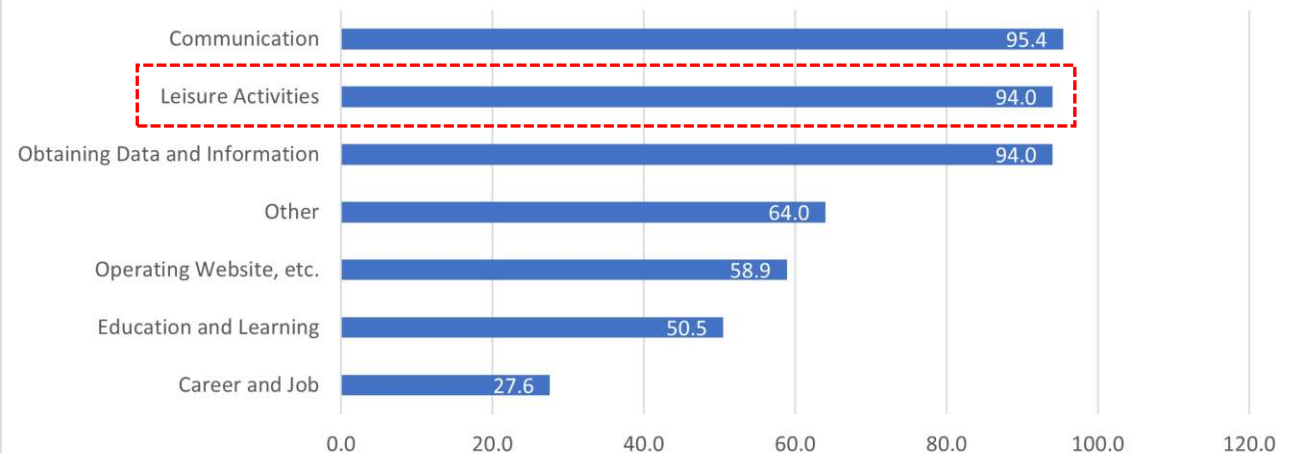
(Source: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Smartphone Penetration Rate in South Korea (% , Ages 20-60+)



(Source: Gallup Korea)

Purpose of Internet Use (%)



(Source: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 공간생산 매커니즘의 변화: 연구방법론

물리적 공간, 인간의 관념과 인식의 공간, 온라인 가상공간 사이의 접점에 집중

블로그 콘텐츠 분석

(2010-2018년 사이 업로드된 포스트)

- 관련 키워드의 7,616개 포스트 수집
- 개인의 경험과 이야기가 담긴 877개의 포스트를 분류하여 질적 분석 진행
- NVivo12 (질적 분석) 프로그램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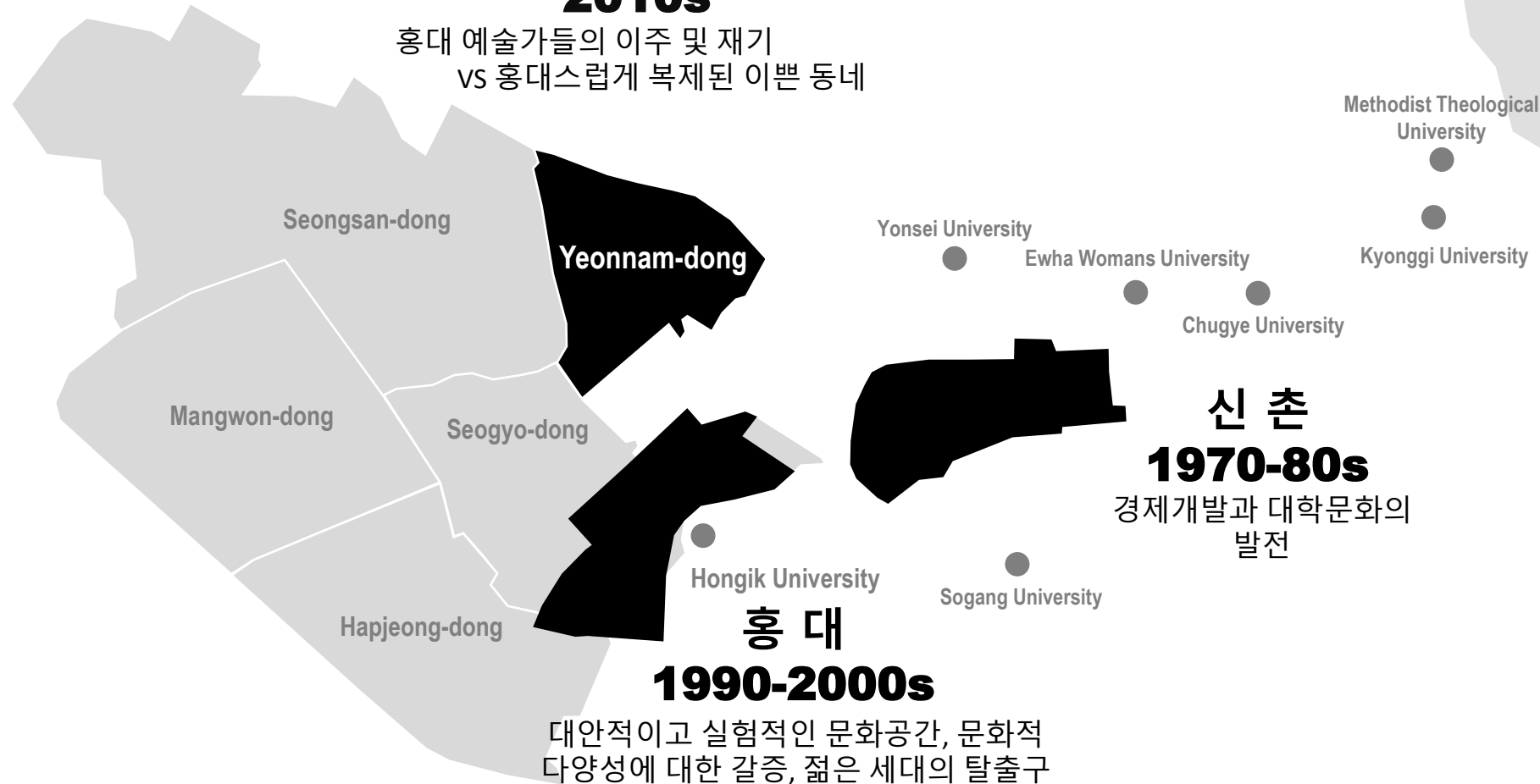
심층 인터뷰 (6개 그룹, 42명)

- 서울의 20-30대 밀레니얼 세대
- 연남동 예술가 및 소상공인
- 지역 공인중개사 및 부동산 전문가
- 파워 블로거 (Blog influencers)
- 연남동 주민
- 서울시 공무원 (도시정책, 사업)

3. 서울 주거지역의 상품화: 핫플레이스의 역사

홍대 주변 동네의 홍대화 2010s

홍대 예술가들의 이주 및 재기
vs 홍대스럽게 복제된 이쁜 동네



Seoul City Centre (Old Seoul)



명동 1960-70s

해방 이후 살롱문화(다방), 젊은 예술가들의 모임

3. 서울 주거지역의 상품화: 연남동 현황정보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인구: 15,579명, 8879세대 (2021년 1월 기준)

면적: 0.64 km²

토지이용: 주거지역



경의선 철도에 둘러싸여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되었던 동네
휴먼타운, 경의선숲길공원 등의 주거정비/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주변 흥대의 젠트리피케이션에 영향을 받음
공항철도의 연결(2010년 12월)로 외국인 관광객 접근성 강화
연트럴파크(2016년 완공)는 골목으로 관광객들을 뿜는 펌프의 역할

4. 연남동 젠트리피케이션 1 : 이미지 양극화 및 공간 계층화 (2010-2012)

동진시장이 문을 닫으면서 저렴한 주변 골목에 젊은 소상공인들이 모여들

연남동 투어를 통해 좁은 골목에 "숨겨진 재밌고 개성있는 가게들"을 발견하는 문화

블로그를 통해 소개되면서 비주류 문화에 관심있는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

표준화된 프랜차이즈 문화에 실증난 밀레니얼 세대에게 **대안적인 문화공간** 제공

숨겨진 공간 VS 잊혀질 공간 → 이미지의 양극화 → 부동산 가격 반영 → 공간의 계층화



4. 연남동 젠트리피케이션 1 : 이미지 양극화 및 공간 계층화 (2010-2012)

숨겨진 공간
(Hidden Spaces)



V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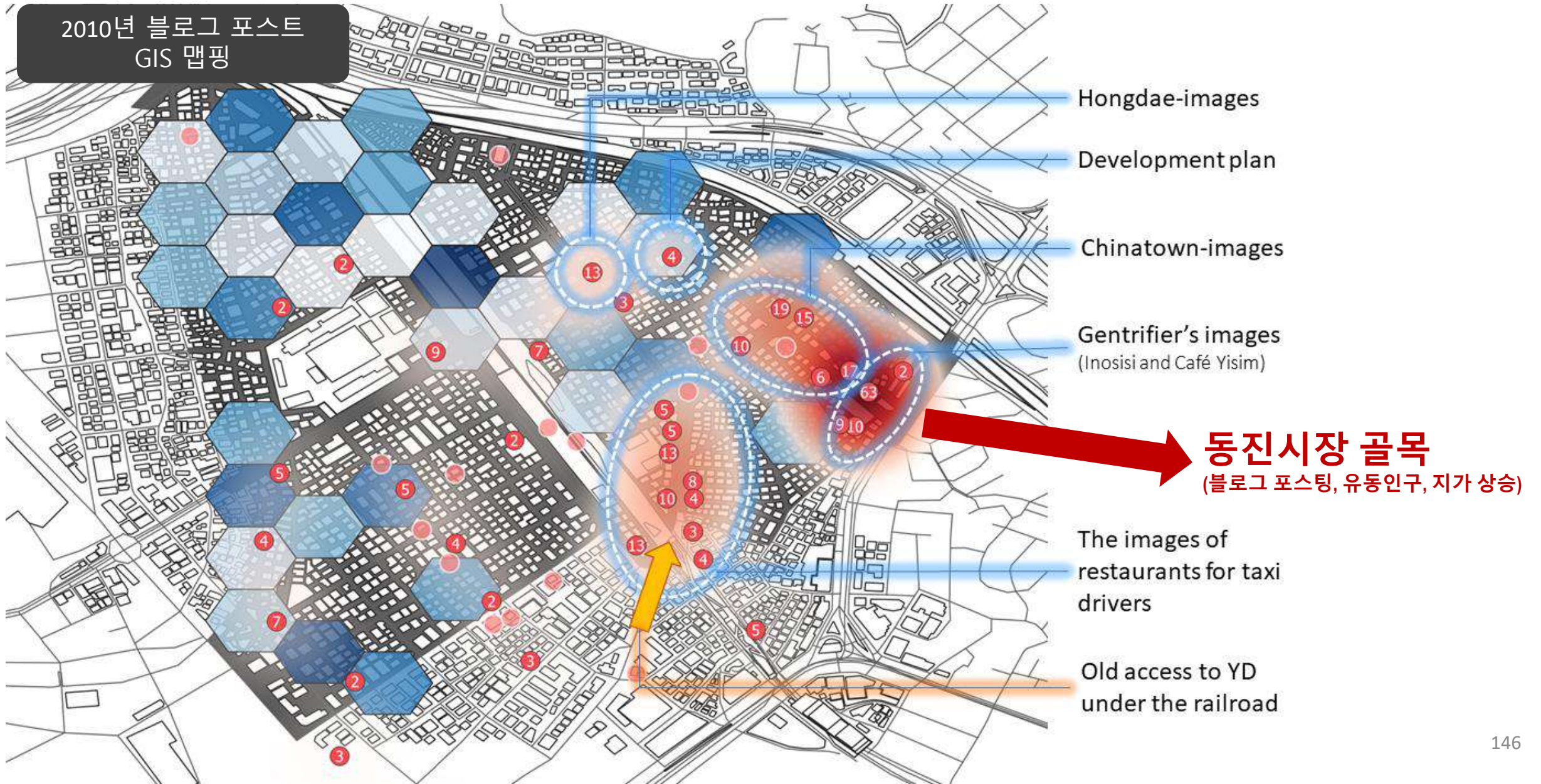
잊혀질 공간
(Forgotten Spaces)



블로거들의 관심 이동
물리적 유동인구 증가
경제적 가치 상승

4. 연남동 젠트리피케이션 1 : 이미지 양극화 및 공간 계층화 (2010-2012)

2010년 블로그 포스트
GIS 맵핑



4. 연남동 젠트리피케이션 1 : 이미지 양극화 및 공간 계층화 (2010-2012)



[집코노미] 같은 연남동인데, 가격도 거래도 정체...왜?

입력 2018.10.03 07:35 수정 2018.10.03 09:08

◆ 연남동 390번지 일대 밸류지역...동교동과 단일상권 **➡** 동진시장 골목

연남동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역은 동교동과 접해 있는 390번지 일대다. 경의선숲길과 동교로 그리고 동진시장을 기점으로 형성되어 있는 블록이다. 골목마다 아기자기한 카페와 레스토랑 그리고 게스트하우스들이 어우러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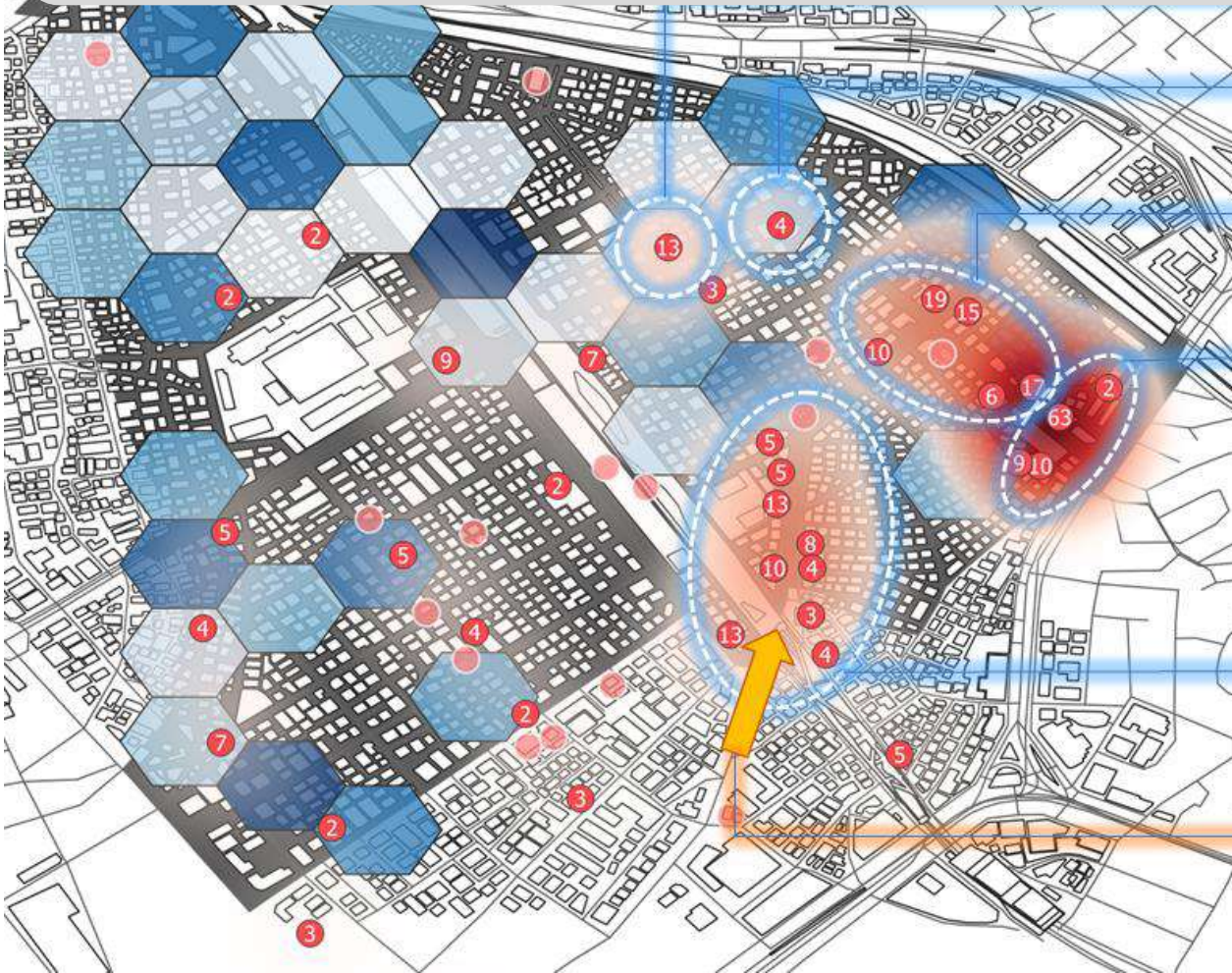
해당지역의 거래건수는 연간 약 20여건에 달한다. 면적에 비하면 손바뀜이 많은 편이다. 물건별 평균 평단가(3.3㎡ 기준)는 2016년 3551만원이었는데, 2018년 5818만원으로 뛰어올랐다. 약 2264만원 증가했으며 상승률은 63.8%에 달한다. 연남동 평균 상승률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4. 연남동 젠트리피케이션 1 : 이미지 양극화 및 공간 계층화 (2010-2012)

공간의 계층화:

블로거에 의해 활성화 된 숨겨진 공간의 수요가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상승시키고, 외부인의 관심 정도에 따라 공간별 가치를 계층화 시킴 → 잠재적 경제 가치의 상승과 공간별 차이 발생



4. 연남동 젠트리피케이션 2 : 선택적 경험과 관심 주도 경제 (2013-2015)

밀레니얼 세대: 취업난과 고용불안, 정보접근성은 강화 → 돈은 부족하나 정보는 풍족

밀레니얼 세대의 골목투어: 온라인에서 이미 확인된 “안전하고 확실한 소비공간” 의 추구

관심은 동네 전체로 넓어졌지만 실제 소비는 **파편적이고 검증된 장소**에 집중 → 숨겨진 공간의 강화

경험보단 경험의 증거로 남기는 “**예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 → **인테리어 및 음식 셋팅**이 더 중요



4. 연남동 젠트리피케이션 2 : 선택적 경험과 관심 주도 경제 (2013-2015)



확대해서 사진을 찍어주니 다시 칭이 고이네요. 이런,조만간 다시 들릴 생각이 있긴 했는데 아무래도 일정을 더 앞당겨야 할까봐요. 같이 간 지인들도 사진 있냐고문던데 이렇게 찍어두길 잘했지 뭐예요.

여행이건 맛있는식당이건 핫플레이스건. 좌우지간 사진 찍어두는게 남는것 같아요.

해가 갈수록 내 사진은 잘 안찍게 되는것같아 뭔가 아이러니하지만, 장소나 예쁜 소품, 정성들여 만들어진 음식같은건 꼭 찍어두는 편이거든요. 그런걸 볼때마다 괜시리 흐뭇하고, 그날 그날 나 참 열심히 살아왔다고 실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굳이 책으로 만들거나 사진을 뽑거나 하지않아도, 가끔 힘든 날 사진들을 두루두루 둘러보다보면 그것만으로 에너지를충전받을 때가 있거든요.

좋아. 열심히 일해서 또 다른멋진 곳을 다녀보자! 하고 힘을 얻기도 해요.

[블로거 '감자', 2018.11.28]

<https://blog.naver.com/sung2gamja/221407757658>



일단 스탬프커피의 외관.

외관부터 예쁘장하게 잘 꾸며두어 인기가 좋은것 같다. 요즘은 모든 카페들이 실내 인테리어보단 외부 인테리어를 더 신경써서 하는것 같다.

여기도 그런 느낌이었음. 특출나게 눈에 띄는 인테리어는 아니었지만 유럽 감성을 풍기는 곳이라 지나가다 오 예쁘다 하고 멈춰서기 좋은 외관이였다.

[블로거 '엔지', 2018.12.19]

<https://blog.naver.com/yeanzz/221422103873>



옥상도 막 일케 이빠~~

너무 재미있는 컨셉의 카페라서

재미지게 놀다 왔네요

여기말고도 연남동 주변에 분위기 있고

특색있는 인기 카페가 많아서

카페찍고 주점찍고~

데이트 코스를 이렇게 짜도 알차겠다

싶었네요

요즘 다녀보니 동네마다 특색있는 맛집&카페가

정말 많긴 하더라고요~

요즘 사람들 사진찍는걸 워낙 좋아하닌

그 맛집들과 카페들의 포인트는

사진이 잘 나오는곳, 음식사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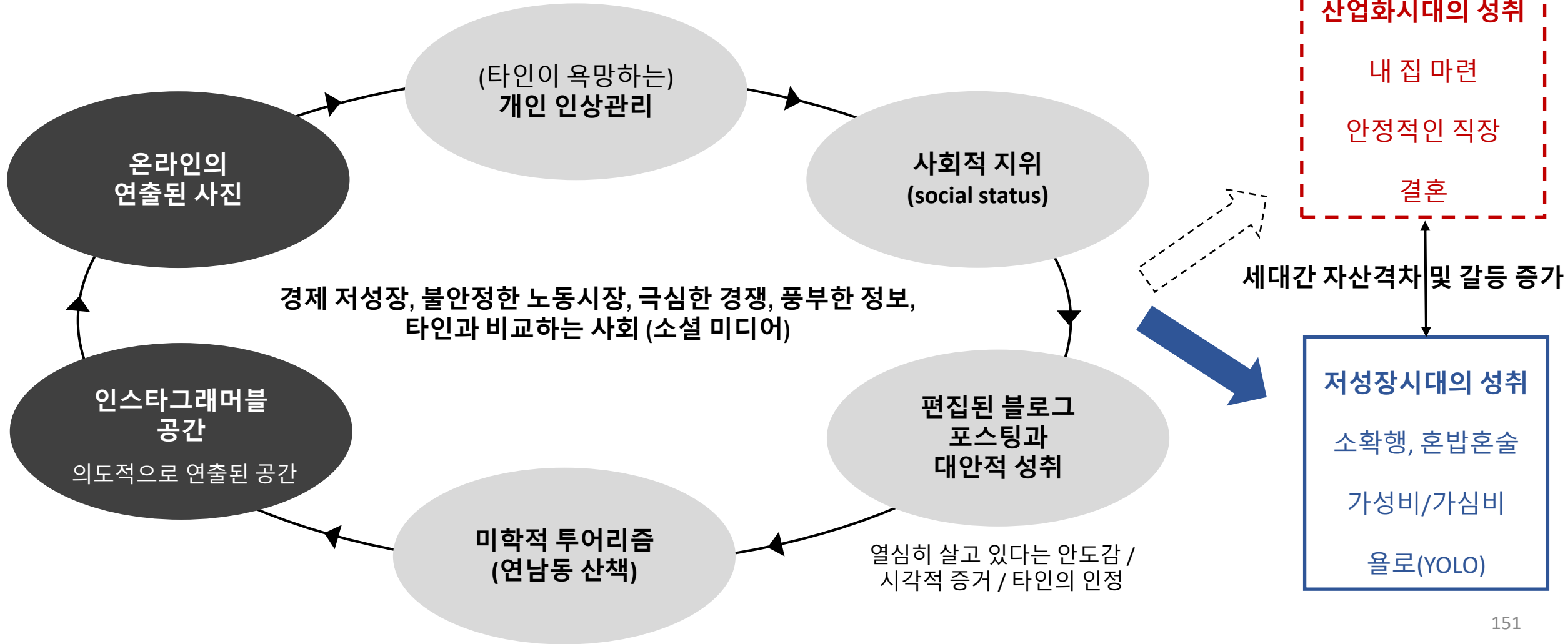
예쁘게 나오는곳! 이라는 공통점이 있긴 했어요 ㅎㅎ

[블로거 '줄리', 2018.12.17]

<https://blog.naver.com/unique1028/221421098778>

4. 연남동 젠트리피케이션 2 : 선택적 경험과 관심 주도 경제 (2013-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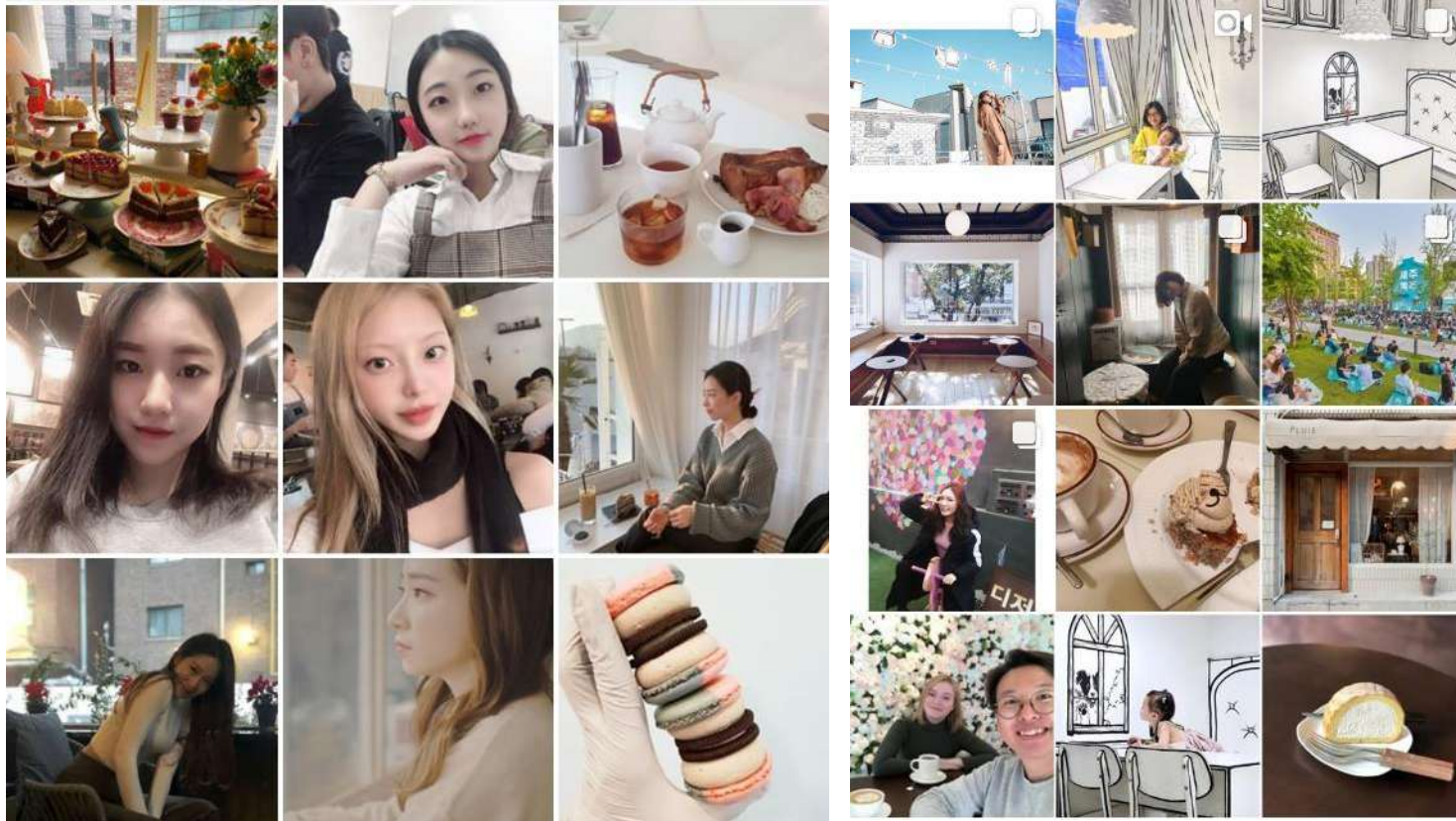
밀레니얼 세대의 대안적 가치 시스템
(alternative value system)



4. 연남동 젠트리피케이션 2 : 선택적 경험과 관심 주도 경제 (2013-2015)

평범하다고 믿는 일상으로부터 벗어나 일시적인 일탈, 미학적인 개인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한 미학적 도시 투어 따라서 타인이 욕망하는 특별한 모습과 장소를 동일하게 재현(representations)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자크 라캉



키워드 "#연남동"으로 검색된 인스타그램 사진들

4. 연남동 젠트리피케이션 3 : 온라인-현실 격차 및 디지털 픽처레스크 (2016-2018)

일시적이고 비일상적인 공간에서 특별한 경험과 **미적인 이미지** 획득을 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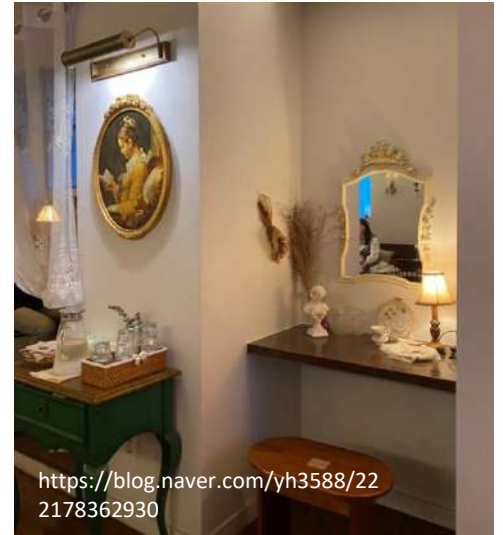
온라인-현실 격차: 온라인에서 선호되지 않는 매력없는 공간 (e.g. 평범하고 일상적인 건물 및 거리)

하이퍼리얼리즘 공간으로 변화 → 온라인과 현실 사이의 격차를 줄임 → 소비 증가 → **지가 상승**



4. 연남동 젠트리피케이션 3 : 온라인-현실 격차 및 디지털 픽처레스크 (2016-2018)

현대의 탈증앙화된 공간생산의 다양성 및 복잡성
 개인의 가치와 경험이 중요 (연트럴파크 사례)



세련되게 디자인 된 도시공원
 (경의선숲길, 연트럴파크)



이국적 경관은 방문자들의
 판타지를 촉발하여 미학적
 이미지를 주변으로 전이

소주 보단 유럽 맥주와 와인 감성

녹지(잔디)에 대한 이국적 판타지를 실천:
 요가, 버스킹, 애견산책, 조깅, 피크닉 등

연트럴파크 주변으로 판타지를
 미학적으로 극대화한 소비공간 확산

4. 연남동 젠트리피케이션 3 : 온라인-현실 격차 및 디지털 픽처레스크 (2016-2018)

19세기 초 영국의 픽처레스크(Picturesque)

그림과 현실 경관 사이의 경계가 약해짐.
그림은 현실을 더욱 아름답게 왜곡하여 담아내고,
반대로 현실은 "그림 같은 공간"을 재현하려 함.



The Chancel and Crossing of Tintern Abbey, Looking towards the East Window by J. M. W. Turner, 1794



A River Landscape with Jacob and Laban and his Daughters, by Claude Lorrain, 1654



Beardsley Park, Bridgeport, Photo by Jason Persaud,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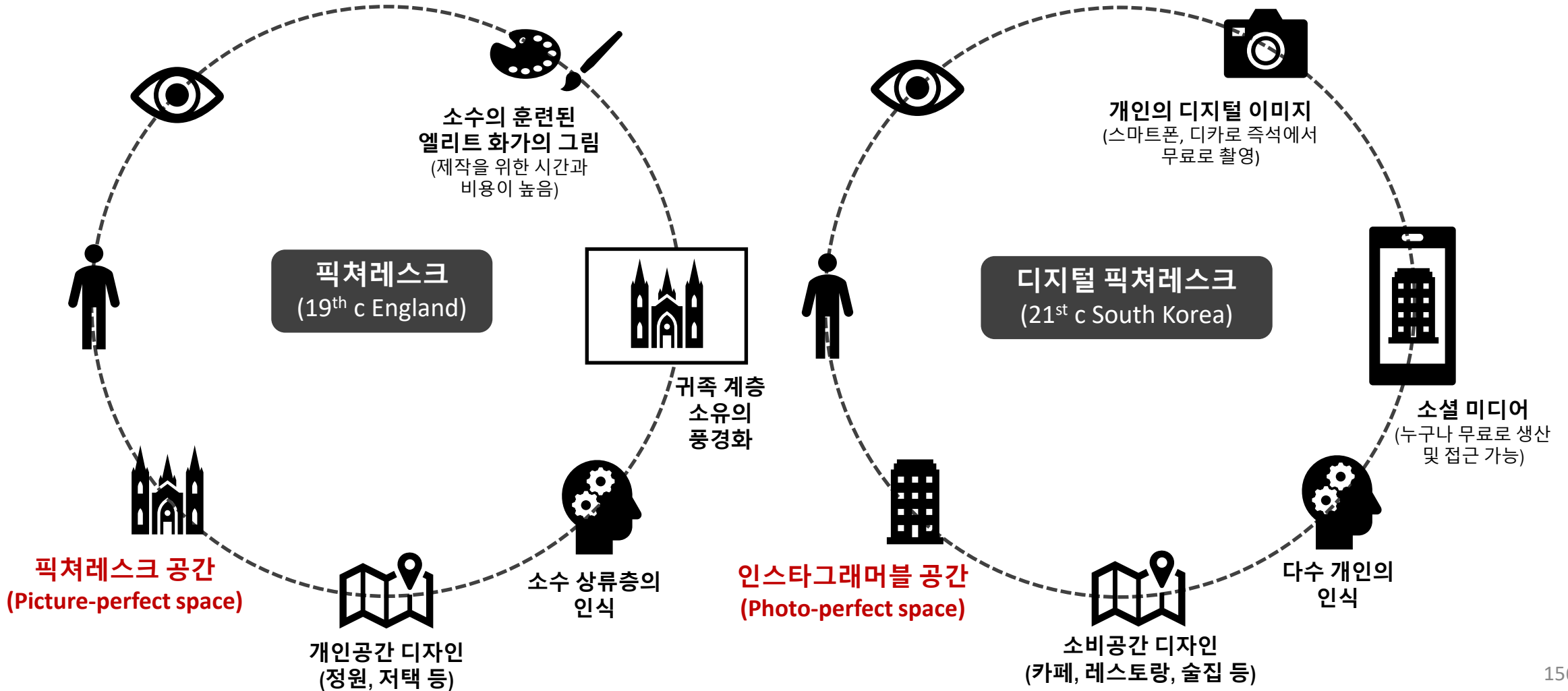


Scotney Castle

4. 연남동 젠트리피케이션 3 : 온라인-현실 격차 및 디지털 픽처레스크 (2016-2018)

21세기 디지털 픽처레스크와 인스타그램러블 공간
젠트리피케이션과 함께 온라인 이미지에
종속되어가는 현실 공간

클릭수, 좋아요, 공유, 팔로잉 숫자(관심) 등으로 가치를 평가
19세기 영국에 비해 순환의 속도, 규모, 범위가 기하급수적 증가



4. 연남동 젠트리피케이션 3 : 온라인-현실 격차 및 디지털 픽처레스크 (2016-2018)

디지털 픽처레스크 공간장치

1) 매혹적인 전시 (Alluring Setting)

전시와 선전의 공간(museum, exhibition)

거리 관광객들의 시선(관심)을 유혹

내부가 훤히 보이는 넓은 쇼윈도
상품의 미학적인 디스플레이

의도적으로 내부의 판타스틱한 소비행위를
외부에 노출

내부인은 외부인의 갈망하는 시선을 통해 개인의
욕망을 충족 → 시선을 온라인으로 확장



4. 연남동 젠트리피케이션 3 : 온라인-현실 격차 및 디지털 픽처레스크 (2016-2018)

디지털 픽처레스크 공간장치

2) 특권적인 무대 (Exclusive Setting)

무대의 공간 (theatre)

연출된 무대장치와 퍼포먼스를 통해 내부
관중(audience)의 만족감을 극대화

오픈 키친, 원테이블, 외국인 셰프, 명문요리학교
졸업장, 유명인의 사진 및 싸인, 찾기 힘들고
읽기도 힘든 외국어의 작은 간판

소수만을 위한 장소, 퍼포먼스, 상품이라는
이미지를 연출함으로써 관중의 판타지를 실현



<https://blog.naver.com/guswl9353/222063945732>



<https://blog.naver.com/phj0154/222021339434>

4. 연남동 젠트리피케이션 3 : 온라인-현실 격차 및 디지털 픽쳐레스크 (2016-2018)

디지털 픽쳐레스크 공간장치

3) 현혹적인 스튜디오 (Deceptive Setting)

촬영을 위한 스튜디오 공간 (studio)

셀카 및 사진 촬영의 무대배경을 제공함으로써
방문객의 특별한 경험을 이미지로 영구히
박제시킴

셀카를 위한 큰 거울, 세련되고 화려한 조명,
감각적인 네온사인, 로맨틱한 꽃 장식, 비밀상적
테라스 및 루프탑 공간

아름답게 연출된 사진을 통해 개인의 대안적
성취를 이미지로 전환시킴

열심히 살고 있다는 증거로써 안도감을
증가시키며, (온라인 댓글과 좋아요를 통해)
타인의 관심, 인정, 욕망을 갈구



4. 연남동 젠트리피케이션 3 : 온라인-현실 격차 및 디지털 픽처레스크 (2016-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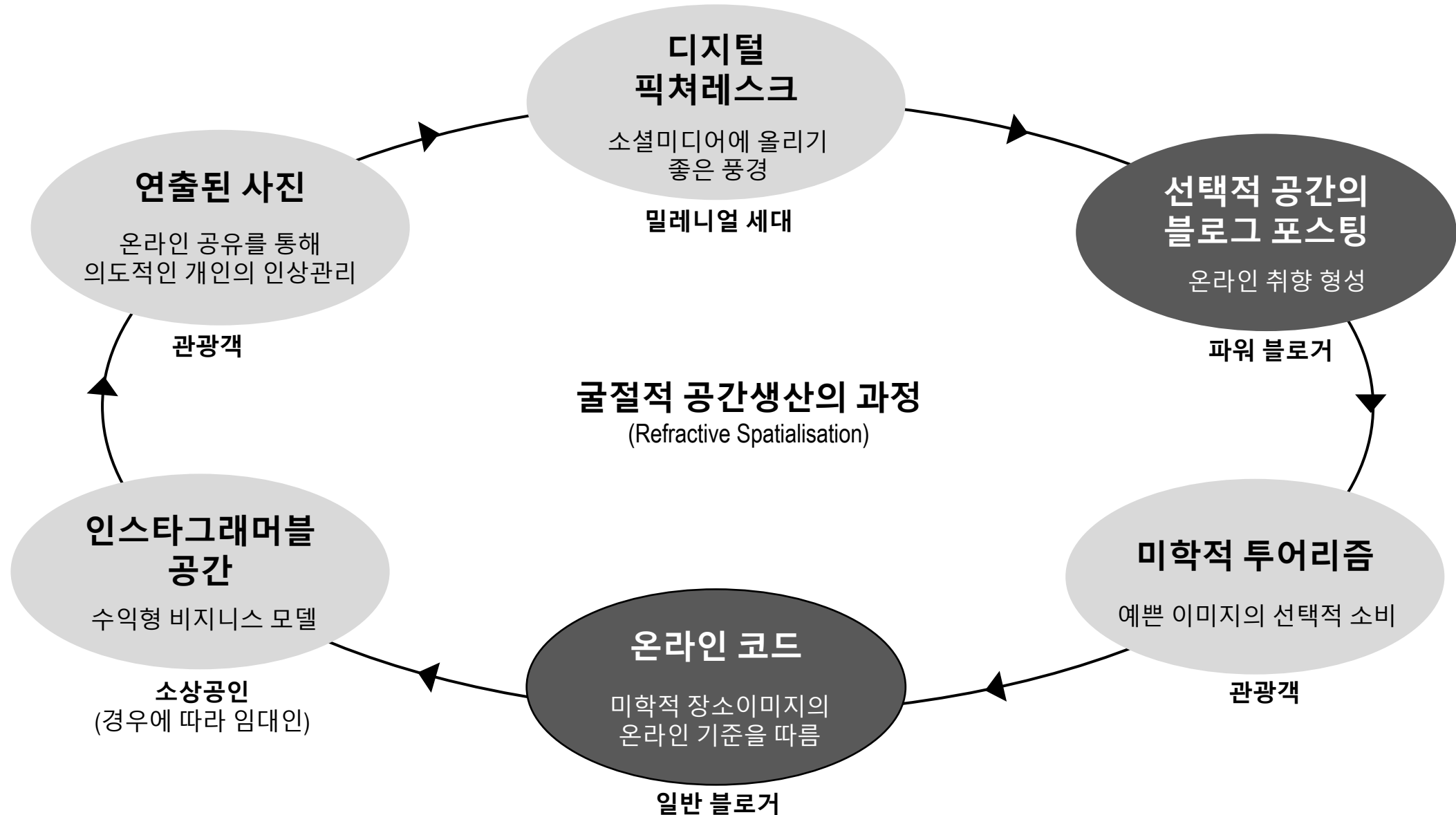
온라인-현실 격차를 줄이기 위한 **디지털 픽처레스크 공간장치**(인스타그램머블 플레이스)와 타인이 욕망하는 경험 및 이미지 획득을 위한 **미학적 투어리즘**

이 과정에서 동네가 가지고 있던 사회문화적 맥락(context)과 장소 이미지(place-image)는 사라지고 온라인의 표준화된 힙한 감성으로 대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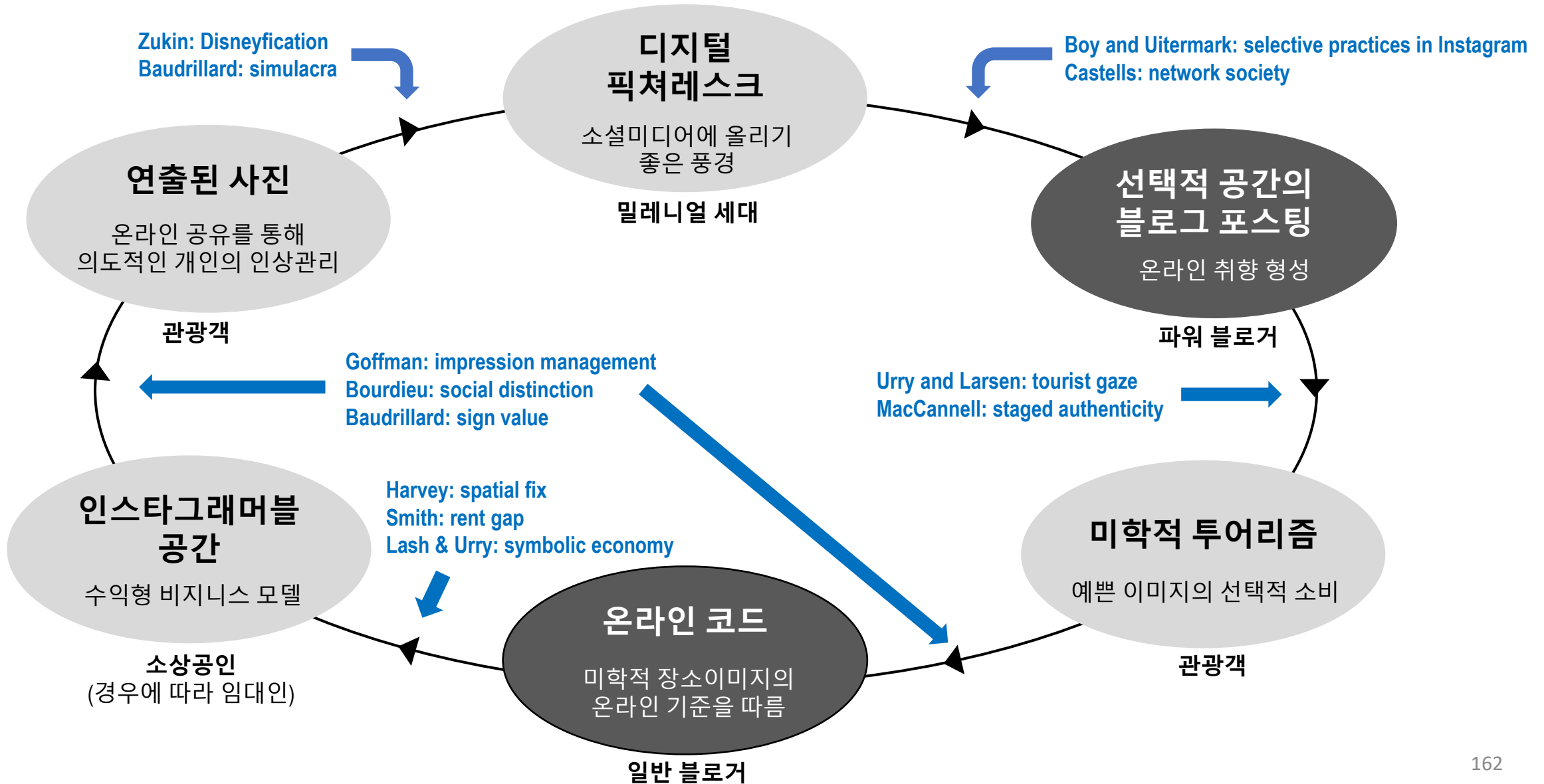


WITH ME AS YOUR GUIDE
The Seoul cafe that looks like a cartoon

4. 연남동 젠트리피케이션 3 : 온라인-현실 격차 및 디지털 픽처레스크 (2016-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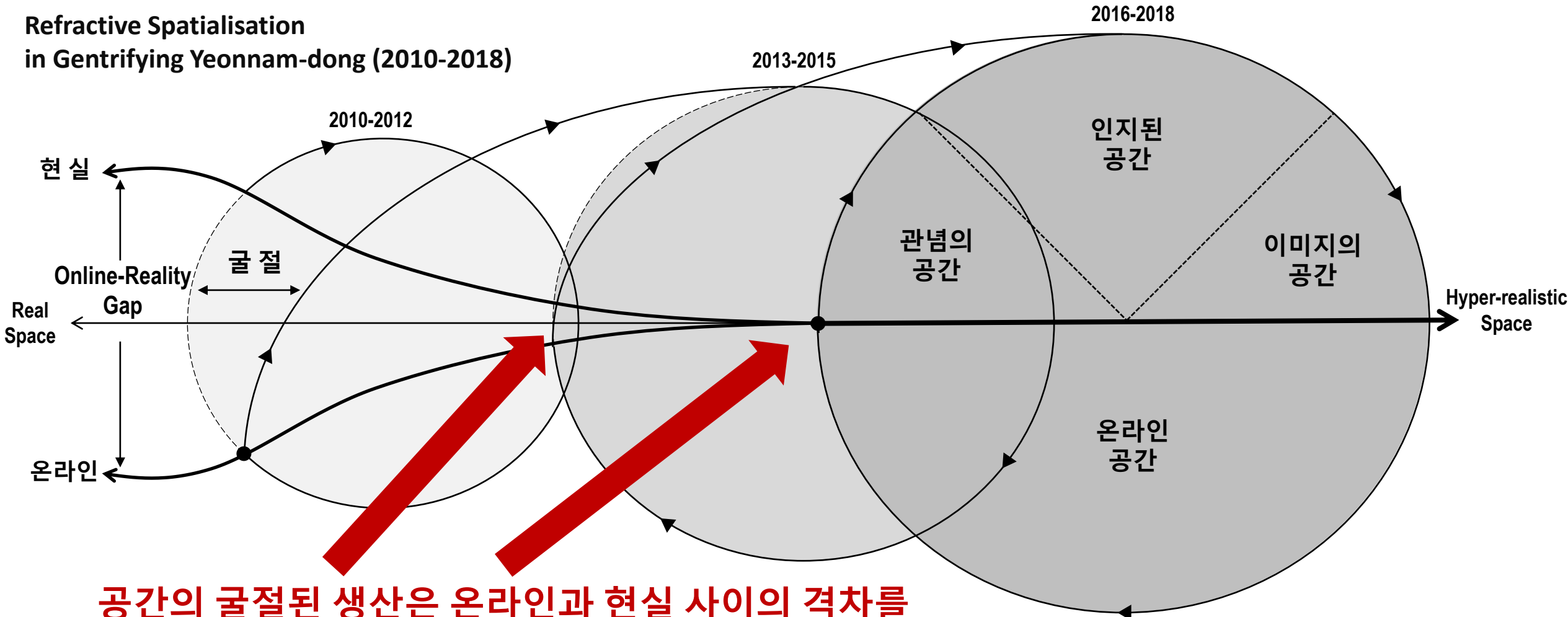


4. 연남동 젠트리피케이션 3 : 온라인-현실 격차 및 디지털 픽처레스크 (2016-2018)



4. 연남동 젠트리피케이션 3 : 온라인-현실 격차 및 디지털 픽처레스크 (2016-2018)

Refractive Spatialisation
in Gentrifying Yeonnam-dong (2010-2018)



공간의 굴절된 생산은 온라인과 현실 사이의 격차를 줄여 소비 및 이윤을 최대화하기 위함이다!

5. 결론

- 지가와 임대료가 낮은 동네 → 개성있고 독특한 장소 형성 → 온라인 관심 증가 → 유동인구 증가 → 장소의 소비력 증가 및 지가 상승 → 젠트리파이어의 미학적 소비공간으로 잠식 → 온라인 관심 더욱 증가 → 관심 주도 지역경제 형성 (디지털 픽처레스크) → 고품질적 공간생산 / 인스타그램머블 공간 (하지만 온라인 기술 및 정보가 공간 변화를 결정 짓는다는 의미는 아님)
- 주거공간이 상품화 되어 핫플레이스 소비공간으로 변해가는 경우, 온라인의 가치 및 흥미에 맞는 방향으로 공간의 로직과 시스템이 전환됨: 온라인-현실 격차를 줄이기 위한 디지털 픽처레스크와 고품질적 공간생산
- 세계화된 경제의 자본흐름, 온라인 네트워크의 데이터 확산, 저가항공을 통한 관광객 이동 등의 결합으로 세계적인 핫플레이스들이 비슷한 가치들을 추구하기 시작 → 매력적이고 선택적인 감성의 표준화, 산업화, 공간화 → 소비 및 지대 수익을 극대화 → 문화, 경제, 기술, 공간 상호작용

5. 결론

- 모든 젠트리피케이션 지역 및 기타 역사문화공간에도 적용이 가능한가?
- 온라인 정보에 의한 주거공간 상품화/상업화의 구체적인 신호와 증거들은 무엇인가?
- 앞으로 플랫폼 자본주의(온라인 중개 서비스 이용료, 온라인 고용 및 거래, 메타버스 등)와 부동산 가치 및 지역경제의 관련성은?
- **관련이 있다면, 앞으로 온라인 공간은 도시계획의 범위 안에서 컨트롤 되어야 하는가?**
- 향후 온라인 공간과 물리적 공간변화 (지가상승, 상업화 등)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
- 특히 온라인과 실제 공간의 사회 문화 경제적 접점이 어디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

재개발 공간-상품의 역동적 구성

정진영, 이건축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목차

- 01 >> 들어가며
- 02 >> 문헌 연구
- 03 >> 재개발 공간-상품의 등장과 그 특성
- 04 >> 소유와 점유 간 불일치의 심화
- 05 >> 이질적인 투자자들의 공존
- 06 >> 생활 공간의 변화
- 07 >> 나가며

1. 들어가며

1. 들어가며

- 재개발 공간-상품은 다양한 행위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닿아 있는 공간임

“한남3구역에 선업씨가 산다. 50여 년을 세입자로 살았다. 고양이 까망이 3대를 돌봤고 이웃이랑 저녁을 먹었다. 비 새는 집은 그냥 견딘다. 그 땅에 형주씨는 투자했다. 정부가 빛내라고 해서 빛내어 8평 건물만 샀다. 마음처럼 되지 않는 개발 진행에 울분을 토한다. 그 땅에 종성씨가 물려받은 집이 있다. 그 집은 약속된 희망이다. 집을 떠나 전세자금 마련에 발을 동동 구르면서도 그 희망 하나로 버틴다. 이 모든 처지는 그것대로 평범하고, 그것대로 지난하여 누구 하나 악인이라고 부를 수 없다. 다만 종성의 희망이 실현되는 날 선업은 쫓겨난다. 선업이 버티면 형주는 다시 분노할 것이다(한겨레21, 2021년 8월 22일)”

- 이와 같이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재개발 공간-상품은 복잡한 특성을 지님
- 재개발 공간-상품을 ‘노후한 거주공간’ 혹은 ‘대박이 약속된 투자상품’으로 단순화시켜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음. 특히 재개발 상품 자체의 특성에 주목한 연구는 드뭄. 재개발 공간-상품은 어떠한 특수성을 가지며 누가, 어떻게 재개발 공간-상품에 얽혀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음

1. 들어가며

- 특히 2000년대 후반 이후 부동산 경기의 악화 등 여러 요소로 인해 기존에 추진되던 재개발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됨
 - 기대수익이 하락하여 추가 부담금이 늘어나는 등 재개발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해진 위험이 소유자들에게 돌아감. 이러한 상황에서 가옥주(조합원) 운동 등이 나타나기도 함(신정수, 2021)
- 재개발 공간-상품은 기존에도 실현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상품이었으나, 이러한 상황에서 더 긴 시간성을 가지게 됨
- 본 연구는 재개발 공간-상품을 좀 더 총체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로, 해당 상품의 시간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함

**재개발 공간-상품은 어떠한 특성을 지니는가?
상품이 실현되는 데 걸리는 긴 시간은 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2. 문헌 연구

2. 문헌 연구: 도시 재개발과 자본의 순환

- 도시 재개발은 낙후된 공간을 개선한다는 의미에서 재생(revitalization)으로 개념화 되기도 함(Ley, 1981)
 - Ley는 재개발을 재생으로 정의하며, 이때 재생은 재개발과 젠트리피케이션, 재건을 포괄하는 개념임(1981)
- 동시에 도시 재개발은 자본 순환 과정의 일부임
 - 전체적인 자본 순환 과정에서, 도시 재개발은 과잉 생산에 따른 위기를 일시적으로 해소함. 다시 말해 도시 재개발은 지방 정부와 자본이 직면한 위기를 일시적으로 해소하여 자본의 순환을 다시 용이하게 함(Harvey, 2008)
 - 이에 정치경제학적인 관점에서, 국가 및 자본의 축적 구조를 봄으로써 재개발이 이루어진 맥락을 분석하고 구조적 조건에서 개인이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었는가를 밝히고자 한 연구들이 전개됨(김명수, 2020; 이수철, 2014)

2. 문헌 연구: 도시 재개발과 자본의 순환

- 한국의 맥락에서 재개발은 도시민의 대표적인 내 집 마련 및 자산 증식 전략으로 자리매김함
 - 발전주의 국가 주도의 급속한 산업화·도시화, 1980년대 주택자산을 통한 계층화를 거치며 주택 소유는 가구의 생존을 담보하는 방법이자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됨(김명수, 2020; 최시현, 2020)
 - 그 과정에서 다수의 재개발이 진행되었으며, 주택 소유자들은 재개발을 통한 아파트 건설을 통해 부를 축적할 수 있다는 믿음을 학습함(이수철, 2014)
 - 이에 한국적 맥락에서 재개발은 지방 정부나 건설 회사 등 소수의 행위자가 자본 순환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에 그치지 않으며, 오히려 다수의 도시민에게 보편화 된 투자 수단이라고 볼 수 있음



자료: 서울역사박물관

2. 문헌 연구: 도시 재개발과 자본의 순환

- 이와 같이 재개발이 자본 순환 과정의 한 요소로 기능한다는 점, 그러한 조건에서 개인들이 재개발 공간을 수익성 높은 투자 상품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은 다수의 연구를 통해 밝혀짐
- 그러나 재개발 상품 자체의 특성에 주목한 연구는 드물. 재개발 공간-상품은 어떠한 특수성을 가지며 누가, 어떻게 재개발 공간-상품에 얽혀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음
- 특히 재개발 상품의 실현이 지연되고, 일부 불확실해진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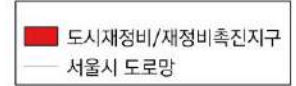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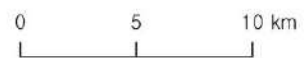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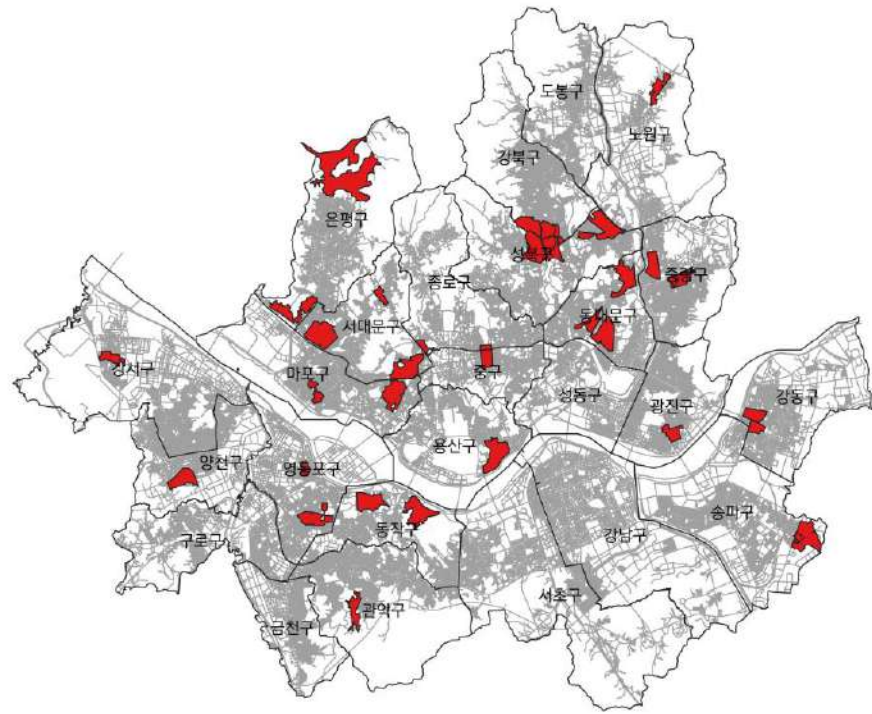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00519069600003>

3. 재개발 공간-상품의 등장과 그 특성

3. 재개발 공간-상품의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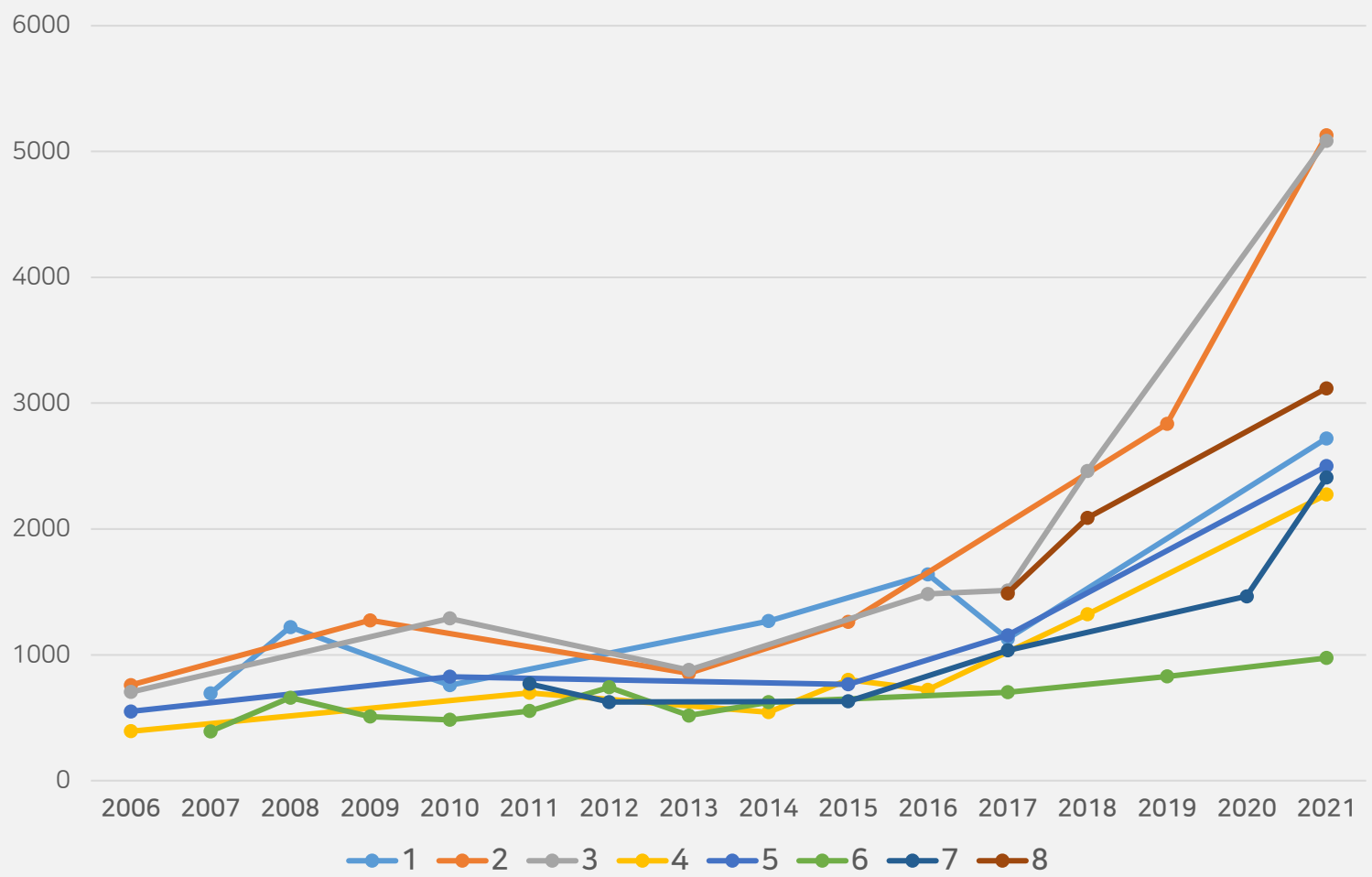
- **1973년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무허가 판자촌을 중심으로 주택재개발이 전개됨**
 - 일제강점기와 6.25,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치며 서울에 무허가 판자촌이 형성됨. 1973년부터 1996년까지 약 8,908km², 총 216,729호의 주택이 재개발됨(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6)
 - 1973년부터 1982년까지는 정부 중심으로 자력재개발, 차관재개발, 위탁재개발 등이 이루어짐
 - 1983년 이후 합동 재개발 방식이 도입되어 공공의 역할이 대폭 축소되고 민간자본에 의한 주택재개발이 가능해짐. 그 결과로 수익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재개발이 이루어졌으며, 원주민의 이주 대책이 미비했다는 비판이 존재함(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 **2000년대 초 서울시 뉴타운 사업이 정책적으로 전개됨**
 - 강남의 아파트가격 급등으로 강남과 강북의 격차가 심각해짐에 따라 강북지역의 노후불량주택지를 정비하는 뉴타운 사업을 도입함(서울정책아카이브, 2015)
 - 그러나 2000년대 말 부동산 불황, 지방정부의 정권교체, 뉴타운 사업에 대한 반대, 사업지구 내부의 분열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다수의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됨. 2018년 기준 약 683개 정비(예정)구역에서 393개소가 해제를 결정함(서울연구원, 2017)

3. 재개발 공간-상품의 등장



2021년 도시재정비 (촉진) 지구
자료: 국토교통부

4. 재개발 상품의 특성



한남 3구역 주택의 평당 매매 실거래가 변화(단위: 만 원)
 자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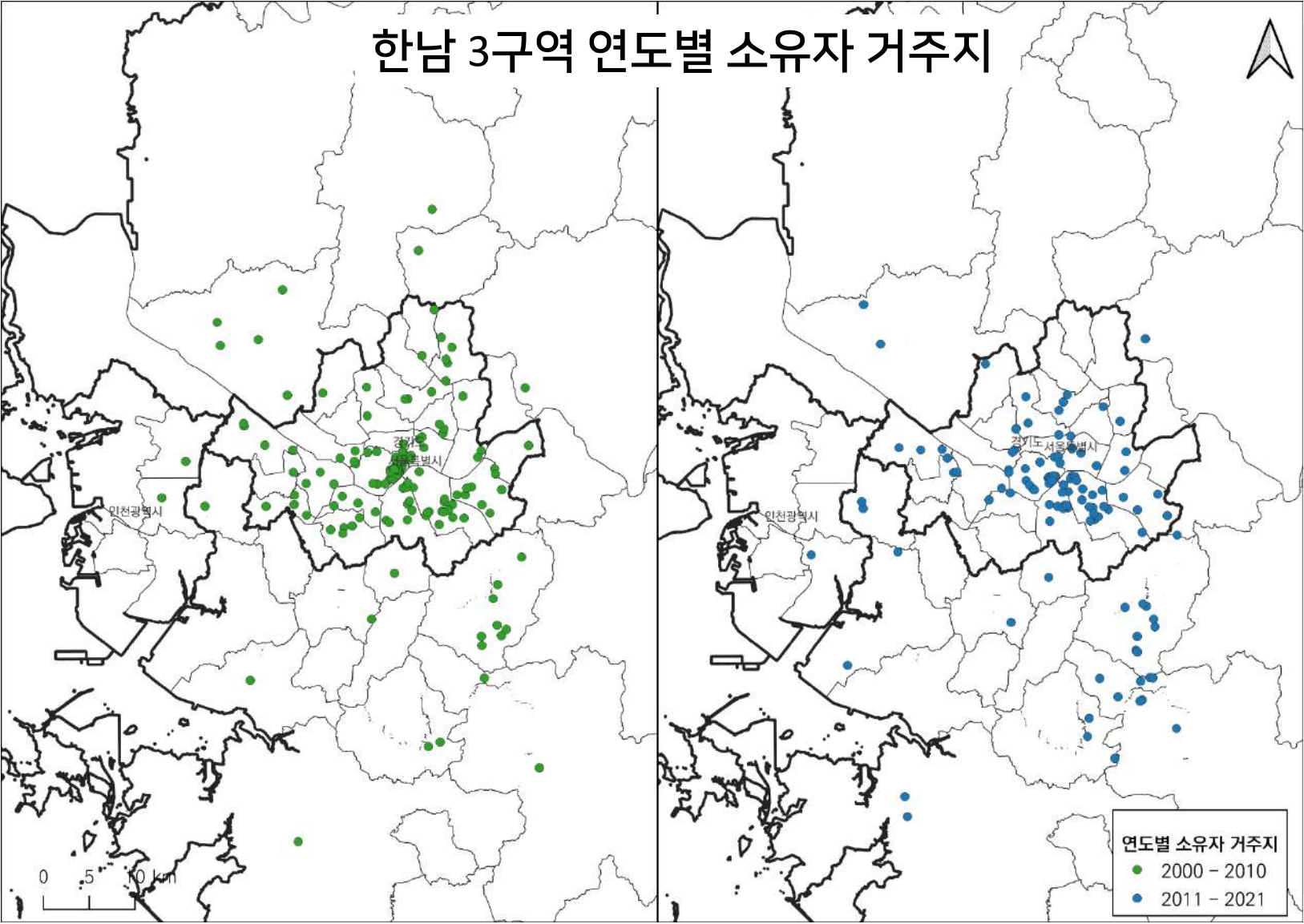
4. 소유와 점유 간 불일치의 심화

4. 소유와 점유의 불일치

소유와 점유의 불일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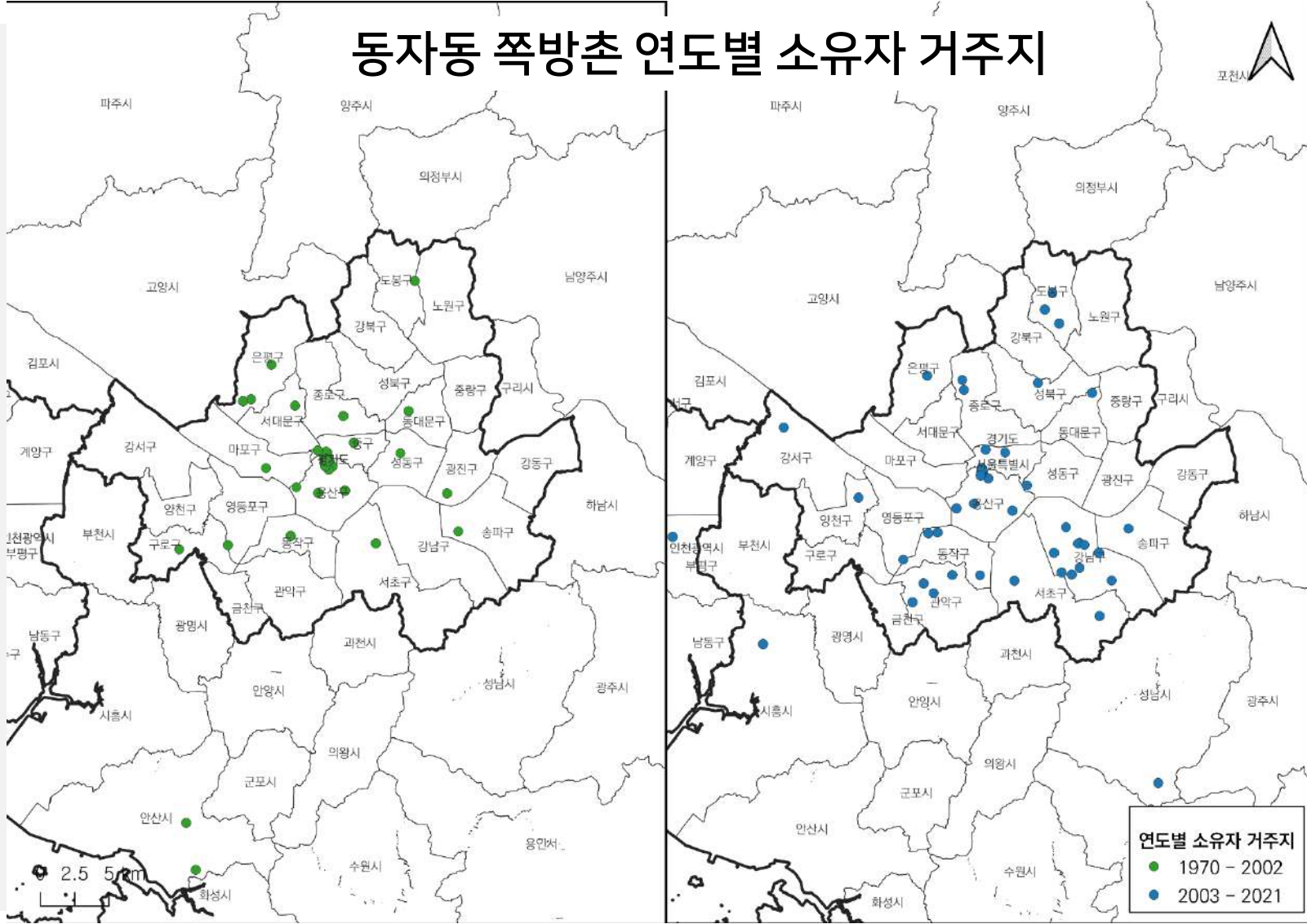
- 재개발 상품은 실현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림. 이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한 사람들에게 판매됨
- 시간이 지나며 공간 상품의 소유와 점유 간 괴리가 심화되고, 소유자 거주지가 지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곳으로 이동함
- 오랫동안 재개발 예정지로 논의되어 온, 한남 3구역과 동자동 쪽방촌의 소유자 거주지 변화를 살펴본 결과 두 공간의 소유자 거주지는 유사한 패턴으로 변화함
 - 동자동 쪽방촌은 2020년 12월 기준으로 확인 가능한 모든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전수 조사하였으며, 한남 3구역은 약 5,240개 건물 중 200개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난수를 활용하여 무작위 추출 후 확인함

4. 소유와 점유의 불일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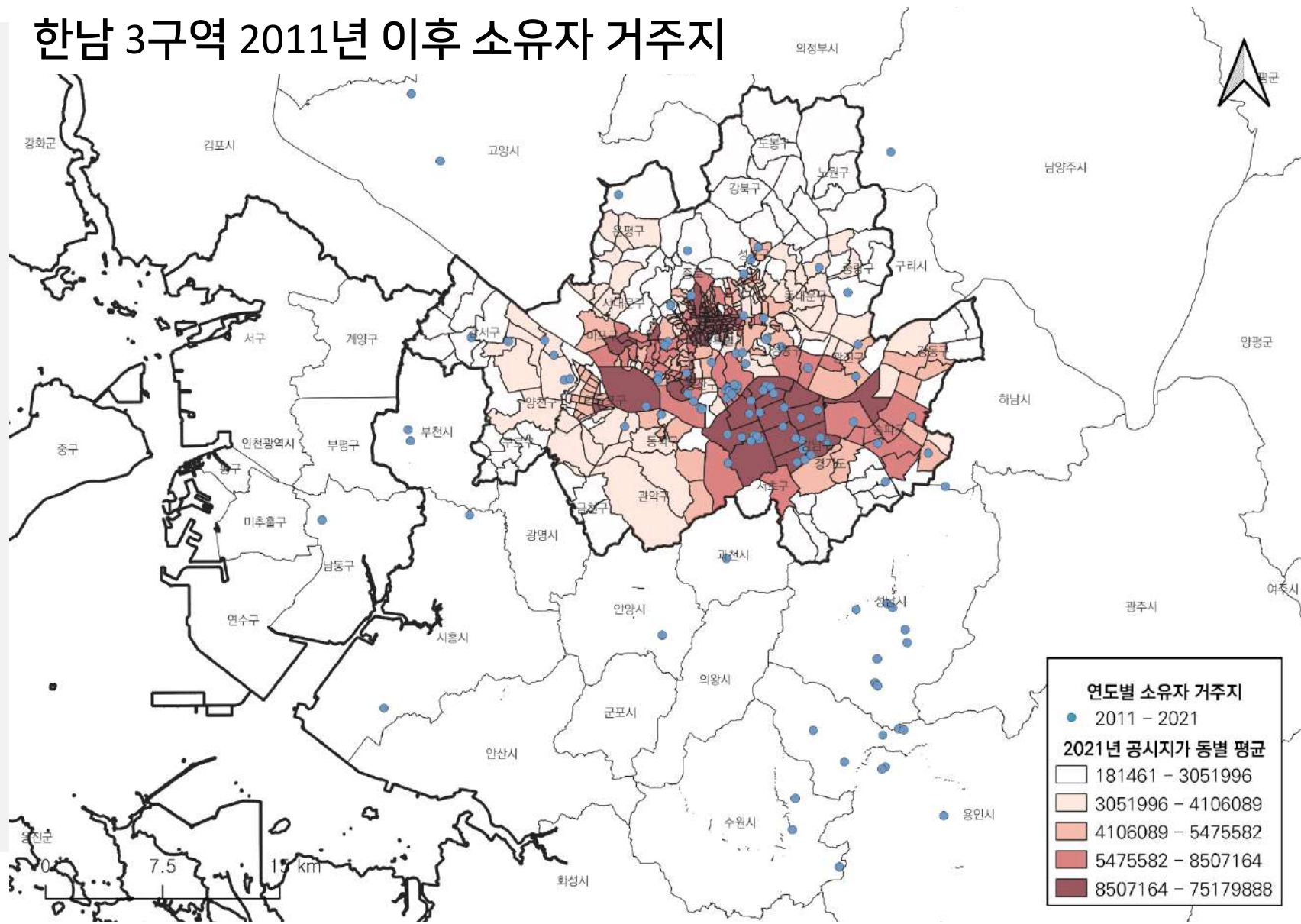
4. 소유와 점유의 불일치

동자동 쪽방촌 연도별 소유자 거주지



4. 소유와 점유의 불일치

한남 3구역 2011년 이후 소유자 거주지



5. 이질적인 투자자들의 공존

5. 이질적인 투자자들의 공존

젊은 투자자들의 등장

- 재개발 상품 소유자들은 일반 주택 소유자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젊은 편임

연령대	소유자 수	퍼센트
30세 미만	39	10.03
30	73	20.33
40	108	30.08
50	91	25.35
60	35	9.75
70	15	4.18
80	1	0.28

한남 3구역(단위: 명, %)

연령대	소유자 수	퍼센트
30세 미만	3	2.68
30	24	21.43
40	35	31.25
50	28	25.00
60	14	12.50
70	5	4.46
80	3	2.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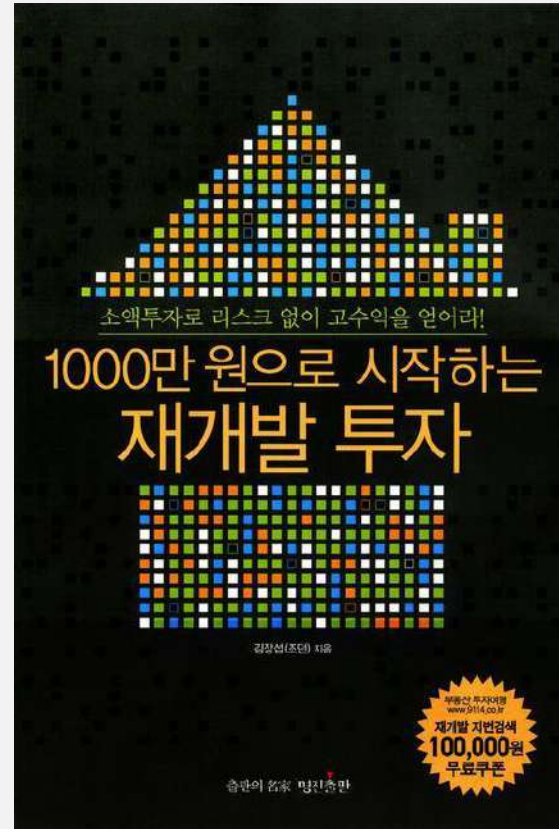
동자동 쪽방촌(단위: 명, %)

연령대	소유자 수	퍼센트
30세 미만	265	1.8
30	1,680	11.4
40	3,338	22.7
50	3,735	25.4
60	3,012	20.5
70	1,680	11.4
80세 이상	659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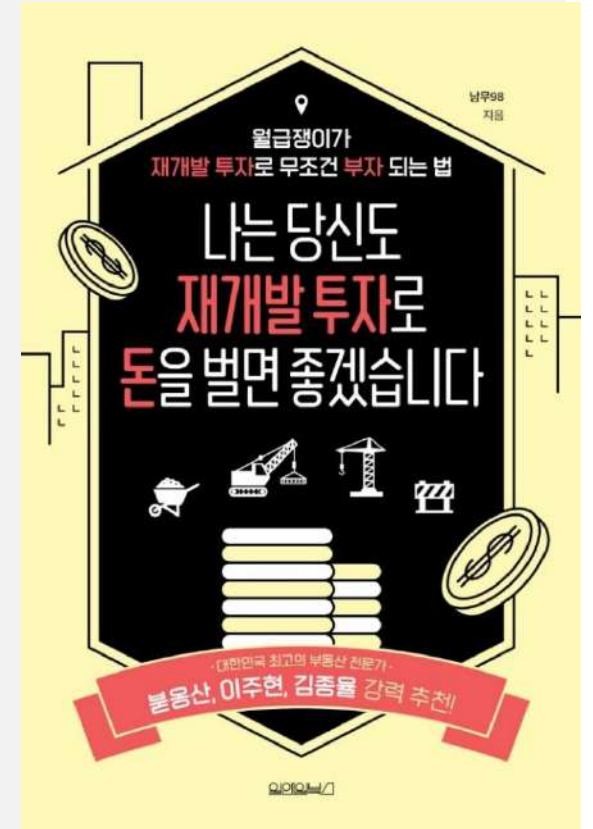
2020 주택 소유자 현황(단위: 천명, %)

5. 이질적인 투자자들의 공존

- 이는 다음을 함의함. 첫째, 실현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상품이라는 점은 젊은 투자자들이 재개발 상품에 투자하는 데 영향을 미침. 상품이 실현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고,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재개발 상품에 투자함
- 둘째, 긴 시간성을 가진다는 특성으로 인해 재개발 상품은 초기에 상대적으로 적은 돈으로도 투자할 수 있음. 이에 평범한 직장인들이 재개발 상품에 투자하기도 하며 그 결과 투자자들의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출처: 교보문고



5. 이질적인 투자자들의 공존

- 그 결과 재개발 투자자의 스펙트럼은 다양하게 나타남. 앞에서 언급했듯이 시간이 지날 수록 부유한 공간으로 소유권이 옮겨가는 경향이 있으나, 그 안에는 반대로 재개발 지역 외에는 투자할 선택지가 없었던 사람들도 일부 존재함
- 즉 실현되는 데 긴 시간이 걸린다는 점은 재개발 구역에 이질적인 투자자들이 섞여있는 데 영향을 미침
- 이와 같은 투자자의 다양성은 재개발의 지연 혹은 실현에 다양한 사람들의 절망 혹은 희망이 연루되어 있음을 뜻함

“한남3구역에 선업씨가 산다. 50여 년을 세입자로 살았다. 고양이가 까망이 3대를 돌봤고 이웃이랑 저녁을 먹었다. 비 새는 집은 그냥 견딘다. 그 땅에 형주씨는 투자했다. 정부가 빗내라고 해서 빗내어 8평 건물만 샀다. 마음처럼 되지 않는 개발 진행에 울분을 토한다. 그 땅에 종성씨가 물려받은 집이 있다. 그 집은 약속된 희망이다. 집을 떠나 전세자금 마련에 발을 동동 구르면서도 그 희망 하나로 버틴다. 이 모든 처지는 그것대로 평범하고, 그것대로 지난하여 누구 하나 악인이라고 부를 수 없다. 다만 종성의 희망이 실현되는 날 선업은 쫓겨난다. 선업이 버티면 형주는 다시 분노할 것이다(한겨레21, 2021년 8월 22일)”

6. 생활 공간의 변화

6. 생활 공간의 변화

거주공간의 슬럼화 및 거주자 생활세계의 재구성

- 재개발이 언제 실현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건물의 소유자들은 해당 공간에 새롭게 투자를 하지 않음. 재개발이 지연되며 해당 건물들은 점점 노후화 됨
 - 재개발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익을 누리는 방법은 낡은 건물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는 것임(이혜미, 2020; 안현진, 2017; 정택진, 2020)
- 오랜 재개발 계획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바꾸기도 함. 2005년 뉴타운 지역으로 선정된 장위동 주민들은 이제 동-통-반이 아닌 구역명으로 동네를 구분함(서울역사박물관, 2021)
 - “어느 순간 저희 입에서도 구역으로 얘기를 한 거는 아무래도 2000년도 뉴타운 지정을 받으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저도 “29통이에요. 290번지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13구역’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게 빨리 와 닿아요(2020년 10월 26일, 장위동 주민 인터뷰; 서울역사박물관, 2021).”

7. 나가며

4. 결론

- 재개발의 긴 시간성은 해당 공간-상품을 특별하게 만듦
- 소유와 점유의 불일치를 가속시키고, 이질적인 투자자들이 등장하게 하며, 해당 공간 물리적 상태와 일상성을 변화시킴
- 재개발을 단순히 넓은 공간의 탈바꿈이나 높은 수익성을 기대하는 투자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은 한계가 있음. 재개발이 이야기되고 좌초되며 재개되는 긴 과정에 수많은 행위자의 이해관계 및 일상생활이 연루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동시에 긴 시간성이 어떠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는가를 볼 필요가 있음. 재개발 공간-상품의 긴 시간성은 부동산 투자에 대한 보편적 열망과 맞닿아 해당 공간-상품의 특성을 만들어 냄

참고문헌

- 김명수. (2020). *내 집에 갇힌 사회*. 창비.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재개발, 재건축의 제도 변천 연구(정책연구).
- 서울역사박물관. (2021). 장위동: 도시 주거 변천의 파노라마.
- 서울연구원. 2015년 5월 8일. 서울시 뉴타운 사업. <https://seoulsolution.kr/ko/content/%EC%84%9C%EC%9A%B8%EC%8B%9C-%EB%89%B4%ED%83%80%EC%9A%B4-%EC%82%AC%EC%97%85>
- 서울연구원. (2021).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 안전관리방안.
- 안현진. (2017). 뉴타운정책과 사업지연이 노후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수철. (2014). 재개발 담론의 형성과 전파 메커니즘. *지역발전연구*, 23, 101-131.
- 이창무. (2009). 뉴타운사업에 대한 재진단. *주택연구*, 17(2), 283-308.
- 이해미. (2020). *착취도시, 서울*. 글항아리.
- 정택진. (2020). 쪽방촌의 사회적 삶: 서울시 동자동 쪽방촌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시현. (2020). 주택장(housing field)의 정치경제학: 도시중산층의 젠더화된 투기아비투스. *공간과 사회*, 31(3), 8-47.
- 한겨레21. 2021년 8월 22일. 역대급 재개발 한남3구역의 장밋빛 내일 잿빛 오늘.
- Harvey, D. (2008). Revolutionary and counter-revolutionary theory in geography and the problem of ghetto formation. In *Geographic Thought* (pp. 24-33). Routledge.
- LEY, D. (1981), INNER-CITY REVITALIZATION IN CANADA: A VANCOUVER CASE STUDY. *The Canadian Geographer / Le Géographe canadien*, 25: 124-148.

일반세션 2. 공간의 인식, 재구성 그리고 수출

사회: 이후빈 (강원대)

- <탈식민 한국에서 한국 지정학의 서양화: 표문화 (1908-1985) 의 생애와 지정학적 사고>
이진수 (아이다호대)
- <COVID-19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적용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이용자들의 경계 넘기를 통한 공간 재구성>
최기훈 (경기연구원)
- <스마트 도시 수출의 꿈: 한국의 도시 수출 시도에 대한 비판적 접근>
오도영 (홍콩 링난대)
- ▣ 토론: 진종현 (공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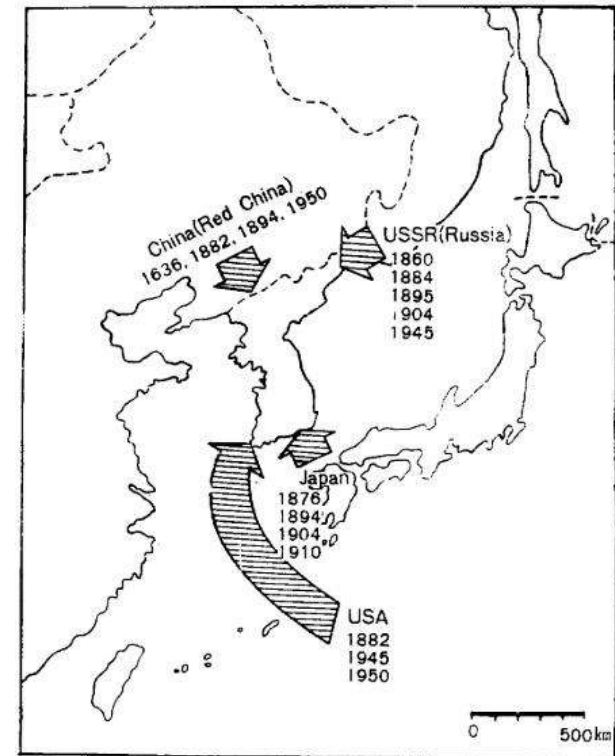
탈식민 한국에서 한국 지정학의 서양화: 표문화 (1908-1985) 의 생애와 지정학적 사고

April 22 2022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n Center

Jin-Soo Lee

Introduction

- 한국의 지정학: 고전지정학의 내재화
 - Ex) ‘반도의 숙명’ (지상현 2013) (그림 좌상)
- But, 고전지정학의 아이디어들이 한국의 탈식민 지정학으로?
 - ‘약소국’의 비극 그리고 생존의 전략을 논의하는 한국의 지정학을 수립
 - 모순을 접합시키는 데 있어 지식인들의 지적 실천 ex) 그림 우상, 아래
- 표문화 (표해운; 1908-1985) 의 지정학을 조사:
 - “지식의 지리” (Agnew and Livingstone 2011)
 - 어떻게 표문화의 지적 실천이 탈식민 한국에서 서구 지리학의 이론, 용어, 개념을 전유하여 새로운 지리적 지식을 생산하였는가 (Mayhew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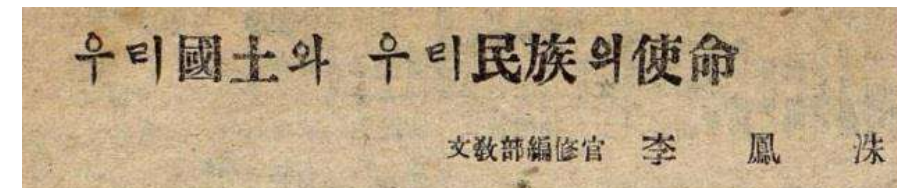


임덕순 1969: 37

運命의陸橋的朝鮮地位
 低下된美蘇間의戰略的價値
 朝鮮政治家는 朝鮮의一日清戰爭때에도
 이陸橋

 修芝陸

육지수 1947



이봉수 1946

Contextualizing the geopolitics of Pyo Moon Hwa

- 지정학적 전통geopolitical traditions에 관한 연구 (Dodds & Atkinson 2000)
 - 특정 사회-공간적 맥락에서 특정 시점에 특정 엘리트에 의해 만들어진 지식
- 담론으로서 지정학 -> 실천으로서의 지정학 (Muller 2008)
 - 지정학자는 텍스트로 물질화되는 내러티브를 만들어내는 에이전트
- ‘지식의 지리’ (Driver 1994; Naylor 2005; Agnew and Livingston 2011; Offen 2012)
 - 지식의 생산, 이동, 전파, 재생산, 변형에 관하여
 - 지정학 지식의 생산 및 재생산에서 에이전시와 장소의 중요성 강조 (Watanabe 2018)
- 표문화의 지정학은 탈식민 한국의 맥락에서 서구 지리학의 지식에 기반해 만들어진 지리의 지식
 - 냉전과 분단의 사회정치적 맥락
 - 구조로서 서구 지리학의 아이디어들
 - 에이전시로서 한국 지리학에 대한 표문화의 지적 실천

The life and career of Pyo Moon Hwa

- 표문화 (그림 위) 의 초기 경력
 - 부산 제1공립상업학교, 고베의 간세이가쿠인 학교, 오사카외사대학 우랄알타이어 전공
 - 일본 고등문관시험 행정과 합격 후 도쿄에서 근무. 히메지고등학교 교수
 - 만주 대동학원 3기 졸업 (최충선 2010) - “친일적”
- 해방 후 20여년 간 여러 대학에서 강사 역임
 - 국학대, 중앙여대, 부산수산대, 조선정치대학, 서울대, 성균관대, 동국대 등 강사 및 교수
 - 육군정훈학교, 국방대학, 해군대학 강사
 - 한국 공무원훈련원 (현재 인재개발원) 학감
- 1961년 이후 정계 투신
 - 국가재건최고회의 외교국방위원회 자문위원
 - UN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한국대표단 고문
 - 신흥당 창당 참여 및 당수 역임
- 1985년 캐나다 벤쿠버에서 타계 (그림 아래)



◇『한국을 비롯한 古代 露古스族문화와 인디언 문화』 여러면에서 공헌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는 표문화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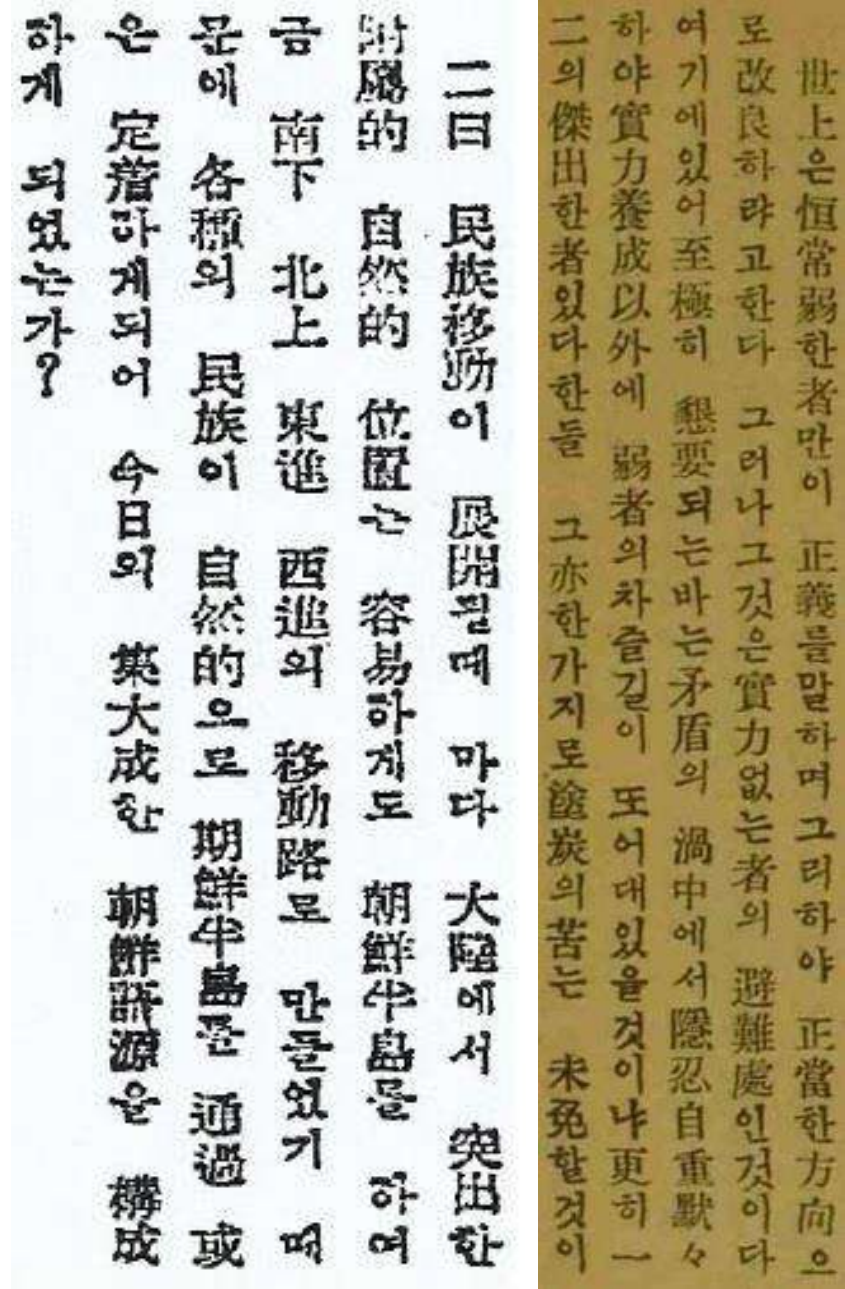
조선일보 1979

하음 ▲표문화씨(전한 국수산학회장) 별세 9월30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7시 30분, 연락처(989)6902. 43자택서, 발인4일오전10시 전 서울노봉구미아4동3의7 오지점직원(父親喪)2일 행 7시. ▲李讚根씨(모간은행 캐나다)604-987-348 택서, 발인4일오전, 연락처 7시. 30분, 연락처(989)6902.

조선일보 1985

The life and career of Pyo Moon Hwa

- 언어학 전공?
 - ‘朝鮮語源에 關한 一考’ (1953: 115):
 - 조선어의 기원에 관해 지리학적 접근 시도 (그림 좌)
- 고전지정학에 대한 이해
 - ‘滿州国小作立法に關する私見’ (1936), ‘滿州国民族問題に關する断片的再考察’ (1936)
 - ‘日本民族發展의 內在的原因’ (1937): 일본지정학의 수용 및 환경 결정론 / 적자생존의 논리 / 이에 기반한 만주국의 정당화 (그림 우)



표문화 1953: 115

표문화 1937: 45

The life and career of Pyo Moon Hwa

- 지적 실천의 결과물로서 책과 논문들
 - 4개의 책과 7개의 소논문, 칼럼.
 -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등으로부터 획득한 텍스트

Year	Title	Publisher
1937	日本民族發展의內在的原因	在滿朝鮮人通信
1947	朝鮮地政學概觀: 朝鮮의 過去, 現在, 未來	建國社
1947	現下世界情勢와 地政學上으로본朝鮮獨立	白民
1953	朝鮮語源에 關한 一考	自由世界
1953	歷史的으로 본 韓國의 政治的位置와 우리의 進路	協同
1954	印度支那半島의 政治地理的位置: 주로 佛印에 對한 地政學的 見解	새벽
1954	地政學的 見地에서 본 우리나라의 過去와 現在	法律과經濟
1955	經濟地理學	高麗出版社
1955	政治地理學概要	高麗出版社
1955	洪成恩 著 "北緯三十八度線"	朝鮮日報
1958	國防地政學講義: 美蘇 兩大陳營의 對立線研究를 中心으로	又星社
1960	地政學上으로 본 外交國防問題: 우리나라의 地理的 條件을 中心으로	東亞日報
1961	地政學으로 본 韓國의 中立統一에 關한 基礎理論	東國政治

표1: 표문화의 책과 논문들 목록

政治地理學概要

—地政學的考察—

表文化著

高麗出版社發行

표문화 1955

Analysis 1: understanding and redefining of geopolitics

- 정치지리학과 지정학의 정의 및 구분 (표문화 1955; 그림)
 - 정치지리학은 국가 행위의 공간적 패턴으로서 정적이며, 지정학은 동적
- 학문으로서 지정학을 도입하여 자신의 방식으로 재정의
 - “지정학은 일국의 자연공간 및 공간적 배치를 검토하면서 유기체인 한 나라의 정치를 기술적으로 우수한 방향으로 영도하고 민족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민족성을 검토하는 민족성의 정치학을 의도하는 학문” (1947b)
 - “이 양학문이 독일에서 발달했다는 사실로서 덮어놓고 독재주의 국가의 학문이고 침략적 학문이라고 재검토 없이 일소에 부하는 것이 금일 아국의 학계의 현상” (1955)

Analysis 2: political geographical framework for Korean geopolitics

- 한반도의 지리적 위치 (표문화 1947a; 1947b; 1954a; 1954b; 1960; 1961)
 - 반도의 '부속성' 및 '주변성'
 - 반도의 관계적 위치: '중앙적' '병참적' '역적' 위치
 - 반도의 대륙정치성과 해양정치성 겸유 (1947a)

표문화 1947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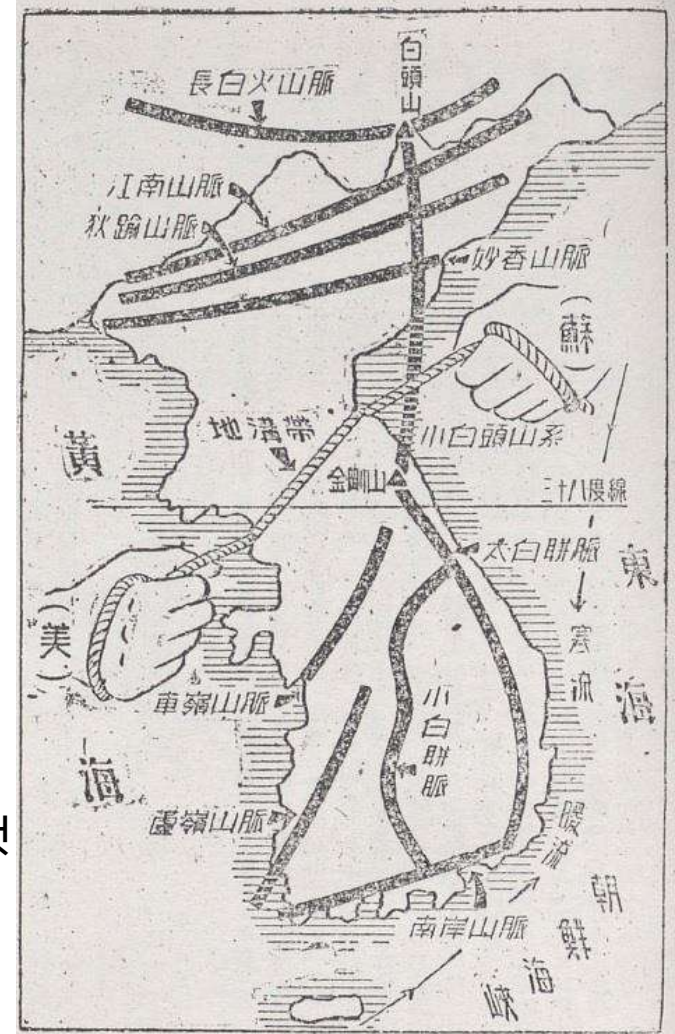
朝鮮地政學的運命

「運命」의意義는 民族生命의展開하는 程度로指摘된다。民族의 進路에 榮枯가있는것과같이 社會의進路에도 榮枯하는 一定한 段階가있다。그렇다면 民族은 一定한宿命下에있다。宿命은 人爲 亂서改變치못하는것이요 運命은 改變되는것이다。우리朝鮮의形 態는 宿命도있고 運命도兼有한다。『朝鮮地政學』이라는것은 Fatalit. Modifiable 所謂 變容할수있는 運命으로서 卽 朝鮮民族의 生命展開對策이다。그리하여 우리民族의 榮枯를보 고저한다。

Analysis 3: geopolitical framework for Korean geopolitics

- “조선지정학적 운명” (그림)
 - ‘운명’ vs ‘숙명’ - 환경결정론
 - ‘민족생명’, ‘영고’, ‘생명전개대책’ - 국가유기체설
 - ‘약소국으로서 한반도’ - 적자생존의 사회 다위니즘 Ex) 수, 당의 침입, 몽골의 침입, 일본에 의한 식민지화, 신탁통치 등등
 - 한국의 내적 역동성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음 ex) 항일독립운동 (오탈영 2015)
 - 대륙, 해양, 유기체와 같은 여러 고전지정학의 용어 및 비유 동원
 - “반도의 숙명“?

韓國의 中立統一에 關한 基礎理論



표문화 1947a: 76

표문화 1961

Analysis 4: space for survival and geostrategy for statecraft

- 해방 이전
 - 일본의 국가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조선인의 발전을 도모 (표문화 1937)
- 해방공간
 - 신탁통치로 인한 남북한의 분할 통치 (그림 우)
 - “조선이 일본 지배 하에서만 이탈한 타율적 해방 (신탁통치) 조선 역시 타율적 독립” (1947b)
 - 반탁으로 멸망의 길을 갈것인가, 군정에 협력하여 중립지역적 완충독립국가를 추구할 것인가
- 한국전쟁 이후
 - 민족성을 정화하여 연합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국가 발전에 매진 (1953; 1954)
 - “전략적 지역을...연락시켜 군사동맹을 체결케 함으로써 공통 반공운명의 개척을 위한 투쟁” (1960)
 - 미소 대립에 편승하기보다 중립 통일 및 경제 발전 추구 (1961) (그림 좌)

新編 地理政學

우리 의 운命은 우리의 힘과 파력의 힘으로
 萬物의 運命은 地力의 힘과 파력의 힘으로
 萬物의 運命은 地力의 힘과 파력의 힘으로
 萬物의 運命은 地力의 힘과 파력의 힘으로
 萬物의 運命은 地力의 힘과 파력의 힘으로

동아일보 1947

Conclusion

- 서구 지리학에 기초하여 당대 맥락에 따라 창조된 지정학적 내러티브
- 그의 지적 실천은 고전지정학을 탈식민 한국의 맥락과 접합시킴
- 그러나 그의 새로운 지정학은 식민/비식민을 발전/저발전으로 전환:
 - 당시 조선의 열등성을 전제로 생존 공간의 확보를 논의하고 국가운영 전략을 제시 (그림)
- 고전지정학을 한국화 -> 한국의 지정학을 서양화

References

- 노도양, 1947, 자연환경론의 재검토, 서울신문.
- 박노식, 2008[1947], 신조선지리, 동지사.
- 오태영, 2015, 탈식민-냉전 체제 형성기 지정학적 세계 인식과 조선의 정위: 표해운의 조선지정학개관을 중심으로, 동아시아문화연구 61: 129-158.
- 육지수, 1947, 운명의 육교적 조선 지위, 경향신문.
- 이봉수, 1946, 우리 국토와 우리 민족의 사명, 아미리가회보 1(1): 74-76.
- 지상현, 2013, 반도의 숙명: 환경결정론적 지정학에 대한 비판적 검증, 국토지리학회지 46(3): 291-301.
- Agnew, J. and Livingston, D. (eds.), The SAGE Handbook of Geographical Knowledge, SAGE, 1-17.
- Dodds, K. and Atkinson, D., 2000, Geopolitical Traditions: A Century of Geopolitical Thought, Routledge.
- Mayhew, R., 2011, Geography's genealogies, in Agnew, J. and Livingston, D. (eds.), The SAGE Handbook of Geographical Knowledge, SAGE, 21-38.
- Müller, M., 2008, Reconsidering the concept of discourse for the field of critical geopolitics: towards discourse as language and practice, Political Geography 27(3): 322-338.
- Naylor, S., 2005, Historical Geography: knowledge, in place and on the move,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9(5): 626-634.
- Offen, K., Historical geography I: vital tradition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6(4): 527-540.

Thank you

Acknowledgement

- 본 발표는 한국공간환경학회 비판적 공간 연구모임 지원사업에 의해 지원되었음

COVID-19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적용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이용자들의 경계 넘기를 통한 공간 재구성

최 기 훈

geozealot@gmail.com

목차

1. 시작하며
2. 이론적 배경
3. 2.5단계의 경험
4. 경계넘기로 바라본 사회적 거리두기
5. 끝마치며

시작하며



소개

연구의 시간적 범주는 2020년 8월 30일부터 9월 13일, 2020년 12월 8일부터 2월 14일 두 차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적용으로 인해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이 전면 중단된 기간이다. 반면, 이 기간동안 비수도권은 2단계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정책적 비대칭성이 발생하였고, 이를 본 연구의 시작점으로 삼는다.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의 시계열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변화(자료 : 보건복지부, 2021.4.13. 기준)



이론적 배경

이론적 배경

- “People were developing their own spatio-temporal fix(Hwang, 2021).”
- 수도권 2.5단계 거리두기 적용은 spatio-temporal fix를 통해 비용을 절약 (compress)하고자 하는 시도
- 곧, 시공간의 제약 설정은 다시 말해 개인에게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사회적 활동을 억제하고자 하는 전략
- 월경행위가 이에 대한 일종의 countermine으로써 작용
- 이 과정에서 개인이 지닌 자본과 접근성에 따라 이동성에 차별이 발생했다(하은혜 외, 2021)
- 연구의 결과에서 보듯 개인의 인식 차원에서 영역은 국가전략의 “territorial trap(Agnew, 1994)”이 동기가되어 개인의 “네트워크적 영역성(박배균, 2006)”을 통해 재생산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2.5단계의 경험

연구 참여자



면담자 A
30대 초반
여성
트레이너
서울 거주
청주 출신
자차 없음



면담자 B
20대 초반
남성
대학생
서울 거주
서울 출신
자차 없음



면담자 C
30대 중반
여성
직장인
경기도 거주
경기도 출신
자차 있음



면담자 D
30대 초반
남성
직장인
경기도 거주
광주 출신
자차 없음



면담자 E
20대 중반
남성
대학생
서울 거주
부산 출신
자차 있음

면담자 A의 내러티브

1

A는 30대 초반 여성 헬스 트레이너이자 피트니스 선수이다. 그녀는 개인운동 및 직업활동을 위해 일주일에 7번 실내체육시설을 방문한다.

2

A는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이 되자 그녀의 생업이자 취미인 체육활동이 어려워졌다.

3

A의 고향은 서울에서 차로 1시가 30분 거리에 있는 청주이다. 자차를 이용하여 고향에 있는 친언니가 다니는 헬스장을 소개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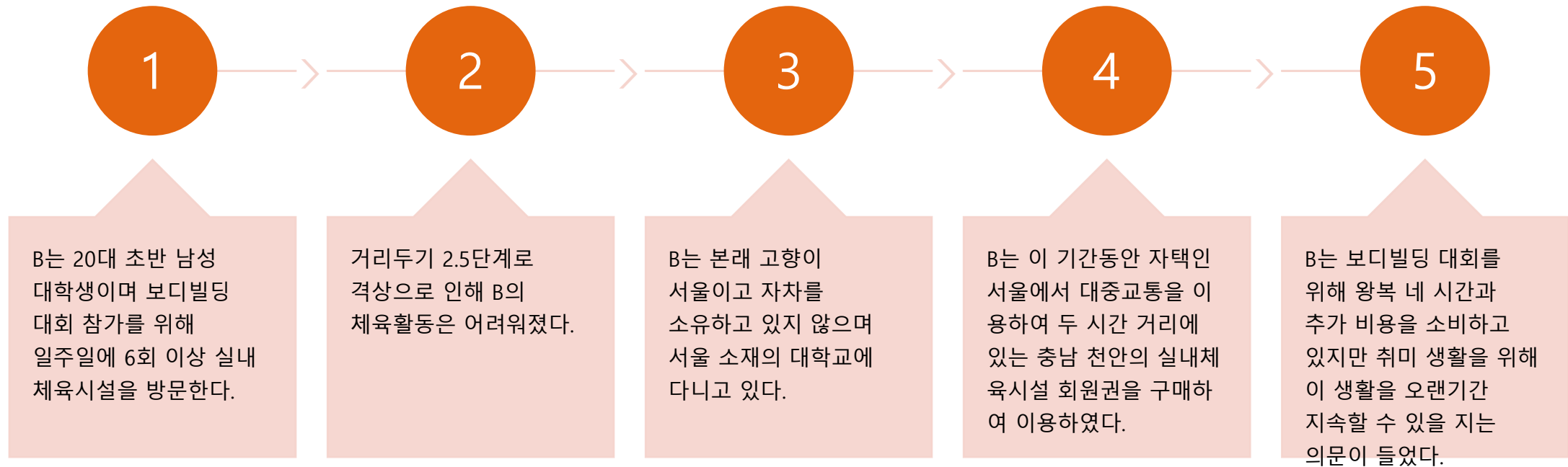
4

A는 일주일에 2-3회 서울과 청주를 오가며 청주에서 개인운동을 실시하였다. 주당 운동의 빈도는 이전과 같을 수는 없었지만 이렇게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5

A의 사례는 거주지의 고착성과 개인적 네트워크의 장점 사이에서 개인이 시공간 변용을 통해 접점을 찾은 사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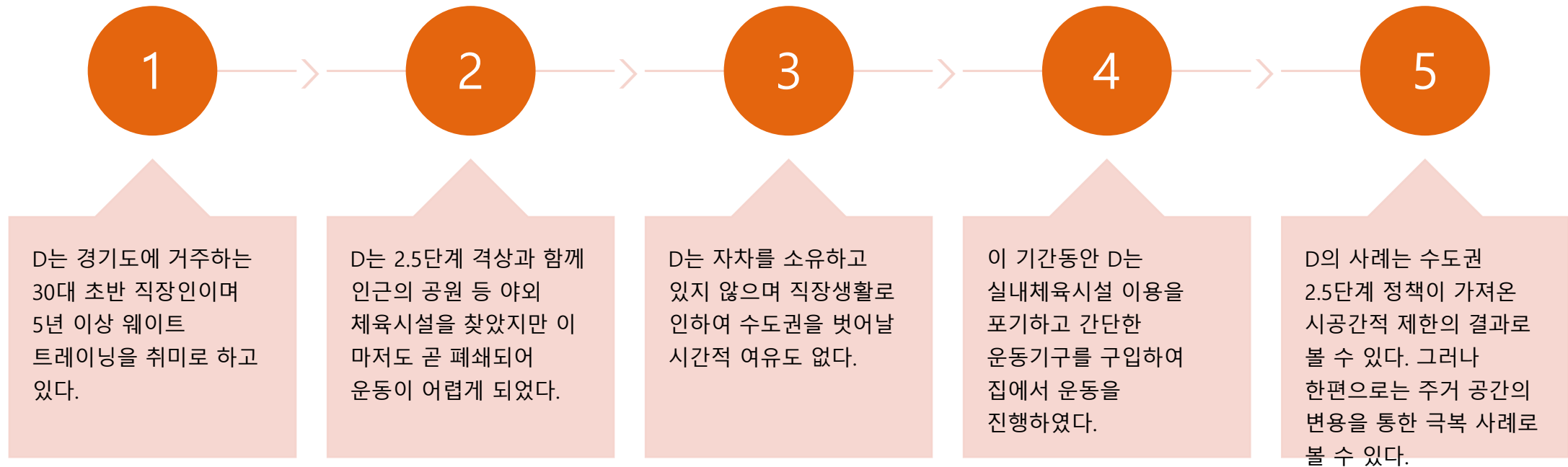
면담자 B의 내러티브



면담자 C의 내러티브



면담자 D의 내러티브



면담자 E의 내러티브

1

E는 학내에서 피트니스 동아리 활동 통해 웨이트 트레이닝을 취미로 즐기는 20대 중반 남성 대학생이다.

2

2.5단계 거리두기 적용으로 인해 학교 체육시설의 이용이 제한되었고 E가 소속된 피트니스 동아리 운영도 잠정 중단되었다.

3

E가 다니는 대학은 해당 기간동안 전면 비대면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E의 고향은 부산이며, 부산에는 부모님댁과 친구가 운영하는 실내체육시설이 있다.

4

이 기간동안 E는 부산 본가에 내려갔다. 학교 수업은 비대면으로 참가하였다. 친구가 본인 소유의 실내체육시설에서 운동을 제안한 것이 결정적인 이동 동기였다.

5

서울과 부산 간의 거리에도 불구하고 E는 개인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수도권 2.5단계 거리두기 적용을 극복하였다.

경계넘기로 바라본 사회적 거리두기

경계넘기로 바라본 사회적 거리두기

1) 자원의 차별성

- 개인이 가용할 수 있는 시간, 이동(공간)자원에 따라 개인의 행태는 차별을 보인다.
- 시간 자원에는 직장의 유무, 종류 그리고
- 공간 자원에는 출신지 등이 있고
- 자차, 대중교통 등의 이동수단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모두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다.

2) 네트워크적 영역성

- 개인의 영역성은 수도권 2.5단계 거리두기 정책의 적용과 같이 행정구역을 단위로 하지 않는다.
- 대신에 개인은 가족, 친구 등 네트워크, 또는 시공간의 편리나 선호에 따라 이러한 영역성을 극복하여 재구성한다.

경계넘기로 바라본 사회적 거리두기

3) 개인적 동기

-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동기나 욕구의 강도에 따라 경계넘기 행위의 강도와 빈도도 달라진다.
- 동기나 욕구가 약하거나 가치 자원이 빈약할 경우에는 실내체육시설 이용을 위한 경계넘기 행위의 강도나 빈도가 약해진다.
- COVID-19 상황이나 수도권 거리두기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연구 참여자들의 실내체육 활동 참여 의지가 높았다.

4) 합의와 양보

- 개인의 이러한 경계넘기 행위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큰 틀 안에서 타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타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 공간, 시간의 여러 측면에서 '비밀'을 지키는 것보다 '공개'를 택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낳는다. 공개를 택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낳는다.

5) 지속가능성

- 참여자들의 행위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적용이 일시적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 만약, 개인이 유용가능한 시간과 공간(이동) 자원이 고갈된다면 그 행태는 재조정을 필요로 할 것이다.

끝마치며

결론 및 요약

COVID-19이라는 전례 없는 세계적 수준의 전염병 속에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영역적 수준에서 적용되고 있는 반면, 개인은 이를 경계 넘기 행위를 통해 극복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참여자들은 대체로 거리두기 상황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며 일상을 지속하고자 하였다.



참고문헌

- Agnew, J. (2015). Revisiting the territorial trap. *Nordia Geographical Publications*, 44(4), 43-48.
- Hwang, J. T. (2021). COVID-19 and the emergence of a level 2.5 society in South Korea. In *Living with Pandemics*. Edward Elgar Publishing.
- 박배균. (2006). “네트워크적 영역성 (Networked Territoriality)”의 관점에서 바라본 스케일의 정치.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45-46.
- 정찬희, 이철원. (2021). 코로나 상황에서의 여가스포츠 참여 경험에 고나한 현상학적 분석. *한국체육과학회지*, 30(5), 43-56.
- 하은혜, 이채현, 고민경, & 김감영. (2021). 모빌리티에 대한 COVID-19의 차별적 영향. *한국지도학회지*, 21(3), 59-76.

감사합니다.



최기훈



geozealot@gmail.com



본 연구는 2021년 한국공간환경
학회의 대학원생 연구모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됨.

스마트 도시 수출의 꿈: 한국의 도시 수출 시도에 대한 비판적 접근

오도영

홍콩 링난대학교

dyoh@ln.edu.hk

연구 과제 소개



- 2019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LSE 중동센터 Kuwait Programme Research Grants (PI: LSE 신현방 교수) 지원을 통해 쿠웨이트의 주거 문제 해결에 스마트 도시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및 한국의 도시 수출 모델에 대한 연구 진행
- 2020년 1월 쿠웨이트 현지조사 및 인터뷰 (쿠웨이트 도시개발 전문가 15명 및 일반인 20명) 진행, 각종 문헌 자료 수집

동아시아의 도시 수출 역사



자료: e영상역사관 (1994)

- 싱가포르 정부가 1992년 인도네시아 바탐 지역에 산업단지를 건설하며 주택 및 위락시설을 함께 조성
- 우리나라 역시 이와 유사하게 중국 천진과 심양에 1990년대 초반 산업단지 건설을 시도함
- 경제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도시개발이 진행됐으며, 따라서 도시화는 산업화에 종속된 형태로 볼 수 있음
- 유사한 형태로 우리나라 정부 및 민간기업은 베트남과 미얀마 등 도시 개발 사업 참여를 시도하였음



자료: MBC (1992)

아시아 도시화에 대한 이론적 정의

- ‘Worlding’의 3가지 유형(Ong, 2011) - 모델화, 상호 참조, 새로운 유형의 연대
- 급격한 도시화 과정을 통한 아시아 대도시의 부상 (Hogan, 2018) - (서구의) 기술을 통해 현대적 도시 만들기, 아시아적 전통과 서구적 현대가 결합한 초-도시적 상상(hyper-urban imaginaries)
- 발전주의 도시화 (Doucette and Park, 2018) - 도시화의 압축적 시간성, 공간적 선택성, 창조적 파괴의 반복, 수많은 ‘예외공간’ 등

한국의 스마트 도시 모델 - 정책 측면

-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정부, 스마트 공공장소 (Kang, 2020)
 - 교통관제시스템(ITS), 자원회수시설, 120 다산콜센터, 청계천 복원
- 스마트 도시계획, 컴팩트 시티, 스마트 안전도시, 홍수 모니터링(ADB & SH공사, 2019)
 - 서울시 도시계획 포탈, 공공시설 고밀재개발, 지능형 화재감지 시스템 등
- 건축, 도시, 에너지, 수자원, 교통 (국토교통부, 2019)
 - 신속한 대규모 개발 진행, 공공 주도의 주택 및 도시개발, 효율적 토지 취득 절차, 선분양 제도



한국의 도시개발 모델 - 실무자의 시각

- 현재까지 진행 중인 대규모 도시개발 경험 (기술력)
 - 공동주거 중심의 도시개발 방식 (Percival and Waley, 2012)
- 빠른 의사결정 (속도)
 - 빠른 개발 진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 융통성 (신뢰)
 - 갑-을 관계 및 상호호혜를 기반으로 한 과업 진행
- 다른 동아시아 국가와 구분이 가능한지?

동아시아 도시 수출의 딜레마

- 서구의 기준과 부합과 동시에 차별성을 좇아야 하는 모순 (Sabrow, 2020: 190)
 - 서구의 표준에 부합함으로써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도시계획 모델 제시
 - 서구의 경험과 차별성을 추구함으로써 역량에 대한 인정을 추구
- 이러한 모순적 상황은 실무자들에게 불안, 거부감, 양가감정을 가져옴(Doucette, 2020)
 - 애나 칭(Anna Tsing, 2005)의 ‘불편한 교류의 공간(zone of awkward engagement)’
 - 신자유주의적 발전 모델과 한국적 맥락이 공존하는 한국의 개발 원조 모델
- 이러한 모순은 수혜국의 정치사회적 환경과 맞물려 더욱 다면적으로 나타남
 - 2021년 2월 발생한 미얀마 쿠데타로 인한 LH 산업단지 사업 중단
 - "쿠데타 영향 없다...중단 없이 진행" (2021년 2월 8일)



자료: KUNA (2017)

한국과 쿠웨이트 정부 간의 협력을 통한 도시개발 추진

- 한국과 쿠웨이트 정부는 장기간에 걸쳐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음
 - 도시개발과 관련해서는 1970년 후반 알 자흐라 주택단지 개발 사업에 참여
- KSP 사업 등을 계기로 2010년 초 주택 개발과 관련한 논의 시작
- 2015년 처음으로 주택 개발과 관련한 협약 체결
- 2016년 사우스 사드 알 압둘라 신도시 개발을 위한 약정을 처음 체결
 - 45,644 호의 주택 및 269,750 명 인구 규모로 신도시 개발 추진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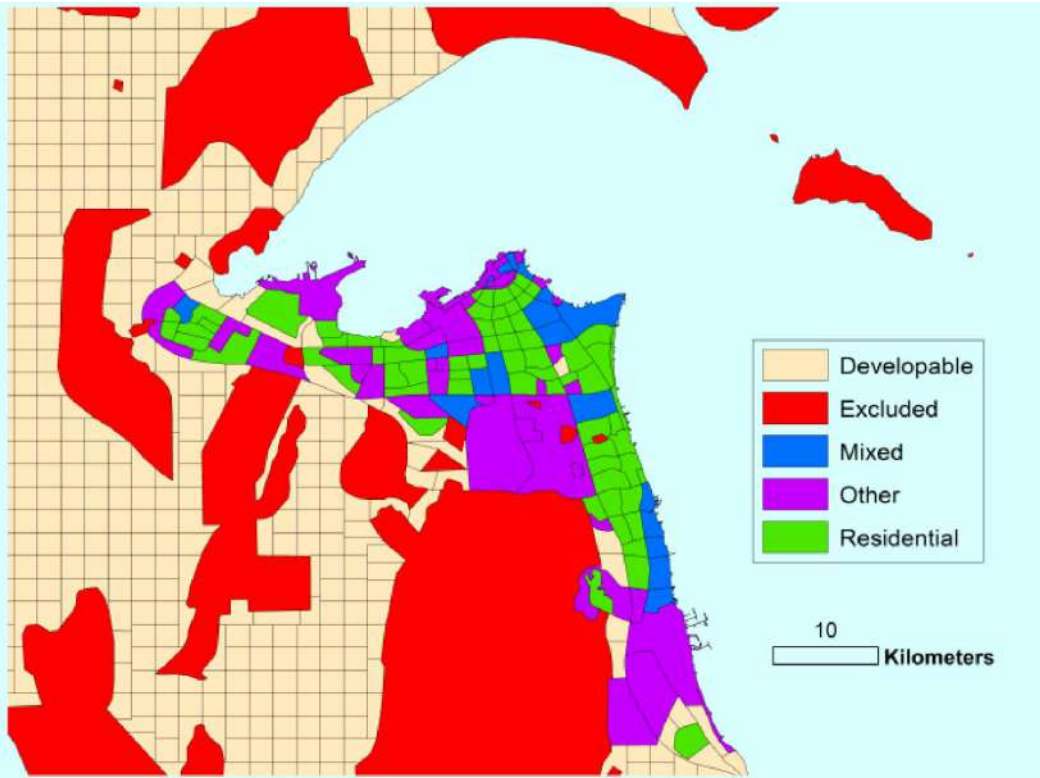


자료: LH 공사 (2019)

쿠웨이트의 주거 환경

- 인구: 약 450만 명이며 31%만이 쿠웨이트 국적 보유
- 쿠웨이트 인은 저밀도 교외지역(인구밀도 3,043명/km²)에 거주하며 외국인은 고밀 도시지역(6,805명/km²)에 거주하는 경향이 있음 (Rode et al., 2017)
- 쿠웨이트 인들에게 주택은 '권리'로 여겨짐
 - 결혼한 쿠웨이트 남성은 400m² 토지와 주택 또는 주택을 짓기 위한 지원금을 제공받음
 - 그러나 정부는 주택 및 토지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기자 명단이 2013년 기준 10만 명에 달했음
 -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평균 7,610 건의 신규 신청서가 접수되었음
 - 평균 15년 동안 주택을 받기 위해서 대기함
 - 쿠웨이트 정부가 1956년부터 2018년까지 공급한 주택의 총 물량은 143,000 호에 그침 (PAWH, 2018)

쿠웨이트의 주택 문제



쿠웨이트 도시지역 토지이용 현황 (2015)
자료: Alghais (2018)

- 정부
 - 저유가로 인해 2016년부터 재정적자가 계속됨
 - 이로 인해 각 정부 기관 간 재정 지출과 관련한 협의 진행이 어려워짐
- 토지
 - 석유를 기반으로 도시지역이 대부분 개발되어 가용부지가 Land situation is no longer straight forward
 - 도시지역이 대부분 개발되어 가용부지가 확보가 어려워짐
- 국민
 - 지속가능하지 않은 생활 형태에 익숙해져 있음
 - 주택을 투기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
 - 따라서 수익성이 높은 주택 부지를 할당 받기를 희망



협력사업 추진의 장애물

- 한국은 정부 주도 주택 공급 사업에서 장점을 보일 것으로 기대됐음
 - LH공사는 지난 60년간 290만 호의 주택을 공급했음
- 그러나 두 나라의 사회적 맥락이 매우 다름
 - 쿠웨이트의 단독주택 vs 한국의 아파트
 - 쿠웨이트의 에너지 과다 소비 및 자동차 중심 문화 - 가구당 연간 전력 소모량은 26,243 kWh로, 싱가포르 9,714 kWh와 비교 2.7배 많음
- 경제적, 정치적 문제
 - 저유가로 인한 정부 재정적자로 정치 불안
 - 2016년 이후 주택 장관이 6번 교체
- LH공사의 성격 - 수익 추구? 또는 공공성?



한국의 스마트 도시 쿠웨이트 수출 전략



- 여러 스마트 도시 기술의 쿠웨이트 도입이 검토되었음
 - 지역난방
 - 교통관제센터
 - 스마트 횡단보도 및 가로등
 - 스마트 계량기 등
- 이러한 기술들을 도입하는 데에는 많은 장애물 존재
 - 높은 설치 및 운용 비용
 - 다른 사회경제적 맥락으로 인한 수요 부족
- 쿠웨이트의 주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기 어려움

쿠웨이트 국민들은 스마트 도시 원하는가?



2021년 5월 쿠웨이트 주거 복지청 앞에서 일부 시민들이 압둘라 신도시의 주택 배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모습
 자료: Sarmad Network (2021)

- 2020년 1월 Al Qabas 신문은 ‘우리는 스마트 도시를 원하지 않는다’ 라는 기사를 내보내며 압둘라 신도시의 빠른 토지 분양을 촉구
- 저렴한 에너지 가격은 지속가능한 생활방식으로의 변화 의지를 억제함
- 주택은 대부분 국민에게 국가로부터 석유 수익을 공유 받는 방식으로 여겨짐
 - 쿠웨이트의 PIR 은 16.5로 추정되며, 임금 소득으로 시장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Gulf Bank of Kuwait, 2021)

쿠웨이트의 다른 주택문제

- 쿠웨이트 정부는 2016년 해비타트III 보고서에서 쿠웨이트에는 슬럼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주장하였으나,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들은 취약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경우가 많음
- 또한 쿠웨이트 인구의 69%가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주거 문제는 정책적, 정치적으로 거의 논의되지 않음
- 그러나 쿠웨이트 사회는 외국인 없이는 작동할 수 없음
 - 이는 주택 시장에도 해당되는 문제로, 쿠웨이트인을 위해 지어진 주택들이 수익을 위해 외국인들에게 임대되고 있음



자료: Imtiajuddin (2017)



자료: Al Fouzan (2014)

결론

- 역사적, 지리적 맥락이 다른 지역 간 도시화 모델을 수출하는 데에는 다층적 장애물이 존재
 - 국가, 사회, 경제, 토지 등 이질적 환경 간의 대립 (Chua, 2011)
 - ‘한국적 모델’이 쿠웨이트의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아시아 도시화’의 이식이 가능한 것인가? - 일시성(temporality) 및 지역성
- 축적 전략으로의 ‘스마트 도시화’
 - 설계나 시공 뿐만 아닌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과 연계함으로써 이익 추구 기회 모색
 - 한국적 스마트 도시에 대한 애매모호함(건설 기술의 지역성)
 - 그러나 개발도상국 도시에서 해당 기술을 수용하는 데에는 장애물이 존재 (Joo, 2021)
- 국가 주도의 도시 수출의 애매모호함
 - 국가의 자원을 투자하여 해외에 진출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
 - 이익 추구가 목적이 아닌 국가 기관의 해외 이익 추구 행위

일반세션 3. 공간의 정치생태학

사회: 정진영 (서울대)

- <제주 대정읍 농지 태양광 발전과 에너지 전환의 지리>
박양범 (서울대)
 - <연결성으로서의 발전: 에너지전환기의 하천 복원>
김레베카 (성공회대)
 - <다층적 행위자와 접경지역 로컬네트워크: 화천군 군납 로컬네트워크를 사례로>
박종구 (경희대)
- ▣ 토론: 황진태 (통일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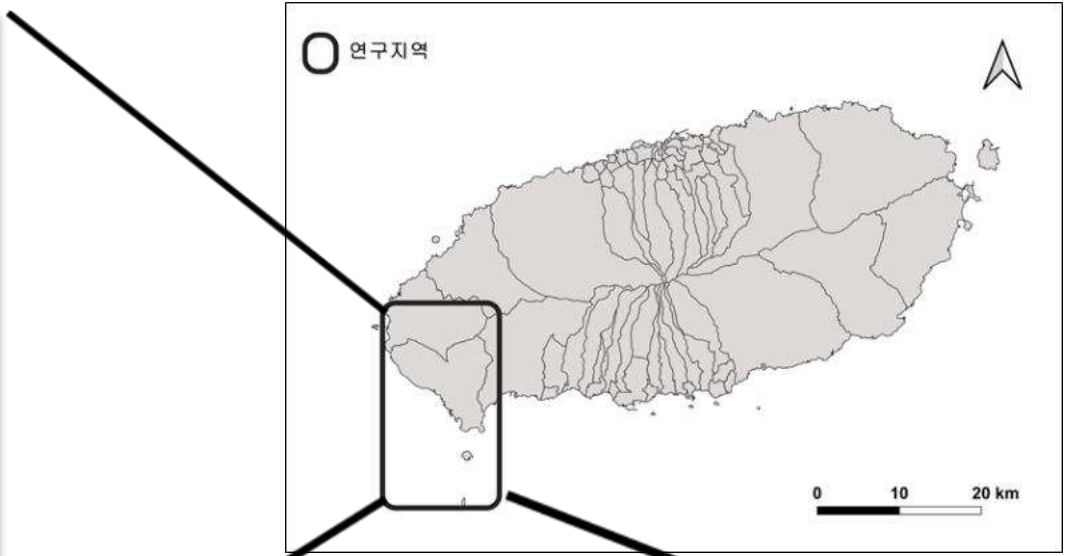
에너지 전환의 사회-공간적 접근

제주 대정 지역의 농지 태양광발전을 사례로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석사과정 # 박양범



에너지 전환의
사회-공간적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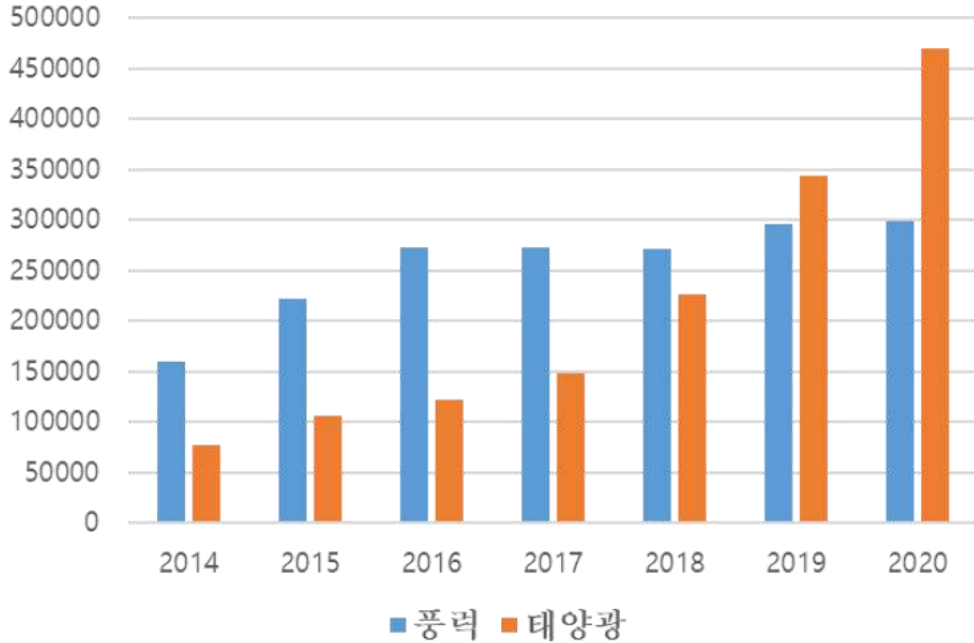
제주 대정 지역에 설치된 농지 태양광발전소

연구대상

제주 대정 지역의 농지를 전용하여 설치한 태양광발전소
제주도 내에서 농지와 평야가 주로 분포



제주 대정 지역 마늘 밭



제주도 내 풍력 / 태양광 누적보급용량(kw)

(자료출처: 통계청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현황통계)

2020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전국 최고치 제주16.2% (전국7.43%)
특히, 태양광설비 보급량 증가가 두드러짐

- 1) 제주의 에너지 전환에서 태양광발전의 빠른 보급 원인 규명
- 2) 이를 사회-공간적 맥락으로 해석 시도
- 3) 구체적으로 '토지의 사적 소유권에 기반한 영토성 강화'라는 동력이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했음을 밝히고, 이것이 동시에 전환을 왜곡 / 방해할 수 있음을 드러냄

개요

#1 / 서론

#2 / 이론적 배경

1. 주류전환이론의 한계
2. 사회-공간적 관점의 필요성
3. 토지의 자산기반 영토화와 에너지 전환

#3 / 연구지역 개관 및 분석틀 제시

#4 / 농지로 향하는 태양광발전소

1. 농지로 향하게 된 제도적 조건들
2. '삼중'의 독점지대 강화
3. 농촌과 농지의 다중위기 심화

#5 / 사례지역 분석: 제주 대정읍 농지 태양광발전소

1. 농지 태양광발전과 지대차 해소
2. '농지전용'이라는 지대추구적 도구
3. 자산기반영토화가 촉진, 왜곡, 방해하는 것들

#6 / 결론



연구지역 답사 및 면담 기간 : 2021.05. / 2021.11. / 2022.01.~ 02.

연구지역선정 : 제주도내 사업용 태양광발전의 공간적 분포를 바탕으로 선정

연구대상선정 : 눈덩이표집

연구방법 : 심층면접

행위자 : 지주, 소작농, 태양광전기사업자, 태양광설치기업, 토지개발 및 부동산 관련 행위자, 정부, 시민단체 등 총24명

" 사회·기술 전환이론은 기술의 발전과 체제 전환에서 사회적 요소를 함께 고려한다 "

의의

- 1) 복잡계 이론의 도입으로 기술 발전과 체제 전환 과정에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
- 2) 사회가 당면한 '지속불가능' 문제에 대해 그것의 해결을 지향
- 3) 간학문적 특성. 학제 간 협력에 개방적 태도

한계

- 1) 기술중심적 논의에 따라 노동, 불평등 부분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홀 (Geels, 2019)
- 2) 시간축 위주로 전환을 설명함에 따라 공간적 차원 설명 미흡 (Bridge *et al.*, 2013)
- 3) 전환을 모호하고 추상적이며, 정치와 무관한 것(apolitical)으로 묘사 (Kemp *et al.*, 2011; Schwanen, 2017; Lawhon *et al.*, 2011; Kern, 2011)
- 4) 전환의 '가치지향적' 특징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닌 사회-공간적 맥락 서술에 한계.

따라서, 공허해지고 사회-공간 맥락에서 벌어지는 이해관계의 충돌 및 재조직을 간과하기 쉬움

#02

이론적 배경

" 사회적 관계는 사회-공간을 생산하고, 사회-공간은 사회를 매개한다 "

전환이 추구하는 변화가 어떻게 사회-공간적으로 차별화된 방식으로 복잡하게 적용되는지를 드러냄으로써 공허한 부분을 보완가능

전환 정책과 프로젝트가 '그릇(container)'으로서 공간에 무차별적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공간적 맥락을 형성하고 그것이 다시 경로의존 / 장소의존적으로 제도에 영향을 끼치는 힘이 될 수 있음을 드러냄

사회-공간적 관점의 주요 분석틀로서 영토, 장소, 스케일, 네트워크 (TPSN) 분석틀 (Jessop *et al.*, 2008)

하지만 TPSN 분석틀을 에너지 전환에 적용 (Gailing *et al.*, 2020) 하였더라도,
네 가지 개념 모두를 균등하게 고려하다 보니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힘든 부분 존재

그래서 본 연구는 특히 영토(Territory) 개념에 집중하여 바라보는 것 시도

#02 이론적 배경

TPSN	정의	에너지 전환에 적용 예시
영토(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계 내부와 외부의 구분 짓기 - 영토 내부에 대한 외부의 '구성적' 역할 - 특수한 형태의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경 내부의 통합된 전력 시스템 - 저탄소 전환을 위한 도시 및 지역 스케일의 전략적 영토화
장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접성, 공간적 뿌리내림, 지역적 차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자원의 장소적 뿌리내림, 장소의존성, 우발성
스케일(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계화, 수직적 차별화 - 스케일 정치, 스케일 조정 - 다중스케일적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시스템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스케일 정치 및 스케일 조정(re-scaling)전략 - 에너지 시스템의 다중스케일적인 특성
네트워크(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 사이 연결성 강조 - 상호연결과 상호의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인프라의 생산, 소비, 분배 네트워크

TPSN 분석틀의 에너지 전환에 적용 (Jessop *et al.*, 2008; 박배균, 2009b; Gailing *et al.*, 2020을 재구성)

#02
이론적 배경

"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에너지 전환의 사회-공간적 실현은 토지의 사적 소유권 체제 위에서 결정된다 "

에너지 전환은 필연적으로 시설과 인프라 등의 설치를 요구

이는 구체적인 사회-공간적 과정으로, 여러 행위자들의 장소성 및 영토적 이해관계와 깊이 관련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입지 갈등 존재 (이정필·한재각·조보영, 2015; 장창석·김선경, 2017; 박선아·윤순진, 2018)

적합한 부지를 찾는 과정에서 다양한 장소, 영토적 이해와 복합적으로 접합될 수 있음 (박배균, 2009a)

특히 토지의 사적 소유권이 중요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국유지를 활용하지 않는 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인프라 건설은 사적 소유권 체제 위에서 결정됨

그러므로 자본주의적 지대 논리는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시설 입지와 건설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음

#02

이론적 배경

" 토지의 자산기반 영토화 구성 논리 "

토지의 사적소유권 체제 하에서는 지주의 이익을 보장하지 않고서는 기존 토지이용에 대해 정책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동력을 찾기 쉽지 않음

영토 : 경계를 통한 내부와 외부의 구분짓기, 이를 통해 내부의 통일성을 추구하고 외부를 배제

소유권 : 특정 사물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 및 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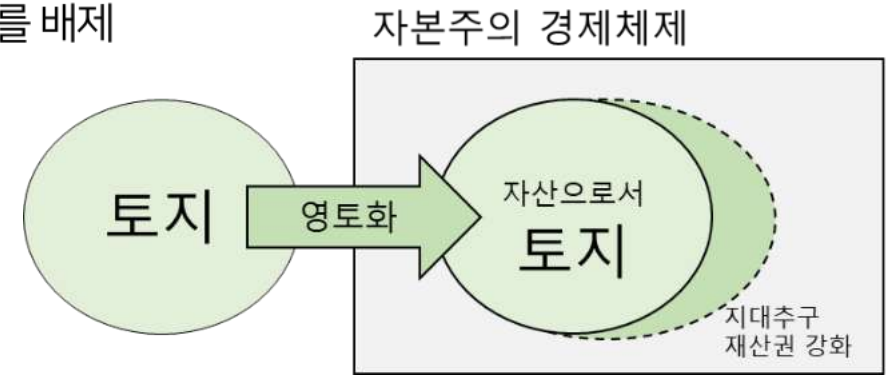
자산으로서 토지 : 독점적, 배타적 사용이 보장되는 영토화된 땅

지대 : 영토화된 토지에서 산출되는 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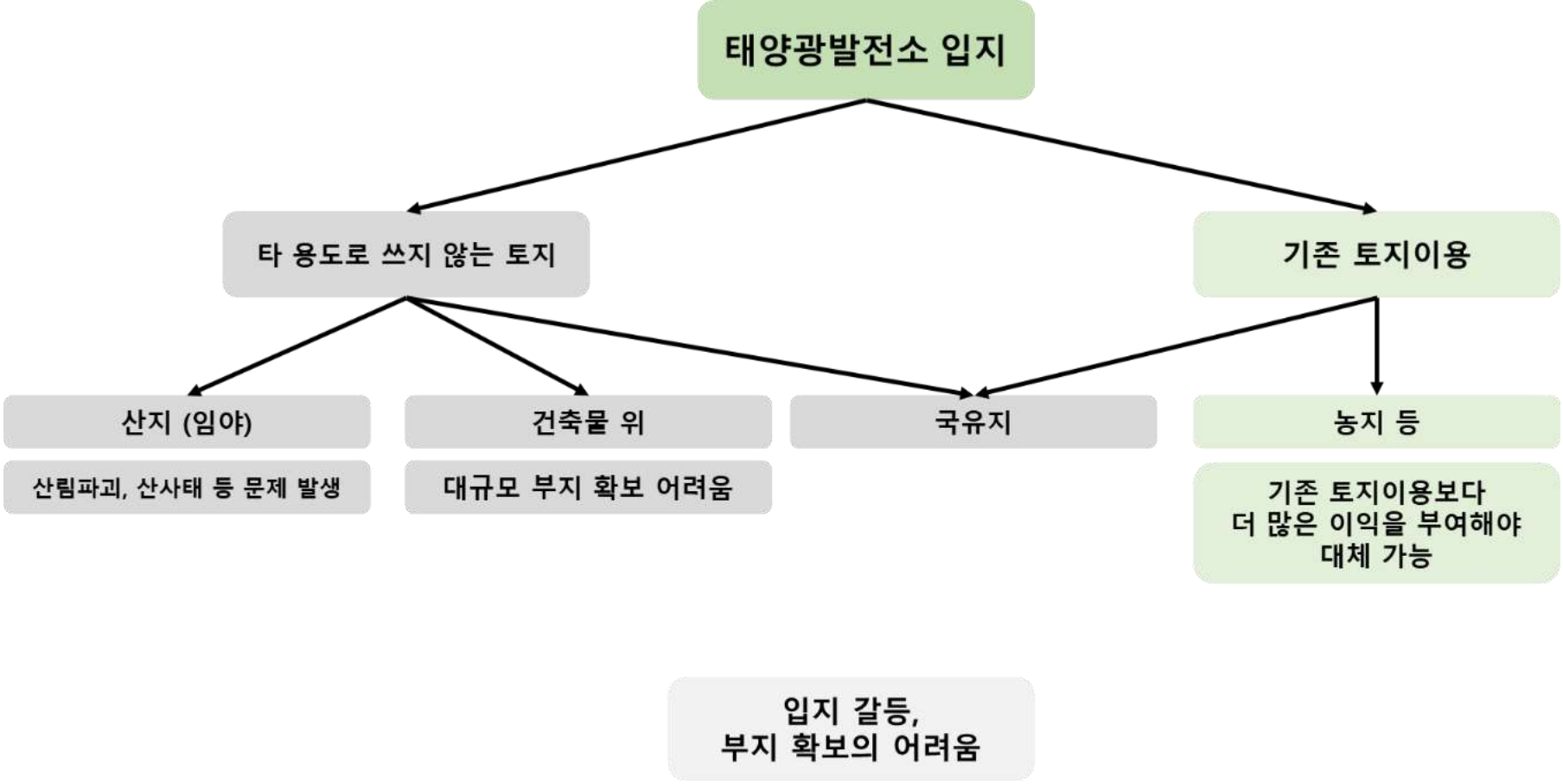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토지는 곧 '영토화된' 토지

토지에서 나오는 이익인 지대를 보호하고 확장함으로써 재산권이 강화되고 체제가 유지됨

이에 따라 토지에 대한 '지대추구적' 행위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짐



#02 이론적 배경



#02
이론적 배경

" 태양광 발전소를 '돈되는 것'으로 만들기 "

정부는 기존 토지이용을 태양광으로 촉진하기 위해 '영토화된 토지'의 속성을 '에너지 전환의 가속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음

예컨대 기존 토지 이용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태양광발전소의 입지를

- 1) 수익이 높은 것으로 만들기
- 2) 지대추구를 가능케 하는 제도적 조건 조성
- 3) 혜택의 정도를 조절하면서 전환의 속도 조절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에너지 전환 자체는 가속화할 수 있지만 기존 체제와 충돌을 야기할 수 있음 -> 전환의 의미 왜곡

전환 과정에서 지대추구적 속성을 이용하였기에 추후 더 나은 수익을 가져다 줄 선택지가 등장하면 '역-전환' 유발 가능 -> 전환 방해

본 연구는 제주 농지 태양광을 사례로 이러한 과정을 탐구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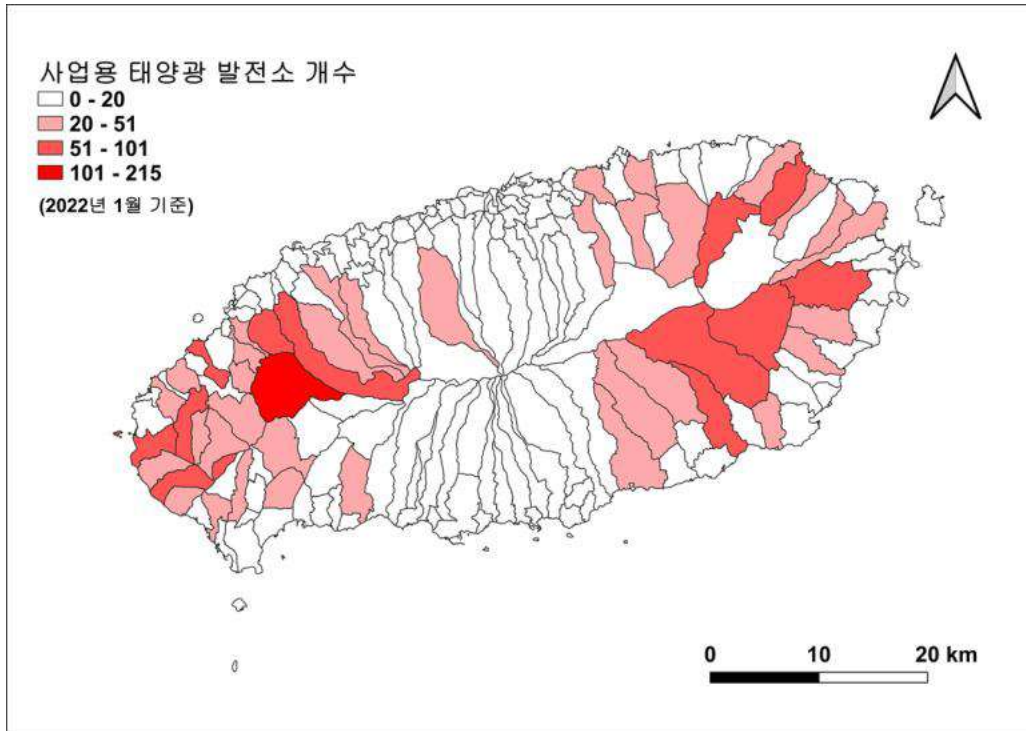
이론적 배경

전반적으로 교외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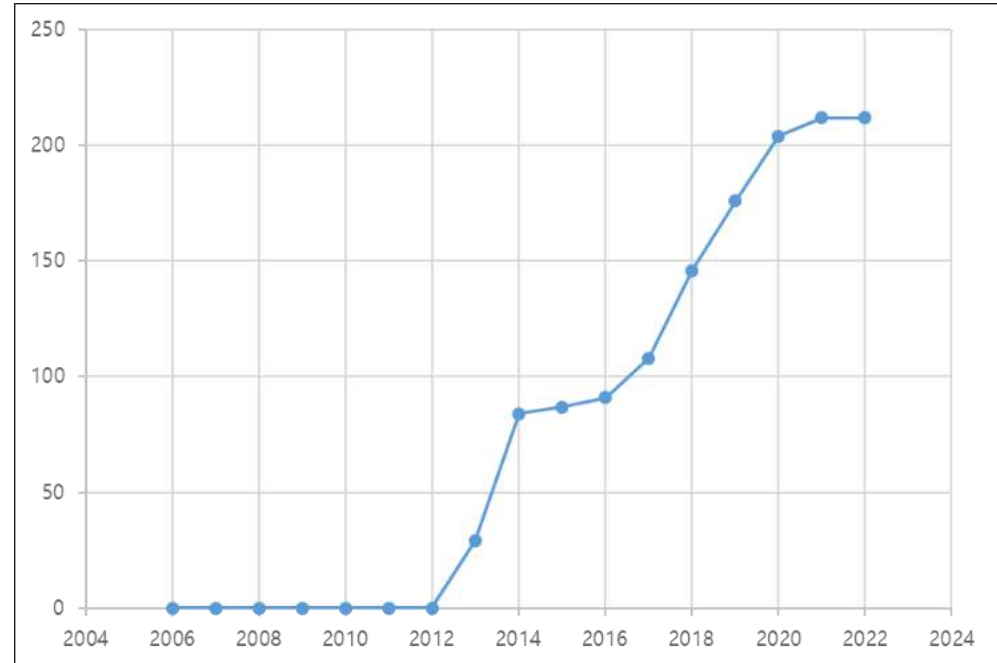
남동쪽의 경우 산지(임야)에 국가주도 신재생에너지 시범단지 집중 분포

북서쪽의 경우 산지(임야)에 주로 분포 (양돈단지 및 골프장 분포지역)

서쪽의 경우 농지(전,답,과수원)에 주로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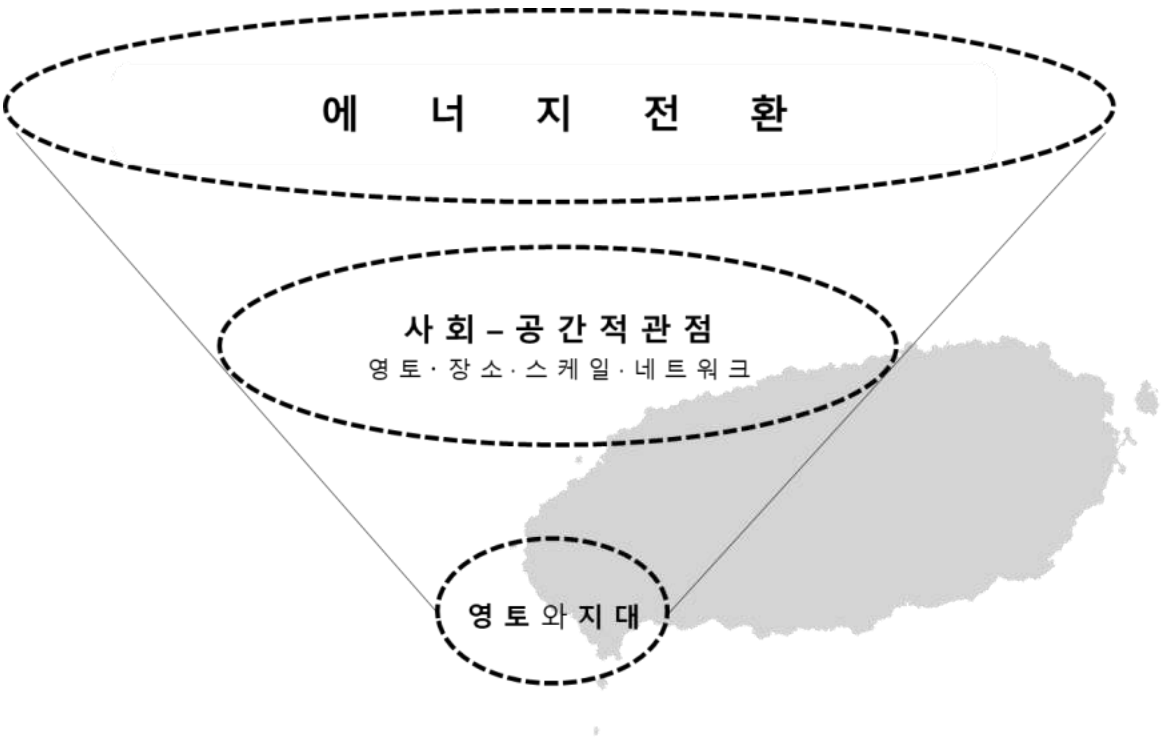
제주도내 사업용 태양광발전소의 공간적 분포 (자료출처: 제주도청 저탄소정책과)



대정지역 사업용 태양광발전소 연도별 누적 개수 (자료출처: 제주도청 저탄소정책과)

#03

연구지역 개관 및 분석틀 제시



연구질문

1. 제주에서 왜 태양광발전소가 빠르게 보급되었는가?
2. 사회-공간적 맥락에서 제주의 에너지 전환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 2-1) 연구지역의 농지에서 태양광으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토지의 자산기반 영토화'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 2-2)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03

연구지역 개관 및 분석틀 제시

" 산지로 덜 가게, 농지로 더 가게 "

연구지역에 농지 태양광발전소 입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제도적 조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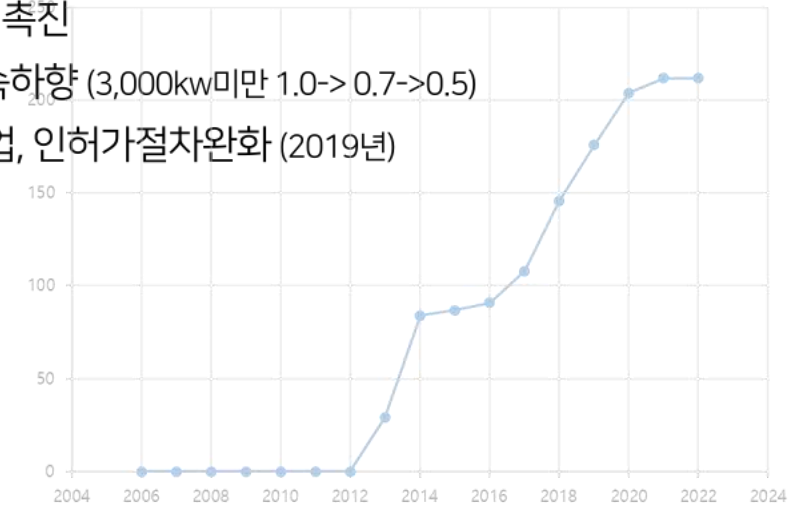
2012년 ~ /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 의무공급비율 지속상향(최대25%)에 따른 재생에너지 입지 촉진

2012년 ~ /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 가중치 조절을 통한 공간선택성 부여, 산지에 대한 가중치 지속하향 (3,000kw미만 1.0-> 0.7->0.5)

2013년 ~ / 탄소없는섬제주2030(CFI2030) -> 감귤폐원지 및 유희부지 전기농사 사업, 민자 태양광발전 사업, 인허가절차완화 (2019년)

2017년 ~ / 신재생에너지3020이행계획 -> 신규발전소의 95%를 재생에너지원으로 보급

2018 ~ 2019년 / 농지법 시행령 -> '농민'이 태양광발전 입지 시 농지전용부담금 50%감면



중앙/지방정부의 전략관계적 역할

중앙 : 산지로 덜 가게, 농지로 더 가게 REC가중치 조절. 동시에 다른 이유로 농지 투기가 문제되자 농지 취득조건 강화

제주 : 농지 투기 방지 위해 중앙보다 먼저(2015년) 농지취득 조건 강화, 제주특별법활용 태양광 인허가권 이양 추진중

#04

농지로 향하는 태양광발전소

"삼중(triple)의 독점지대 강화"

1. 지방정부 차원에서 '청정제주' 라는 장소마케팅을 통해 지속적으로 독점지대 추구
2. 농지에 대한 독점지대 증가 (전국 스케일) - 제도적으로 태양광이 점점 더 들어서기 좋아하는 농지 + 농지 취득 규제 강화 -> 우발적 접합
3. 제주 섬에 대한 독점지대 증가 (제주 스케일) - 부동산투자자이민제(2015~), 제주 이주/귀농(2010~), 지속적인 개발 이슈

#04

농지로 향하는 태양광발전소



" 촌집, 전, 과수원, 임야입니다 "

1. 연구지역 농지의 투기대상화 (농지로 유도되는 태양광발전소, 제주 전반 땅투기)
2. 높은 지가상승 (토지 자체가 생산수단인 농부에게 직접 타격)
3. 기후위기와 식량위기
4. 농산물 수매/수입제도 (농산물 가격 상승 억제)
5. 농산물 수입개방 (김치 양념, 마늘)
6. 경자유전 원칙의 유명무실화 (편법 및 합법적 비-농민의 농지 취득)
7. 농지전용문제. 경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경지면적감소
(서귀포시 기준 2013년31271ha, 2019년 29522ha)



각 요소들이 상호중첩 / 강화되면서 농촌과 농지의 다중적 위기 심화

#04

농지로 향하는 태양광발전소

농지 태양광발전과 지대차 해소

" 농지에 태양광발전소가 입지하는 과정은 지대차 해소과정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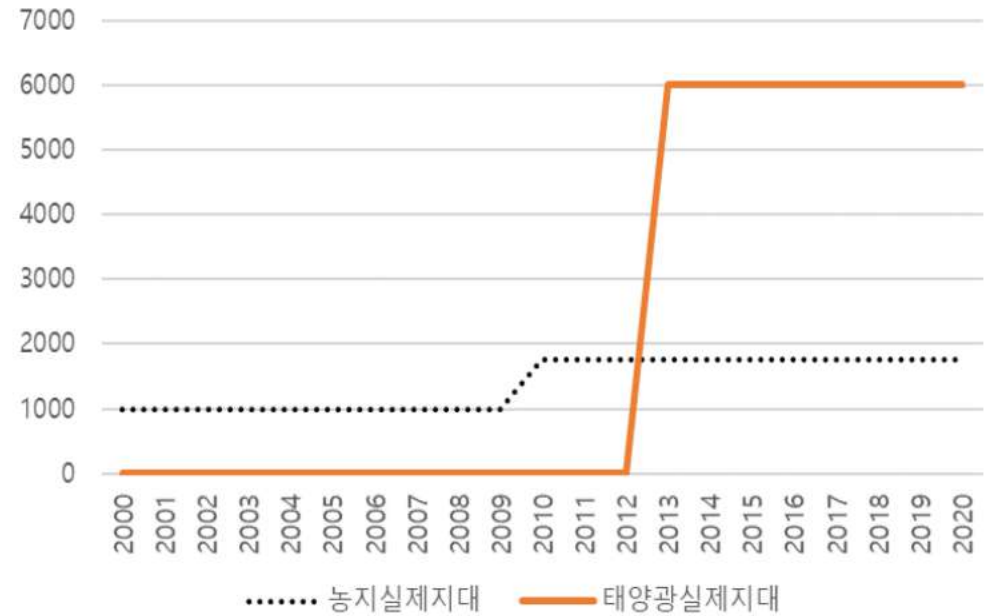
지가의 지속적 상승에 따라 토지개발로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지대 상승
농사 목적으로 농지 구입하기에 부담 가중

농지의임차료변화 (1,000 -> 1,500~2,000원) / 계약서x, 지주가 평당200원 직불금 추가 수령하는 경우 존재

농업이윤감소로 지속적 작물전환 및 대농화 경향, 임차농 사이 농지 수요 증가

'기존농지이용 - 태양광신규입지' 간 지대격차 발생 (2013~)

-> 농지로 계속 이용했을 때 실제 지대(1,500~2,000)와 잡종지로 변경 후 태양광발전을 할때 지대(6,000)



면담을 통해 추산한 연구지역 농지실제지대 및 태양광실제지대변화 (2000~)

#05

사례지역 분석: 제주 대정읍 농지 태양광발전소

'농지전용'이라는 지대추구적 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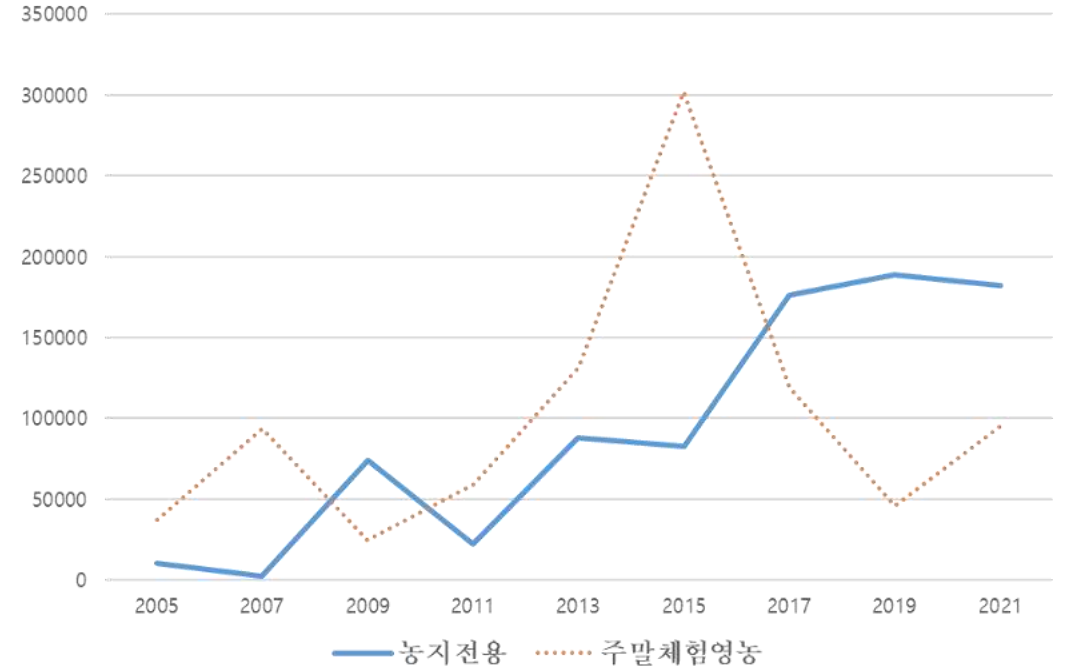
" 농지전용(농지->잡종지)을 통한 지대추구 "

지목변경을 활용한 지대추구를 제도적으로 용인

현행 태양광발전소를 짓기 위해 필요한 '농지전용' 절차가
사업자들에게 지대추구를 위한 도구로 사용
지목변경을 통한 지가차익 기대 존재

제주의 경우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없어서 전용이 더 수월

토지 자체에 대한 물질적 조건이 특별히 바뀌지 않고,
단순히 '지목변경'만으로 일종의 의제자본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지대추구적 특성



2005 ~ 2021년 대정읍 지역의 농지전용과 주말체험영농 허가 면적(m). (자료출처: 한국농어촌공사)

#05

사례지역 분석: 제주 대정읍 농지 태양광발전소

" 자산기반 영토화가 촉진, 왜곡, 방해하는 것들 "

촉진

- 토지의 자산기반 영토화 활용. 그것의 지대추구적 속성이 빠른 태양광 보급을 촉진 (영토성 강화)

왜곡

- 빠른 보급속도 영향으로 최근 제주에서는 '전력 출력제한' 이슈 발생
- 최근 이미 인프라를 설치한 태양광사업자들이 조직하여 제주의 무분별한 허가를 반대(네트워크 기반 영토성 강화)하고 도의 출력제한조치에 대한 보상 촉구
- 농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태양광발전소 입지를 통한 농지잠식이 추가적으로 이뤄질 수 있음 (기존 농업 체제와 충돌)
- 농지의 이용에서든 태양광으로 이용에서든 사유재산권 강화차원에서 전환이 이뤄짐에 따라 소작농은 늘 배제 (농지 기반 장소성 해체 및 자산기반 영토화로 재조직)

#05

사례지역 분석: 제주 대정읍 농지 태양광발전소

" 자산기반 영토화가 촉진, 왜곡, 방해하는 것들 "

방해

- 발전소 입지 과정에서 소유권관계의 지리적 확장 (전남, 광주, 서울, 제주시, 서귀포시, 대정 등) -> 로컬 장소성 기반 에너지 체제 형성 방해
- 글로벌 석유 시장가격과 연동되어있는 현행 전력가격제도. 석유 파동 등 글로벌 스케일 문제가 로컬에서도 바로 영향 받을 수 있음.
분산형 에너지 인프라의 장점을 활용하지 못함
- 특히 사례지역 면담자의 경우 최근 코로나 및 석유가격하락으로 전기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불안정성 강화
- '토지담보 + 시설담보'로 용자를 만들어 태양광발전소를 지은 농민이 다수. 전력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방 압력을 주면 추후 소유권 이전 발생 가능성 존재 (탈-영토화, 재-영토화)
- 지대추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지속되지 못할 경우 추후 역-전환 가능성 존재 (탈-영토화, 재-영토화)

#05

사례지역 분석: 제주 대정읍 농지 태양광발전소



제주의 에너지 전환은 특히 태양광발전소가 빠르게 보급됨에 따라 탈-탄소 전환에 큰 기여

그러나 '토지의 자산기반 영토화' 논리를 전환 촉진의 도구로 활용함에 따라
'지속가능한' 체제로의 전환 의미를 왜곡 및 방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동시에 발생하게 됨

본 연구는 사회-공간 분석틀 (TPSN) 의 요소 중에서 특히 '영토'에 집중함으로써
현행 에너지 전환의 복잡한 사회-공간적 맥락을 드러내고 그것의 이중적 특성을 밝힘

한편, 농지를 전용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을 짓는 대신에
새로운 대안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농업과 태양광발전을 동시에 운영하는) '영농형 태양광' 모델의 경우에도
본 연구와 같은 종류의 분석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연구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석사과정 # qkrdidqja@naver.com # 박양범

한국공간환경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

연결성으로서의 발전

- 에너지전환기의 하천 복원

김레베카 /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문제의 배경

- IPCC WGIII AR6 (정책입안가들을 위한 요약): 기후 변화 완화를 위한 방법들: “자연을 이용한 탄소 흡수와 저장(enhanced carbon uptake and storage using nature)”
(IPCC WGIII, 2022)
- ‘자연기반해법’:
 - IPCC의 2050탄소중립 합의에 따라 유럽위원회는 2019년 ‘유럽 그린 딜’을 제시, 유럽의회는 2021년 유럽기후법 승인.
 - 대기에서 CO2를 제거하는 것, 필수적: 배출 감소 정책의 실행을 보완.
 - 유럽 과학아카데미: 탄소 배출량 감축, 생물다양성 보존, 자연흡수원고 저수지를 강화 > 이산화탄소 제거(CDR) 옵션 포트폴리오 개발
 - 자연기반해법: 산림 조림, 토양 탄소 격리 및 습지 복원 등.
 - 기술적 대안: 강화된 풍화(enhanced weathering), 탄소 포집 및 저장을 통한 바이오에너지, 직접적인 공기 포집 및 저장 등.
(Think Tank, European Parliament, 2021)

문제의 배경

- 탈탄소사회->'그린 인프라'의 필요성:

자연 및 준자연이 주는 생활지원 시스템

-하천, 습지, 삼림, 야생 생물 서식지 및 기타 자연 지역의 상호연결 네트워크

-산책로, 공원 및 기타 보전 토지. 경작 농장, 목장, 숲 및 관개 용수로와 시스템

-토착종 부양, 자연 생태과정 유지, 공기와 수자원 보전, 사람의 건강과 삶의 질에 기여하는 자연보호 지역과 열린 공간

-옥상녹화, 침투성 포장, 빗물배수시스템 등
(이동률, 2020)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보호, 사회적 대화 -> 그린 인프라 투자

예) 캐나다: 화력발전소 -> 그린 인프라 &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청정에너지로 전환, 캐나다 인프라 은행 기금.

(Just Transition Centre, 2017)

문제의 배경

- "생물다양성의 경제학 - 다스굽타 보고서":

- 민물은 지구 지표면의 0.8%에 불과하지만 어류 40%를 포함한 척추동물의 1/3이 서식.

- 하천 파편화의 심각한 영향: Barbarossa et als.의 '연결성 지수(connectivity index): 전 세계의 약 4만 개의 대댐이 하천 유량의 50%를 변경시킴; 현재 건설 계획 중인 대댐의 수 약 3,700개->90%의 유량 변경이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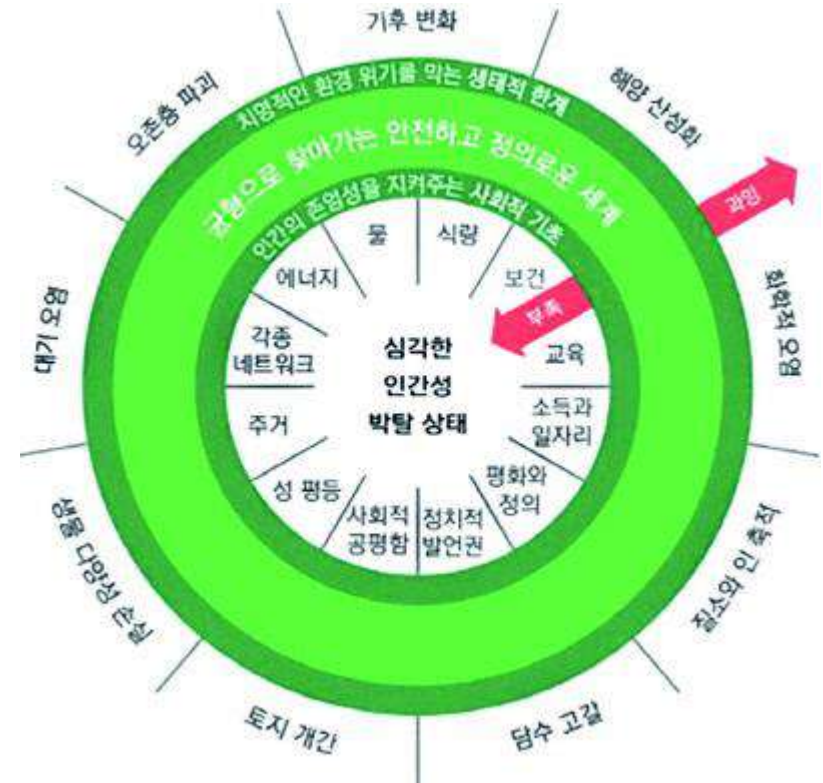
- '환경적이지 않다면 경제적이지 않음': Ansar et als., 2014의 대규모 수력발전 댐 연구: 65개국 대상, 1934~2007년 시기, 245개 프로젝트: 평균 건설 비용이 애초 타당성조사 예측치의 두 배 이상->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 수익률은 국채의 연간 수익률 4-5%보다 낮게 나타남. (Dasgupta, 2021)

문제의 배경

“생물권에 묻어들어 있는 경제”



(Dasgupta, 2021)



(Rayworth, 2017)

문제의 배경

- 하천 복원과 기후 변화의 넥서스
- 기후 변화: 하천 통로 여건의 기능작용을 지탱하는 핵심 생물물리학적, 화학적 과정들에 영향을 줌.
- 회복탄력성(resilience): “중요 시스템변수들 또는 군집체들 간의 핵심 관계성은 유지하면서 변동과 교란을 흡수하고 잔존할 수 있는 생태계의 역량”
(Holling, 1973; Briggs, M. K. and Waite R. Osterkamp eds, 2021에서 재인용)
- 하천 복원 -> 생태계 회복탄력성 증진 -> 기후 변화 대응
- 하천 복원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의 증가 -> 정상성(stationarity)에 기반한 생태계/자원 관리는 도태될 수밖에 없음.

'하천 연속성'

- 유럽연합 2000년 '물관리지침(European Water Framework Directive, WFD)': 하천 연속성은 WFD 요구에 맞게 유럽 수역을 건강한 상태로 만드는 데 있어 핵심.
- 유럽 '2030 생물다양성 전략': '유럽 그린 딜'의 핵심. 2030년까지 하천장벽을 제거하고 홍수터, 습지 등을 복원함으로써 적어도 25,000km의 하천을 자유유동하천으로 복원할 것을 목표로 함.
- 프랑스 '하천 연결성' 법제: 환경법 L.214-18, L.214-17 => '생태적 연속성=어류의 자유로운 회유와 유사/퇴적물의 운송' (Garnier, 2019)
- WFD에 따른 제2차 유역관리계획(RBMPs)에 맞추어 보고 집계된 바에 따르면 하천 장벽은 유럽 지표수체(28개 EU국과 노르웨이)의 약 34%에 심각한 압박요인으로 작용.
- 하천 연속성 목표를 달성하려면 하천 파편화와 관련된 정보 베이스를 개선해야. (EEA,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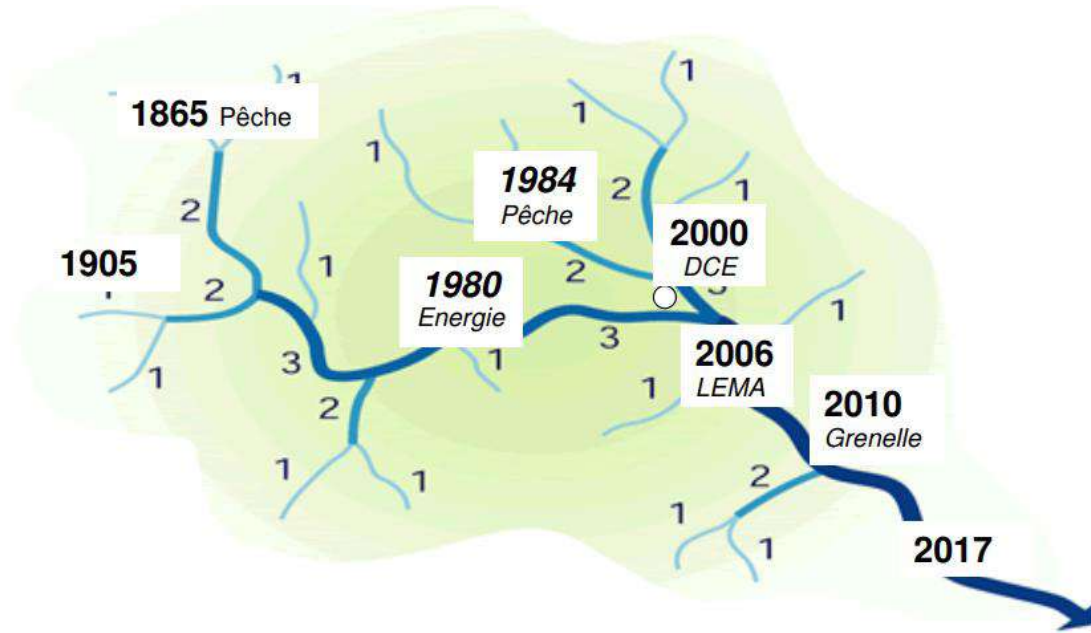
'하천 연속성'

- "Rivers 4 Recovery" 보고서: "강 관리(stewardship)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생명과 공중보건에 없어서는 안될 수원水源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COVID-19로 파산한 국가가 재앙적인 신규부채를 떠안지 않도록 방지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며,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

'정의로운 녹색 회복'을 위한 요구사항:

- 신규 수력발전 댐을 중단시키는 회복
- 비-수력 재생에너지 및 저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회복
- 신규 댐 건설 대신 기존 수력발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회복
- 분산 소규모 에너지 솔루션을 우선시하는 새로운 에너지 계획을 시작하는 회복
- 보호지역, 자유롭게 흐르는 강 및 선주민 영토를 보호하는 회복
(International Rivers, Rivers without Boundaries, 2021)

'하천 연속성'



프랑스 환경법제의 진화 과정
(Garnier, 2019)

'하천 연속성'

WFD에 따른 프랑스 유역관리 계획(SDAGE=RBMP)의 주기



하천 연속성

- '양호한 상태(good condition): 생태적 양호함+화학적 양호함(WFD)
- '민물 건강성 지표(FHI): '양호한 상태'=하천/민물의 '건강성(health)'.

-> 과학에 근거하되 시민들도 접근 가능

-> 생태적 온전성을 생태계서비스의 전달에 링크

-> 사회적 차원과 생태적 차원을 결합

“서식처 연결성은 수생물학적 군집체를 shaping 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인 중 하나이다” (Shaad, 2020)

- “생태계 연결장치(ecosystem linkages)”: 서로 다른 생태계들 간을 연결시켜주는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과정 또는 속성.
(Lamberti, Chaloner, Hershey, 2010)

오스트롬의 '사회생태체계'를 이용한 Shaad, 2020의 '민물 사회생태체계'

Freshwater Social-Ecological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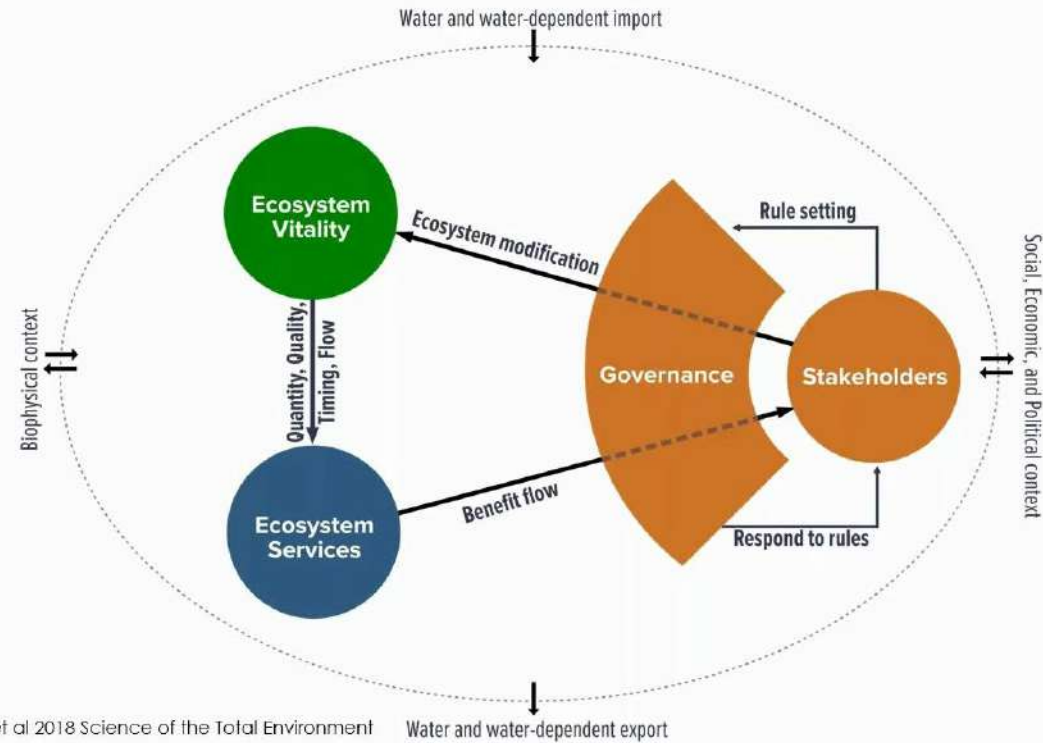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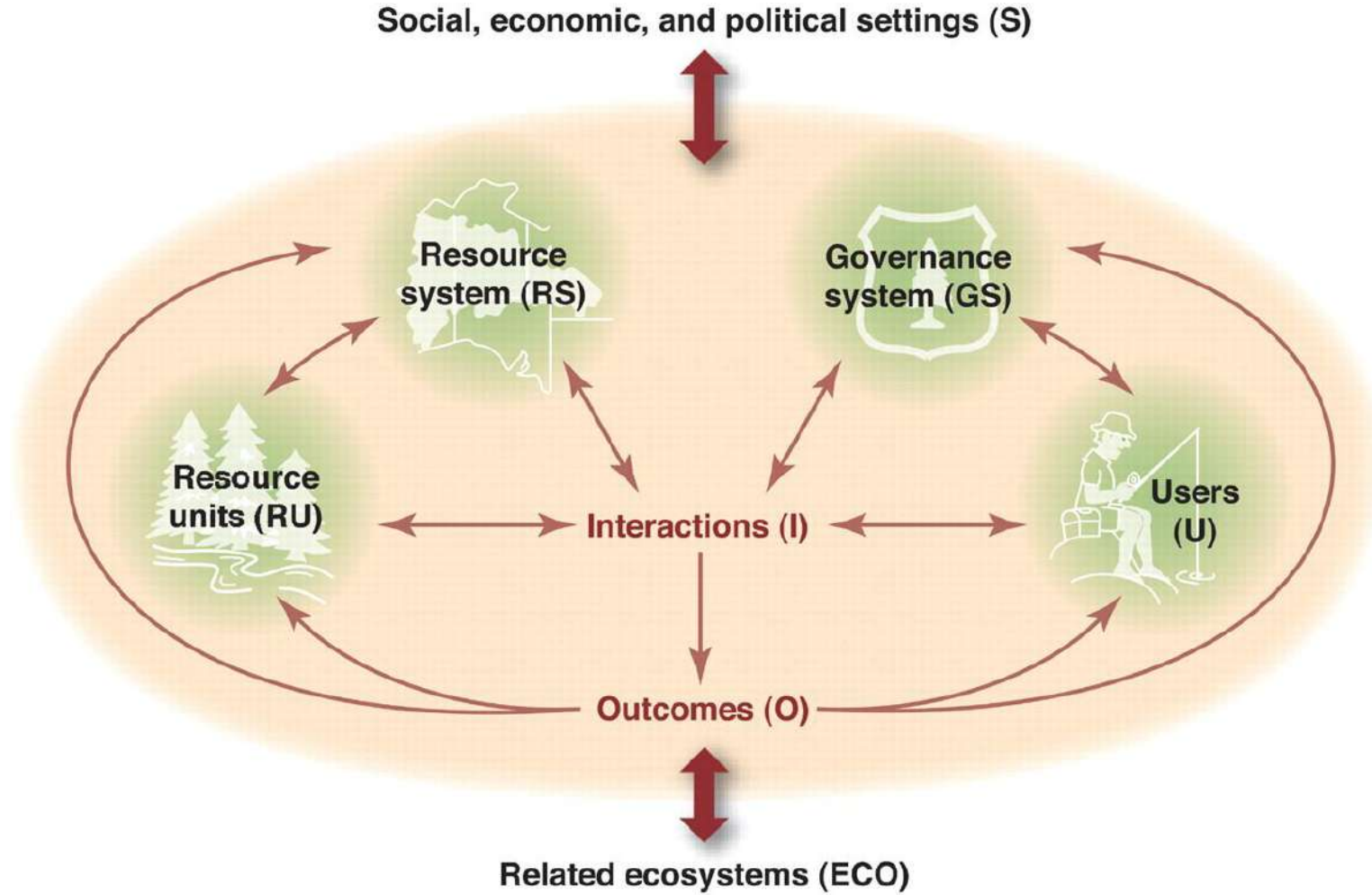


Image Source: Source: Vollmer et al 2018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Shaad, 2020)



(Ostrom, 2009)

하천 단절성

- 유역단위: 수문순환, 물질이동 -> 수체 수질에 영향 -> 수생태계에 영향
- 인간활동이 하천의 수문, 형태, 연결성에 끊임없이 작용
- 인간활동: 항행, 경작지 조성을 위한 홍수터 간척, 도시 개발, 홍수 예방을 위한 제방/둑 조성, 용수 확보를 위한 관개, 하상 퇴적물 준설 등.
- 수문형태적 변형 요인: 토지이용 변화, 토지피복도 변화, 지역 기후 변화 -> 수계 수문체계의 변형
- 하도나 하안부지의 물리적 변형; 댐, 갑문, 제방, 다리, 암거 등등의 '하천 장벽(river barriers)': 유럽 청정수법이 강제하는 '양호한 상태' 요건 충족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 -> 하천 파편화 (fragmentation)

하천 단절성

- '하천 장벽':

댐, 보나 낙차공 등의 횡단구조물, 수문, 암거, 도섭장(ford), 호안 경사로(ramp) 등.

영향: 하천 파편화

-횡적 연속성, 종적 연속성의 차단

-서식처/생물다양성 상실

-유사/퇴적물 이동 방해

-수질 악화

-수생태계의 건강성 악화

하천 단절성: 유럽

- 하천 파편화

EEA의 집계:

-백만 개 이상의 하천장벽; 10%는 노후(obsolete)시설

‘댐철거유럽(Dam Removal Europe)’의 집계:

-하천 유로 1km 당 하나의 장벽

-댐 총계: 60만~180만 개

-하천 파편화: 10m 이상의 댐만 집계. 현존 장벽의 약 5%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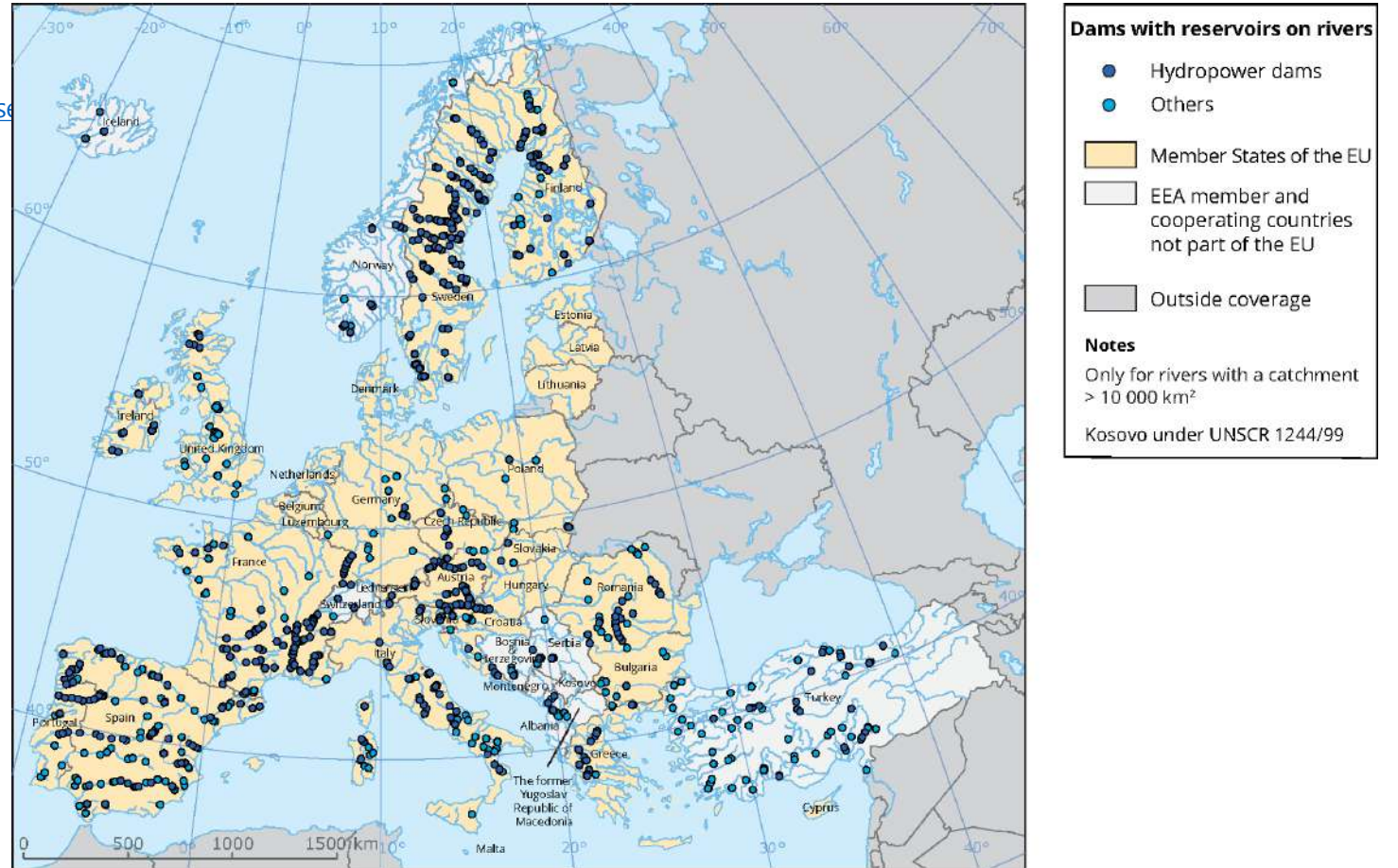
-하천 재자연화: 장벽 철거, 어류 회유 환경 조성, 유사/퇴적물 이동 환경 조성

하천 단절성: 유럽

- '하천 장벽' 지도

EEA

<https://www.eea.europa.eu/data-and-maps/figures/dams-with-reservoirs>



하천 단절성: 유럽

DRE

The screenshot shows the website for DAM International Europe. The header is blue with the logo on the left and navigation links (Home, About, News, Events, Maps, Case studies, Promo Materials, Contact) and social media icons on the right. The main heading is "Mapping dams in European rivers". Below it is a yellow banner with the text "Barriers in European rivers". The central part of the page features a map of Europe with numerous colored dots representing dam locations. On the left side of the map, there is a sidebar with "Most active users" listing names and their submitted records. On the right side, there is a "Barrier records" panel showing a list of recent submissions with timestamps.

European rivers are full. Of fish? No, barriers. Over 1 million barriers are blocking our rivers and as shown in the map above more and more are discovered each 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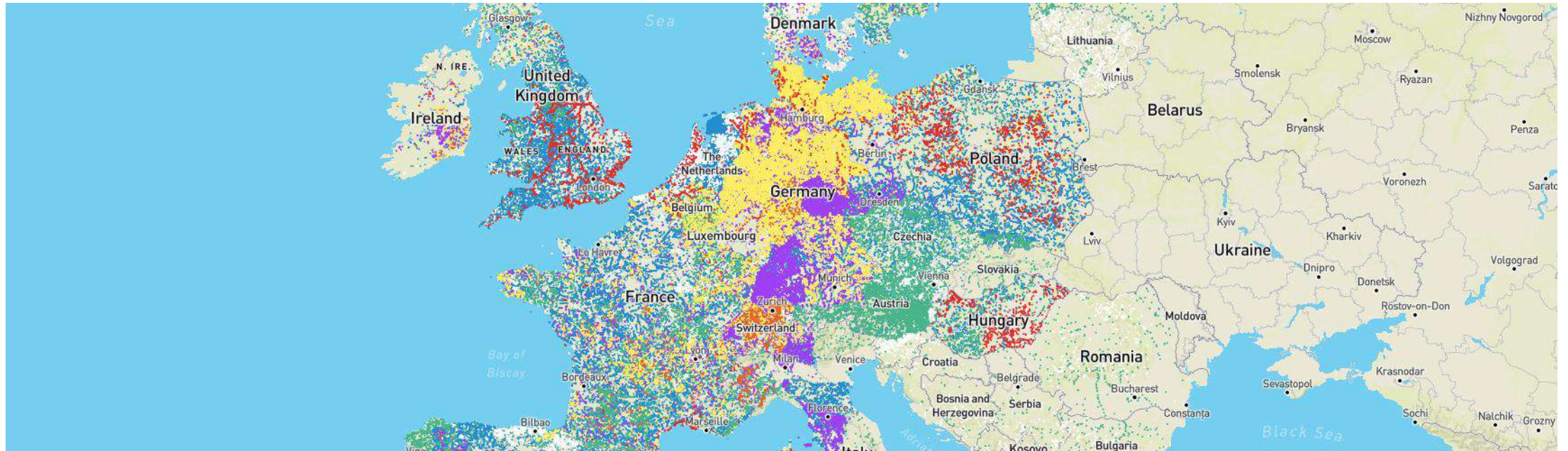
The above map is a result of the AMBER project which aims to map all barriers in European rivers. The map has two

하천 단절성: 유럽

- DRE 제거된 장벽 지도

<https://damremoval.eu/dam-removal-map-europe/>

시민과학/참여민주주의 장려: 'barrier tracker' 앱을 사용, 누구나 업포스팅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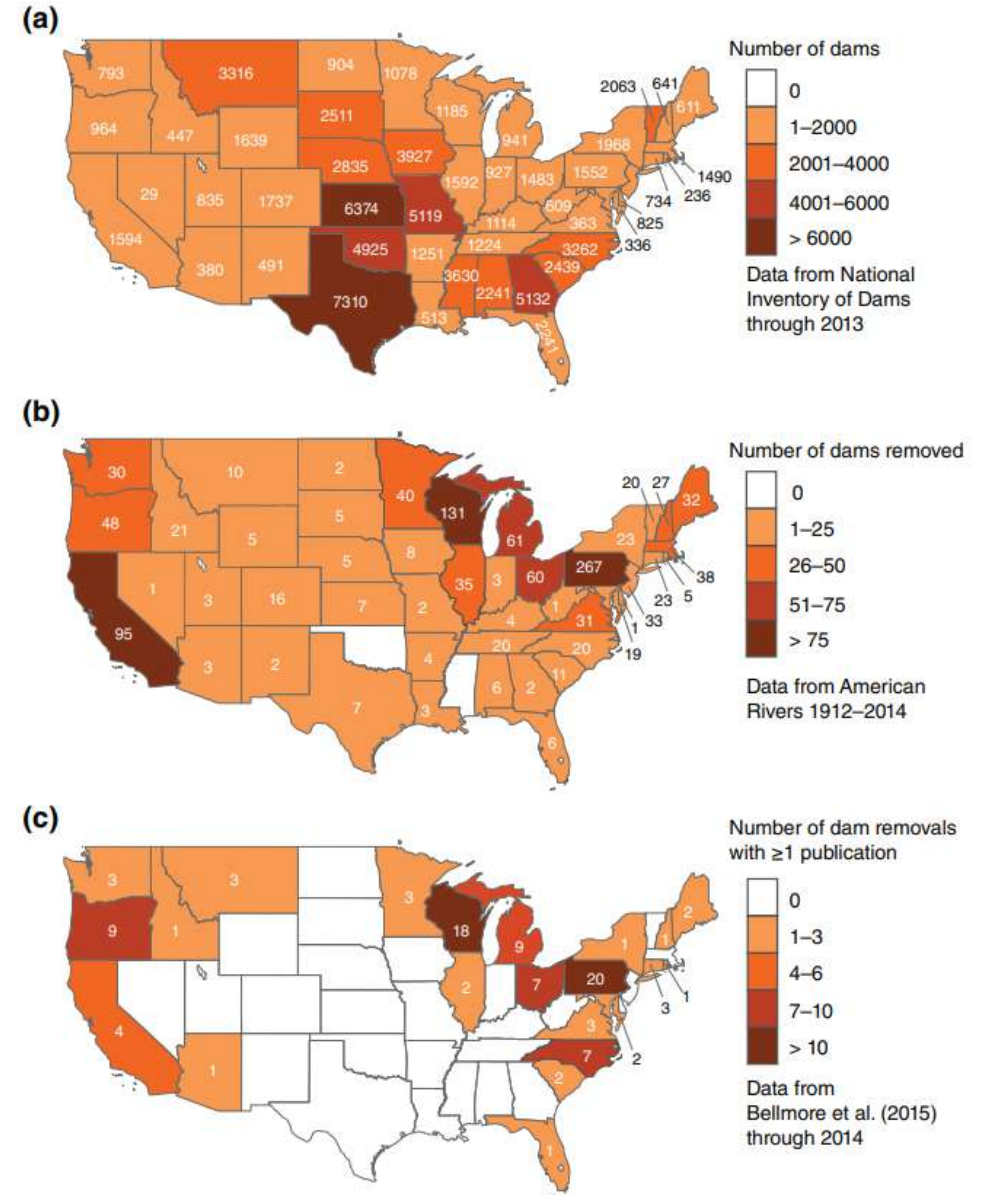


하천 단절성: 미국

- 약 2백만 개의 댐, 80%가 50년 이상된 시설들.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노후화+(어도 설치 의무화 등의 환경성 의무를 갖추려면) 경제성 상실 => 댐 철거 상승 추세
- 지난 20년 간 약 1,200개의 댐을 철거.
- (하천복원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더더욱) 댐의 존속은 철거보다 훨씬 더 비경제적 (Duda et als., 2008)
- 1986년 연방에너지법의 개정 -> 30-50년 단위로 수력발전에 따른 경제적 이익과 환경 파괴 등을 에너지규제위원회가 평가. 환경 관련 연방기관들이 갱신 요건(어도 설치 의무화 등) 강제.
- 바이든 행정부, '인프라 투자와 고용 법(the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IIJA)', 2021년 11월: 유역복원 관련 투자
 - 천연 자원 보존 서비스(Natural Resource Conservation Service) 유역 프로그램에 6억 1,800만 달러
 - NOAA 커뮤니티 기반 복원 프로그램에 4억 달러: 어도 장벽 제거 보조금
 - 서식처 복원 및 지역사회 회복 보조금으로 4억 9,100만 달러
 - 태평양 연안 연어 복구 기금에 1억 7,200만 달러

하천 단절성: 미국

미국의 댐, 철거된 댐, 댐 철거 연구 분포
(Bellmore, Duda, Craig et als., 2016)



하천 단절성: 한국

하천 개수

- 국가하천 (구, 직할하천): 국토 보전상 또는 국민 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 국가(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하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등 88개소 3,277km
- 지방하천 (구,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지방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 청계천, 한탄강, 흥천강, 광주천 등 3,858개소 28,077km
- 소하천 : 하천법을 적용받지 않고 소하천정비법(소방방재청)을 적용받는 소규모 하천(폭 2.0m, 연장 50m이상): 25,073개소 38,862km
- 5대 하천, 증소하천, 117개 소유역
- 국가하천, 지방하천의 81.6%에 하천기본계획 수립 (물과미래, 2016)

댐 개수

- 2014년까지 건설 중인 시설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댐 및 저수지 수는 17,735개소
- 다목적 댐 20개소, 생공용수 댐 54개소, 수력 발전 댐 12개소, 나머지는 대부분 소규모의 농업용수 댐
- 보 33,842개. 이 중 5,857개는 노후화되고 파손된 채 방치되고 있음
(국가어도정보시스템, 환경운동연합)

하천 단절성: 한국

2015년 기준 다목적댐, 발전전용댐, 생공용수전용댐, 하구둑 및 담수호, 농업용 저수지 등 제원 및 시설현황

용수

-다목적댐(20개)의 총 저수용량은 127.4억 m³, 연간 용수공급량은 109.9억 m³ (전체 188.8억 m³)
(2007년 기준 수자원 총량 1,297 (억 m³/년) 중 생활, 공업, 농업용수가 77%를 차지)

-광동, 운문 등 54개 용수전용댐에서 연간 881백만 m³, 낙동강, 금강 등 12개 하구둑 및 담수호에서 연간 2,930 백만 m³, 장성, 담양댐 등 전국 17,649개소의 농업용 저수지에서 2,742백만 m³/년의 물 공급 능력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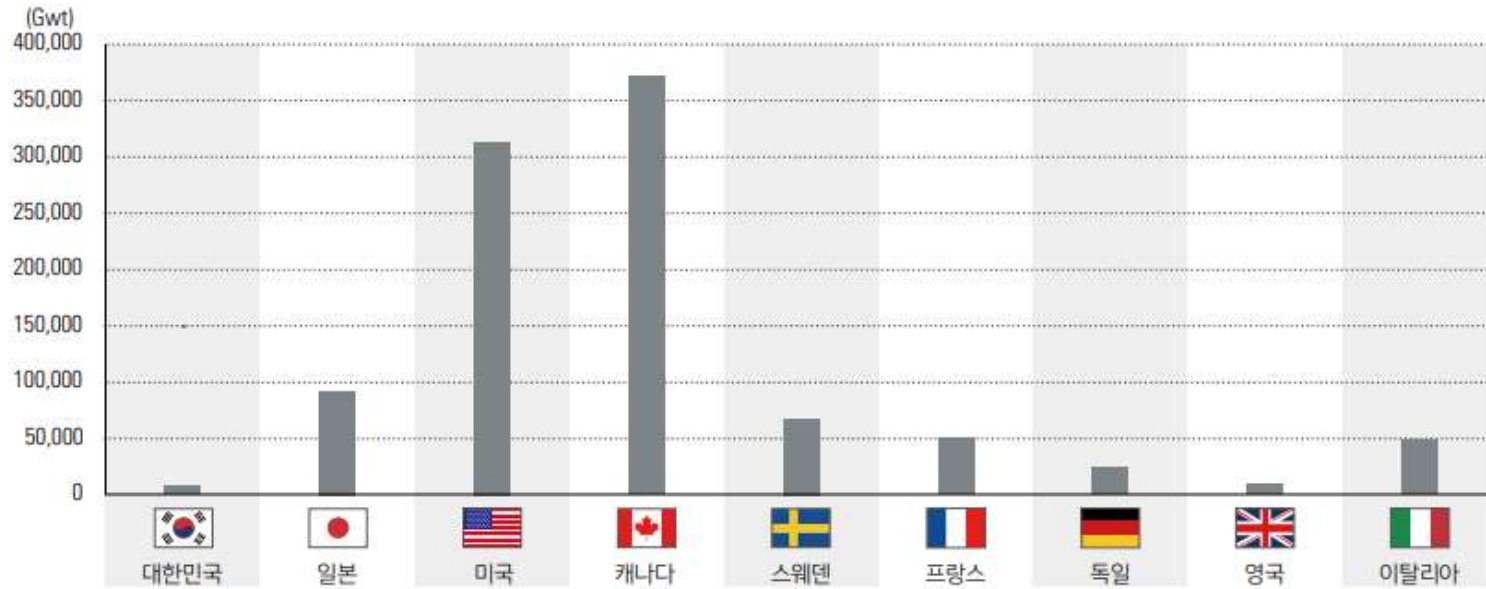
발전

-발전전용댐 발전시설용량 합계: 2,799 (천kw)
(통계로 보는 한국의 수자원, 국토교통부, 2016)

'통합물관리': 실패: 물관리기본법 준용 예산 없음, 개발사업 중심, 주요 법령 개정안 미제출 상태, 사업 연계성 & 통합지원체계 등의 부재, 댐 존치의 기정사실화('트윈 시스템'), 자연기반해법 무시 등.
(환경미디어 2021년 12월 7일자 기사, "2022년 물예산과 통합물관리, 무엇이 문제인가?")

에너지전환과 하천

• 국가별 수력 발전량



(한국수자원공사, 2015)

잠재량 (백만 m ³)	이론적 잠재량	지리적 잠재량	기술적 잠재량
한강	14,262	7,796	2,496
낙동강	14,502	7,782	2,490
금강	6,770	3,436	1,099
섬진강	4,034	2,074	650
영산강	2,187	1,338	428
제주도	1,672	272	87
합계	43,427	22,698	7,250

(물과미래, 2015)

에너지전환과 하천

- 수력발전은 1950~2015년 동안 미국 누적 발전량의 10%를 제공, 미국 누적 재생 발전량의 85%를 제공. 2015년 말 기준, 수력발전의 총 설비용량은 101GW.
- 비발전용 댐(NPDs), 관개수로 등의 시설을 발전용 댐/시설로 전환
- 양수발전: 'closed-loop' 양수발전: 높은 에너지저장 능력+환경영향 최소화 (U.S. Department of Energy's Wind and Water Power Technologies Office, 2016)
- 재생에너지 발전시설로 레트로피팅:

미국: 2000년부터 현재까지 36개 댐을 수력발전용으로 레트로피팅
-> 2020년 한 해에 덧붙태진 태양광·풍력 발전용량 33,000MW 중의 500MW (Dinneen, 2021)

에너지전환과 하천

- 댐은 사막화(습지 상실), 하구를 비롯한 '생태적 연결장치' 구역의 황폐화를 불러일으킴.
(EC, World Atlas of Desertification)
- 댐이 배출하는 GHG: 250여 개의 댐 분석: 호수, 습지보다 댐이 더 많은 메탄을 방출. 특히 댐 저수지는 온실가스 배출의 중요 원천, 지구온난화에 기여. 수중 부후식물이 발생시키는 온실가스 매년 약 10억 톤 -> 연간 인위적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1.3%
(Deemer, Harrison, Li et als., 2016)

작은 결론

- 탄소중립, 에너지전환의 필연성
- '발전', '성장'을 재정의하고 거기에 따른 '전환 전략'을 수립, 이행해야 함.
(우리에게는 '재정의' 부분이 빠져있음. 에너지전환=또 다른 발전전략)
- '지속가능성': "지속가능한 사회는 양적 확대가 아니라 질적 발전에 관심이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는 물질적 성장을 반드시 이루어야 할 지상명령이 아니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무조건 성장을 찬성하지도 반대하지도 않지만 성장의 종류와 목적에 따라 찬반이 달라질 수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는, **자연과 사회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모두 따져보았을 때, 거기서 얻을 가치보다도 대가가 클 경우, 그 일이 무엇이든 간에 한계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거나 당장 멈추게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성장까지도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회를 말한다.**"
(성장의 한계, 2012)
- 양적 팽창으로서의 '발전'은 불가능하나, '연결성'의 증진으로서의 '발전'은 가능하고 필요함.

다층적 행위자와 접경지역 로컬네트워크

: 화천군 군납 로컬네트워크를 사례로

박종구 (Jong-Ku Park)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석사과정 | +82-10-2780-3116 | glorifing@khu.ac.kr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인문지리연구실
DEPARTMENT OF GEOGRAPHY, KYUNG HEE UNIVERSITY
HUMAN GEOGRAPHY LAB



CONTENTS

1. 연구 개요

2. 이론적 배경

3. 급식 군납시스템과
국방부의 군 급식체계
개선안

4. 화천군의 급식
군납 로컬네트워크



1. 연구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그동안 접경지역연구에서 다루어져 왔던 주체 · 행위자는 국가(지상현 외, 2018)에서부터 지역(허훈, 2007), 집단-개인(김창환 외, 2016), 비인간(김준수, 2019)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남
- 접경지역에서 군 부대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중요한 주체임에도, ‘군(軍)’에 초점을 맞춘 접경지역연구는 다른 연구에 비해 부족함
- 타 주체에 집중한 연구와는 다르게, 군 관련 접경지역연구들은 ‘평화’, ‘안보’, ‘개발’과 같은 국가적 · 거시적 담론 위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접경지역의 특수성 때문
- 그러나, 군과 밀접한 삶을 살아가는 접경지역 행위자 역시 각 개인, 집단의 일상이 존재하기에 이들의 삶과 행태를 제대로 담아 내지 못하는 국가적 · 거시적 담론 위주의 연구에는 한계가 존재함
- 접경지역 행위자의 상호작용으로 구성되는 지역의 모습을 이해하기 지역의 맥락 즉, 로컬네트워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군 관련’ 접경지역연구에서도 국가, 지역, 개인, 나아가 비인간까지의 다양한 행위자들의 행태와 맥락을 고려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접경지역의 특수성과 국가적 · 거시적 담론, 지역의 로컬네트워크에 대한 다층적인 범위에서의 연구가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로컬네트워크를 이해하기 위해 다중스케일적 정치생태학의 시각을 적용(Blaikie & Brookfield, 1987)

군 관련 접경지역연구에서 지역의 맥락과 로컬네트워크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 제안

1. 연구 개요

2) 연구 대상

- 연구 대상: 2020년 2월 25일 논란이 제기된 군 부실급식 문제와 그에 대한 국방부의 해결책인 '군 급식체계 개선안'이 추동한 화천군 군납 로컬네트워크의 대응 사례



2020년 2월 25일 군 부실급식 사태 최초 보도 - 부실급식 사례 사진

(출처: 이데일리, '코로나' 격리 장병 부실급식 논란, 국방부 반박 홍보물 보니..., 20.02.25)

국방부의 해결책 제시
: 군납 식재료 완전 경쟁조달 도입



세종 정부종합청사 & 국방부 & 청와대 앞 시위 진행(2021.11~2022.1)

(출처: 강원도민일보, 점검지역 농업인들, 군납 농산물 경쟁입찰제 도입 철회 대정부 시위 22.01.21)

2. 이론적 배경



1) 국내 '군 관련' 접경지역 선행연구 동향

국내 '군 관련' 접경지역 연구 동향

- 국내 '군 관련' 접경지역연구 유형의 공통적 특징은 '군' 또는 '정부' 즉, 국가적 스케일에 의해 상상된 방식으로 접경지역 개발담론, 민-군 갈등에 대한 해결책 논의, 군-지역간 거버넌스의 구성에 대해 논하고 있음

접경지역 개발 담론 연구	민-군 갈등 해결방안에 대한 모델적 논의	군-지역 간 거버넌스의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재한(2005); 이세라(2009); 허태희(2010); 신광식(2011); 심재정(2011); 심재정(2015); 강한구(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석호(2006); 김길수(2013); 이승준(2015); 김민수(2016); 이명철(2018); 남궁승필(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훈(2008); 김명환(2010); 이의신(2016)



- 접경지역은 전쟁에서 비롯된 국가적 규모에서의 상상과 수행에 의해 거주민들의 경제활동이나 일상이 아닌, '평화', '안보'와 같은 거시적 담론의 시각과 지역발전정책 분야 위주로 고려되고, 연구되어 왔음
- 상대적으로 지역을 강조하는 군-지역 간 거버넌스의 구성을 논의하는 연구와 접경지역에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로서 '민간'을 주목한 다양한 연구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원론적·모델적 관점에서 지역-민간에 대한 논의에 국한됨

2. 이론적 배경

2) 거시적 담론 위주 접경지역연구의 한계

국내 '군 관련' 접경지역연구가 안보·평화·개발과 같은 거시적 담론 위주로 진행된 원인



접경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거시적 담론만으로 이해하는 것은 너무도 추상적임
접경지역에서는 실제로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일상적 경험으로서 체험되는 국가의 효과와 그로 인해 상상되는 접경지역의 특수성

- 한국전쟁 이후 지속된 북한과의 군사적 마찰과 체제 경쟁은 남한 민족주의를 추동(홍태영, 2020)하여 '안보'와 '반공' 이데올로기가 국가적 차원의 정체성으로 사회화되는 결과를 낳았음(Paasi, 1996)
- 안보라는 국가정체성은 '적'과 접해있는 접경지역에 집중되어 나타났으며 이는 다양한 안보경관과 규제로 나타남
- 국가에 의한 일상공간의 통제와 하위 행위자들의 일상적 체험은 접경지역의 다양한 행위자로 하여금 지역 군부대와 정부에 의존하는 정치·경제적 형태(Frontier Drive)를 형성시킴(Gelézau, 2011) → 접경지역의 특수성
- 이러한 접경지역의 특수성은 다른 행위자들보다 위계적으로 우위에 있는 국가를 상상하게끔 하는, 다시 말해 '국가 수직성(State Verticality)'을 발현하도록 추동함(Ferguson & Gupta, 2002).
- '국가 수직성'은 접경지역 연구 및 정책 수립 과정에 영향을 미치며 접경지역 군 관련 연구가 국가적 담론을 중심으로 형성되도록 함
- 안보의 사회화는 접경지역의 발전을 지연시켰고, 안보경관과 일상의 규제를 구성하는 국가 규모의 행위자는 특정한 '의도'를 주입시켜 사람들의 일상적인 활동을 '코드화된 수행'으로 전환함(Larson & Urry, 2011; 지상현 외, 2018)

2. 이론적 배경



2) 거시적 담론 위주 접경지역연구의 한계

방법론적 국가주의에서의 탈피

- 군 관련 접경지역연구에서는 국가적 시각의 거대담론을 위주로 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음
- 그러나, 정치지리학과 지정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계에서는 ‘국가’를 사고의 기본 컨테이너로 상상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어옴. Agnew(1995)는 영역적 함정(Territorial Trap)을 논하는 과정에서, 근대 국민국가의 영토라는 영역적 범위의 틀을 통해 다양한 현상을 분석하는 것에 대한 한계점을 제기하였고, 이 한계는 Brenner(2002)로부터 ‘방법론적 국가주의’라 명명되었으며, 이는 국민국가라는 공간적 범위가 근대적인 정치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컨테이너가 된다는 태도를 비판하는 데 사용되었음(박배균 2012; 김준수 2018)
- 군 관련 접경지역연구 역시 국가적 시각의 거대담론을 위주로 한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국가주의를 활용한 연구라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경향성은 지역 내 다양한 행위자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에 장소에 대한 이해와 설명 과정에서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음(박배균 2012)
- 따라서, 접경지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효과적인 정책을 구성하는 과정에서는 국가적 시각, 규모에서의 고찰이 아닌 지역주민의 일상적 삶에 대한 이해와 그들의 일상적 삶을 추동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 방법론적 국가주의에서 탈피하는 방법 중 하나로 다중스케일 관점을 포함한 **정치생태학적 시각을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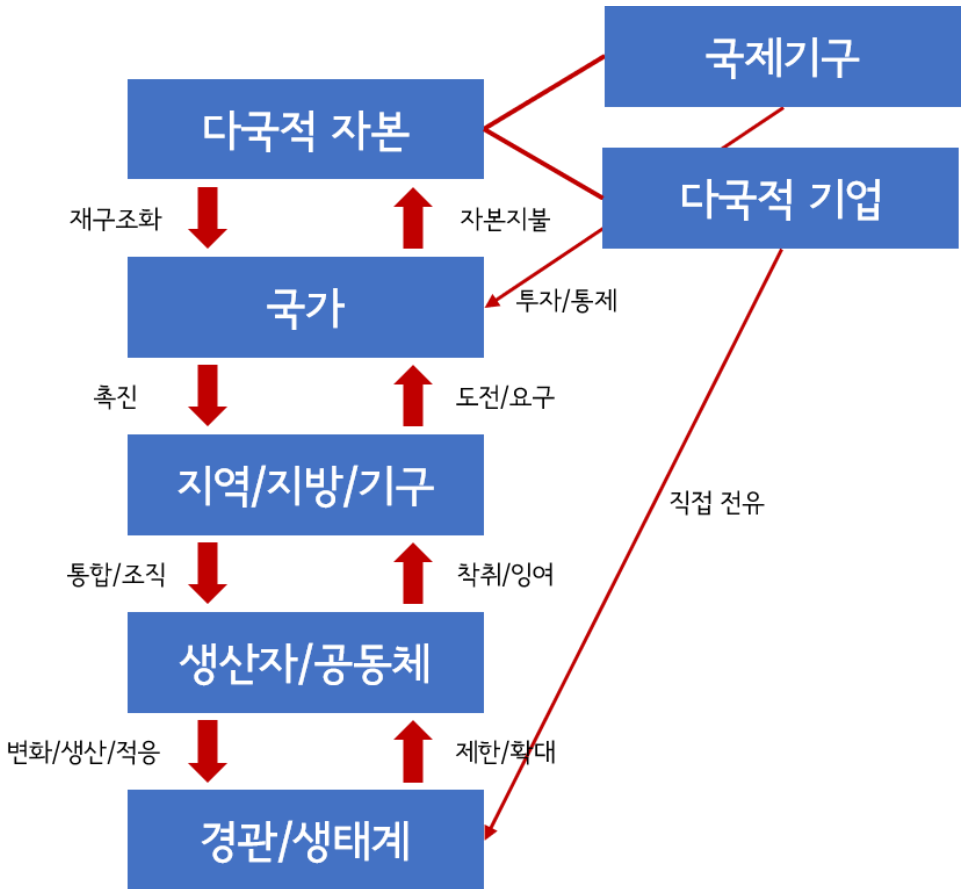
3) 정치생태학을 통한 군 관련 접경지역연구의 시도

국가-권력-지역에 대한 정치생태학적 접근

- 방법론적 국가주의를 벗어나되, 국가적 · 거시적 담론이 우선시 되어 온 한국의 접경지역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지역의 맥락과 국가적 담론을 함께 바라보는 다층적 분석 방법이 필요함 → 다중스케일 관점을 포함한 정치생태학적 접근
- 정치생태학은 문화생태학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에, 정치생태학은 분석 단위를 국가가 아닌 하위 단위(지역, 로컬 등)로 설정해 옴(Loftus, 2018)
- Blaikie & Brookfield(1987)는 구조적 관점에서 국가 행위자의 영향력을 수용하여 ‘설명의 연쇄’ 개념 내부에 국가를 자율적 행위자로 위치시킴(Robbins, 2008) → 이 때의 국가는 영역적 함정을 유발하는 하나의 주체가 아닌, 관계적 성격을 지닌 것, 즉 국가를 “자본과 마찬가지로 관계(Ollman, 1971) 및 과정” 또는 “특정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Harvey, 1976) 이라 사유함
- 이러한 국가 개념의 이해는 정치생태학자들로 하여금 토지/자원/지역/권력의 문제를 국가의 마스크를 벗은 상태로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는 사조를 이끌어 냄(Loftus, 2018)
- 1990년대 정치생태학에서의 다양한 행위자, 장소-공간의 역할 및 영향에 대한 관심(Gezon, 1997; Harvey, 1996)은 다중스케일 개념과 혼합되어 지역 간의 차이와 권력관계를 식별하고자 하는 시도로 나타남(Paulson et al, 2003)
- 따라서 정치생태학에서 국가-지역에 대한 논의는 다중스케일적 관점을 받아들여 특정한 하나의 행위자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다양한 행위자들의 영향력에 대한 복합적인 탐구를 통해 진행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음
- ‘안보’, ‘평화’, ‘개발’이라는 국가적 규모의 담론 논의를 넘어 지역의 행위자(주체-물질), 경제, 일상이 만들어 내는 모습에 대한 탐구에 적용할 수 있음

2. 이론적 배경

3) 정치생태학 개념을 통한 군 관련 접경지역연구의 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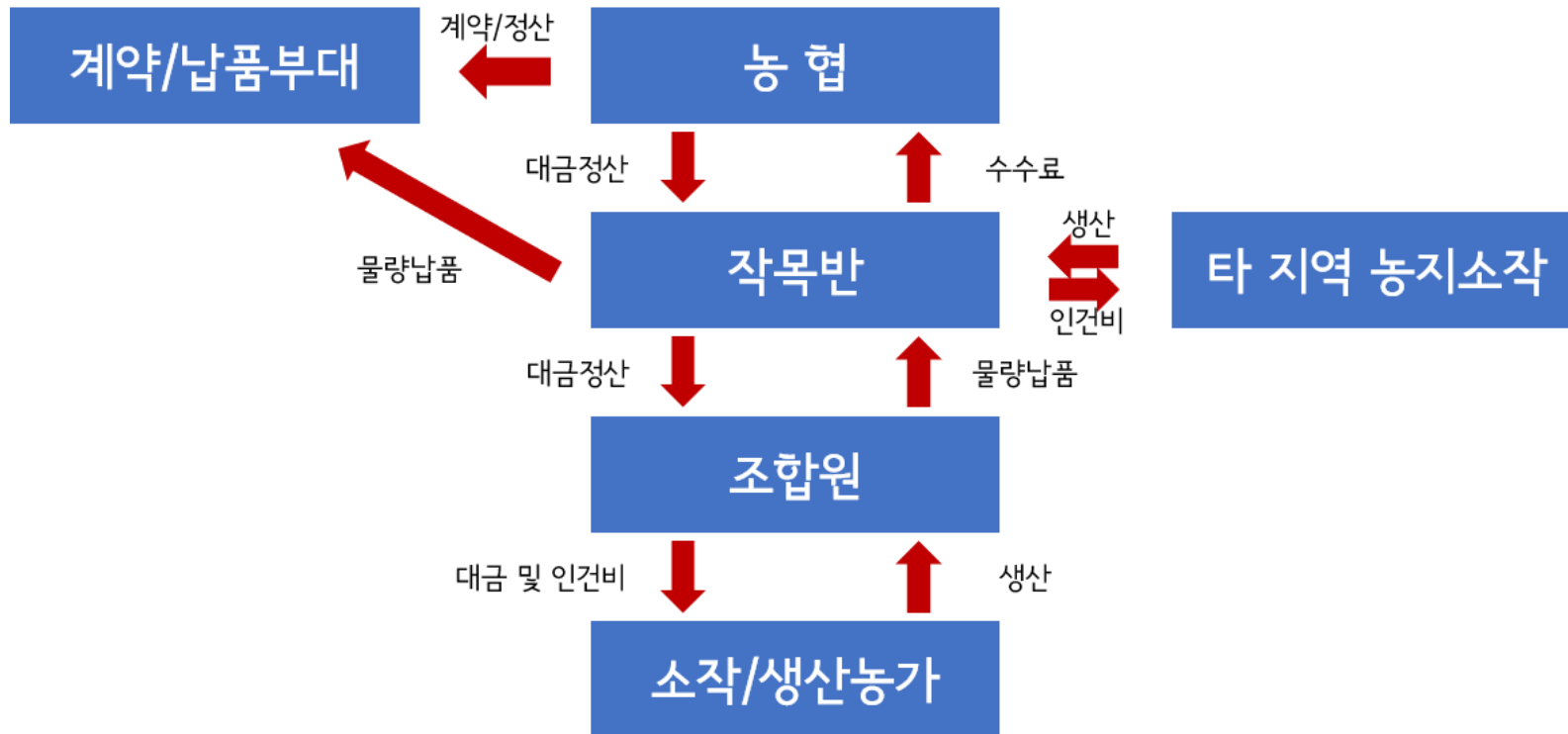


정치생태학에서의 다양한 스케일의 상호작용 – 설명의 연쇄(Blaikie & Brookfield, 1987)

- 정책이나 특정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스케일 행위자는 상호 상-하의 하향적 위계를 가진 것이 아닌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다중스케일의 과정 속에 놓여있음(박배균, 2001; 2012)
- Blaikie & Brookfield(1987)는 다양한 스케일 행위자의 상호작용을 ‘설명적 연쇄(Chains of Explanation)’라 정의하고, 특정한 생태적 상황 또는 정책이 구성되는 과정을 각 스케일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함
- 이를 통해 기존에는 특정 스케일에서의 인과관계를 논의했던 정책 또는 상황에 대해 다양한 스케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입되는 영향력을 새롭게 조망해 볼 수 있음
- 또한, 특정 스케일의 의도에 천착하여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다양한 스케일 행위자들의 행동-일상-경험-담론들을 종합적으로 맥락화(Vayda, 1983) 하여 판단할 수 있기에 다양한 계층의 관계들에 대한 설명을 하나로 결합하여 표현할 수 있음
- 다양한 계층의 관계들에 대한 설명을 결합하는 과정에서는 변수의 집합과 적절한 규모를 선택해야 함 → “설명적 기술은 인과관계로 연계된 변수들과 상태적으로 변화에 민감한 몇 가지 전략적 변수를 포착할 수 있는 능력에 있음”(Blaikie and Brookfield, 1987)
-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지역을 설명하기 위해 택한 규모는 국가 – 지역 – 생산자 – 생태계이며, 전략적 변수로는 로컬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식재료 군납 시스템을 선정하였음
- 안보-평화-개발이라는 국가적 스케일의 논의를 넘어 지역 스케일 행위자들의 영향력에 대한 조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 급식 군납시스템과 국방부의 군 급식체계 개선안

1) 급식 군납 시스템



- 군 급식 관련 군납 유통 체계도
- 제시된 도표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역 군 부대와 같은 군납체계에 다양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행위자가 고려되지 않았음
- 지역과 군 부대 사이의 네트워크가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군납 농산물 유통 체계도(O군지사, 군급식 계획생산 검토자료, 2001; 하영미 2002)



3. 급식 군납시스템과 국방부의 군 급식체계 개선안

1) 급식 군납 시스템

군납 식재료(농산물) 유통 시스템

- 군 급식은 매년 초 국방부에 의해 연간 급식계획이 수립된 뒤, 지역별 계약 부대와 군납 지역농협간의 상호 계약을 통해 진행됨
- 군 급식 운영 과정에서 계약 부대와 계약 담당 지역농협과의 군납 식재료 유통 시스템의 핵심은 ‘계획생산’ → “군의 1년간 전체 급식 계획에 의거 군부대에서 소요로 하는 농, 수, 축산물을 사전에 농, 수협으로 하여금 농, 어가와 부식물 생산 약정을 체결토록 하여 계획적으로 생산, 확보하게 함”(국방부, 1988)
- 군은 농협중앙회와 1970년 1월 체결한 ‘군 급식 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에 따라 군 급식에 활용되는 농, 수, 축산물을 50년 넘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조달하고 있음
- 2011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이후 시행령 제22조 “접경지역 군 급식조달에 접경지역 농, 수, 축산물의 우선 납품” 항목에 의거 약 군납 식재료의 70% 이상이 접경지역에서 생산, 납품되어 왔음
- 따라서 접경지역 농가들은 매년 유지되는 생산계획에 의해 농사 규모, 생산 규모, 설비의 구축 등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군 부대가 사전 통보한 농산물 납품 일자와 수량, 품질기준에 맞추어 납품해야 하는 조건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함



3. 급식 군납시스템과 국방부의 군 급식체계 개선안

2) 화천군 군납 로컬네트워크

화천지역 군납 로컬네트워크

- 군납 시스템의 원활한 유통구조 형성은 다양한 지역 행위자들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
→ 식재료를 생산하는 농민 + 행정적 지원을 뒷받침하는 지방자치단체 + 생산계획의 구성과 소비를 담당하는 지역 군부대
- 이를 화천군 지역의 군납 로컬네트워크에 대입하면 다음 세 집단 행위자로 구분할 수 있음
 1. 화천농협(생산자-농민): 국방 규격, 요구 품질, 계약 수량에 맞는 식재료의 생산을 담당
 2. 강원도-화천군(지자체): 농협의 생산을 위해 다양한 행정·입법적 지원 및 최소 소득의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담당
 3. OO사단(지역 군부대): 계약 발주한 물량에 대한 대금의 지급, 국방 기준의 적용 확인, 수량 책정을 통한 생산 규모의 설정을 담당
- 세 집단은 각자의 담당 역할을 통해 지역의 생산과 소비, 소득 즉 지역 경제를 구성하는 로컬네트워크를 형성함
- 지역의 군납 로컬네트워크를 통한 화천군의 경제적 생산은 2015년 ‘접경지역 생산 농축산물 군납 고시’ 이후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 경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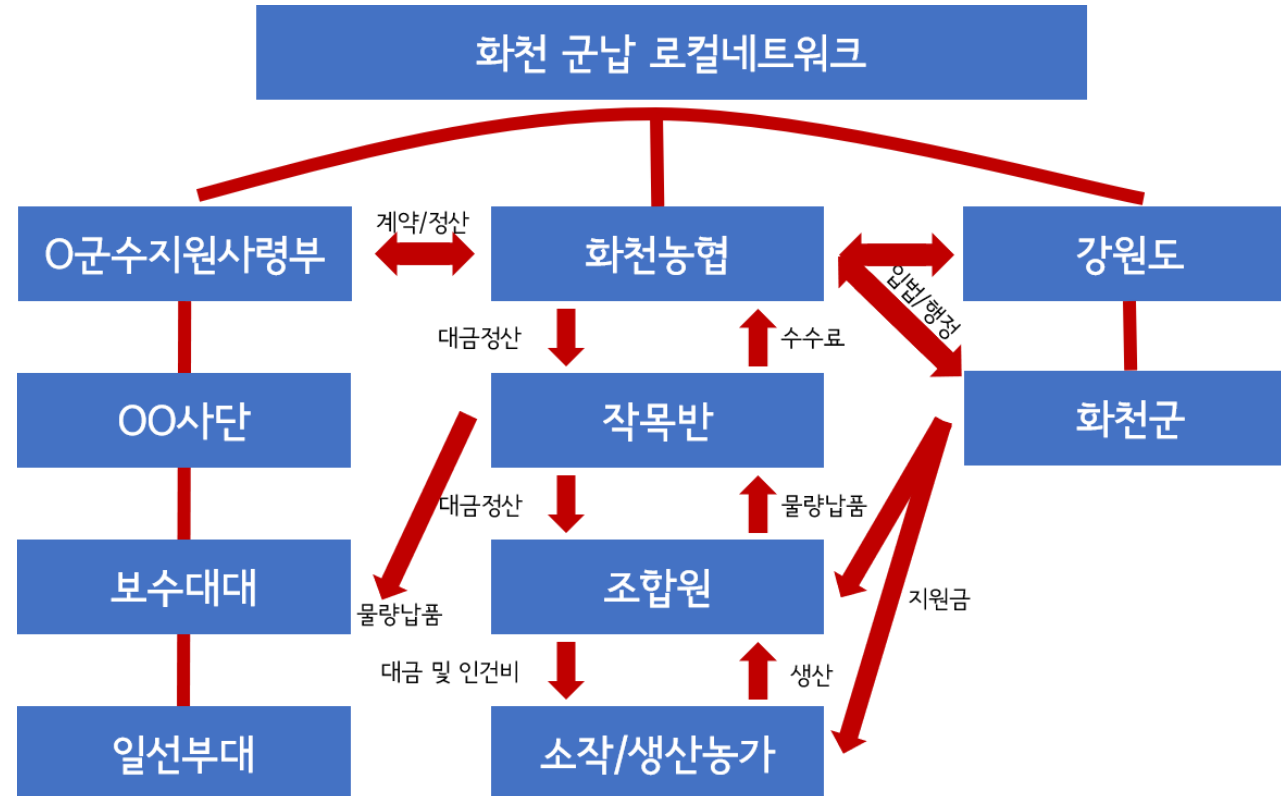
생산년도	품목 수	군납 납품 총량(톤)	군납 계약금액
2015	65	4,778톤	69억 8,200만 원
2017	80	5,881톤	96억 8,900만 원
2021	74	6,070톤	216억 1,500만 원

3. 급식 군납시스템과 국방부의 군 급식체계 개선안



2) 화천군 군납 로컬네트워크

화천지역 군납 로컬네트워크



3. 급식 군납시스템과 국방부의 군 급식체계 개선안

3) 국방부의 군 급식체계 개선안 및 로컬네트워크의 파괴

군 급식체계 개선안(2021.7, 2021.10)

-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국방부는 전 군에 외부로의 출타를 통제하거나, 이미 다녀온 병사들에 대해 정해진 시설에서의 격리생활을 규정하였음 → 이 과정에서 격리중인 병사에게 부실한 급식이 제공된 사실이 수회 폭로되며 부실급식 관련 논란이 촉발됨
- 국방부는 부실급식 관련 TF팀 구성을 통해 7월 4일, 해결책을 발표함. TF팀은 기존 부실급식 사태의 원인을 “공급자 위주의 농축수산물 조달체계에서 장병들의 선호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점으로 지적하며, 학교급식과 같은 경쟁조달체계를 구성하겠다고 발표
- 이어 10월 14일, 국방부는 급식을 포함한 전 분야에서 군 내 수의계약을 대폭 축소 하고, 2025년에는 완전 경쟁 체제 급식으로 전환할 계획을 발표함. 국방부의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에 의하면, 기존 농,축,수협과의 수의계약 규모를 21년 당시 70%에서 24년까지 30%로 감소시킨다는 계획.
- 부실급식이 군 급식 농,축,수산물 조달체계의 경쟁입찰방식으로의 전환을 추동하게 됨





3. 급식 군납시스템과 국방부의 군 급식체계 개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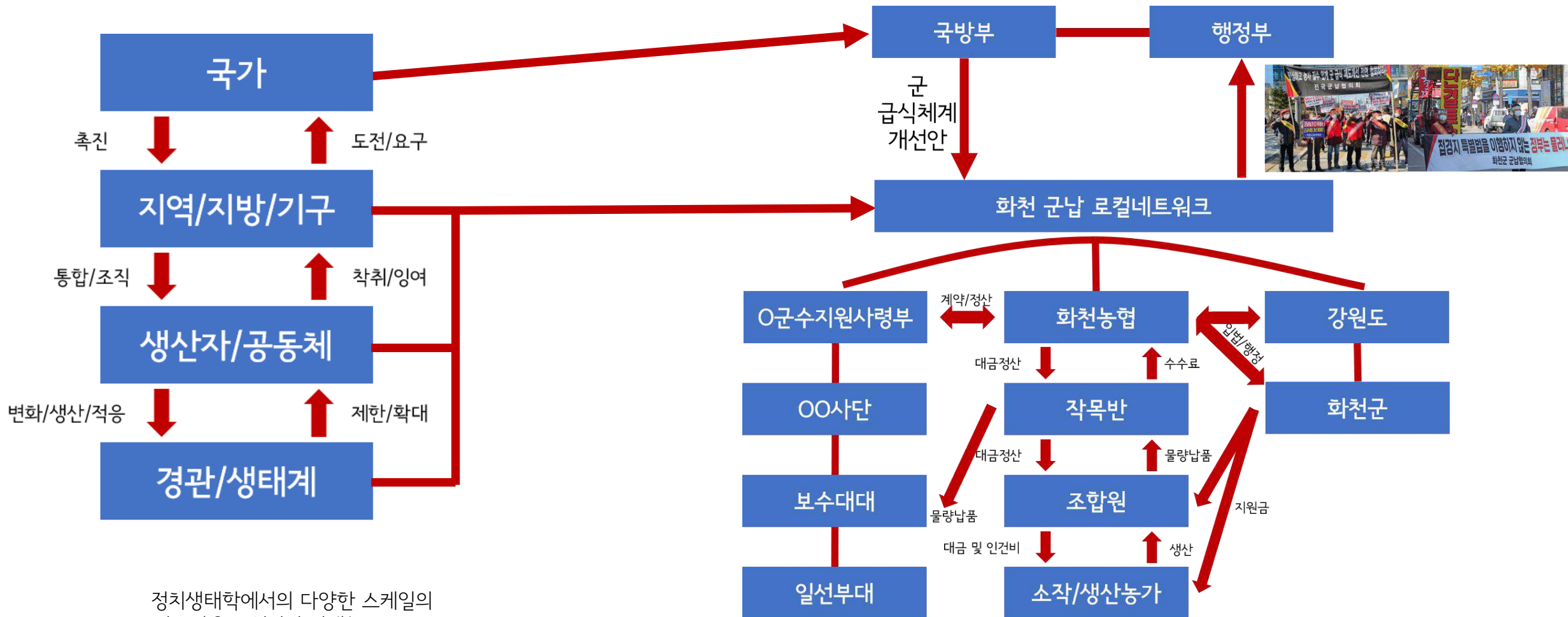
3) 국방부의 군 급식체계 개선안 및 로컬네트워크의 파괴

화천군 군납 로컬네트워크의 파괴

- 화천군 군납 로컬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세 행위자 집단의 대응은 다음과 같음
 1. 화천농협(생산집단): 부실급식의 본질적인 문제는 부실조리, 급양감독의 문제인데 이를 농업인, 농업때문에 부실급식이 발생한 것 처럼 몰아가서 공급방식의 변경이라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 → 이는 수입산 식재료의 도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외국산 식재료 10% 반영 시 농민 피해 약 5,100억 원, 20%시 1조 200억 원, 등 다양한 농민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함
 2. 강원도-화천군(지자체): 국방부의 군 식재료 경쟁조달체계 구상은 강원도-화천군의 지역 농업경제 구상에도 문제를 야기함 → 지난 19년 7월, 강원도는 지역산 농산물을 70% 이상 공급을 위한 국방부-농,수협과의 협정을 체결했고, 로컬푸드 군납 확대 실행계획 수립(19년 9월), 군 급식 로컬푸드 공급확대 추진단 참여(19년 10월), 접경지역 군납조합 컨설팅(19년 12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의 군납 로컬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음 → 따라서 강원도와 화천군은 즉각적인 반대성명과 함께, 지역의 군납협의회와의 연대를 통해 비상대책위를 구성, 문제에 대응하고 있으며 역내 군납 농업 종사 농가를 대상으로 한 임시 보조금 교부를 결정함(2022. 3)
 3. OO사단(지역 군부대): 군납 로컬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한 축이었던 지역 군부대는 상위집단인 국방부의 결정에 반대하지 못하며 로컬네트워크의 붕괴를 야기하였음

4. 화천군의 급식 군납 로컬네트워크

1) 정치생태학 개념을 통한 화천 군납 로컬네트워크의 이해



정치생태학에서의 다양한 스케일의 상호작용 - 설명의 연쇄(Blaikie & Brookfield, 1987)



4. 화천군의 급식 군납 로컬네트워크

2) 시사점의 논의 및 향후 연구 방향

시사점 논의

- 다중스케일적 정치생태학의 접목을 통해, 군 관련 접경지역연구에서 안보, 평화, 개발의 거시적 담론과 함께 지역을 구성하는 네트워크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자율적 행위자로서의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정부, 군부대, 농업조직, 지역, 생산자가 구성하는 지역네트워크로서 군납 로컬네트워크를 바라볼 필요가 있음
- 최근의 군 급식 식재료 경쟁입찰 방식의 도입과 관련한 논쟁을 통해 지역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다층적 행위자의 입장과 역할이 드러남을 제시
- 본 연구의 사례 뿐만 아니라, 접경지역을 연구하는 많은 연구 과정에서 “인과관계로 연계된 변수들과 상태적으로 변화에 민감한 몇 가지 전략적 변수”, 즉 지역의 네트워크를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관계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Blaikie and Brookfield, 1987)

향후 연구 방향

- 국가-자연에 관련한 다양한 논의(Whitehead et al., 2007; 황진태&박배균, 2013; 김준수, 2019)들을 접경지역에 적용함을 통해 접경지역의 로컬네트워크를 파괴하는 국가적 스케일에서의 정책적 결정에 대한 ‘의도’에 대한 추론
- 이론적 배경의 Missing Link들(특히, 정치생태학의 활용)에 대한 추가적 논의가 필요
- 화천군 군납 로컬네트워크에 속해있는 구성원(지자체, 농민, 농협, 군부대)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한 네트워크의 심층적 이해 확장의 필요성
- 정치생태학적 렌즈를 통해 로컬네트워크를 주목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명확한 인식론-방법론적 도구의 탐색이 필요



Question



Thank you

본 발표는 2021년 한국공간환경학회의 대학원생 연구모임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됨.

일반세션 4. 행복 격차, 공동체 그리고 인간 너머

사회: 이민주 (서울대)

- <서울 청년의 행복 격차: MZ세대를 중심으로>
이민주 (서울대) · 박민진 (서울연구원)
 - <좋은 공동체를 향한 희망과 열망, 그리고 행복한 미래: 경남 창원
수정마을의 공동체 회복 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최희진 (서울대)
 - <남북한 경계넘기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간 너머 주체에 관한 연구 -
석모도 북한 쌀 보내기 운동을 사례로>
조용혁 (경희대)
- ▣ 토론: 이영아 (대구대)



서울 청년의 행복 격차:

잠재프로파일분석의 적용

이민주(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 **박민진**(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원)

CONTENTS

- 01 서론
- 02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 03 모형 및 변수 설정
- 04 분석결과 : 서울 청년의 행복
- 05 결론



서론

서울 청년의 행복 격차

연구배경 1

생애주기상 자연스럽게 거쳐야 하는 **이행기가 단절된 청년**
 특히 **MZ세대** 교육과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세대,
 빈곤의 위험이 가장 큰 세대,
 세대간 소득 이동성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세대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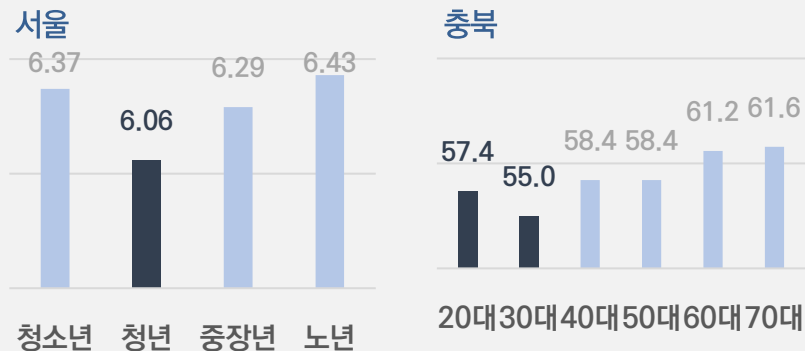
연구배경 2

청년을 주요 정책 대상으로 인식하는 도시정부 (지자체),
 청년세대를 둘러싼 여러 이슈와 사회경제적 환경을 반영하여
 청년을 위한 주요 가치로 **'행복'** 을 둔



연구배경 3

청년 불안감, 불안정성으로
 청년 행복도 다른 연령, 세대에 비해 낮게 나타나



연구배경 4

청년 행복 연구, 인구사회경제적 이질성 (異質性) 을 반영하지 못해

- 01_ 국가, 지역단위, 특정 인구 집단, 세대별 행복도를 비교, 검증 행복격차가 나타나는 요인 분석
- 02_ 최근 연구, 특정 인구집단이나 세대 타켓팅 청년의 행복 연구에서도 청년을 동일한 집단으로 간주하고 청년세대와 다른 세대간 특성을 비교하고 행복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2020년 서울서베이 자료를 활용하여 서울 청년의 이질성과 행복 격차 파악

- 1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 청년과 MZ세대 개념, 행복 측정방법, 영향요인
- 2 잠재프로파일분석 적용 - 행복유형 분류, 집단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파악
- 3 순서화 로짓 모형 적용 - 행복유형에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영향력 파악



- 1 청년의 이질성에 포커싱하여 청년 내부의 행복 격차 비교
- 2 잠재프로파일을 통해 서울 청년의 행복 유형 분류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석
- 3 단일 문항이 아닌 종합적 행복 점수를 종속변수로 활용(세분화된 행복 수준 포괄적 고려)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서울 청년의 행복 격차

청년과 MZ세대 개념

청년(Youth, Young people) 개념

**사회가 바뀌고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청년의 개념과 기준 변화**

- 사전적 의미: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절정에 도달해 무르익은 나잇대를 뜻하는 한자어
- 청년의 개념, 연령 범주는 생애주기별, 국가별, 정책별로 차이 보여
-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지칭

MZ세대 개념

M세대 26-40세, Z세대 25세 이하 (서울서베이 기준)

- 세대: 동일시기에 태어나 전쟁, 세계화, 인터넷의 출현, 다중현실등의 비슷한 경험을 한 집단

구분	미국	글로벌	한국	연령 (2020년 기준)
Z세대(Generation Z)	1996년 이후	2001년 이후 출생	1995년 이후 출생	25세 이하
M세대(Millennials)	1981-1996	1981-2000	1980-1994	26-40세
X세대(Generation X)	1965-1980	1965-1980	1965-1979	41-55세
베이비붐세대(Baby Boomer)	1946-1964	1940-1964	1950-1964	56-70세
침묵세대(Silent Generation)	1928-1945	-	-	-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서울 청년의 행복 격차

행복 측정과 영향요인

행복 개념과 측정방법

행복은 단순히 현재 상태를 넘어 생애사 전반의 주관적 만족상태

- 사전적 의미: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
- 행복은 주관적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특성에서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측정하기 어려움
- 행복측정방법은 단일지표 측정(당신은 지금 얼마나 행복하십니까?)와 같은 하나의 질문)과 복합지표 측정(사회경제적 요인들의 합을 통해서 행복도 측정)으로 구분

행복격차와 행복요인

청년세대 내부의 행복요인을 경제상황(가구와 경제특성), 불안한 주거 환경(주거특성), 지역특성으로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분석

- 행복연구는 초기 경제적 요인(소득)이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데서 출발하여 연령, 교육수준, 건강, 고용상태, 여가상태, 혼인상태, 자녀유무, 사회적 관계, 그 외 가정내 특성 등의 요인에 대한 연구로 확산
- 청년 행복연구는 생애주기적 상황, 학교 또는 직장이라는 공간적 상황을 중심으로 연구되었으며, 청년 행복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다면적인 접근의 필요성 제기

분석모형

잠재프로파일 분석 (Latent Profile Analysis: LPA)

- 잠재집단분석(Latent Class Analysis: LCA)에서 확장된 분석 방법
- 관찰변수들로부터 잠재적인 특성 정보들을 도출하여 잠재집단을 제시함(Henry & Muthén, 2010)
- 혼합모형(mixture model)
- 모집단의 구성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하위집단(잠재집단)을 분류하는 범주형 잠재변수들로 자료를 추론할 때 적용(Muthén, 2004)

$$f(x_i|\theta) = \sum_1^k \pi_k f_k(x_i|\theta_k)$$

- 관찰 연속변수 $x_i (i = 1, \dots, n)$ 에 대해,
- 특정 잠재집단 k 에 속할 확률 π_k 와 특정 잠재집단 k 의 정규밀도함수 $f_k(x_i|\theta_k)$ 에 대한 관찰점수 분포로 나타남
- 각 잠재집단에 속할 확률의 총합은 1 ($\sum \pi_k = 1$), 이는 각 잠재집단들이 상호 배타적임을 의미
- 정규밀도함수 f_k 는 각 잠재집단의 평균 벡터와 공분산 행렬 $\theta_k = (\pi_k, \sum k)$ 의 분포를 가짐(Tein, et al., 13)

분석모형

잠재집단의 수 결정

- 잠재집단의 수를 증가시키면서 모형들을 추정한 후, 모형검증 및 비교를 통해 최종적으로 가장 적합한 모형을 기준으로 집단의 수 결정
- 일반적으로 정보지수, 우도비검정법, 엔트로피 지수 등을 조합해 활용(Tein et al., 2013)
=> 최적의 집단 수를 논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 (cf. 군집분석)
- **정보지수 (information-theoretic methods)**
 - 해당 값이 낮을수록 적합도 양호 (AIC, BIC, SABIC)
- **우도비 검정법 (likelihood ratio statistical test methods)**
 - p값이 유의하면 잠재집단 수가 k개인 모형이 k-1개인 모형보다 적합 (LMR, BLRT 등)
- **엔트로피 지수 (entropy-based criterion)**
 - 보통 0.8 이상일 때 분류의 질이 양호하다고 판단

분석모형

순서화로지트모형 (Ordered logistic model)

- 잠재집단을 종속변수로 하여 각 특성들의 영향력 파악을 위해 순서화 로짓 모형 활용

$$y^* = \sum_{k=1}^K \beta_k x_k + \varepsilon \quad (1)$$

(단, ε 는 $E(\varepsilon) = 0$ 인 대칭분포이며,
CDF(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F(\varepsilon)$)

$$y = J \text{ if } \mu_{j-1} < y^* \leq \mu_j \text{ (}\mu_j \text{는 } \underline{\text{경계값}} \text{)} \quad (2)$$

$$\log \left[\frac{P(y \leq j | x)}{1 - P(y \leq j | x)} \right] = \mu_j - \sum_{k=1}^K \beta_k x_k \quad (3)$$

(단, $j = 1, 2, \dots, J-1$)

변수설정

2020년 서울서베이를 주 자료로 활용, 총 43,737 가구원 중 MZ세대 15,745개의 응답 추출하여 활용

구분	변수		정의
종속변수	행복유형		1: 낮은 행복도 집단(C), 2: 중간 행복도 집단(B), 3: 높은 행복도 집단(A)
독립변수	성별		1: 남성, 2: 여성
	연령		응답자의 연령 (2020년 기준)
	학력		1: 고졸 미만 (중졸 이하), 2: 고졸, 3: (초)대졸, 4: 대학원 이상
	직업		1: 화이트칼라, 2: 블루칼라, 3: 기타(학생, 주부, 무직 등)
	혼인상태		1: 미혼, 2: 배우자 있음(기혼, 동거), 3: 배우자 이별(이혼, 별거, 사별)
	가구 특성	가구구성	1: 1인가구, 2: 다인가구
		소득	월평균 균등화소득(만원) ($\text{가구소득} / \sqrt{\text{가구원 수}}$)
	주거 특성	점유유형	1: 자가, 2: 전세, 3: 월세/사글세, 4: 무상
		주택유형	1: 아파트, 2: 단독주택, 3: 다세대/연립/빌라, 4: 기타(오피스텔, 상가내 거처 등)
		거주기간	현 주택 거주기간(개월)
	서울 거주 특성	거주권역	1: 도심권(용산구, 종로구, 중구) 2: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3: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4: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5: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거주기간		서울 거주기간(개월)	

분석결과: 서울청년의 행복

서울 청년의 행복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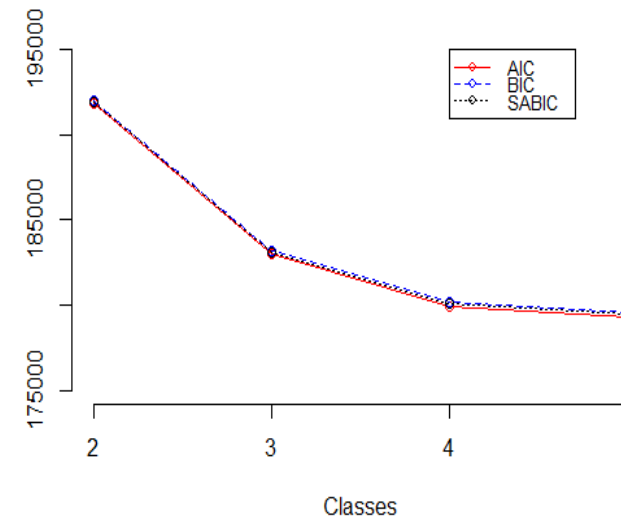
서울 청년의 행복 프로파일: 잠재 집단 도출

- 잠재집단의 수가 증가할수록 AIC, BIC, SABIC 값이 감소, 2개에서 3개로 증가하는 구간에서 정보지수 급격히 감소, 3개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 적절
- 우도비 검정에 기반한 BLRT 값은 4개 분류 모두 0.50미만으로 유의
- 엔트로피 지수가 0.8이상일 때 분류의 질 양호, 잠재집단 수가 3개일 때 엔트로피 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0.90)

잠재집단 수에 따른 적합도 지수

구분		잠재집단수			
		2	3	4	5
정보지수	AIC	191855	183014	179935	179308
	BIC	191977	183183	180149	179569
	SABIC	191927	183113	180060	179461
χ^2 차이 검증 (p값)	BLRT	0.01	0.01	0.01	0.01
분류의 질	Entropy	0.89	0.90	0.79	0.81
분류율 (%)	집단1	0.68	0.34	0.35	0.29
	집단2	0.32	0.60	0.04	0.23
	집단3		0.06	0.25	0.42
	집단4			0.35	0.02
	집단5				0.04

잠재집단 수 증가에 따른 정보지수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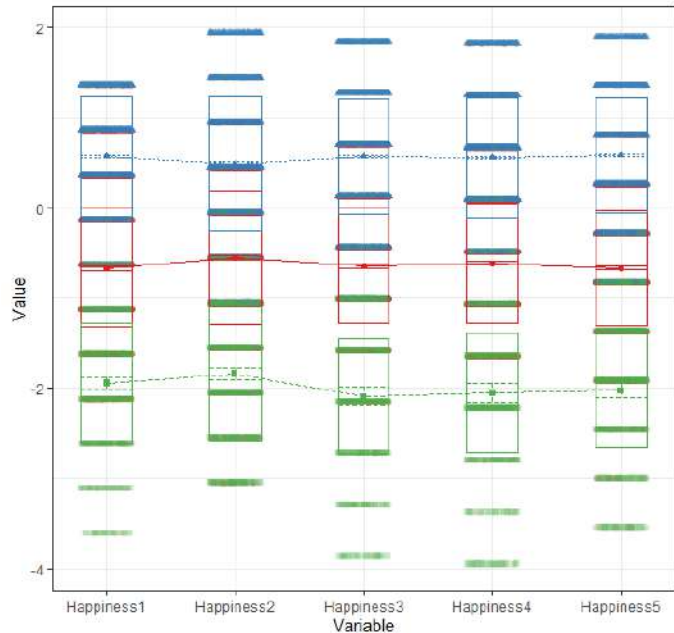
분석결과: 서울청년의 행복

서울 청년의 행복 격차

서울 청년의 행복 프로파일: 잠재 집단 도출

- 동일한 집단의 영역별 행복점수 차이는 크지 않으나, 3개 집단 간 행복점수 차이는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남
- 행복점수가 전반적으로 높은 집단(집단 2 - 높은 행복도 집단), 중간수준 집단(집단 1 - 중간행복도 집단), 낮은 집단(집단 3 - 낮은 행복도 집단)
- 낮은 행복도 집단에서 높은 행복도 집단으로 갈수록 종합, 영역별 평균 행복 점수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 서울 및 현 주택 거주 기간 역시 유사한 경향
- 높은 행복도 집단의 평균 연령 가장 낮고, 낮은 행복도 집단으로 갈수록 평균 연령 증가

잠재집단 영역별 행복점수



구분	잠재집단 (N=15,745)						F	Prob>F	사후검증 scheffe 검정	
	높은 행복도 집단 (A) N=9,521		중간 행복도 집단 (B) N=5,318		낮은 행복도 집단 (C) N=906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영역별 행복 점수	자신의 건강상태	8.40	1.18	5.92	1.50	3.34	1.76	10069.48	0.000	A)B)C
	자신의 재정상태	7.09	1.50	5.00	1.48	2.43	1.63	6202.62	0.000	A)B)C
	주위친지, 친구와의 관계	7.77	1.07	5.62	1.13	3.15	1.67	11084.02	0.000	A)B)C
	가정생활	7.80	1.05	5.76	1.21	3.29	1.71	9919.27	0.000	A)B)C
	사회생활	7.57	1.13	5.28	1.21	2.81	1.54	11125.05	0.000	A)B)C
종합행복점수	7.73	0.72	5.51	0.71	3.01	1.01	27612.88	0.000	A)B)C	
연령(세)	29.6	7.66	33.2	6.04	34.0	5.05	538.27	0.000	A)B)C	
월평균균등화 가구소득(만원)	306.0	98.38	287.2	114.44	246.3	136.93	158.44	0.000	A)B)C	
서울거주기간(월)	267.7	124.51	243.8	146.37	208.5	147.92	115.92	0.000	A)B)C	
현주택거주기간(월)	67.2	58.59	55.0	50.62	51.9	52.96	98.34	0.000	A)C A)B	

분석결과: 서울청년의 행복

서울 청년의 행복 격차

서울 청년의 행복 프로파일: 잠재 집단 도출

- 음영 및 굵은 글씨 - 인구사회학적 특성 범주 중 분류율 (전체 응답수 대비 각 집단에 속한 응답자 수 비율)보다 높으면서, 그 비율이 가장 높아 우세한 특성을 보이는 집단
- 열은 음영: 분류율 보다 높지만 범주 내에서 가장 우세한 집단은 아닌 경우




구분		잠재 집단 (N=15,745)			계	χ^2
		높은 행복도 집단 (A) N=9,521	중간 행복도 집단 (B) N=5,318	낮은 행복도 집단 (C) N=906		
성별	남	4,480(62.2%)	2,360(32.8%)	366(5.1%)	7,206(100%)	21.01***
	여	5,041(59.0%)	2,958(34.6%)	540(6.3%)	8,539(100%)	
MZ 세대	M세대	6,632(54.8%)	4,642(38.3%)	837(6.9%)	12,111(100%)	727.01***
	Z세대	2,889(79.5%)	676(18.6%)	69(1.9%)	3,634(100%)	
직업	화이트칼라	5,008(56.4%)	3,324(37.4%)	547(6.2%)	8,879(100%)	317.00***
	블루칼라	1,033(53.8%)	722(37.6%)	166(8.6%)	1,921(100%)	
	기타	3,480(70.4%)	1,272(25.7%)	193(3.9%)	4,945(100%)	
학력	고졸미만	292(85.9%)	37(10.9%)	11(3.2%)	340(100%)	291.53***
	고졸	1,615(69.5%)	551(23.7%)	157(6.8%)	2,323(100%)	
	(초)대졸	7,117(59.1%)	4,273(35.5%)	646(5.4%)	12,036(100%)	
	대학원이상	497(47.5%)	457(43.7%)	92(8.8%)	1,046(100%)	
혼인 상태	기혼/동거	4,231(55.5%)	2,978(39.1%)	411(5.4%)	7,620(100%)	196.26***
	이혼/별거/사별	46(50.0%)	36(39.1%)	10(10.9%)	92(100%)	
	미혼	5,244(65.3%)	2,304(28.7%)	485(6.0%)	8,033(100%)	
가구 구성	1인가구	747(30.8%)	1,254(51.7%)	424(17.5%)	2,425(100%)	1400***
	다인가구	8,774(65.9%)	4,064(30.5%)	482(3.6%)	13,320(100%)	
주택 유형	아파트	4,545(65.2%)	2,152(30.9%)	273(3.9%)	6,970(100%)	178.65***
	단독주택	2,046(59.7%)	1,163(33.9%)	219(6.4%)	3,428(100%)	
	다세대/연립/빌라	2,913(54.7%)	1,999(37.6%)	411(7.7%)	5,323(100%)	
	기타	17(70.8%)	4(16.7%)	3(12.5%)	24(100%)	
점유 형태	자가	5,066(64.6%)	2,489(31.7%)	291(3.7%)	7,846(100%)	481.60***
	전세	3,623(61.3%)	1,932(32.7%)	353(6.0%)	5,908(100%)	
	월세, 시골세	820(42.2%)	866(44.6%)	258(13.3%)	1,944(100%)	
	무상	12(25.5%)	31(66.0%)	4(8.5%)	47(100%)	
거주 권역	도심권	744(57.9%)	480(37.4%)	61(4.8%)	1,285(100%)	84.68***
	동북권	3,038(63.2%)	1,494(31.1%)	273(5.7%)	4,805(100%)	
	서북권	1,034(55.3%)	738(39.5%)	98(5.2%)	1,870(100%)	
	서남권	2,745(58.0%)	1,686(35.6%)	305(6.4%)	4,736(100%)	
	동남권	1,960(64.3%)	920(30.2%)	169(5.5%)	3,049(100%)	
계		9,521(60.5%)	5,318(33.8%)	906(5.8%)	15,745(100%)	-

***p<0.001

분석결과: 서울청년의 행복

서울 청년의 행복 격차

서울 청년의 행복 프로파일: 잠재 집단 도출

	잠재집단	집단 분류율에 비해 우세한 인구사회학적 특징
	<p>[높은 행복도 집단(A)] (평균 행복점수: 7.7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 연령 29.6세 (Z세대), 남성 - 평균 월소득 306만원(균등화소득), 기타 직업군 - 고졸 이하 - 미혼, 다인가구 - 기타 아파트 거주, 자가 전세, 평균 현 주택 거주기간 약 5년 7개월 - 서울 동남권 및 동북권 거주, 평균 서울 거주기간 약 22년 4개월
	<p>[중간 행복도 집단(B)] (평균 행복점수: 5.5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 연령 33.2세 (M세대), 여성 - 평균 월소득 287만원(균등화소득), 블루칼라 및 화이트칼라 - (초)대졸 및 대학원 이상 - 배우자 없음(이혼/별거/사별) 및 배우자 있음(기혼/동거), 1인가구 - 다세대/연립/빌라 거주, 월세, 평균 현 주택 거주기간 약 4년 7개월 - 서울 서남권·서북권 거주, 평균 서울 거주기간 약 20년 4개월
	<p>[낮은 행복도 집단(C)] (평균 행복점수: 3.0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 연령 34.0세 (M세대), 여성 - 평균 월소득 246만원(균등화소득), 블루칼라 및 화이트칼라 - 대학원 이상 및 고졸 - 배우자 없음(이혼/별거/사별) 및 미혼, 1인가구 - 기타 다세대/연립/빌라 거주, 월세·무상 전세, 평균 현 주택 거주기간 약 4년 4개월 - 서울 서남권 거주, 평균 서울 거주기간 약 17년 5개월

분석결과: 서울청년의 행복

서울 청년의 행복 격차

행복격차 영향 요인

- 연령: 행복감에 대한 연령 효과는 U자 형태
- 교육수준: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청년과 비교해 고졸미만 및 대졸자가 행복수준이 높을 확률이 각각 1.35배, 1.22배. 행복 수준과 학력은 비례하지 않음
- 직업: 화이트칼라와 비교해 블루칼라 및 기타 직업군 청년들의 행복수준이 높을 확률은 각각 0.76배, 0.84배. 직업에 따른 행복 정도 영향력 확인
- 혼인상태: 미혼청년과 비교해 유배우자 청년의 행복 수준이 낮음
- 가구 특성: 다인가구 청년과 비교 시, 1인가구 청년의 행복 수준이 크게 낮을 확률 ↑
- 주거특성: 아파트 거주하는 청년과 비교해 다세대, 연립, 빌라 거주 청년들의 행복도가 높을 확률은 0.89배. 점유 형태 측면에서, 자가 거주 청년에 비해 전세 거주 청년의 행복 수준은 높고, 무상 거주 청년의 행복도 낮음. 거주기간이 증가할수록 행복수준 증가 확률 ↑
- 서울거주특성: 동남권에 거주하는 청년이 다른 지역(도심권, 서북권, 서남권) 청년에 비해 높은 행복도집단에 속할 확률 ↑
서울 거주기간이 증가할수록 높은 행복 수준 유지할 확률 높음 ↑

		변수	Coef	exp(b)
성별		여성	-0.049	0.952
	연령	연령	-0.124***	0.883
		연령제곱	0.001*	1.001
학력		고졸미만	0.297*	1.346
		(초)대졸	0.198***	1.219
		대학원이상	-0.078	0.925
직업		블루칼라	-0.272***	0.762
		기타	-0.177***	0.838
혼인상태		배우자있음(혼,동거)	-0.500***	0.607
		배우자이별(이혼,별거,사별)	0.076	1.079
가구 특성	가구구성	1인가구	-1.549***	0.212
	소득수준	월평균균등화개인소득(만원)	0.002***	1.002
주거 특성	주택유형	단독주택	-0.040	0.961
		다세대, 연립, 빌라	-0.122***	0.886
		기타	0.776	2.172
	점유형태	전세	0.343***	1.410
		월세, 사글세	0.039	1.040
		무상	-0.480*	0.619
	거주기간	현주택거주기간(개월)	0.001**	1.001
서울 거주 특성	거주권역	도심권	-0.141*	0.869
		동북권	0.040	1.041
		서북권	-0.275***	0.760
		서남권	-0.122**	0.885
		서울거주기간(개월)	0.002***	1.002
cut.point2			-5.552642	
cut.point2			-2.863491	
Loglikelihood			-11699.077	
N			15,745	

***p<0.01, **p<0.05, *p<0.1

결론: 주요 결과 및 함의

서울 청년의 행복 격차

- ✓ 2020년 서울서베이 자료를 활용하여 서울 청년의 영역별 행복도에 따라 집단 분류하고 그 특성 탐색
- ✓ 각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분석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해 3개 집단 구분

높은 행복도 집단

- 평균 연령 가장 낮고 Z세대, 미혼, 남성 특성 우세
-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높은 자가비율, 아파트 거주, 높은 소득수준)이 높고 주거환경이 좋은 동남권 거주 비율 높게 나타남

→ 부모의 사회경제적 환경이 자녀의 행복격차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추가 연구 필요

중간 행복도 집단

- 연령대 중간 수준, 여성, 대졸 이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
- 1인가구 매우 우세(전체 1인가구의 50% 이상)
- 타 집단에 비해 서울의 특정지역에 거주하기보다 서울 전역에 고루 분포하는 경향

→ 주거 안정성 보안을 위한 정책 설계 필요

낮은 행복도 집단

- 평균 연령 가장 높고 월평균 소득 가장 낮음
- 여성, 블루칼라 우세
- 1인가구 우세, 낮은 주거 안정성

→ 주거 안정성 + 경제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 설계 필요

집단별 행복격차를 위한 맞춤형 정책 개발 필요

결론: 주요 결과 및 함의

서울 청년의 행복 격차

- ✓ 집단별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기반하여 행복 유형에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순서화 로짓 모형 활용

남성 > 여성

- 성별에 따른 행복 격차는 사회, 경제적 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 높음
- 출산과 양육 등과 같은 생애주기적으로 겪어야 하는 사건이 여성에게 과도한 부담
- 사회경제의 구조적 변화, 불평등 증가, 사회적 신뢰, 가정생활 변화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성별 행복격차에 따른 추가 연구 필요

미혼 > 기혼

- 청년의 생애주기에서 '결혼'은 중요한 사건이나 현재 결혼은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님
- 결혼과 출산에 따른 양육부담을 내려놓고 비혼을 선택하는 비율 높아짐
- 이러한 경향성은 혼인상태에 따른 행복도에 영향을 미침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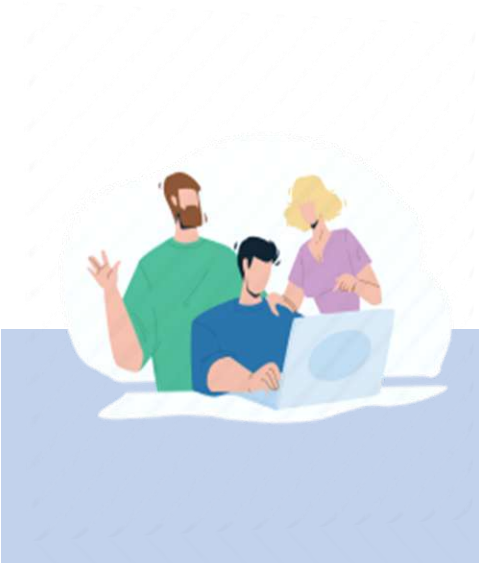
- 행복감에 대한 연령 효과는 U자 형태
- 연령이 증가할수록 행복감이 감소하다가 특정 연령 이후 감소폭이 줄어들음
- 노동력 시장에 진입하는 Z세대를 위한 취업, 교육 등에 대한 추가 지원 필요

주거

- 주택가격이 높은 서울에서 자가 거주를 위한 주거비 부담이 행복도를 감소시킴
- 자산 축적의 기간이 비교적 짧은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이 행복에 영향을 미침을 예상할 수 있음

교육

- 선행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긍정적 영향(행복이 자신감, 자가평가, 지식에서 파생된 즐거움이 행복감을 높이며, 교육이 건강을 증진시키고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켜 행복에 영향 미침)을 미치나 서울 청년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서울 청년은 이미 고학력(즉,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세대)으로 고학력 청년세대에 학력은 중요 변수가 아님



감사합니다



좋은 공동체를 향한 희망과 열망, 그리고 행복한 미래
..... 경남 창원 수정마을 공동체 회복 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최희진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feelingshj@snu.ac.kr



1. 문제제기와 연구질문

공유수면매립지 개발 갈등으로 와해된 공동체

- 농어촌의 공동자원인 바다와 바닷가, 하천 등지에 흙, 모래, 돌, 그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넣은 공유수면매립지가 조성돼 택지 및 산업 부지 용도로 쓰임
- 공유수면 매립지 개발은 환경 문제를 야기하고 지역공동체를 갈등의 소용돌이에 몰아넣고 와해시키는 과정을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있음
- 새만금간척사업으로 인해 지역개발 갈등은 개발연합에 의해 지역공론장이 사유화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아래로부터 전달하고 논의할 수 없거나(박순열, 2007), 바다와 갯벌의 수산자원에 의존해 생계 유지와 재생산활동을 하는 여성들의 저항(박경, 2003; 윤박경, 2004; 함한희, 2004)이 있었음
- 누군가에게 생계의 터전인 땅/바다는 국가와 지역개발을 위한 명목으로 다른 쓸모/목적에 밀리면서 사회적 갈등이 빈번히 일어남
- 제주 탐동 공유수면 매립 반대 운동에 대한 연구(장훈교, 2019)는 투쟁 그 자체를 역사적 기록에 근거를 두고 제주개발체제의 헤게모니 연구를 시도함
- 대규모 국가 개발과 환경 문제, 지역공동체 와해와 갈등을 겪은 여타 사례(밀양 송전탑, 월성 원전, 제주 강정 해군기지)에 대한 현장 연구들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나, '지역적'이고 '지엽적'이라 여겨지는 사례는 거의 주목받지 못함

1. 문제제기와 연구질문



어느 지점에 닿는다면 “좋은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가 될 거라는 믿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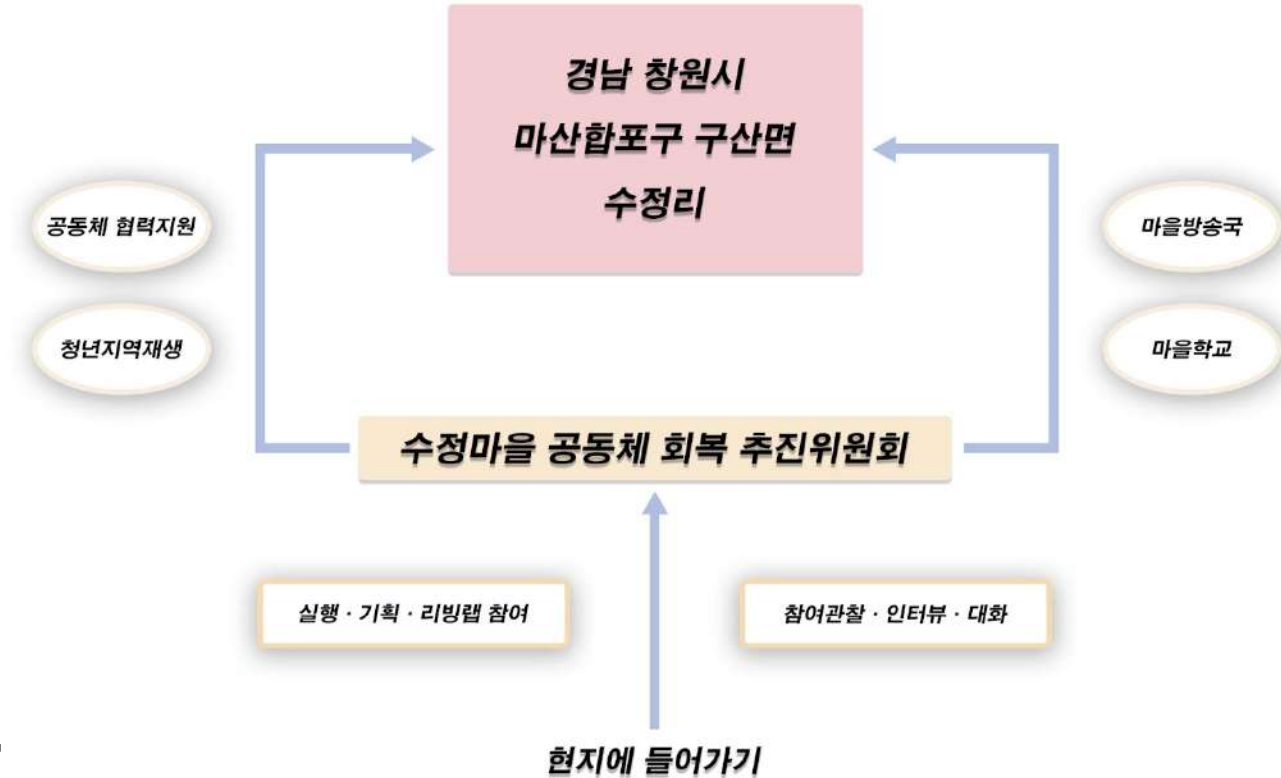
- 마을공동체가 지속되고 유지가능한 이유를 밝히고(김혜빈 외, 2020), 마을만들기의 여러 사례를 통해 협력적 마을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하고(김상민, 2016)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방식의 일환으로 중간지원조직의 발전방향을 모색(박세훈, 2015), 공동자원 관리를 살핌(정영신, 2017) 한편으로, 마을만들기가 사회적 유대와 투자적 합리성까지 결합된 공동체의 자본화 과정(이승철, 2020)으로, 신자유주의 정치기획과 전술(박주형, 2013)이라는 비판에 직면함
- 이 연구는 경남 창원 수정마을 공유수면매립지 개발 갈등 이후 공동체 회복을 위한 활동에서 참여자들의 ‘좋은/나쁜 느낌’에 초점을 두며, 감정(EMOTION)과 정서/정동(AFFECT)에 관한 페미니즘 문화 연구의 분석방법을 차용을 시도함
- 마을공동체를 어떤 대상에 의해 정동적 영향을 받는 정동 공동체(AFFECTIVE COMMUNITY)로 상정해 어떤 대상을 행복의 원인으로 보고 그것에 몰두하는가?
- 참여자들은 어떤 “행복의 길”을 따라가면 그 지점에 닿을 것을 어떻게 상상하나? 특정 행복을 깨뜨리면서 지역공동체의 새로운 공동체 서사 만들기가 가능한가?
- 페미니즘 문화 연구/퀴어 이론에서 행복의 현상학적 접근의 지평을 연 사라 아메드(2021)는 “느낌은 단순히 주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향해 밖으로 움직이는 것”이며, “함께 머무는 공간에서 대상들이 만들어내는 인상들”이라 주장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정동적 전환이 발생하는 점을 지적함

2. 연구방법 및 대상

-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13차례 현장방문, 참여관찰, (공식/비공식) (대면/비대면/전화) 인터뷰, 외부 자원과 연계해 마을 활동 협력, 커뮤니티 아카이브

질적연구에서는 “연구자 자신이 연구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연구자의 정체성이 연구과정에서 현지민들과의 관계 맺음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윤택림, 2013)

“실제로 현장연구자로서 필자는 주민들을 만나기도 했지만, 청년 활동가와 기획자로서 역할을 기대받기도 하면서 마을활동을 만들어내고, 또한 마을활동에 협조하는 동네 친구이자 손주가 되었다. 이는 연구자 자신과 마을이라는 서로의 갈라진 영역과 세계를 ‘거슬렀다’. 이 연구 활동은 문화기술지적 연구 (ETHNOGRAPHIC RESEARCH)에 기대면서도 사회적 참여와 행동을 강조하는 연구를 지향하였기에 기존 현지조사 연구 과정과는 꽤 차이가 있다.”



2. 연구방법 및 대상

[참고] 연구자료*

- **현장답사와 현지노트, 주민들의 의견과 대화(2021.03.-2021.12.)**
 - 이 연구활동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수정마을 활동을 수행하며 작성한 현지노트를 기반으로 둔다. 주민워크숍 및 모임 등에 참여하며 기록한 주민들의 의견과 함께 나누는 대화 내용을 받아서 재구성하였다.
 - 공동체협력지원가(I), 마을주민(J), 음달경로당 노인회장(K) 세 분과 개별 전화인터뷰를 진행하였다.
 - (그 외) 수정마을 소식지 1호에 담긴 마을학교에 대한 소감을 활용한다.
- **‘수정, -하다’ 청년 지역재생프로젝트 기획단 및 참여자의 후기와 평가**
 - 행사 마지막 날에 참여자 6명과 인터뷰 영상 촬영을 진행하였다.
 - 행사 이후, 평가/후기 관련 익명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응답대상 22명 중 20명이 답했다. 질문 내용을 수정마을에 방문한 경험 여부,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과 이유, 삶과 생각에 미친 영향 정도와 이유, 재참여 의사, 느낀점, 어려웠던 점 등으로 구성하였다.

* 이 연구자료의 일부는 2021년 경남청년연구자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됨

<표> 현장 방문 및 활동 내용

연 번	날 짜	현장 방문 및 활동 내용	비 고
1	3.26(금) -3.27(토)	찾아가는 경남 1번가 <수정마을공동체회복추진위원회> 수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워크숍 참여 수정만 답사 / 솔방울커먼즈 활동 소개 공동체회복 주민워크숍, 분임토의, 퍼실리테이터로 참여	첫 방문
2	4.18(일) -4.20(화)	1)공동체회복 주민워크숍 분임토의 퍼실리테이터로 참여 2)경남마을공동체지원센터 및 공익활동지원센터 회의 참여 3)공동체회복 추진위 TF팀 및 주민 모임 참여(마을회관)	
3	5.6(목) -5.9(일)	1)공동체회복 추진위 TF팀 회의 참여(경남대) 2)경남청년내일센터 방문 3)주민과 만남 및 대화(죽전, 음달 방문, 흥합, 마을상황 공유 등)	
4	5.28(금) -5.31(월)	1)청년캠프 기획단 논의 및 수정만 답사 2)공동체회복 추진위 주민 모임 참여(마을회관) 3)거제 장승포 공유를위한창조 만남	
5	6.13(일) -6.15(화)	1)두 곳의 노인회와 함께 만남 2)'수정, -하다' 청년캠프 기획회의 3)공동체회복 추진위 TF팀 회의(음달 경로당)	음달경로당에서 숙박
6	7.24(토) -7.28(수)	1)국가로봇 테스트필드 혁신사업 유치 위한 주민동의서 받으러 부녀회장님과 공동체협력지원가 I씨를 따라 다님 2)국가로봇 테스트필드 혁신사업 유치 건이서 전달식 참여 3)공동체회복 추진위 TF팀 긴급 회의 참여 4)경남마을공동체지원센터/경남지역문제해결플랫폼 회의 참여	
7	9.3(금) -9.5(일)	1)'수정, -하다' 기획회의 2)주민과 대화 및 만남	
8	9.25(금) -9.27(월)	1)주민과 대화 및 만남 2)'수정, -하다' 사전답사 진행(수정마을에서)	
9	10.2(금) -10.4(월)	'수정, -하다' 2박 3일 진행 마을탐방, 마을청소, 마을잔치 등의 프로그램 진행	마을회관 숙박
10	10.15(금) -10.17(일)	1)'새로운 수정마을 만들기' 세미나 참여(경남연구원) 2)마을학교 참여관찰 3)'수정, -하다' 모임 참여	
11	10.22(금) -10.24(일)	1)마을학교 참여관찰 2)경남 지역거점 소통협력공간을 위한 대화마당 기획 및 진행	
12	11.12(금) -11.14(일)	1)마을 주민과 만남 2)거제 장승포 '아웃도어 아일랜드 페스타' 방문 3)스페인 몬드라곤 학생과 로컬로의 마을방문 회의에 참여	
13	11.26(금) -11.28(일)	제1회 수정마을 '빛나리 마을축제' 참여 - 청년부스 및 현장도움	335

2. 연구방법 및 대상

[참고] 연구자료

· 수정마을 공동체 회복 활동에 참여한 청년과의 인터뷰 및 대화

- 마을공동체 활동의 필요성, 수정마을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과 변화된 생각과 일상,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지원, 앞으로 활동 여부 등에 대한 몇 가지 질문 사항으로 구성된 연구 질문지를 미리 제공하였다. 다만, 대화의 흐름과 인터뷰 대상자를 고려해 공통된 질문지(부록 참조)에서 추가된 질문 사항이나 임의로 누락한 질문 사항도 있었다.
- 연구참여자(A)와는 대면과 비대면으로 인터뷰를 몇 차례 수행하였고,
- 다른 연구참여자들(B~G)과는 코로나 위기로 인해 줌미팅을 활용해 비대면 인터뷰를 진행했고, 연구참여자(H)와는 대면 인터뷰를 했다.
- 인터뷰 시간은 한 시간에서 두 시간 내로 진행되었다.

<표> 인터뷰 대상자 및 연구참여자 목록

사례	성별	연령대	특성	수정마을 활동	거주	인터뷰
A	여성	30대	공동체협력지원가	수정하다 기획단 마을학교/축제 실무	수정마을	대면/ 비대면
B	남성	30대	청년활동가	수정하다 기획단 마을축제 도움	창원	비대면
C	남성	30대	교직원	공동체회복 추진위 마을학교/축제 실무진	창원	비대면
D	여성	30대	교직원	마을학교/축제 실무 진	창원	비대면
E	여성	30대	취업준비	수정하다 기획단 마을축제 도움	서울	비대면
F	여성	20대	청년활동가	수정하다 참여자 마을축제 도움	창원	비대면
G	여성	20대	대학생	마을축제 관람	서울	비대면
H	여성	30대	시민사회 활동가	마을축제 관람	서울	대면
I	여성	60대	공동체협력지원가	마을학교/축제 실무	수정마을	전화
J	여성	60대	직장인	마을학교/축제 참여	수정마을	전화
K	여성	80대	노인회장	마을학교/축제 참여	수정마을	전화

* 이 연구자료의 일부는 2021년 경남청년연구자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됨

2. 연구방법 및 대상

- 수정만 공유수면 매립지는 택지 조성을 목적으로 1990년대에 매립하면서 만들어진 부지로, 이후 매립지를 활용하기 위해 2006년 마산시와 조선산업을 주도한 민간기업과의 협약을 맺어 수정만 매립지에 조선소가 들어오게 되었음

마산시와 조선업체는 마을발전기금과 이주 희망자의 보상, 뉴타운 조성, 기업 채용 시 마을자녀 가산점 부여 등을 약속했고, 구산면사무소와 (구)보건소에 대형 현수막을 설치해 이를 알림

그러나 트라피스트 봉쇄수녀원의 수녀들과 일부 주민들은 면사무소, 시청, 도청 등의 행정기관과 조선업체의 서울 본사 등지에서 마산시-조선업체의 비민주적 행태를 날날이 밝혔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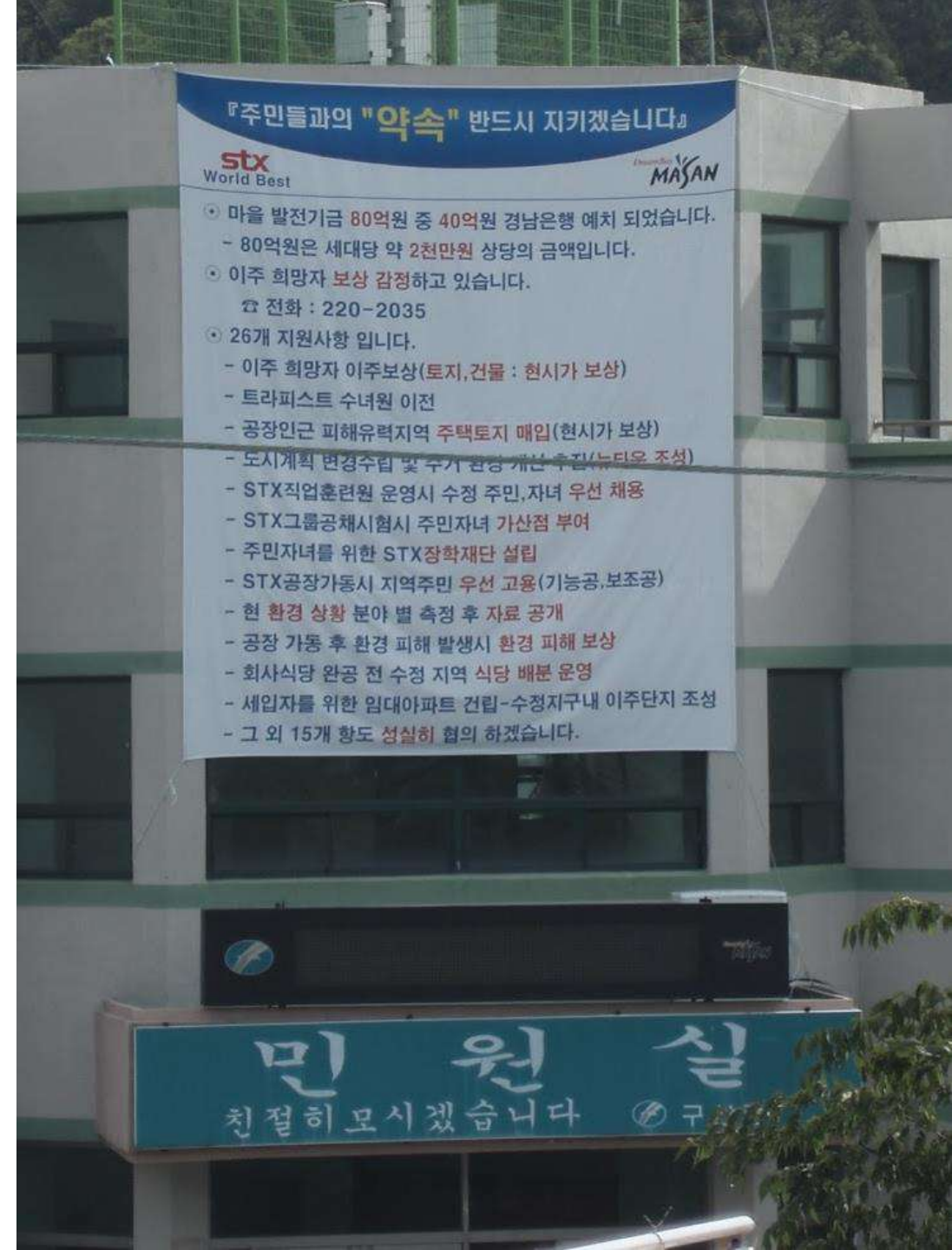
당시 지역발전주의를 이끈 행정과 기업, 주민집단과 그리고 또 다른 주민집단 간의 복합적인 갈등은 조선업체가 사업을 포기하면 끝날 줄 알았으나, 여전히 마을에 불화/불합치(DISAGREEMENT)가 내재함

“조선경기가 활황인데 부지가 없어서... 기업체의 에로사항도 들어줄 수 있는 부분도 있잖습니까. 이거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당장 내일모레 죽는 것도 아니고”

마산시 비전사업본부 관계자

출처: 에코뷰(2009.08), “수정마을 주민들의 소원”,

<http://ecoview.or.kr/국토생명/수정마을-주민들의-소원>



2. 연구방법 및 대상

- 구산음달경로당, 수정여성경로당, 남성노인회

‘수정마을회관’이라 적혀있는 돌 비석 뒤의 기와집이 ‘구산음달경로당’(2015년 7월 7일 개설)

그 옆에 2층으로 지어진 빨간 벽돌 건물 1층 ‘수정여성경로당’

구산음달경로당과 수정여성경로당 모두 대한노인회 창원시 마산지회 소속의 여성노인회

마을 이장은 수정여성경로당 안에 있는 작은 방에서 안내 사항을 발송하고, 마을사무 처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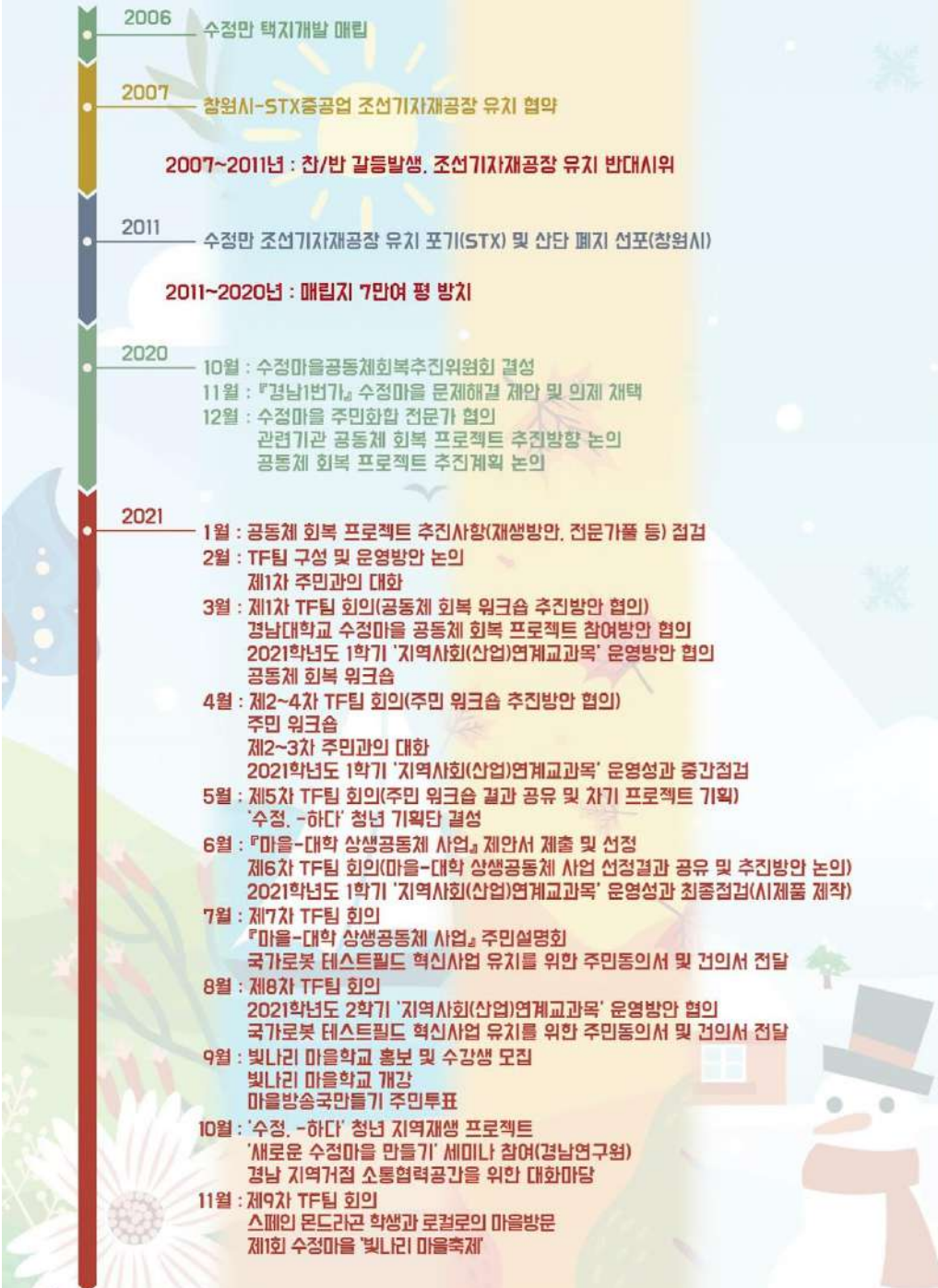
최근 주민회의, 워크숍, 마을학교 등 각종 행사를 2층 강당에서 진행

2020년 기준 832명 거주 집계, 2010년 1,231명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2013년부터 만 17세부터 34세 연령의 청년인구 비율은 20% 이하로 감소, 2019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30% 이상)

구남중학교 구산분교는 2019년에 폐교되면서, 옆동네 ‘현동’ 신도시로 조성돼 구산중학교 이전

구산초등학교 21명 재학(2021년 기준), 창원시립 구산어린이집(36명/정원 5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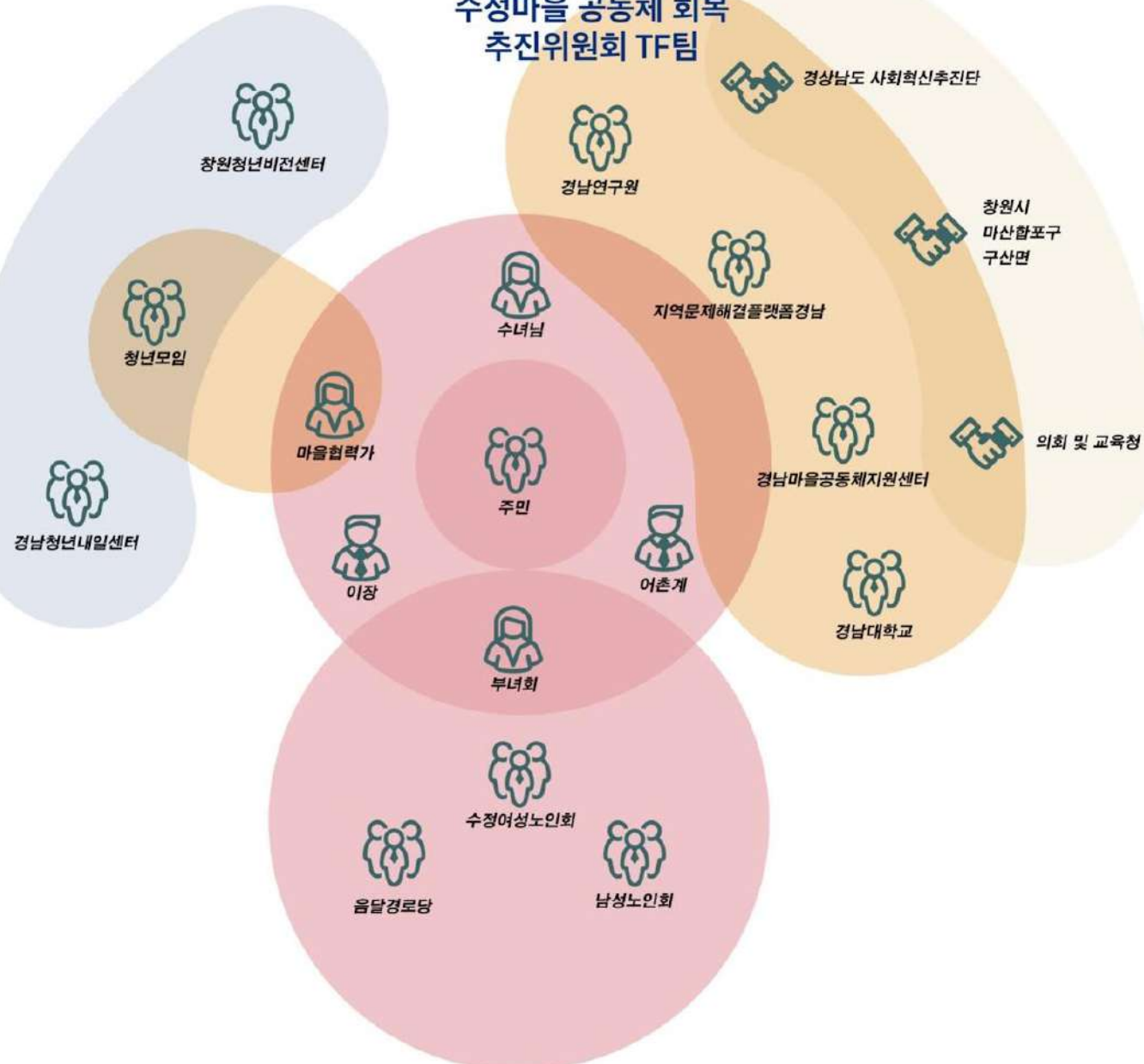




3. 수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

- 균등한 지역발전과 지방소멸의 문제가 가속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지원, 지역문제 해결플랫폼 등의 민·관 협업 방식을 통해 각종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
- 경상남도 사회혁신추진단은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경남1번가'라는 정책제안을 통해 제도적 지원을 하는데, 지난해 11월 경남1번가 도민참여 플랫폼을 통해 창원 수정마을 문제해결을 위한 의제가 채택됨
- 전통적인 농어촌 공동체가 와해된 상황에 도민참여 플랫폼의 온라인 투표에 높은 득표수를 얻은 것은 마을공동체 회복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으로 볼 수 있음
- 수정마을에는 잠재적인 갈등 요소와 불화가 여전히 남아있으나, 민·관·학이 함께하는 '수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결성돼 공동체 화해를 위한 과정 진행

수정마을 공동체 회복 추진위원회 TF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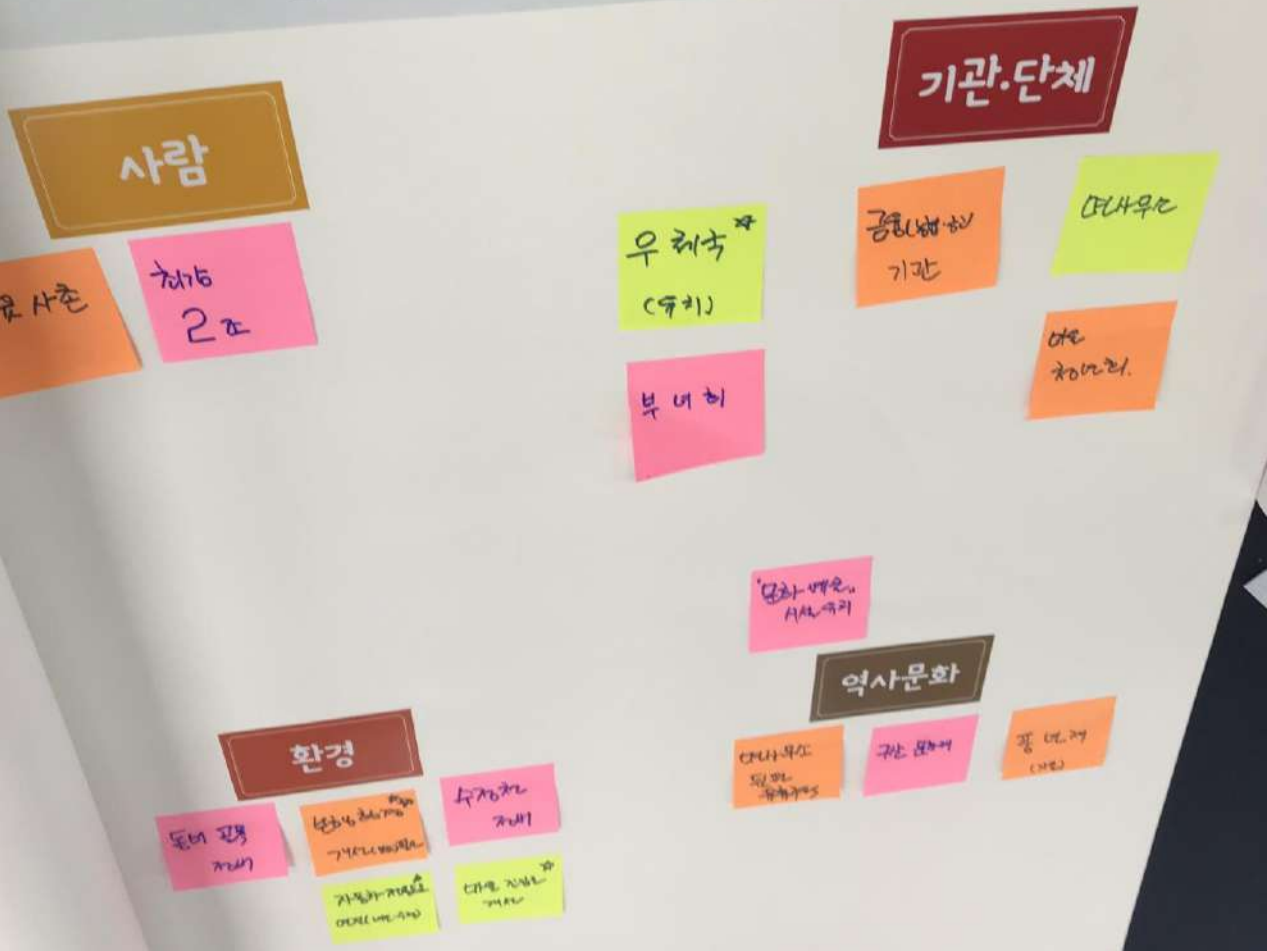


3. 수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

.....

- 수정마을 공동체 회복 추진위원회와 TF팀
- 이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새마을지도자 등을 포함한 주민 대표자들과 트라피스트 수녀원, 경상남도 사회혁신추진단, 경남도의회·창원시의회, 경남연구원, 경남마을공동체지원센터, 지역문제해결플랫폼 경남, 경남대학교 LINC+사업단, 천주교마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 슈퍼히어로 등의 행정, 의회, 대학, 연구기관, 중간지원조직, 종교계, 슈퍼히어로(콘텐츠 홍보기획사) 등이 모여 2020년 10월에 결성됨
- 트라피스트 수녀원은 봉쇄수녀원임에도 불구하고, TF팀과 연계하고 주민들, 외부 기관들과 적극 소통
- TF팀은 추진위원장의 주최 하에 주민워크숍, (구)보건소 리모델링, 마을방송국, 마을학교와 마을축제 등에 관해 협의하는 등 수정마을 공동체 회복 추진위원회의 의사결정기구로서 기능

“수정, 우리가 다시 빛내리” 수정마을 주민 워크숍 마을 자원 “보물찾기”



3-1. 공동체회복추진위-마을주민: 마을의제, 자원, 희망

경남대 링크사업단 주도 주민워크숍 진행(주민교육 측면)
(세 차례 공적영역에서의 토의, 같은 안건)

대부분 60-70대 이상 여성 참석

- “도로확장(인도와 차도 분리)”, “하천 정비”, “둘레길 조성”, 문화/여가프로그램, 지자체 지원 요청 등
- 주민워크숍에 참여한 마을자원, 의제 찾기 이후 마을내 폐교 활용 방안을 모색했으나, 면단위 자치개발위원회와 의견 충돌로 인해 실행하지 못함
- 마을주민 기대=> 폐교(2019년) 임대, 마을수익사업, 카페/캠핑장 운영
- 면단위 자치개발위원회 계획=> 면단위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재건축
- (주민워크숍 참여하지 안(못)한 사람들)
- 창원시 예산 없음

수정마을 주민 워크숍

수 정
우 리
다 가
빛 내
리

RE;SUJEONG

3-1. 공동체회복추진위-마을주민: 마을 발전을 위해

.....
몇 차례 공동체 회복 활동을 위한 주민워크숍이 이뤄지고 난 후 추진위원회의 주민모임이 열림

“제 생각에는 공동체활동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여기서 이쯤에서 그만했으면 합니다. 동네가 전보다 화목해져서 웃음이 나오는 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굶아서 터질 것도 없고, 우리 수정마을 발전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고 싶으면, 길이 뚫리면 수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길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우리가 공동체 이룬다고해서 우리 공동체 7만평 해결을 못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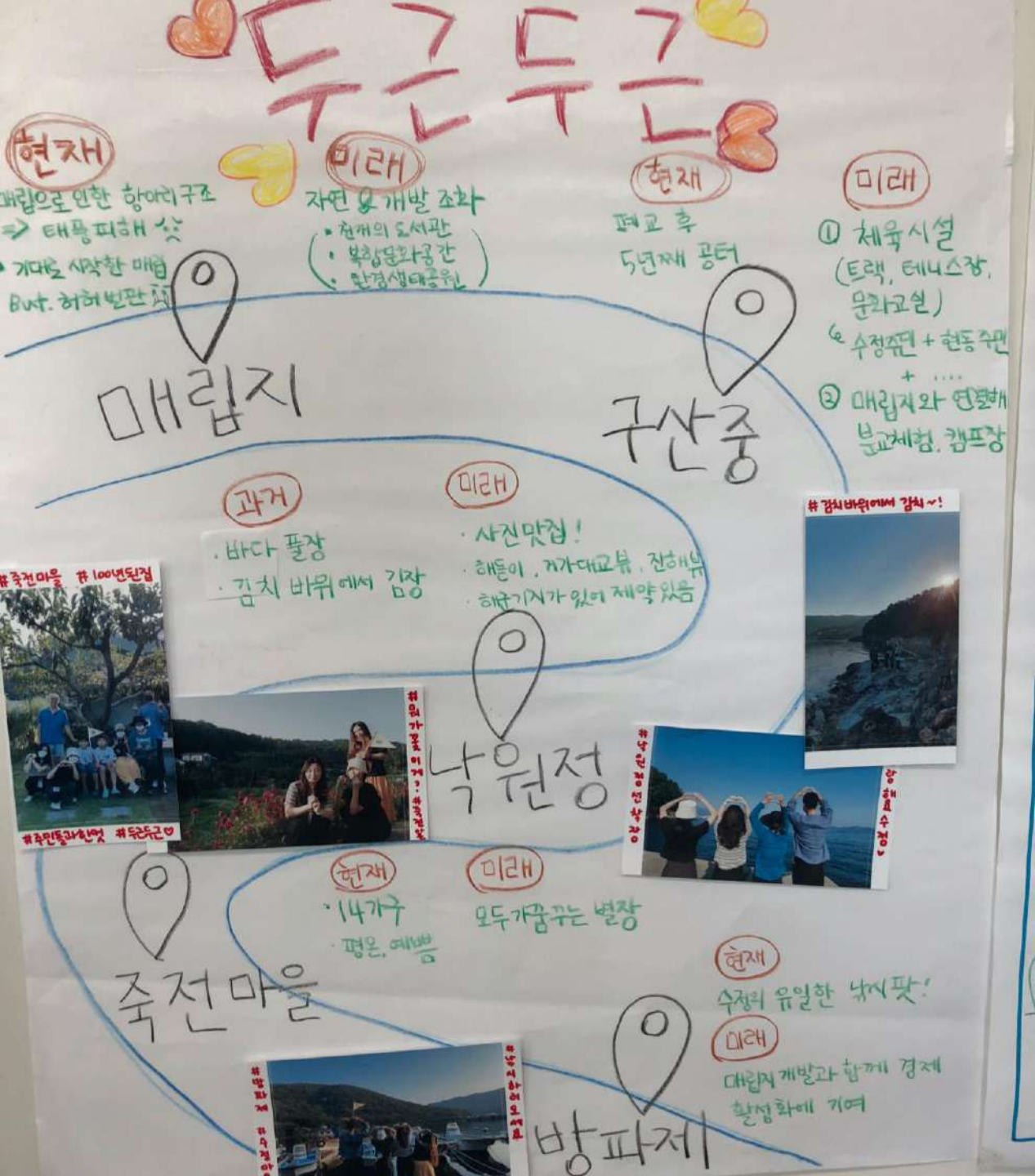
마을공동체의 문제를 도로 정비와 매립지 해결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앞으로 공동체 회복 활동으로 이뤄지는 주민워크숍 등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말함



3-2. 창원시: 매립지 = 산업부지

.....
국가로봇테스트필드 혁신사업 유치 건의(7-8월)
주민동의서-> 창원시 제출

“아무리 경제발전도 좋고 아무리 지역사회에 도움되는 게 좋지
만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주민 여러분들께서 살아가는데 생활상
으로 안전하고 즐겁고 말그대로 행복한 어떤 지역사회가 지속
될 수 없다 그러면은, 상당히 받아들이기가 뭐하지않나, 그런 생
각을 STX 건으로 해서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오늘 이렇게 국가
로봇테스트필드 사업과 관련해서 유치건의서를 주셨는데, (중
략) 우리 도와 창원시는 여기를 제공해주는 조건으로 신청을 하
게 되는 것입니다.”
창원시 스마트혁신사업국 신성장산업과



3-3. 지역청년-마을주민 마주함

“이제 욕심에 우리 동네에 사는 젊은 층이 좀 많이 합류를 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사실은 너무 많이 남더라고요.” J씨는 주민 중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동참했으면 화합하는 문제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이걸 이어나갈 때에도 훨씬 효과적이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새겨보아야 할 점은 마을축제 특히 합창에 참여한 사람들 대부분 7080대였다. J씨만 유일하게 젊은 60대였다. 마을에서 젊은 층에 속하는 J씨답게 이렇게 일회성의 행사가 아닌 꾸준한 활동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젊은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젊은 사람은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의미가 아닌 마을에서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동료이자 동력이다. 합창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하나 같이 말씀하셨다. “공동체협력지원가 A씨가 없었으면 끝까지 못했을 거라고.” J씨와 A씨는 모녀 정도의 나이 차이가 있지만 수정마을에서는 모두 ‘젊은 사람’이다. 청년마을캠프를 하고 사진현상 부스를 준비해서 주민분들을 돕고 즐겁게 어울린다고 해도 냉정하게도 이 청년들은 언젠가 자신의 목적에 맞게 떠날 사람들이다. 시민활동가 H씨는 그렇게 온 청년들은 단지 동원된 사람들 내지 도와주러오는 것만 같아 보여서 아쉬웠다고 한다.

수정, 광(光) 속(續) 배달 1호

●발행일: 2021.11.27 ●배달부: 이슬&최희진



제1회 수정마을, 빛나라 마을 축제

대한민국 통합1번지 수정마을 축제

일시: 2021년 11월 27일(토), 오후 12시~3시 장소: 구산초등학교 강당

경상남도 1등수정마을공동체회복추진위원회 LINC+경남대학교 LINC+사업단

시간	세부내용
11:00~16:00	소식지, 공예·그림 작품 전시 청년 및 대학생 체험부스 운영
11:30~12:00	마을 아카이빙 영상 상영
12:00~12:55	내빈소개 개막사 / 환영사 / 축사 소프라노 / 검무 / 난타공연 기념촬영
12:55~13:00	휴식 및 장내정리
13:00~13:10	'마을울림 품물' 공연
13:10~13:20	'실장구' 공연
13:20~13:30	'수정마을 열정댄스' 공연
13:30~14:30	노래대회 / 초청가수 공연
14:30~15:00	'수정 하모니'공연 폐회선언 및 사진촬영

3-3. 마을소식, 마을학교/축제

수정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일손을 보탠 공동체협력지원가 A씨와의 대화

“A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못했다. 확실히 젊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에 있어서 물론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했을 거예요. 여기에 저밖에 없으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젊은 사람이 이래서 필요하다, 있으니 좋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좀 보람이 있었어요.”

마을주민 J씨와 K씨와의 전화 통화에서도 “많이 도와주지 우리 그런 분들이 모두 도와줘서 이래 하고 있어요. 모두 여러분들이 다 좀 이러면 도와주는 게 낫지. 욕 보는 사람 욕 보고 그런 실정”이라며 마을학교 준비에 도운 분들에게 감사함을 표하였다.



우리 마을 수정은 빛나는 고을
오손 도손 함께 돕던 정 많은 마을
수정 바다 월간산 꽃 피는 동네
모두 함께 웃던 때가 그리웁습니다.
-수정의 봄 1절-



3-4. 공동체의 미래, 순간의 우연, 행복? 고통

.....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관찰하고 기록하면서, 각기 다른 이해관계의 주민/행위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동안 마을에 쌓인 불화와 고통(겪기), 욕망을 엿볼 수 있었다. ‘마을공동체의 불합치/불화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수정마을은 다른 공동체들의 자연스러운 소멸/와해와 달리, 매립지 개발갈등으로 인해 조금 더 빨리 그리고 힘겹게 그 과정을 겪은 것이다.

수정마을 안팎의 행위자들과 실험해보고 그리고 매립지를 새롭게 상상해 볼 수 없을까? 산업단지, 공장, 기업, 도서관 등을 본 주민들은 다른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없다. 지금의 매립지를 계획할 수 있는 사람은 한정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매립지를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는?

매립지만 개발되면 마을공동체가 행복해질까? 매립지가 어떻게 개발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황/조건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에 노출돼 있다. 행복이 우리 삶만큼 우연에 달려 있으며, 마을공동체의 “행복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판타지”이다.

사라 아메드가 지적인 바와 같이, 행복을 능동적 활동으로, 불행을 수동적 활동으로 보는 구분에 도전을 경험적 연구에 시도할 수 있을까?

우연발생의 정치학; 다른 방식으로 존재할 가능성, 어쩌면(PERHAPS)의 가능성을 여는 것이 퀴어문화연구 내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걸까? 집합적 정치행위자로서 부적절한 방식으로 행복할 자유를 포함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연구는 불가능할까?

참고문헌

사라 아메드(2021). 행복의 약속, 성정혜, 이경란 (옮김), 후마니타스.

사토 토모히사, 카이 켄지, 기타노 히사시(2021), 커뮤니티 아카이브 만들기: 센다이미디어테크 '3월 11일을 잊지 않기 위하여 센터' 분투기, 윤주 옮김, 빨간집.

박경(2003). 새만금지역의 여성 삶과 갯벌의 관계에 대한 생태여성주의적 접근 : 부안 '그레'마을 여성들의 '갯살림'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 여성학과 석사학위 논문

윤박경(2004), 새만금, 그곳엔 여성들이 있다, 푸른사상.

윤택림(2013). 문화와 역사연구를 위한 질적연구 방법론, 아르케.

이승철(2020). 마을 기업가처럼 보기: 도시개발의 공동체적 전환과 공동체의 자본화. 한국문화인류학, 53(1), 99-148.

박세훈(2015).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운영특성 연구. 도시행정학보, 28(3), 75-104

박순열(2007). 새만금개발의 사회적 갈등구조와 지역발전담론에 관한 연구,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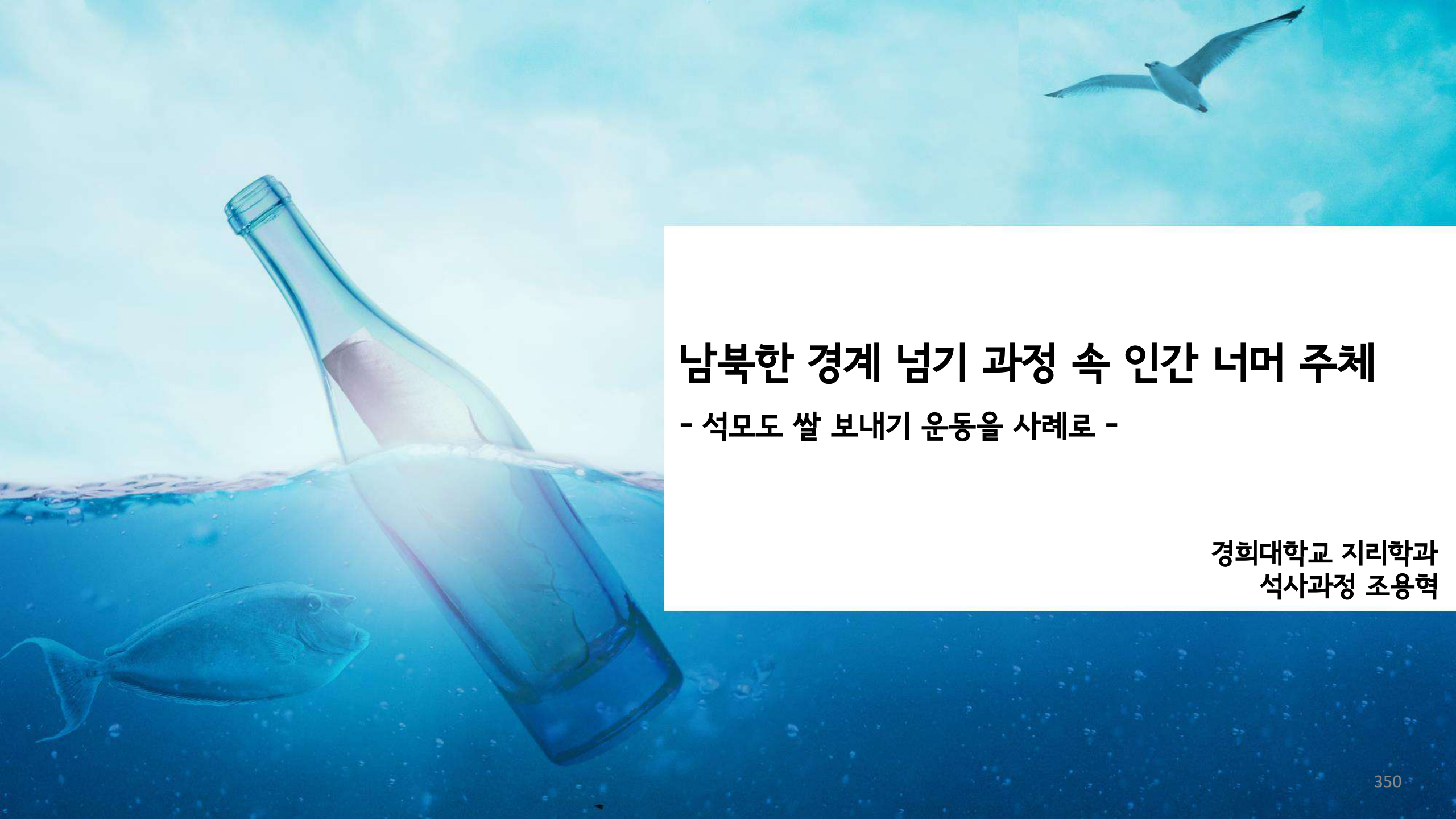
박주형. (2013). 도구화되는 "공동체"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비판적 고찰. 공간과 사회, 43(0), 5-43.

장훈교(2019). 제주 탐동 공유수면 매립 반대 운동 : 유산의 재구성과 또 다른 상속의 방법, 탐라문화 제60호, 265-303.

조영우, 김영수, 김민(2017). 커뮤니티의 주체성과 커뮤니티의 구성요소 분석을 통한 연구; 제주도 선흘리 마을과 선흘곶-동백동산 관계를 사례로, 로컬리티인문학 17, 119-163.

함한희(2004). 생태계의 위기와 여성어민들-새만금지역의 사례. 환경사회학연구ECO, 150-170.

감사합니다



남북한 경계 넘기 과정 속 인간 너머 주체

- 석모도 쌀 보내기 운동을 사례로 -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석사과정 조용혁



목 차

- 01 서론
- 02 선행 연구
- 03 남북관계와 인간 너머 행위자들
- 04 쌀 보내기 운동의 행위자-네트워크
- 05 결론





0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2020년 6월 인천광역시 강화군 석모도에서 쌀을 바다에 띄워 보내려는 외지인과 이를 저지하려는 지역주민 간의 마찰이 발생
- 탈북민 단체는 페트병이 북한에 도달한다고 주장하지만, 언론엔 해안가에 산적한 페트병이 보도되고, 지역주민들도 쓰레기로 인한 불편함과 혹시 모를 북한의 도발을 우려하는 여론이 컸음
- 이러한 지역주민과의 마찰, 그에 따른 정부의 개입과 미디어 보도 등을 계기로 해당 행사를 접하고 연구 시작



출처: 쌀 보내기 운동 주최 측 홈페이지



출처: 연합뉴스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강화군 석모도에서 진행된 '쌀 보내기 운동' → 인간 너머 주체(More-than-human)인 '쌀'의 경계 넘기 행위로 바라봄
- 쌀이 남북한 경계를 넘기까지의 과정을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을 통해 살펴봄
- 연구 질문
 - ✓ Q1. 경계 넘기의 주체로 '쌀'이 선택된 이유는?
 - 쌀의 '번역(Translation)' 방식을 통한 쌀의 의미 분석
 - ✓ Q2. 석모도 해안가에서 바다와 쌀, 인간 너머 주체들은 어떻게 결합되었는가?
 - 인간 너머 주체의 행위성(Agency)과 네트워크 구성 과정 분석
 - ✓ Q3. "쌀이 북한에 도달할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를 이루는 지식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 지식 구성 과정의 ANT적 분석

1-2. 연구 대상과 지역, 연구 방법론



- 연구 대상: 탈북민 단체에 의한 쌀 보내기 운동
- 연구 지역: 행사가 진행된 강화군 석모도 북서쪽 끝에 위치한 해안가
- 연구 방법론:
 - 1) 답사: 2020년 7월 23일-24일(1박 2일)
 - 2) 데이터 수집: 쌀 보내기 운동 주최 측 홈페이지 내 게시물 취합(102건)
 - 3) 인터뷰:
 - ✓ 탈북민단체의 대표 A씨(2021년 9월 15일 / 2021년 12월 17일)
 - ✓ 석모도 주민(2020년 7월 23일)
 - ✓ 해양모델링 전문가(2022년 2월 28일)





02

선행연구

2-1. 물질적 전환(Material Turn/New Materialism)

- 문화적 전환(Cultural Turn) 이후의 포스트 구조주의 지리학은 담론과 의미, 텍스트를 통해 세계를 이해
→ 지리학은 근본적으로 공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 대상, 물질에 관심을 가져왔었는데, 담론 지리학은 물질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에 직면(Thrift, N. 2000; Whatmore, S. 2006; Dittmer, J. 2014)
- 사회과학 전반에 걸친 '물질'에 대한 재강조는 물질적 전환 혹은 신유물론이라는 새로운 사조를 형성
- 신유물론의 특징
 - 1) 자연-사회 이분법에 기초한 근대적 사유에 도전
 - ✓ 자연으로부터 고립된 사회, 사회로부터 고립된 자연은 없음 / 자연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 간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혼종(hybrid)
 - ✓ 자연-인간의 관계를 위계적으로 바라보지 않음(Flat Ontology)
 - 2) 자연을 '수동적' 존재로 바라보는 것을 거부
 - ✓ 인간 이외의 모든 물질들의 행위성을 인정함 → 인간 이외의 모든 사물, 자연, 지식, 제도, 법령 등을 인간 너머 주체(More-than-human)로 인식
 - 3) 구조보다는 관계를 통한 행위주체성을 강조
 - ✓ 세계는 인간과 인간 너머 주체들 간의 관계 맺음으로 구성되고, 연결 속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춤(Post Humanism)



2-2. 행위자-네트워크 이론 (Actor-Network Theory)

1) 번역(Translation)

- 행위자, 실재(entity), 장소 간 관계를 만들어내는 협상, 재현 및 치환(displacement) 의 과정 (Murdoch, 1998)
- 한 행위자의 이해나 의도를 다른 행위자의 언어로 치환하기 위한 프레임을 만드는 행위 (홍성욱, 2010)
- 번역이란 행위자가 자신의 의도와 목표에 기반해 다른 행위자들을 포섭하는 과정이자 끊임없는 네트워크 건설 과정이며, 네트워크의 권력 획득 과정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에 그 자체로 정치적 성격의 행위
- 번역의 과정을 거치며 다양한 행위자들은 자신이 연결되어 있었던 기존 네트워크와의 연결은 끊어지고, 새로운 네트워크에 편입, 동원됨

2-2.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

2) 행위자와 행위소, 그리고 행위성(Actor, Actant and Agency/Subjectivity)

- ‘행위자’는 세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모든 실체로, 선형적으로 실존하는 것이 아닌, 행위자의 수행을 통해 정의 (김환석, 2005)
- Pearson(2015): 행위성을 인간 수준의 ‘의도성’ 및 ‘이성’과는 분리하여 사고할 것을 주장
- 인간 너머 주체들의 행위성을 인간의 행위를 돕거나, 제약을 가하거나, 인간의 의도를 형성하는 관계 등 폭넓게 이해할 것을 주문
 - 인간 너머 주체들의 행위성을 ‘허락(allowing)’과 ‘저지(blocking)’로 구분함
- Alldred and Fox(2017): 행위성을 정동(affect)을 일으키거나 수용하는 능력으로 대체하여 생각한다면, 모든 물질은 정동을 행사할 ‘행위자적’ 능력을 지님
 - 행위성과 수행의 주체를 인간 너머 주체들에게까지 확장할 것을 주문
- Lorimer(2007): 비인간 카리스마(Nonhuman Charisma)
 - 인간과 비인간의 대면 과정 속 비인간이 유발하는 정동, 감정적 반응, 느낌
- 인간 너머 주체의 행위성에 대한 국내 연구가 이어짐
[적조, 김지혜(2018) / 녹조, 김지혜(2019) / ASF, 김준수(2019) / 평화의 댐, 김종욱(2011)]

2-2.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

3) 네트워크(Network)

- ANT에서 네트워크는 '행위자를 연결하는 관계'로, 그 상태는 미결정적이고 끊임없는 '과정'으로 이해됨
- 행위자는 그 자체로 이질적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음; 행위자는 언제나 행위자인 동시에 네트워크임 (Law, 2010)
 - Urry(2006): Car-driver / Haraway(1991): Cyborg(유기체-기계 결합체) / Whatmore(2002): Post-human(Hybrid Geo-)
- 결절(punctualization): ANT에서 이종적 네트워크가 하나의 행위자나 대상으로 축약되는 것
- 블랙박스(black-box): 하나의 대상으로 만들어진 네트워크가 안정성을 가지고 작동할 때 (홍성욱, 2010, 최병두, 2015)
- 블랙박스 내 축약된 네트워크에 무관심해질 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블랙박스를 사용할 수 있으며, 블랙박스가 원래의 네트워크로 펼쳐지는(Unfolding) 속성을 '가역성(reversibility)'이라고 함



03

남북관계 속
인간 너머 주체들

3-1. 남북관계 속 인간 너머 주체들



1) 과거 남북한 경계를 넘었던 인간 너머 주체들

- 1998년 정주영 '소 떼 방북': 평화와 화해의 수단으로 번역된 소 → 2000년 최초 남북정상회담, 개성공단 설립
- 대북 방송용 확성기: 공기를 매개로 '소리'의 경계 넘기는 '도발'행위로 번역 → 2015년 8월 서부전선 포격 사건
- 대북 전단: 바람을 매개로 '전단'의 경계 넘기 역시 '도발'행위로 번역 →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 특히 대북 전단은 한국전쟁 이후 심리전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살포되며 남북한 경계를 넘었음
- 2004년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통해 살포 중지 → 민간단체에 의한 살포는 지속(2010년~2020년 1924만 장 살포)
- 이러한 예시는 인간 너머 주체들의 경계 넘기 행위가 남북 관계를 추동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거나 새로운 협정, 합의 등을 생산

해내는 주체임을 보여줌



좌: 소 떼 방북
(출처: 연합뉴스)

우: 대북 확성기
(출처: KBS뉴스)



3-2. 쌀의 경계 넘기 역사



1) 체제 경쟁 수단으로의 번역(1960년대~)

- ✓ 남북은 쌀을 체제 경쟁의 수단으로 삼음
- ✓ 쌀을 둘러싼 남북의 신경전 속에서 쌀은 단순한 식량이 아닌, 냉전적 치열한 체제 경쟁의 수단이자 동시에 국력의 지표, 우월성의 척도로 번역되었음
- ✓ 벼 품종 이름 짓기를 '통일'로 짓는 등 국민의 식량난 해결이란 1차적 목표와 더불어 북한을 '압도'하는 경쟁적 목표의 달성 수단으로 번역됨
- ✓ 이러한 번역 속에서는 쌀의 경계 넘기 행위는 발생하기 어려웠음

食糧難極甚해 北傀強制勞動 內外研究所發表

公報部內的 內外問題研究所에서는 十六日 資料를通하여 極甚한 食糧難을 解決 못하여 北韓住民들에게 「옥수수」 配給으로 겨우延命시키고 있는 北韓傀政權은 最近「土地開墾突擊隊」를組織하여 北韓同胞들을 또다시 強制勞動에 動員하고 있다고 發表하였다 同資料는 그와 같은 金日成一黨의 狂奔相은 最近의 傀官營通信에 依해 밝혀졌다고 말하였는데 傀儡들은 土地開墾突擊隊를組織하여 一九六三年까지 白頭山高原地帶에 一萬町步의 새 땅을 開墾할 것을 強要하는 한편 黃海道 羅津 農機作業所 勞動者들에게는 課外作業으로 今年中에 一千五百町步의 새 땅을 열도록 突擊運動을 展開中이라고 指摘하였다

통일(統一)	경세로서 부흥하면 북한을 압도할 수 있다는 뜻	100
신흥(新興)	새로나온 벼씨로 우리나라 풍토에 재배하기 좋으며 널리 보급된다는 뜻	101
만풍(萬豊)	IR 667은 가득히 풍년을 맞을 증자라는 뜻	102

위: "식량난 극심해 북괴 강제노동" 조선일보(61.10.17) / 우: 벼 신품종 이름 짓기 상황보고(경제기획원, 1971)

3-2. 쌀의 경계 넘기 역사



2) 동포애로의 번역(80년대 중반~)

- ✓ 1984년 8월 31일, 남한은 전국적 집중호우로 86명 사망, 40명 실종, 1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
- ✓ 북한적십자회에서 쌀 7200t과 천, 시멘트 등의 구호물자를 보냄 → 이를 계기로 11월 남북경제회담, 85년 최초의 이산가족 상봉 및 예술공연단 교환 방문 등이 이루어짐
- ✓ 90년대 이후 남북 간 경제적 차이가 벌어지며 쌀은 점차 '동포애'와 '인도적 차원' 등의 감정과 결합하며 '지원의 대상'으로 번역되며 남북한 경계를 넘기 시작함
- ✓ 95년 북한 대홍수 당시 쌀 15만 t 가량의 무상지원을 시작으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도합 265.5만t의 쌀이 지원되었음(차관 형식/무상 지원)
- ✓ 2010년 이후 대북지원은 중단되었지만, 전국농민총연맹(전농) 주도의 민간 차원의 대북지원이 있었지만, 중단됨



3-3. 쌀 보내기 운동의 전개



- 2016년 4월 7일 탈북민단체를 주축으로 강화군 석모도에서 최초의 쌀 보내기 행사가 진행됨
- 1.5L 생수통 안에 쌀을 절반 정도 채우고 때에 따라 구충약, USB, 칫솔, 성경, 마스크 등을 동봉함
- 행사 1회에 보통 500kg 정도의 쌀이 북으로 보내졌고, 대부분의 쌀은 기부 받은 쌀
- 행사는 2020년 6월까지 이어짐. 지역사회는 대북전단으로 인한 북한과의 갈등 등 국내 이슈로 인해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가 통일부에 '탈북민단체 대북전단 살포 중단 건의문'을 제출할 정도로 예민해져 있었음
- 지역주민의 반대와 경찰의 개입, 지자체의 각종 법령을 통한 제지에 의해 쌀 보내기 운동은 중단됨



(출처: 주최 측
홈페이지, 연합뉴스,
뉴스1) 365



04

쌀 보내기 운동의
행위자-네트워크

4. 쌀 보내기 운동의 행위자-네트워크



1) 쌀 보내기 운동 속 쌀의 번역: <경계 넘기의 주체로 '쌀'이 선택된 이유는?>

- ✓ 쌀은 대북전단과는 다르게 남북한 경계를 넘으면서도 정부의 제지를 받지 않음 → 쌀 번역의 복합성이 이유
- ✓ 주최 측은 해당 운동이 '힘없고 약한' 북한 주민을 '직접적' 으로 돕기 위한 '인도적' 행사임을 강조

“이거는 탈북민들의 애환이 담긴 그 마음이 북한 주민들한테 전달되어 남쪽에서도 그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탈북민단체 인터뷰 中)

- ✓ 그와 동시에 쌀을 수령한 북한 주민의 인식 전환 → 북한 정권의 붕괴, 즉 '전쟁없이 통일할 수 있는 수단'으로 행사의 의의를 밝힘

“남북 통일은 외세의 간섭 없이 북한 주민 스스로가 들고 일어나서 북한 체제를 바꿀 수 있는 힘을 밖에서 줘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중략) 인식을 바꾸면서 북한 체제를 바꿀 수 있는 믿거름을 만들자고 했던 것입니다”(탈북민단체 인터뷰 中)

- ✓ 대북전단과 달리 대외적으로 인도적 차원을 표방하고, 정치적 의미는 숨겨져 있었던 쌀은 남북 간 합의가 금지한 접경지역 내 '선전 수단' 에 해당하지 않음
- ✓ 2004년 남북장성급군사회담 3조는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을 중지하고 선전수단들을 제거'하도록 합의하였음 → 방송, 게시물, 전단 / 쌀은 해당 안 됨

4. 쌀 보내기 운동의 행위자-네트워크



2) 행위자로서 바다의 등장; RQ2. <석모도 해안가에서 바다와 쌀, 인간 너머 주체들은 어떻게 결합되었는가?>

탈북민의 경험

- 황해도 출신 탈북민들은 남한에서 떠내려온 쓰레기를 해안가에서 주운 경험을 공유함

“한국에서 홍수가 나게 되면 뭐 심지어 돼지까지 떠내려오는데, (중략) 그런 걸 받아보고서 황해도부터 해보자...” (탈북민단체 인터뷰 中)

일반적 지리지식

- 주최 측은 이와 같은 쓰레기가 조류에 의해 북으로 운반되었다고 생각 → 조류를 활용하면 북으로 물품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 추측
- ‘서해안이 조수간만의 차가 크다’는 일반적인 지리지식을 동원 → 서해안을 행사 지역으로 선정

인간 너머 주체

- 북한과 가까운 교동도, 백령도는 군사보호구역으로 철조망과 군인들에 의해 해안가 접근이 어려움
- 교동도와 백령도에서 보낸 쌀은 조류 흐름 상 북한군 철조망으로 전달된다고 주장 → 석모도를 행사 지역으로 선택
- 2017년 강화도와 석모도를 잇는 석모대교의 건설은 석모도와 네트워크의 연결을 강화하는 역할(연간 행사 횟수 15회 → 27회)

비인간 카리스마

- 주최 측은 석모도 내 행사 장소 선정 과정에서 해당 해안가 썰물이 굉장히 거칠고 유속이 빠름을 경험
- 바다와의 대면 과정 속 유속과 물살이 주는 정동 → 비인간 카리스마가 발현됨으로써 해당 해안가가 행사 장소로 선정됨



4. 쌀 보내기 운동의 행위자-네트워크



3) 지식과 과학기술의 행위성; <“쌀이 북한에 도달할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되는 지식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① 물때표

- 물때: 보름을 주기로 매일 바뀌는 바닷물의 변화 → 음력 1일, 15일이 조수간만 차가 큰 7~8 물 때
- 주최 측은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크고 유속이 빠른 6~9물때에 행사를 90% 이상 진행함
- 물때표란 구체적인 지리지식은 이들의 추측에 ‘과학적’인 근거로 작동되며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포섭
- 전문가: 서해 순환의 복잡성을 강조하며 단순 조류만이 물품의 북한 도달을 설명하긴 어렵다고 답변

서해 해양 표층 순환 요인: 바람 / 해수면 냉각 또는 가열 / 양쯔강과 한강, 임진강으로부터 유입되는 담수에 의한 염분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수직 혼합 / 계절에 따라 진행 방향이 역전되는 서한연안류 / 난류성·한류성 소용돌이 존재 여부 등등

- 서해 순환의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물때표라는 ‘지식’을 통해 바다를 축약적으로 이해
- 쌀 보내기 운동 네트워크 내에서 바다는 그 자체로 블랙박스화 되었음

2022년 4월	월명	물때/물흐름	만조시간	간조시간	일출/일몰시간	월출/월몰시간	날씨
7	3.7	13 물	08:13 (765) ▲+661	01:57 (104) ▼-630	06:11/19:01	09:34/00:04	☀️
8	3.8	조금	08:46 (715) ▲+561	02:23 (154) ▼-528	06:09/19:02	10:19/01:00	☀️
9	3.9	무시	09:29 (661) ▲+449	02:55 (213) ▼-409	06:08/19:03	11:12/01:52	☀️
10	3.10	1 물	10:30 (613) ▲+335	03:43 (277) ▼-282	06:07/19:04	12:00/02:38	☀️
11	3.11	2 물	12:32 (604) ▲+281	05:18 (323) ▼-189	06:05/19:05	13:10/03:18	☀️
12	3.12	3 물	01:15 (530) ▲+169	07:21 (303) ▼-227	06:04/19:06	14:12/03:53	☀️
13	3.13	4 물	02:29 (601) ▲+305	08:35 (230) ▼-363	06:02/19:07	15:17/04:24	☀️
14	3.14	5 물	03:16 (682) ▲+450	09:27 (165) ▼-517	06:01/19:08	16:22/04:52	☀️

물때표 예시(출처: 바다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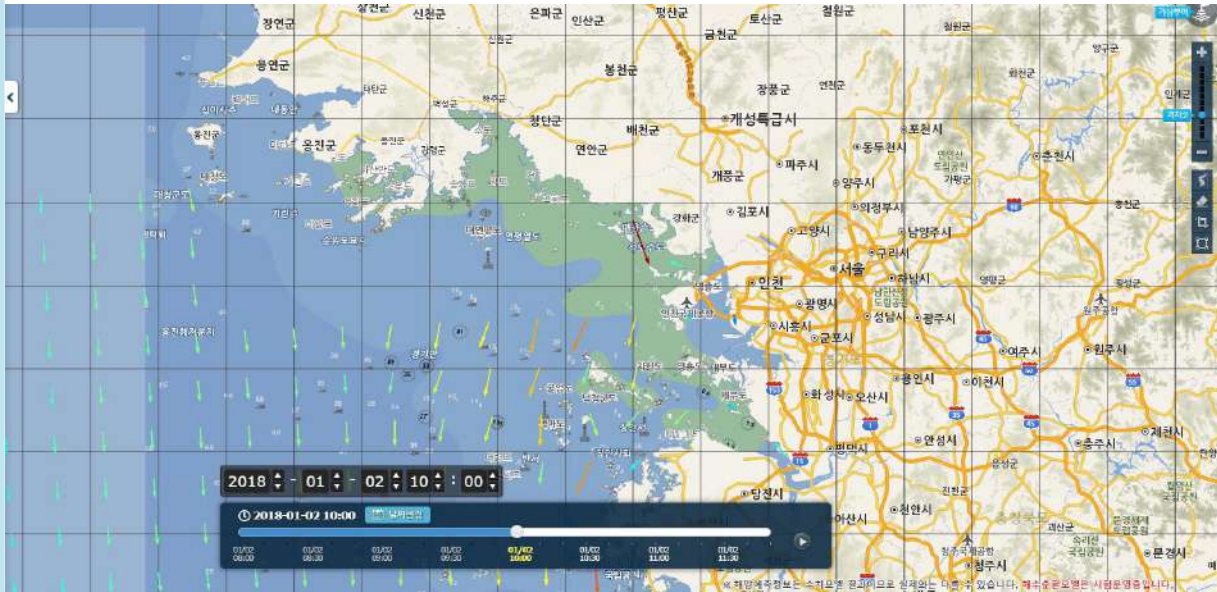
4. 쌀 보내기 운동의 행위자-네트워크



3) 지식과 과학기술의 행위성; <“쌀이 북한에 도달할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되는 지식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 Brief Inspection

- 행사 당일 살포가 이루어진 정확한 시간은 자료가 없음 → 살포 시간을 오전 10시/오후 2시를 기준으로 조류를 확인해도 주최 측이 주장하는 웅진군/해주시 앞바다로 조류가 흐른다고 보기는 어려움
- NLL 인근 해역 관측 어려움



4. 쌀 보내기 운동의 행위자-네트워크



3) 지식과 과학기술의 행위주체성

- 분단으로 인해 쌀의 도달이 검증될 수 없는 상황에서 탈북민의 주장은 반박하기 어려운 권위를 형성
- 정부 및 전문가의 검증이 정치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경험에 기반한 지식은 검증, 반박할 수 없는 지식이 되며, 행위의 개연성을 부여하는 지식으로 기능함

② 탈북민의 경험(2016년 이후 탈북자)

- 쌀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주장하는 탈북자들의 구체적인 증언
- 페트병 속 쌀을 장마당에 팔아 더 많은 구황작물을 구매 / 페트병 공병이 공공연하게 거래 / 성경이 부적처럼 여겨짐
- 탈북민들의 구체적 경험은 기존 탈북민 및 연구자를 비롯한 남한 사람들에게겐 검증, 반박할 수 없는 '진실'로 기능
- 탈북민들의 구체적 경험에 기반한 진술의 불가역성(irreversibility)은 그 자체로 블랙박스화되고, 탈북민단체에 의해 손쉽게 이용됨

③ 지역주민의 경험

- 40년 경력 선장의 증언: *"그 선장님이(중략) 그곳에서는(물길이) 100% 다(북한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하략)"*
- 지역주민의 반대 의견: *"물살이 세서 이북으로 가는 줄 아는데 안 가요. (페트병)이 섬을 빙 돌아서(해안가로) 되돌아와요."*
- 지역주민 간 서로 다른 경험에 기반한 상이한 지식이 있음에도 네트워크는 자신들의 추측을 뒷받침해주는 증언을 선택적으로 포섭

4. 쌀 보내기 운동의 행위자-네트워크



3) 지식과 과학기술의 행위주체성

④ GPS

- 주최 측은 행사 초기 총 15개의 GPS를 병입하였고, 모두 북한에 도달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함
- 검증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으며, 제한된 표본수의 문제
- 그러나 대북전단 살포 네트워크와 마찬가지로 쌀 보내기 네트워크는 GPS 결과를 자신들의 추측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로 활용하고 있음

대북전단 살포 시 활용된 GPS
(출처: YTN)





05

결론

5. 결론



- 쌀 보내기 운동 네트워크는 쌀의 복합적 번역을 통해 경계 넘기의 주체로서 쌀을 네트워크에 포섭함
- 쌀 보내기 운동 네트워크가 서해 및 석모도와 연결되는 과정에서 집단적 기억, 일반적 지리지식, 비인간 카리스마 등 다양한 인간 및 인간 너머 주체들의 행위성이 발현되었음
- ‘남한에서 물품을 바다에 띄워 보내면 북한 해안가에 도착할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 쌀 보내기 운동 네트워크는 이 추측을 ‘사실’로서 만들기 위해 과학적·경험적 지식과 과학기술을 동원함
- 이러한 지식과 과학기술은 쌀 보내기 운동을 가능하게 ‘허락’하는 행위주체성을 발현하였음

A glass bottle is shown floating in clear blue water. The bottle is tilted, and a small fish is swimming nearby. The background is a soft, light blue sky. The text 'THANK YOU' is overlaid in white, bold, sans-serif font.

THANK YOU